

제 68권 제 4호 | 2025. 12

국방연구

-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미국 국방혁신단(DIU) 사례를 중심으로 _ 이수진, 양정규, 김진우
- 첨단기술이 억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_ 이성훈
- 한미안보협약의 변천과 함의 _ 이미숙
- 김정은 시대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도약이론을 중심으로 _ 장석준
- 중국 연합합동군사훈련의 전략적 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 _ 전창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 연구: 시기별 인지전 변화과정과 한국적 함의를 중심으로 _ 허은재, 김태경, 강민수, 한원중, 김인승
- 이스라엘은 왜 공격적인가? -전략문화 관점의 분석- _ 백자성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양상 분석: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 적용 _ 류인석
- 지휘통제의 본질과 발전방향: 지휘의 술(Art)과 통제의 과학(Science), 두 요소의 조화를 중심으로 _ 조태근
- 모병제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 연구: Hood의 정책 도구론을 적용한 전문가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_ 김석훈, 고영준
- [서평] 경제의 무기화(The Economic Weapon) - 전간기 유럽의 경험과 현대적 경제제재의 탄생 _ 이준배



제 68권 제 4호 | 2025. 12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는 한국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 연4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논문지입니다.

국 방 연 구

제68권 제4호

인쇄 2025년 12월 30일

발행 2025년 12월 30일

발행인 : 김 영 호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편집인 : 박 영 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편집위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호 (해군사관학교)

박성용 (전북대학교) 송태은 (국립외교원)

신범식 (서울대학교) 신성호 (서울대학교)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윤태성 (한국과학기술원) 이홍섭 (국방대학교)

임은정 (공주대학교)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구연 (강원대학교)

편집간사

장광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행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전화 : (041)831-6461

E-mail : rinsakj@kndu.ac.kr

인쇄 : 화신문화주식회사 (02)2277-0624

ISSN 1229-3598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미국 국방혁신단(DIU) 사례를 중심으로 _ 이수진, 양정규, 김진우	1
첨단기술이 억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_ 이성훈	25
한미안보협약의 변천과 함의 _ 이미숙	59
김정은 시대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도약이론을 중심으로 _ 장석준	105
중국 연합합동군사훈련의 전략적 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 _ 전창빈	13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 연구: 시기별 인지전 변화과정과 한국적 함의를 중심으로 _ 허은재, 김태경, 강민수, 한원종, 김인승	165
이스라엘은 왜 공격적인가? - 전략문화 관점의 분석 - _ 백자성	199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양상 분석: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 적용 _ 류인석	233
지휘통제의 본질과 발전방향: 지휘의 술(Art)과 통제의 과학(Science), 두 요소의 조화를 중심으로 _ 조태근	265
모병제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 연구: Hood의 정책 도구론을 적용한 전문가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_ 김석훈, 고영준	295
[서평] 경제의 무기화(The Economic Weapon) - 전간기 유럽의 경험과 현대적 경제제재의 탄생 _ 이준배	319
저자약력	329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8, Number 4 | 2025 12

L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Building a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U.S. Defense Innovation Unit (DIU) - _ Lee Su-jin & Yang Jungkyu & Kim Jinwoo	1
How Advanced Technologies Reshape Deterrence Effectiveness _ Lee, Sung-hoon	25
Change and Implications of the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_ Lee, Misook	59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Military Modernization in the Kim Jong-un Era: A Perspective of Leapfrogging Theory _ Chang, Sok-chun	105
The Strategic Evolution of China'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_ Jeon Chang-Bin	139
A Study on Russia's Conduct of Cognitive Warfare in the Russia-Ukraine War: With Emphasis on the Process of Changes in Cognitive Warfare by Perio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_ Eunjae Heo & Taekyung Kim & Minsu Kang & Wonjong Han & Inseung Kim	165
Why Is Israel Aggressive? -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ulture - _ Baek Jaseong	199
Analysis of the Israel- Hamas War: Apply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Digilog Hybrid Warfare' _ Inseok Yoo	233
Essence and Future Development of Command and Control: Achieving Harmony Between the Art of Command and the Science of Control _ Jo, Tae-gun	265
A Study on Key Prerequisites for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Focusing on Expert Interview Analysis Applying Hood's Policy Tools Theory _ Seok-Hoon Kim	295
[Book Review] The Economic Weapon: Inter-war Europe and the Foundations of Modern Economic Sanctions _ Joonbae Lee	319
<hr/> Contributors	329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미국 국방혁신단(DIU) 사례를 중심으로 -

이수진**, 양정규***, 김진우****

- I. 서론
- II. 미국의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모델 고찰
- III.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단계별 DIU의 역할
- IV. 결론: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

요약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혁신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아니라, 민간기술과 국방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수준의 혁신모델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상업기술 파이프라인(commercial technology pipelin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 국방혁신 생태계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국방혁신 생태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DIU)의 임무와 수행방법, 성과평가를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의 기술식별-개발-도입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 사례에서 착안한 교훈과 시사점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도와 조직 측면에서 개진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개방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론적인 접근으로서, 신기술의 국방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형 모델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핵심어 : 국방혁신단(DIU), 국방혁신 생태계,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신속획득, 민군 기술 협력

* 본 논문은 한국국방연구원 2025년도 연구과제 보고서 『국방혁신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의 제1저자 작성 부분(평문)을 편집·발전한 글이다. 본 논문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 제1저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제2저자, 해군 중령, 방위사업청 한국형집수합사업단 집수합개발 담당.

**** 교신저자, 해군 대령, 해군대학 해양전략전략학처장.

I. 서론

최근 국방혁신의 화두 중 하나는 '개방형 국방혁신 생태계(Open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구축과 '한국형 국방혁신조직(K-DIU)' 창설이다.¹⁾ 모두 「국방혁신 4.0」의 전략 과제로 제시되었지만, 공개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제는 신정부의 국방개혁의 일부로 지속 논의되고 있으며, 정책 수립 및 재정비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미국의 국방혁신 생태계를 학술적으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DIU)의 국방혁신 생태계 운영방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DIU의 벤치마킹 요소를 식별하여,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도·조직 기반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한다.

첨단기술의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이 국가경제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이 된 오늘날, 기존의 연구개발(R&D) 및 획득 방식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은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을 추진하는 주도 조직으로 DIU를 창설하고, 민간 기술을 군사 역량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정책 기제를 발전시켜 왔다. 인공지능(AI), 자율성, 사이버보안, 인간-기계 통합체계(Human-Machine Interface), 우주 기술 등 DIU가 전담하는 기술영역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Manned-Unmanned Teaming, MUM-T) 구축에 필수인 기반기술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한 선행 연구가 일부 있다. 제환주는 DIU와 각 군의 국방혁신 임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기술 R&D 사업 체계와 비교·분석하며 한국의 R&D 사업 체계 발전 방향을 개선하였다.²⁾ 김용선은 DIU를 국방획득혁신의 '공학적 실천기관'이라고 평가하면서, DIU가 국방 계약시장에 민수 기업을 유인하고, 국방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³⁾ 하태경 외 연구진은 미국 국방혁신생태계를 국방획득체계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국방부 내 부서(행위자)의 역할을 설명하였다.⁴⁾ 하지만 기존 연구는 단편적인 기능 소개에 머물러 있다. '상업기술 파이프라인(commercial

1) "李 강조한 방산 中企 육성...전문가 3인 "K국방혁신단 설립, 방산 스타트업 투자해야." 『조선비즈』 (2025. 7. 14).

2) 제환주. "미 국방혁신생태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국내 국방기술 R&D 체계 발전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 논문지』 제24권 9호 (2024).

3) 김용선. "미 국방획득혁신의 아이콘, DIU의 혁신공학에 대한 단상." 『국방과 기술』 제550호 (2024).

4) 하태경 외.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4차년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technology pipeline)’이라는 개념으로 국방혁신의 전 과정을 꿰뚫지 못하고 있으며, DIU의 임무와 수행방법, 성과평가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DIU가 수행하는 기술 스카우팅, 실험적 획득 절차, 성능입증-배치-전력화에 이르는 일련의 작동 메커니즘은 계약 혁신의 차원을 넘어 국방부-산업계-투자자-사용자가 함께 하는 개방형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DIU는 단순한 획득혁신 기관이 아니라, 국방혁신 생태계의 실천적인 조율자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국방혁신 생태계란, 군사용 신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치하는 조직과 활동, 기능 및 과정의 전 집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방조직이 군사용으로 전환가능한 상용기술을 발견하고, 개발 및 도입하는 일련의 활동과 기능, 과정을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⁵⁾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은 국방혁신 생태계에서 조직(entity)을 분리한 개념으로, 3차 상쇄전략 실행 과정에서 국방혁신조직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분석 질문에 집중한다. 첫째, 미국 DIU는 기술 식별-개발-도입 전 주기에 걸쳐 존재하는 세 차례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있는가?⁶⁾ 죽음의 계곡이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주기에서, 자금 부족, 자원 부족, 시장 수요 창출 실패, 규제 등의 요인으로 상용화 실패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곧 국방혁신 실패의 위기를 가리킨다.⁷⁾ 둘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 DIU는 어떠한 제도적 인센티브 구조와 정책 기제를 활용하고 있는가? 셋째, 이러한 정책 기제는 어떠한 성과지표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평가지표는 국방혁신 생태계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미국 국방혁신 생태계의 구조를 고찰한다. 제III장에서는 DIU의 단계별 임무와 작동 메커니즘을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II. 미국의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모델 고찰

미국은 ‘3차 상쇄전략(2014~)’을 통해 국방혁신 역사에서 본격적인 민군협력의 시대를

5) Kotila et al, *Strengthening the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CA: RAND, 2023), p.x.

6) U.S. DoD.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2023*, p. 5.

7) Defense Innovation Board. “Terraforming the Valley of Death,” pp. 1-2, July 20, 2023.

열었다. 3차 상쇄전략은 AI 기반 무인체계를 핵심으로 규정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를 위한 요소기술인 상호운용성, 자율성, 사이버보안, 인간-기계 통합체계의 개발 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우위를 달성하고자 한다.⁸⁾ 이러한 변화는 군이 혁신을 독점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군사기술혁신(Military Technological Revolution, MTR)의 선도 주체가 되었을 의미한다. 3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한 1950년대 1차 군사혁신(전략 핵무기)과 1970-1980년대 2차 군사혁신(네트워크 기반 정밀타격)은 국방에서 민간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스피노프(spin-off) 방식의 민군협력에 기반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기에 이러한 스피노프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⁹⁾ 그 결과, 미국 국방조직은 군사기술의 생산·획득 방식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세계적 확산과 민간 투자 기반의 기술경쟁 심화는 미국이 기술우위 유지조차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다.¹⁰⁾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미국 국방부는 국방혁신이란, “전투원에게 지속적인 우위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바와 같이, 민간기술을 군사력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이를 대규모로 배치·운용하는 체계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¹¹⁾ 기존의 군사혁신이 새로운 전략/작전개념과 조직, 교리 측면에서의 창의적인 적용을 꾀했다면, 국방혁신은 기술확보 그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방혁신 생태계가 등장하였다.¹²⁾

이러한 취지에서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월, 획득·기술·군수차관실(USD AT&L) 산하에 국방혁신실험단(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DIUx)이라는 조직을 창설하였다. 후일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으로 개칭된 DIU의 사명은 “적보다 빠르게 새로운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현존 및 미래 군사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충돌 시 승리하는 것”이다.¹³⁾

8) Gentile et al. *A History of the Third Offset, 2014-2018* (CA: RAND, 2021), p. 38, p. 48;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7-2042.” August 28, 2018, p.4.

9)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Evron and Bitzing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litary-Civil Fusion: A New Paradigm for Military Innov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p. 22-23.

10) U.S. DoD.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p. 3; 동 내용과 관련한 미국의 최신 기획문서로는 U.S. DoD(2023a), pp. 1-2.

11) OUSD(R&E) and OUSE(I&S). U.S. Department of Defense. “F&A.” ctoinnovation.mil/faq.

12) 「2018 국방전략서(NDS)」에서 등장한 ‘국가안보혁신기반’이라는 개념은 DIU 창설 이후 보다 역동적인 개념인 국방혁신 생태계로 대체되었다. U.S. DoD(2018), p. 11; U.S. DoD(2023a), pp. 5-6.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국방부 정책차관은 3차 상쇄전략의 많은 부분이 「2018 국방전략서(NDS)」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Gentile(2021), p. 69.

DIU는 12-24개월 내 시제품을 확보하고 신속한 시험과 전력화를 거치는 '획기적인 획득 절차'를 도입하며, 국방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4년에는 의회의 지지를 받아 국방수권법(NDAA)에 의거, 국방장관 직속 기구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¹⁴⁾

현재 DIU는 세 개의 산하 조직을 통해 기능적 확장을 이루고 있다. 먼저 국방혁신 공동체 기구(Defense Innovation Community Entities, DICE)이며, 이는 육군응용연구소(Army Applications Laboratory), 공군혁신연구소(AFWERX), 해군 기술허브(NavalX), 해병대 전투연구소(MCWL) 등 30여 개 조직이 참여하는 국방 내 혁신기관 협의체이다.¹⁵⁾ 다른 하나는 국가안보혁신네트워크(National Security Innovation Network, NSIN)이다. NSIN은 군-산-학-연이 연결된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로, 민간기술을 국방에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혁신자본(National Security Innovation Capital, NSIC)은 이중용도 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이 기능 단위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은 DIU를 비롯한 국방혁신조직들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조직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단계별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험에서 출현하였다. 2023년 창설 8주년을 맞은 NSIN은 RAND 연구소에 국방혁신조직이 군사용 신기술과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개발-생산-배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에 RAND는 이 과정을 하나의 구조적 흐름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모델'이라 명명하였다.¹⁶⁾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의 단계별로, 미 국방부 혁신조직들의 역할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¹⁷⁾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먼저 기술 발견과 초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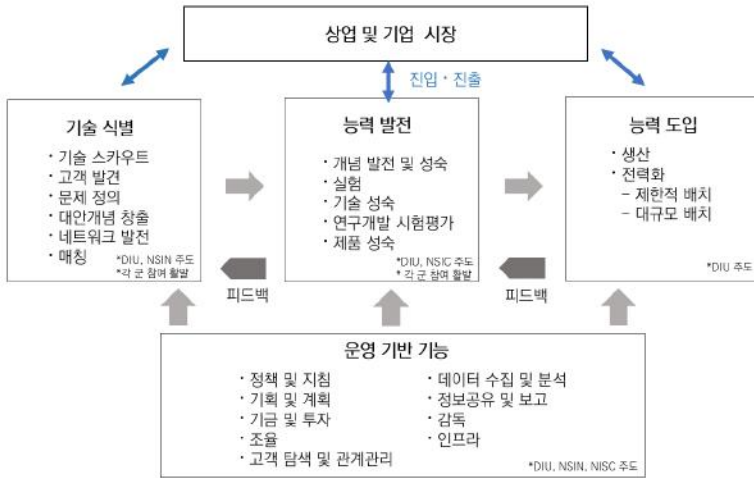
-
- 13) DIU. "About DIU." <https://www.diu.mil/about>;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AU). <https://www.dau.edu/sites/default/files/2025-04/DIU%20OTA%20Today%2030%20April.pdf>.
- 14) Beck, Douglas A. Director of DIU. "DIU 3.0" - Scaling Defense Innovation for Strategic Impact." February 7, 2024. p. 1.
- 15) Kotila et al(2023); 제한주(2024) 참조.
- 16) Kotila et al(2023). p.ix. RAND 연구소의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모델 연구 이후, 미국 국방혁신 생태계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 국방부(MoD)는 2022년 6월부터 국방부의 조달계획(향후 18개월 내 입찰 공시)을 담은 MOD Acquisition Pipeline을 발간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가 Acquisition Pipeline을 발간하는 목적은 미국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국방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잠재적인 국방부 공급업체가 향후 입찰을 준비하고 조달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Government of U.K. "MOD Acquisition Pipeline." October 30, 2024.
- 17) 기술성숙도(TRL)는 특정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나타내는 정량화된 지표이다. 미국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TRL에 대해서는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U.S. DoD.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Guidebook, June 2023, pp. 4-9.
- 18)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Defense Innovation Unit: Actions Needed to Assess Progress and Further Enhance Collaboration." February 27, 2025, P.10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

단계(TRL 1~3)에서는 DICE와 NSIN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각 군의 혁신조직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상용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실험실 수준에서 기본 원리의 타당성과 구성 요소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NSIN은 대학, 스타트업, 민간기술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군과 민간의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기술 시제품화와 중간 개발 단계(TRL 4~6)에서는 NSI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기술이 실험실 수준을 넘어 제한된 환경에서의 통합 성능시험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 성숙과 도입 단계(TRL 6~9)에서는 DIU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DIU는 시제품의 군사적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 절차를 통해 양산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DIU는 실제 환경에서의 시험 및 운영, 최종 시스템의 실전 배치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일련의 파이프라인은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하고 돌파하는 작전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전환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은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실전투입을 목표로 한 기술전환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혁신공학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미국 국방혁신조직의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 출처: Kotila et al(2023), p.18에서 저자 보완 작성.

이다.

19) 각 군 혁신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환주(2024), 김용선(2024) 참조.

〈그림 1〉은 RAND 연구소가 문헌 연구 및 국방혁신 생태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한 미국의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모델로서, 국방혁신조직들이 상업기술을 군사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실제 역할과 운영 흐름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 모델이 보여주는 미국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RAND 연구소 보고서와 미국 감사원(GAO)의 DIU 성과평가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출하였다.²⁰⁾

첫째, 기술 도입은 선형적 경로가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구조’로 구성된다. 기술의 식별-개발-채택이라는 각 단계는 순차적이라기보다 병렬적으로 작동하며, 단계 간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통해 지속적인 상호 보완과 조율이 이루어진다. 둘째, 기술 이전 과정은 중앙집중적 체계가 아닌 ‘분산형 수행 체계(decentralized execution)’에 기반한다.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부처, 연구소, 민간기업, 벤처투자자 등)가 참여하며, 기능 수행은 기관 간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에 의해 이뤄진다. 셋째, 상업기술의 군사적 채택은 단일 주체 주도가 아닌 ‘국방혁신 생태계 기반의’ 연합형 운영 구조로 전개된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개념 도출, 과학기술 성숙화, 제품화, 조달 및 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분담·협업하며, 이로써 민군 간 혁신 동력이 순환된다. 이 과정에서 DIU는 국방혁신 생태계의 ‘허브’로서 기능하며, 기술 발견, 기술개발, 기술 도입의 전 주기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국방혁신 모델을 ‘허브 기반 분산형’ 모델로 명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미 국방부 자문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Defense Innovation Board, DIB)는 이러한 분산형 모델의 한계에 주목하였다. DIB는 DIU 및 DICE 산하 혁신조직들이 상업기술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양산하는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상호 간의 정보 공유와 통합 관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용기술의 신속한 전력화가 지체되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고 경고하였다.²¹⁾ 2025년 2월에는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이 문제를 공식 지적하며, 혁신조직 간 임무와 기능의 중첩, 비효율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의회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²²⁾ 이후 DIU는 2025년 4월에 ‘단일화된(unified)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의 방향성을 조정하였다.²³⁾

20) Kotila et al(2023), pp. 18-19; pp. 23-25; U.S. GAO(2025), pp. 8-10.

21) Defense Innovation Board. “Terraforming the Valley of Death.” July 20, 2023, p.1: <https://www.dau.edu/sites/default/files/2025-04/DIU%20OTA%20Today%2030%20April.pdf>. p.6.

2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Innovation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February 5, 2025, P.2.

23) <https://www.dau.edu/sites/default/files/2025-04/DIU%20OTA%20Today%2030%20April.pdf>. p.2.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의 운영 기반 기능(enabling functions)에 대한 국방혁신조직의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RAND, GAO, CRS, DIB 등은 운영 기반 기능 부재가 기술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²⁴⁾ 특히 정보공유의 한계는 구조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DIU는 자체적으로 웹 기반 고객 관계관리(CRM)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이력, 계약 정보, 수상 내역 등을 공유하고 있다.²⁵⁾ 하지만 국방부와의 거래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간 전통적인 연방 조달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는 비전통적 국방계약자(non-traditional defense contractors)는 여전히 기술개념, 요구성능,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정보 접근 장벽을 호소한다.²⁶⁾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공유 기능이 명확히 수행되지 않으면 상호 간 문제 인식이 단절되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된다.²⁷⁾ 기업 간 지식과 자원의 교환 네트워크는 혁신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군사기술 특히 네트워크에서 중심성(특히 인용도)이 높은 기술은 민군겸용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정보공유와 개방은 결정적이다.²⁸⁾ 그러므로 후술하겠지만, DIU의 시제품 실용화 및 양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파이프라인의 운영 기반 기능 부족과 정보공유 체계 미비를 꼽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정보공유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DIU는 미국 의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고객관계관리(CRM) 플랫폼을 운영중인데, 미국 국방부 지휘부, 국방부의 (잠재적) 계약 파트너, 의회는 이 플랫폼에서 전력화 촉진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²⁹⁾

24) Kotila et al(2023). Ch. 4: U.S. CRS(2025), p.2; U.S. GAO(2025), pp. 18-23.

25) DIU. "Commercial Solutions Catalog." <https://www.diu.mil/solutions/portfolio/catalog>; DIU가 참가하는 플랫폼은 <https://defenseinnovationmarketplace.dtic.mil/>.

26) DIB(2023), Appendix A: 미 연방법이 규정하는 비전통적 국방계약자에 대해서는 <https://www.diu.mil/work-with-us/dod-entities>.

27) Kotila et al(2023), p.35.

28) 장용진·김봉선·김언수. "군사기술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경영학회』 제24권 제2호(2024), p. 122.

29) DIU는 민간 AI 공급 업체 3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보다 자동화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반 고객관계관리 플랫폼을 통해 DIU는 기술성숙도, 자원배분현황, 프로젝트의 진행현황,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고 있다. DIU. "DIU Awards Three Contracts to Streamline DIU's Budget Execution and Project Management." March 18, 2025.

〈표 1〉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기능별 국방혁신조직 관여 현황

파이프라인 기능	AAL	AFWERX	DARPA	DIU	JRAC	NavalX	NSIN	SOFWERX
기술식별								
· 기술 스카우트	×	×	×	×		×	×	×
· 고객 발견		×		×			×	
· 문제 정의	×		×	×	×	×	×	×
· 대안개념 창출	×	×	×	×		×	×	
· 네트워킹	×	×		×		×	×	×
· 매칭	×	×	×	×			×	
능력 발견								
· 개념 개발	×	×		×	×		×	
· 실험		×	×					×
· 기술 상속	×	×	×	×		×	×	
· 연구개발 시험평가	×			×				×
· 제품 상속			×	×		×		
능력 도입								
· 저중적 배치			×	×	×	×		
· 대규모 배치	×		×	×				
능력 도입								
· 정책					×			
· 계획								
· 투자 유치	×	×	×	×	×	×	×	
· 조율	×	×	×	×	×	×		×
· 고객 탐색	×		×	×		×	×	×
· 데이터 및 분석	×							
· 정보공유 및 보고				×				
· 감독				×	×			
· 인프라		×	×	×				×

* 출처: Kotila et al (2023), p.24에서 주요 조직 발췌

III.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단계별 DIU의 역할

1. 기술식별 단계

상업기술 파이프라인의 초기 단계인 기술식별(Technology Identification) 과정은 신기술 탐색, 문제 정의, 기술개념 구상 등 일련의 선제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DIU는 창설 초기 3년(2015-2018)을 ‘DIU 1.0’ 단계로 규정하며, 국방조직과 상용기술 생태계 간 교량 역할에 주력했다.³⁰⁾ 주요 활동과 수행방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³¹⁾

30) Beck(2024), pp. 3-4.

31) Kotila et al(2023), p. 20, Appendix A; GAO(2025), p. 11; Beck(2024), p.5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표 2〉 기술식별 단계에서 이뤄지는 주요 활동과 수행방법

활동	수행 방법	목표기간
기술 스카우트 및 고객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숙도 3~6단계의 이중용도 기술 개발 기업 발굴 • 실리콘밸리 본부 외 4개 지부(오스틴,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D.C.)와 연결된 지역 기업 네트워크 활용 (DIU) • 국방환경 분석팀과 상용시장 분석팀을 별도 운영하여 수요-공급 매치 (DIU) •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상용시장 데이터베이스 검색, 웹검색 등 (NSIN) 	없음
문제식별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의 신속획득메커니즘인 상용품조달혁신(CSO) 적용 • 산하 군조직과 함께 합동군 차원의 목표 능력 수립 및 목표 능력 대비 현존능력 격차 구체화 (DIU) • 인도태평양사령부 내 DIU 합동임무사업단(Joint Mission Accelerator Directorate)을 통해 최종사용자의 요구사항 구체화 (DIU) • 국방부 및 주요 사령부,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와 함께 합동군 차원 최종사용자의 요구 구체화 (NSIN) 	30일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에 연구제안서 공고, 관심기업 접촉 (DIU) 	
기술 개념 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기업을 초청하여 24개월 내 시제 제작 가능한 기업 파악 (DIU) • 관심 기업을 초청하여 국방 R&D 시장 입찰 및 계약 방법 교육 (NSIN) 	제안서 접수 후 60~90일 내 계약

이 과정에서 DIU가 강조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비전통적 국방계약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방전략서」와 「국방과학기술전략서」 등 미국의 전략문서에서 강조하는 '이중용도 기술 중심의 민군 융합 생태계 구축' 기초와 일치한다. 즉, 민간 기술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받은 혁신 기술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국방 분야에 기술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비전통 기업의 입장에서 국방 R&D 시장은 진입 유인이 낮다. 기술 전문성이 높을수록 상용시장과의 기술 접점이 약해져 수익성 확보가 어려우며, 민군겸용 기술 개발은 양측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본과 시간 측면에서 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³²⁾

그러므로 국방혁신조직이 국방 R&D 시장에 비전통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 장치와 진입 장벽 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DIU는 미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주관하는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기금과 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기금을 적용하고 있다.³³⁾ 동시에 CSO(Commercial Solutions Opening)와 OTA(Other Transactions

32) Beck(2024), p. 7; 장용진·김봉선·김연수(2024), p. 117.

Authority) 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CSO는 제안서 접수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업에는 경쟁입찰 없이 후속 계약(follow-on contract)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³⁴⁾ OTA는 연방조달규정(FAR)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기술의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한다.³⁵⁾ 이러한 제도적 조항은 기존 획득체계의 속도 제한을 극복하고, 민간 투자와 국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 사례는 시가전(MOUT)에 최적화된 자율 쿼드콥터 드론 개발이다. DIU는 자율드론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Shield AI가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을 파악하여, CSO 절차를 통해 기술전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약 30일 이내에 OTA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시제품 개발과 공군과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이 사례는 DIU의 OTA 가이드라인 수립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³⁶⁾

가장 최근에는 2025년 3월, DIU가 AI 기반 지휘 결심 지원체계인 Thunderforge 사업을 개시하여, 스타트업 Scale AI와 시제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은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와 유럽사령부(EUCOM)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작전계획 수립, 자원 배분, 임무 평가 등 다양한 군사적 의사결정을 자동화·지능화할 계획이다. Thunderforge 시스템은 Anduril의 자율 플랫폼과 Microsoft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통합하여, 복합 전역지휘 환경에서의 결심 속도와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⁷⁾

DIU는 이처럼 단순한 시제품 조달을 넘어,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실질적으로 연계·적용하는 '기술-정책-작전 연계형 조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2022년간 'DIU 2.0'이라는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의 발굴부터 시제품 지원, 기

33) DIB(2023), pp. 2-3.

34) DIU. "Work With US." <https://www.diu.mil/work-with-us/dod-entities>; DIU. <https://www.dau.edu/sites/default/files/Migrated/CopDocuments/DIUx-Commercial-Solutions-Opening-White-Paper.pdf>.

35) 195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혁신 경험에서 연원한 연방군법 제2371호는 연방 기관이 연방계약제도의 복잡한 조항을 일부 면제하고 계약조건이나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인 OTA를 성문화한 것이다. 냉전기 이래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OTA 적용기관과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연방군법 제2371조에 따른 시제품 OTA를 영구적으로 명문화하였다. OUSD(A&S). U.S. DoD. "Other Transactions Guide." July, 2023.

36) DIU. "Shield AI —Autonomous Tactical Airborne Drone"; Obis, Anastasia. "A look back at the origins of DIU." Federal News Network, June 4, 2025; <https://shield.ai/shield-ai-selected-competitive-phase-air-forces-golden-horde-vanguard-program/>.

37) DIU. "DIU's Thunderforge Project to Integrate Commercial AI-Powered Decision-Making for Operational and Theater-Level Planning." March 5, 2025.

술 전환 촉진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였다³⁸⁾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 국방수권법(NDAA) 제231조와 미 연방군법 제2359조를 통해 입법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특히 해당 조항은 민간기술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부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 제공, 최적 관행 공유 등을 통해 기술이 실질적 전력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³⁹⁾

상론한 국방혁신조직의 지원 활동은 '제1차 죽음의 계곡'인 기술개발에서 시제품 간 단절 구간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이다. 그러한 까닭에 의회의 감독과 국방부의 의무규정이 강화된 것이다.⁴⁰⁾

현재 DIU는 시제품 계약체결 소요기간(제안서 접수 후 60~90일 이내)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⁴¹⁾, 2024년 국방수권법은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DIU의 임무 적합성과 효과성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향후 DIU와 긴밀히 연계된 NSIN의 활동성과도 평가대상으로 포함되며, 이는 최종사용자와의 연결을 통해 시제품 단계까지 도달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성과 측정 지표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방부 내 파트너 기관 수, 일정 기간 내 확보된 비전통적 국방계약자 수, 시제품 계약체결 건수 등이 활용될 수 있다.⁴³⁾ 2025년 4월 DIU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4년 기간 동안 시제품 OTA 계약의 88%가 이러한 비전통 기업과 체결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68%, 국방과 첫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전체의 40%에 해당한다.⁴⁴⁾

38) Beck(2024), p.2.

39) U.S. 117th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p. 72; United States Code Title 10 §2359 - "Pilot programs for the transition of technologies."

40) Tucker, Patrick. "House Bill Aims to Bridge Acquisition 'Valley of Death' In Race to Counter China." *Defense One*, August 25, 2021.

41) U.S. GAO(2025), p.11.

42) U.S. GAO(2025), p. 2, p. 38.

43) U.S. GAO(2025), p. 20; U.S. DoD(2024b), p.2.

44) U.S. DoD(2018). p. 11; 미국 국방부는 비전통적 국방계약자의 국방 R&D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U.S. DoD. "Innovation Fact Sheet - Struggling Change to Last." August 2024, p.2; <https://www.dau.edu/sites/default/files/2025-04/DIU%20OTA%20Today%2030%20April.pdf>.p.2.

2. 개발 단계

개발 단계는 기술 성숙,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RDT&E), 그리고 소량 생산을 포함하는 초기 제품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DIU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미국의 일반획득 모델에서 '기술 탐색 및 체계 개발 단계'에 해당한다.⁴⁵⁾

이 단계에서 DIU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제2차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병목 현상이다. 이는 시제품 제작 이후 중기소요계획 반영이 지연되거나 예산배정에 실패하여, 상용기술의 국방 전환이 좌절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 국방기획관리제도(Planing, Programming, Budgeting and Execution, PPBE)의 경직성과 예산편성 주기(2년)의 제한성은, 상용 시제품이 조기에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자금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⁴⁶⁾

이러한 병목을 극복하기 위한 DIU의 노력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 첫째, 기술 발견 단계에서 SBIR/STTR Phase I 및 II를 통해 확보한 유망 기술에 대해 후속 투자 연계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자본과 국방수요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는 합동군 중심의 임무 기반 소요와 연동된 기술투자기금을 구성하여, 상용기술의 군사적 성숙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⁴⁷⁾

둘째, 시제품 생산계약(follow-on contract)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미국 국방부는 신속국방실험예비군(Rapid Defense Experimentation Reserve, RDER)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유망 기술을 선정하여 다년도 전투실험을 통해 기술의 작전효용성을 사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⁸⁾ DIU는 RDER 주관기관인 연구공학차관실(USD(R&E))과 협력하여, 기술통합성, 성능요구사항, 비용추정 등 핵심 요인을 기반으로 계약업체와 최종사용자 간을 조율해왔다.⁴⁹⁾

45)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AU). "Major Capability Acquisition," <https://aaf.dau.edu/aaf/mca/>; 최수동. "무기체계 탐색개발단계의 개념 및 복수 연구개발의 발전방향." 「국방논단」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5. 6. 23.), p. 7에서 재인용.

46) DIB(2023), p. 10.

47) DIB(2023), p. 10; DIB, "Scaling Nontraditional Defense Innovation." January 8, 2025, p.8.

48) DIU. "Innovation Fact." August 7, 2024, p. 2.

49)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Mission Capabilities, U.S. DoD. "What is APFIT?." <https://ac.cto.mil/pe/rder/>; Horowitz, Andreessen. "DoD Contracting for Startups 101." March 13, 2015. 2025년 6월부터 국방혁신기관들 간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RDER은 군 전투사령부 단위로 이전되었다.

셋째, 군사적 유용성이 입증된 시제품의 증기소요 반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DIU는 2022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신설된 ‘혁신기술 조달 및 현장 배치 가속화(Accelerate the Procurement and Fielding of Innovative Technologies, APFIT)’ 시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비전통적 국방계약자를 우선 지원하며, DIU는 시제품 계약 성공 기업 중 APFIT 대상 업체를 선발하여 DICE 소속 군 기관과 함께 야전운용시험(field test)을 수행한다.⁵⁰⁾

마지막 단계인 야전운용시험을 통해 시제품의 임무성능이 검증되면, DIU는 해당 기업과의 정식 예산 항목(Program of Record) 계약체결을 지원함으로써 증기소요계획에의 반영을 유도한다. 이는 안정적인 예산 배정을 가능케 하여, 단·중기적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입 단계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제도적 인센티브로 작동한다.⁵¹⁾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구조적 작동을 대표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바로 ‘AMMO 프로젝트(Project Accelerated Machine Learning for Maritime Operations)’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수중전 위협에 대비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자동표적식별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뢰대항전 능력 개발을 꾀한다. DIU는 2022년 가을, 시제품 개발 기업 5개를 APFIT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은 1년 이내에 수중 표적 탐지와 표적 추적 평가를 위한 기계학습 운영도구(Machine Learning Operations Tools)를 성공적으로 개발·통합하였다.⁵²⁾

이 과정은 민간 공급업체와 군사기술 개발기관(Northrop Grumman, SeeByte, Johns Hopkins APL) 간의 기능 분업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DIU는 계약업체 선정에서부터 미·일·호 3국 간의 통합훈련(Integrated Battle Problem) 지원, 그리고 생산계약으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해군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2025년 4월 기준, 해당 시제품들은 생산계약 체결 단계에 진입하였다.⁵³⁾

개발 단계에서 DIU는 시제품 제작 완료기한(12~24개월 이내)을 성과관리 지표로 삼고 있다.⁵⁴⁾ 아울러, APFIT 프로젝트 선정 건수 및 투자 규모, 시제품 계약의 양산계약 전환을

50)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Mission Capabilities, U. S. DoD. “What is APFIT?.” <https://ac.cto.mil/apfit/>; U.S. DoD(2024), p. 3.

51) DIU. “Work With US.” <https://www.diu.mil/work-with-us/commercial>; U.S. DoD(2024), p. 3.

52) DIU. “DoD Successfully Deploys Commercial AI Infrastructure To Support Underwater Target Threat Detection.” June 17, 2024; Edwards, Jane. “DIU, Navy Issue Success Memos to 5 Machine Learning Operations Toolset Providers.” *Executive Biz*. June 18, 2024.

53) U.S. Navy. “Integrated Battle Problem 23.2 Concludes as Unmanned Surface Vessels Return to Homeport.” January 16, 2024.

54) GAO(2025), p.11.

등도 성과지표로 활용가능하다. APFIT에 선정된 프로젝트 수와 투자금은 22년(10건, 총 1억 달러), 23년(11건, 총 1억 5천만 달러), 24년(9건, 총 3억 달러)이다.⁵⁵⁾ DIU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450건의 시제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62건(14%)이 생산 또는 양산계약으로 전환되었다.⁵⁶⁾ 같은 기간 동안 기술 소유권 이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 기술전환 실적은 51%로 평가되기도 하나,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효과 평가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해 2024년 국방수권법 입법 과정에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DIU의 실질적 전력화 수준이 조직의 초기 사명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⁵⁷⁾

3. 도입 단계

DIU는 ‘도입(transition to fielding)’을 기술의 전력화, 즉 양산 및 실전 배치를 통해 합동군의 실질적 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제한적 배치(Limited Fielding)와 대규모 배치(Full Deployment)로 구분된다.⁵⁸⁾ DIU는 그간 제한적 배치조차 미흡했다는 점을 자성하며, 2024년 2월 ‘DIU 3.0’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력화 중심 운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⁵⁹⁾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 국방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리플리케이터(Replicator) 구상’은 도입 단계에서의 죽음의 계곡, 즉 시제품의 대량 양산 실패를 초래하는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무기체계 획득예산의 대부분이 운영·유지비에 집중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장기적 환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는 도입 단계에서 양산으로의 전환을 지체하는 주된 원인이다.⁶⁰⁾

Replicator 1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18~24개월 이내에 전장 전 영역에 수천 대 규모의 소모성 자율무기(Attributable Autonomous Systems)를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서 조기에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개전과 동시에 자율무기를 대규모로 전개하여 지휘통제 마비, 플랫폼 무력화, 작전 속도 차단

55) U.S. DoD(2024b), p.3.

56) GAO(2025), p.14; Beck, Director of DIU. “Testimony before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 of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15, 2024, p. 4.

57) GAO(2025), p.2.

58) 야전부대로의 전환은 생산·배치·작전·유지 등을 위해 개발한 제품 또는 체계의 소유권을 기업에서 작전부대 또는 사업관리자(PM)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Kotila et al(2023), p.20.

59) Beck(2024).

60) DIB(2023), pp. 11-12.

등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2024년 9월 발표된 Replicator 2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Counter-small Unmanned Aerial System, C-sUAS)를 전력화하여 국가 전락시설과 전력 밀집 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⁶¹⁾

Replicator 구상 추진은 국방부 부장관 직속 혁신조정그룹(Deputy's Innovation Steering Group, DISG)이 총괄한다. DIU는 DISG 소속이자 실무조직인 '국방혁신실무그룹(DIWG)' 의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기술 간 접점을 통합하고 있다. DIU는 이 과정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방장관실(ODS), 합참, 전투사령부, 각 군과 협업하여 합동군 차원의 우선순위 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18~24개월 내 전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 내부 일정을 감독하며 병목을 제거한다. 셋째, 기술식별·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혁신 기술을 반복 적용하여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속히 양산 가능한 시제품을 확보한다.⁶²⁾

DIU는 OTA를 통해 기업이 개발한 독점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상업 해석 가능성과 기술 재사용의 유연성을 보장받는다.⁶³⁾ 이를 기반으로 DIU는 기존 계약 이외에도 CSO 방식으로 신규 기업을 지속 유입시키고, 시제품 생산능력이 확보된 공급자를 식별·확장한다.

이와 함께 DIU는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온램프(On-Ramp)' 체계를 확장하였다. 이는 실리콘밸리 본부와 4개 지부 외에 8개 지역에 신설된 거점으로, 지역 산학연 주체들이 국방 시장 진입 경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⁶⁴⁾ 온라인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디지털 온램프 시스템을 통해 수요-공급 간 기술 매칭을 자동화함으로써 시장조사와 스카우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⁶⁵⁾

전력화 실적이 미흡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DIU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2024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전력화 기한(2년) 준수 여부, 합동군 능력 강화 효과 등이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제품 계약-하청 연계 건수, 민간 혁신 생태계 확

61) DIU. "Replicator." Diu.mil/replicator.

62) ibid.

63) DIU는 제작완료한 시제품과 생산전환된 시제품 목록('상용 솔루션 카탈로그')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국방부가 기술 소유권을 가진바, 관심 있는 국방조직이 필요한 기술을 DIU를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DIU. "Work with US." mil./work-with-us/commercial; DIU. "Commercial Solutions Catalog." <https://www.diu.mil/solutions/portfolio/catalog>.

64) 캔자스, 오키오, 애리조나, 하와이, 워싱턴, 켄터키, 미네소타, 몬타나 주이다. DIU. "Regional Outreach." Diu.mil/regional-outreach.

65) DIU. "Resource Guide." Diu.mil/defense-innovation-onramps-hubs-resources-guide.

산 효과 등도 정량적 성과로 고려될 수 있다. DIU에 따르면 Replicator 1에는 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35개 이상의 기업이 50여 개 하청업체와 협업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약 75%가 비전통적 국방계약자로 분류되며, 이는 DIU가 기존 방위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⁶⁾

IV. 결론: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

본 연구는 국방혁신은 무기체계 현대화 차원을 넘어서, 민간기술과 국방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수준의 혁신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례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도와 조직 기반의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국방정책에서도, 국방혁신 4.0에서도 국방혁신 생태계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⁶⁷⁾ 연구개발(R&D)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군·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다루었을 뿐이다. 하지만 생태계의 범위와 역할을 R&D에 한정된 결과, 국방혁신의 목표인 신속전력화까지 생태계의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런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R&D, 사업발주/무기공급, 기업지원의 흐름을 아우르는 ‘방산 혁신 생태계’라는 별도의 생태계를 명명하고 자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국방혁신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지 못했다.⁶⁸⁾

〈그림 2〉는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기존 연구결과로, ‘실천적인 조율자’로서 DIU가 주도하는 상업기술 파이프라인 모델을 도입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연구개발 및 획득의 단계에 국한하여 국방혁신 생태계를 다루고 있으며, 혁신의 전 과정과 임무를 기획·관리하고 완수하는 전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방부/합참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추가하고, 행위자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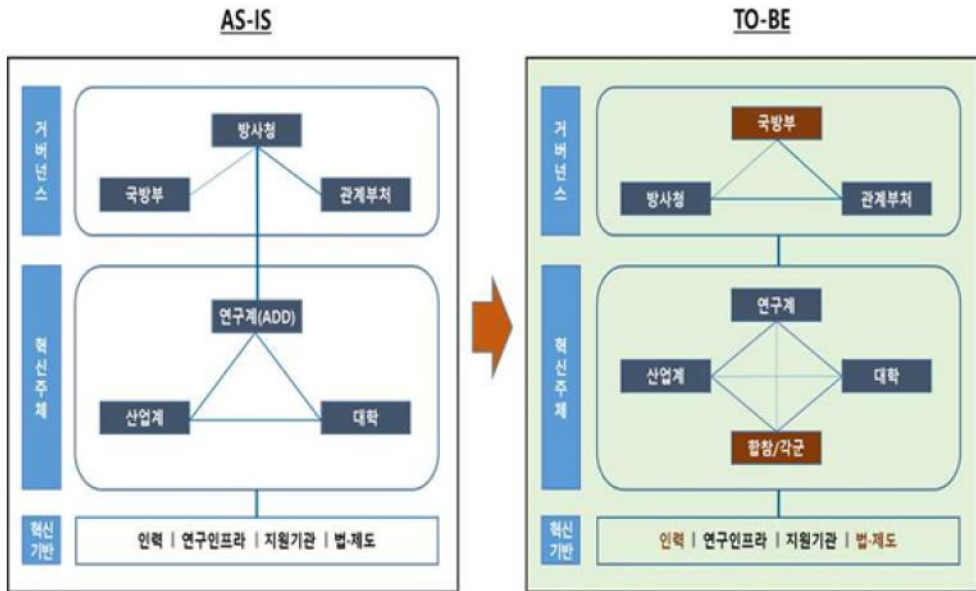
66) 지표는 리플리케이터 구상에 관한 DIU의 설명에서 역추론한 것이다. Diu/mil/replicator.

67) 개념 정의는 개념의 외연과 내포를 규정하기 때문에 국방혁신 생태계라는 개념을 정의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영역과 주요 행위자를 식별하고, 행위자의 임무, 행위자 간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임무 흐름, 임무 성과지표 등을 체계화할 수 있다.

68) 장원준. “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포커스」(산업경제연구원, 2024. 11. 29), p.28.

69) 국방혁신 생태계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주체들의 형태, 주체들 간 상호작용, 활동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라고 국방혁신 생태계의 분석범위를 밝히고 있다. 하태정 외(2022), p. 5.

〈그림 2〉 한국의 국방혁신 생태계 개선 방향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 출처: 하태정 외(2022), p. 11.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R&D) 및 획득체계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양산 및 계약 집행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방위사업청의 절차는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확보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첨단 상업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제도적 대응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 획득 방식과 민간 기반 조달 간의 기능 분담과 조정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국방혁신조직(K-DIU)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기존 방위사업청과 충돌하지 않도록 이원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민간기술 기반의 신속획득 전담 조직으로서 기획-기술 식별-시범 운용 중심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양산, 계약 집행, 시험평가 등의 기존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역할 분담의 정합성을 기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방부 직할의 ‘국방혁신기획단(가칭)’과 같은 상설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직은 국가안보실, 합참, 각 군과의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범정부적 기술기획 및 민군협력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허브는 기존 획득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국방혁신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국방 R&D 환경에서는 소요기획과 기술기획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반복적인

기술 사장 및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한국형 DIU는 기술기획-소요기획-시험 및 시범 운용-획득 연계라는 전 주기 통합 구조의 중심축으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방혁신이 실질적인 전력화와 민간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민군 융합과 기술 주권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한편 국방혁신은 단기적 가시성과 장기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의 기능 분담을 전제로 한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혁신 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기술 실험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⁷¹⁾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온램프(On-Ramp)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여 민간의 자발적 기술 제안이 수시로 접수되고, 즉각적으로 기술 검토가 이루어지는 유연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존의 R&D 과제 선정 체계를 보완하고, 연중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술 아이디어의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기술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조기에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병행 구축하고, 운용 부대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술과 운용 개념 간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테스트베드의 운용과 기술 검증은 한국형 DIU가 주도하고, 이후 성능이 확인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양산, 계약,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담당하는 분업 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능 중복이나 절차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군기술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기술 협력 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민간 자본을 국방기술에 유입할 수 있도록 국방 ETF(Exchange Traded Fund) 등의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국방기술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사업화 컨설팅, 후속 투자 유치 등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술 파이프라인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⁷²⁾

마지막으로,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은 시범 운용 기반의 기술 혁신 개념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어, 민간 신기술 조기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유연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⁷³⁾ 한국형 DIU는 미국 DIU의 'Prototype-to-Fielding' 모델

70) 국방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방사청.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2025), 별지 27-5 참조.

71) “李대통령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대강국 도약.” 「연합뉴스」 (2025. 10. 20).

72) 국방당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방위사업청.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2025. 9. 3).

이나 APFIT 프로그램과 같이, 시제품 운용-피드백-성능 검증-예산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시범 운용 결과가 전력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전력화 촉진 계획(Accelerated Fielding Plan)'의 제도적 반영 여부, 예산편성과 과업 지시서 간의 연계 방식 등을 모색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기능 분담이 명확히 조정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중복을 완화하고 협력구조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3) 김경식·김동수.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전력발전업무체계 혁신 방향: 국방과학기술, 무기체계 개발 간 소요군-개발자 협업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9권 2호(2023).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25. 6. 26. 개정.
- 국방부·방위사업청.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2025. 9. 3).
- 김경식·김동수.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전력발전업무체계 혁신 방향: 국방과학기술, 무기체계 개발 간 소요군-개발자 협업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9권 2호 (2023).
- 김용선. “미 국방획득혁신의 아이콘, DIU의 혁신공학에 대한 단상.” 『국방과 기술』 제550호 (2024).
- 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2024. 9. 12.
_____.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5. 3).
- 장원준. “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포커스』 (산업경제연구원, 2024. 11. 29).
- 장용진·김봉선·김언수. “군사기술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경영학회』 제24권 제2호(2024).
- 제환주. “미 국방혁신생태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국내 국방기술 R&D 체계 발전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9호 (2024).
- 최수동. “무기체계 탐색개발단계의 개념 및 복수 연구개발의 발전방향.” 『국방논단』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5. 6. 23).
- “李 강조한 방산 中企 육성…전문가 3인 “K국방혁신단 설립, 방산 스타트업 투자해야.” 『조선비즈』 (2025. 7. 14).
-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Mission Capabilities, U. S. DoD. “What is APFIT?” <https://ac.cto.mil/apfit/>.
- Beck, Douglas A. Director of DIU. ““DIU 3.0”- Scaling Defense Innovation for Strategic Impact.” February 7, 2024.
- _____. “Testimony before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 of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15, 2024.
-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https://www.dau.edu/sites/default/files/2025-04/DIU%20OTA%20Today%2030%20April.pdf>.
- Defense Innovation Board. “Terraforming the Valley of Death.” July 20, 2023.
- _____. “Scaling Nontraditional Defense Innovation.” January 8, 2025.
- Defense Innovation Unit (DIU). “About DIU.” <https://www.diu.mil/about>.
- _____. “Shield AI —Autonomous Tactical Airborne Drone.”

- _____. “DoD Successfully Deploys Commercial AI Infrastructure To Support Underwater Target Threat Detection.” June 17, 2024.
- _____. “Major Capability Acquisition,” <https://aaf.dau.edu/aaf/mca/>.
- _____. “Commercial Solutions Catalog,” <https://www.diu.mil/solutions/portfolio/catalog>.
- _____. “Work With US.” <https://www.diu.mil/work-with-us/commercial>
- _____. “Resource Guide.” [Diu.mil/defense-innovation-onramps-hubs-resources-guide](https://www.diu.mil/defense-innovation-onramps-hubs-resources-guide).
- _____. “Commercial Solutions Opening,” <https://www.dau.edu/sites/default/files/Migrated/CopDocuments/DIUx-Commercial-Solutions-Opening-White-Paper.pdf>.
- _____. “DIU’s Thunderforge Project to Integrate Commercial AI-Powered Decision-Making for Operational and Theater-Level Planning.” March 5, 2025.
- _____. “DIU Awards Three Contracts to Streamline DIU’s Budget Execution and Project Management.” March 18, 2025.
- _____. “Replicator,” [Diu.mil/replicator](https://www.diu.mil/replicator).
- _____. “Regional Outreach.” [Diu/mil/regional-outreach](https://www.diu.mil/regional-outreach).
- _____. “Innovation Fact.” August 7, 2024.
- Edwards, Jane. “DIU, Navy Issue Success Memos to 5 Machine Learning Operations Toolset Providers.” *Executive Biz*. June 18, 2024.
- Evron and Bitzinger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litary-Civil Fusion: A New Paradigm for Military Innov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 Gentile et al. *A History of the Third Offset, 2014-2018*. (CA: RAND, 2021),
- Government of U.K. “MOD Acquisition Pipeline.” October 30, 2024,
- Horowitz, Andreessen. “DoD Contracting for Startups 101.” March 13, 2015.
- Kotila et al. *Strengthening the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CA: RAND, 2023).
- Obis, Anastasia. “A look back at the origins of DIU.” *Federal News Network*, June 4, 2025.
- OUSD(A&S). U.S. DoD. “Other Transactions Guide.” July 2023.
- OUSD(R&E) and OUSE(I&S). U.S. DoD. “F&A.” ctoinnovation.mil/faq.
- Shield AI. “Shield AI Selected for Competitive Phase of Air Force’s Golden Horde

- Vanguard Program.” September 20, 2021.
- Tucker, Patrick. “House Bill Aims to Bridge Acquisition ‘Valley of Death’ In Race to Counter China.” *Defense One*. August 25, 2021.
- United States Code Title 10 §2359 - “Pilot programs for the transition of technologies.”
- U.S.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January 8, 2025.
-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7-2042.” August 28, 2018.
- _____.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 _____.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2023*.
- _____.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Guidebook*. June 2023.
- _____, “Innovation Fact Sheet - Struggling Change to Last.” August 7, 2024.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Defense Innovation Unit: Actions Needed to Assess Progress and Further Enhance Collaboration.” February 27, 2025.
- U.S. Navy. “Integrated Battle Problem 23.2 Concludes as Unmanned Surface Vessels Return to Homeport.” January 16, 2024.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Building a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U.S. Defense Innovation Unit (DIU) -

Lee Su-jin & Yang Jungkyu & Kim Jinwoo

Keywords

DIU,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Commercial Technology Pipeline, Accelerated Acquisition and Civil-Mil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fense innovation requires a national-level model that systematically links commercial technology and defense needs, rather than focusing on weapon system moderniz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commercial technology pipeline’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U.S.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mission, implementation method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fense Innovation Unit (DIU), which serves as a hub within this eco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stages of the commercial technology pipeline: technology identification, development and adoption. Drawing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study, the paper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in Korea from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논문투고일: 2025. 10. 30.]

[심사의뢰일: 2025. 11. 23.]

[게재확정일: 2025. 12. 4.]

첨단기술이 억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이성훈**

- I. 서론
- II. 억제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기술별 억제 효과성 및 안정성과의 관계
- IV. 결론: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본 연구는 첨단기술의 발전이 기존 억제 개념과 전략적 안정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체계와 같은 첨단 군사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핵억제 개념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물리적 능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억제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략적 안정성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특히 AI·극초음속·무인체계 등의 기술은 오판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경보 및 대응 시간을 단축시켜 위기 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비대칭적 억제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한다. 나아가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술 격차와 위기 관리 역량의 불균등은 미래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첨단기술이 핵억제의 효과성과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첨단기술, 억제 효과성, 전략적 안정성, AI 자율체계, 드론·무인기술, 극초음속기술, 우주 기술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1023715).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AI 자율무기 등의 신흥파괴기술(EDTs, Emerging Disruptive Technologies)¹⁾이 억제제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 극초음속, 무인기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억제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냉전기 이래 억제제는 대량살상무기의 파괴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 의지를 단념시키는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첨단기술은 이러한 억제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억제제의 작동 방식과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며,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따라서 기존 억제전략은 디지털 혁명 시대에 등장한 첨단기술의 발전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변화된 기술환경에 부합하도록 그 개념과 운용 원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를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즉, 공격-수비의 균형에서 공격 우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기존 거부적 억제제의 개념과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첨단기술의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 기술들이 억제제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공격자와 억제자 간의 전략적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극초음속기술을 탑재한 무인기의 등장은 양측 간에 공격-수비의 딜레마를 야기하여 선제공격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안정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억제 및 위기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첨단기술은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존 억제 요건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부분 연구가 미국의 확장억제력 중심으로 대응 논의가 치우쳐 있고, 우리의 첨단기술 적용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첨단기술이 억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기제로 첨단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위의 배경하에 이 연구는 첨단기술이 억제 효과성과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기술안보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억제력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이론적 및 정책적

1) NATO 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 *Science & Technology Trends 2020-2040* (March, 2020), pp. 1-2. 신흥파괴기술 용어는 기존의 군사력운용 개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운용개념을 창출하는 기술로 이 연구에서는 첨단기술 등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2) Mazar, Michael J. & Ashley L. *Disrupting Deterrence: Examining the Effects of Technologies on Strategic Deterrence in the 21st Century* (RAND, Apr 14, 2022), pp. 48-58.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억제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첨단기술과 전통적 군사기술의 비교

전통적 군사기술이 정밀타격 능력과 플랫폼 생존성 제고 등을 통해 보복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면, 인공지능 자율체계, 극초음속 무기, 무인기 및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은 상대의 지휘통제(C2)와 전력투사 능력을 선제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확대한다. 즉, 상대가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작전 실행에 구조적 제약을 부과하여, 비용·편익 계산 이전 단계에서 전략적 선택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제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던 공격-방어 딜레마를 공격 우위의 구조로 전환하며, 이는 선제적 행동의 유인을 강화하여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군집드론, 극초음속, 사이버·전자전 및 네트워크 마비 능력의 결합은 먼저 행동하는 측이 결정적 이익을 확보하는 속도 중심 전쟁 양상을 고착화시키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경고 시간 단축, 오판 가능성 증가, 조기 충돌 위험 확대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첨단기술의 확산은 동맹 억제체계에도 구조적 재조정을 요구한다. 기존 동맹 억제가 상대국의 대규모 보복 능력과 공동 대응 의지에 기반했다면, 첨단기술 환경에서의 억제는 연합 지휘통제 체계의 상호 실시간 연결성, 데이터 공유 신뢰성, 그리고 알고리즘·AI 의사결정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핵심 요건으로 한다. 즉, 억제의 중심은 동맹이 보복할 것인가와 더불어 동맹이 얼마나 빠르고 연동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동맹이 전력 배치 중심 구조에서 네트워크·센서·AI 기반 통합 억제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첨단기술의 확산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넘어, 위기관리 체계, 그리고 동맹 작전 구조 전반의 패러다임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전략적 변수로 볼 수 있다.

2. 첨단기술과 억제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

첨단기술과 억제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국외 연구로는 우선 NATO의 신흥파괴기술에 관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³⁾ 나토는 항

후 20년간 안보환경을 변화시킬 6대 혁신 기술군으로 데이터·AI, 자율·로봇, 우주기술, 바이오·인간강화, 신소재·제조기술, 에너지·환경기술을 제시하며, 이 기술들이 전쟁 양상을 정보 중심·고속화·분산화시키며, 전통적 작전구조와 동맹의 억제·방위개념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AI 자율 무기와 초연결 전장은 의사결정 속도를 압도적으로 가속화시켜 지휘통제, 전략적 안정성, 위기관리 체계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은 작전 효율성, 위협 인지 능력, 방어 효과성 강화라는 기회도 제공하므로, 기술 혁신을 연합 상호운용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랜드연구소의 Mazarr와 Ashley는 인공지능 자율무기 등 신형 군사기술이 역제의 전통적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기술들은 공격 속도를 높이고 경보·판단 시간을 단축시켜 상대의 전력투사 능력과 지휘통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나, 위기상황에서 오인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첨단무기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위기관리 메커니즘, 신뢰구축 조치 등을 병행해야 역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국내 연구로 조은일은 인공지능(AI), 드론, 극초음속 무기라는 세 가지 미래 무기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군비경쟁, 신무기 확산, 국제규범의 공백 등 그로 인한 위험요소들을 분석한다. 특히 기술주도국과 비(非)기술주도국 간의 역학 변화, 비국가행위자의 접근 가능성 확대까지 논의하고 있다.⁴⁾ 장용은 무인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운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작전개념·지휘통제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자율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투 지속성·속도 우위가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오작동·책임소재 모호·위기관리 실패 리스크가 동반됨을 경고한다. 특히 유·무인 복합편대 운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군의 운용개념 변화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술 도입이 단순 성능 향상을 넘어서 운용체계 혁신을 요구한다고 결론짓는다.⁵⁾ 이재현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산이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억제체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핵·재래식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 난이도로 인해 기존 억제모델이 압박받고 있으며, 동맹 내 조기경보·타격 협력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센서·C2·실시간 표적식별 등에 있어 단순 플랫폼의 통합이 아닌 기능들의 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⁶⁾ 전성훈은 한반

3) NATO STO, *Science & Technology Trends 2020-2040*, pp. 2-50.

4) 조은일, “신기술은 어떻게 국제안보를 변화시키는가: 인공지능, 드론, 극초음속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안보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3권 제3호(2024), pp. 71-98.

5) 장용, “미래 무인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 제11권(2022), pp. 135-155.

6) 이재현,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산과 한미동맹의 억제 구조 변화,” 『한반도안보전략』 제11권(2023), pp. 47-67.

도에서 북핵 및 재래식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이 채택해온 재래식 억제전략을 검토하면서 첨단 정찰·미사일방어·사이버·우주 기술이 억제 기능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논증하면서 한미연합 억제체계가 기술·전술 측면에서 상호운용적 억제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⁷⁾

기존연구들을 첨단기술과 억제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기술혁신이 억제의 기본 논리인 처벌 위협 또는 거부 능력을 속도, 자동화, 복합체계 운용 측면에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적 억제 논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변화 동인을 제기하고 있다. 연속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억제의 핵심 목적이 '상대가 공격을 감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위해 보복 능력, 의지, 신뢰성이라는 고전적 억제 조건을 분석의 기본 틀로 유지한다. 차별성 측면에서, 첨단기술은 전장의 속도·정밀성·작전 연속성을 비약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억제구조를 지속적 감시-즉응-실시간 표적화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보면, 기존 연구들은 첨단기술의 성능 향상이 곧 억제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가정을 비교적 당연시해 왔다. 그러나 억제는 단순한 전력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위기 국면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의해 실질적 효과가 결정된다. 즉, 억제의 핵심은 능력 자체보다는 이를 해석하는 상대의 인식과 선택 구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첨단기술은 감시·타격·지휘통제 역량을 향상시켜 억제의 신뢰성을 높일 잠재력을 지닌다. 동시에, 경보시간 단축에 따른 오판 가능성, 신속·정밀 타격 능력 강화가 유발할 선제공격 유인, 기술 적용 속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동맹 내 기대 불일치 등 전략적 불안정 요인 또한 내포한다. 그럼에도 기존 논의는 속도 및 정밀성과 같은 기술적 지표에 집중함으로써, 첨단기술이 각 행위자에게 상이한 위협 인식과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억제 효과는 단순한 물리적 능력 향상보다는 해당 기술이 위기 상황에서 억제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지, 혹은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켜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첨단기술이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운용 맥락과 상호 인식 구조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첨단기술이 어떤 조건하에서 억제를 강화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글은 첨단기술의 억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운용 조건과 기준을 명료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억제 전략 설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전성훈, "북핵 시대의 재래식 억제 개념 재구성" 『안보연구』 제 12권 제 1호(2023), pp. 88-108.

3. 첨단기술 환경하 억제제의 효과성과 전략적 안정성의 개념화

가. 억제제의 효과성 평가 기준

냉전 시기 확립된 억제 이론은 적에게 ‘공격 시 용납할 수 없는 대가’를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보복할 수 있는 실제 능력, 그 능력을 사용할 의지 및 의사전달,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상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성공조건들에 기반한 억제제의 효과성이란, ‘억제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안정적으로 형성 및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억제는 단순히 보복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상대의 선택구조를 변화시키는 심리적 설득 과정이다. 따라서 억제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능력 비교보다는 상대가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억제이론은 상대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①그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②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며, ③공격 하더라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④특히 동맹의 결속으로 인해 더욱 광범위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는 Schelling의 거부적 억제⁸⁾, Snyder와 Huth & Russett의 비용-편익 억제모형⁹⁾, Posen의 전쟁수행능력론,¹⁰⁾ 그리고 Snyder 등이 발전시킨 동맹 신뢰 및 확장억제 이론¹¹⁾에서 각각 강조된 요소들이다.

위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 기술이 억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상대방의 대응능력 무력화 가능성이다. 억제자가 첨단기술을 통해 상대의 감시·방어·지휘능력을 제약함으로써, 상대가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억제자는 신속한 정보 우위와

8)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켈링은 공격의 성공 가능성 인식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이 억제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9) Glen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비용-편익 억제모형은 상대의 기대편익 < 기대비용 구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Paul Huth & Bruce Russett, “Deterrence Failure and Crisis Esca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 no.1 (1988), pp. 29-45. 이들은 상대가 인지하는 공격의 성공 가능성과 비용-편익 계산 변화가 억제 성패를 좌우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Barry R. Posen,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28, no.1 (2003), pp. 5-46. 포젠은 전력투사 능력의 유지/마비가 장기적 전략 목표 달성 가능성과 억제 지속성의 핵심임을 규명하고 있다.

11)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스나이더는 동맹의 결속이 흔들릴 경우 억제 신뢰성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사결정 시간을 확보하여 공격 시도에 대한 상대의 기대 이익을 낮추고, 반대로 실패 위험과 비용을 높인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상대가 공격을 선택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핵심 억제 요인으로 작동한다. 둘째, 공격의 비용-편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은 공격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있다. 즉 억제효과는 첨단기술이 기대손실과 기대이익 계산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상대국의 전력투사 능력을 마비시키는 능력은 상대가 장기전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하여, 전쟁 개시의 전략적 목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는 억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조건이다. 넷째, 동맹국의 결속과 공동 억제 신뢰성에 대한 영향은 확장억제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동맹 신뢰와 응집력이 유지될수록 상대는 공격 시 더 광범위한 집단적 대응을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어 억제의 신뢰성이 강화된다. 요컨대, 억제의 효과성이란 상대를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복합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위 네 가지 판단 기준은 바로 그러한 인식 구조를 어떻게 기술이 재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요소들이다.

나. 전략적 안정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전략적 안정성이란, 억제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핵무기 사용의 유인이 최소화되고, 군비경쟁의 동기가 억제된 상태를 의미한다.¹²⁾ 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뉜다. 위기 안정성은 위기 상황에서 선제공격의 유인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¹³⁾ 군비통제 안정성은 양측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제한적 군비경쟁을 추진하지 않는 균형 상태를 뜻한다.¹⁴⁾

위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안정성의 판단 기준은 첫째, 첨단기술 보유로 인한 지정학적 균형 변화 여부이다.¹⁵⁾ 즉, 핵심 전략기술의 보유는 상대의 취약성 또는 군사적 우위 가능성을 급변시켜 전략적 균형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휘통제체계의 마비 또는 오작동 가능성이다. 핵전력 운용의 핵심인 지휘통제 체계(NC3)의 취약성은 우발적 핵사용 또는 위기 확산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해친다.¹⁶⁾ 셋째, 선제공격을 유

12) Wohlstetter, M.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Foreign Affairs*, Vol. 37(1959), pp. 211-233.

13) Schelling(1966), p. 19.

14) Freedman, L.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London: Palgrave Macmillan 2004), p. 165.

15) Acton, J. "Escalation through Entanglement," *International Security*, 44(1) (2020), pp. 67-73.

16) Acton, J. (2020), pp. 62-66,

도할 동기의 촉발 여부이다. 기술 비대칭과 ‘use it or lose it’ 인식은 상호 선제공격 유인을 증가시켜 위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¹⁷⁾ 마지막으로 군비경쟁의 유발 가능성이다. 신기술 도입이 군비경쟁의 촉발 요인이 되며, 이는 군비통제 안정성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 분석을 위한 첨단 기술의 선정

역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방부, 나토, 한국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제시한 핵심 기술 목록을 대조·분석한 후, 관련 기준을 거쳐 도출하였다. 미국방부는 2023년 14개의 핵심 기술 영역(Critical Technology Areas, CTAs)을 지정하여 국가안보 및 군사 우위 확보를 위한 중점 기술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⁸⁾ 나토(NATO) 또한 신흥파괴기술을 다수 선정하여 향후 억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AI, 자율체계 등 10대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게임체인저’로 관리하고 있다.¹⁹⁾ 한국 국방부는 2022년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기반 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개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²⁰⁾

〈표 1〉 한국, 미국, 나토가 지정한 주요 첨단기술

미국방성	나토	한국 국방부
AI 자율체계	인공지능(AI) 자율체계	자율·인공지능
우주	양자기술	유무인자율체계
사이버	생명공학	양자 기술
3D 프린터	극초음속기술	우주 기술
지향성 무기	우주 기술	에너지 기술
극초음속기술	차세대 통신(5G/6G)	첨단소재
바이오	지향성 에너지	사이버 기술
양자 기술	전자전	전자전
6G	사이버 및 정보작전	극초음속 추진기술
로봇	신소재	WMD 대응 기술

17) Glaser, L. “Security Dilemma and Offense-Defense Theory,” *World Politics*, 44(3)(1990), pp. 428-431.

18) DoD,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2023*, <https://media.defense.gov/2023/May/09/검색일, 2025.9.18.>

19) NATO STO(2020), pp. 2-50.

20)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2-’26)」, <https://gbtis.re.kr/file/readFile.tc?>(검색일, 2025.7.18.).

세 기관의 핵심기술 목록을 대조한 결과, ① 지정의 공통성, ② 억제 구조와의 직접적 연계성, ③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파급력을 기준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위 기준에 근거해 AI 기반 자율체계, 극초음속, 무인·드론, 우주 기반 기술을 억제 효과 분석의 대표 기술군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연구대상 첨단기술의 선정 기준과 결과

핵심기술	선정 이유	주요 비교 근거
AI 자율체계	- 세 기관 모두 '1순위 핵심기술'로 지정 - 전장 지능화의 중심축으로 모든 기술과 결합 가능 - 세 기관 모두 '자율·인공지능'을 우선 순위 항목으로 설정	공통성, 억제 연관성 기술 융합성 가장 높음
극초음속기술	- 세 기관 모두 억제 개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 - 핵무기 대비 신속·정밀타격 수단으로 '전략적 대체제' 기능 - NATO는 "극초음속기술"을 억제체계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명시 - 한국 국방부 또한 '추진기술'을 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	공통성 및 억제연관성이 비교적 높음
무인기 (드론)	- 세 기관 모두 '자율·무인체계'를 미래전의 핵심축으로 지정 - 미국은 AI와 결합된 무인체계를 JADC2·Replicator Initiative에 적용 하여 억제의 핵심전력으로 추진 - 전장 자동화, 병력 절감, 감시·공격·보급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	공통성, 억제 효율성 및 기술 융합성 높음
우주기술	- 세 기관 모두 우주를 공통적 우선 순위에 명시 - 우주는 AI와 함께 기술 간 융합효과가 가장 높은 기술	공통성 및 기술 융합성 높음

III. 기술별 억제 효과성 및 전략적 안정성과의 관계

1.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체계

가. 군사적 적용 가능성 및 개발 동향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체계는 전장에서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기존 지휘·판단 체계의 한계를 보완한다. 고밀도 정보환경에서 AI는 우주·공중·지상·사이버 등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식별하고 대응 옵션을 산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기를 단축한다. 이는 감시정찰(ISR) 능력 강화, 신속한 대응 태세 유지, 전장 상황 우위 확보로 연결된다. 특히 자율 무인체계는 고위험 임무를 병력 대신 수행하여 인명 손실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전투 지속성을 높인다. 동시에 AI 기반 결심지원 체계는

시나리오 분석과 자원 배분을 자동화하여 지휘관이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장 인식→판단→행동의 체계를 속도·정확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시간 우위를 확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발 동향을 보면 미국방부는 2023년 ‘Replicator 구상’을 통해 대규모의 자율/반자율 체계를 단기간내 전력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개된 1차 품목에는 스위치블레이드 600(자폭형 LM), Anduril Altius-600, Ghost-X UAS, C-100 UAS(PDW) 등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미 공군의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시제기인 YFQ-42A가 2025년 비행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 DARPA는 2024년 AI가 조종하는 X-62A이 유인 F-16과 실전적 근접 공중전 교전을 수행한 세계 최초의 비행시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공대공 자율 교전시 신뢰성과 안전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²¹⁾ 또한 군집 자율 드론과 고난도 임무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병행해 실전 배치 궤도에 올렸고, 2025년에는 실제 비행시험·선정 결과가 연속 발표되며 운용개념(CONOPS)을 작성 중에 있다.

중국은 ‘로열 윙맨’형 UCAV 인 FH-97/FH-97A가 2024-25년에 에어쇼 영상 등에서 포착되었고, J-20과의 팀임무, 소형 드론 스웸 지휘, 전자전 임무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²²⁾ 현 단계에서 실전배치 수준은 불명확하나, 시범 운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대형 USV(JARI-USV-A ‘Orca’), CH-7 등 스텔스급 대형 UAV, 대량 LM/전자전·극초단파 대응체계가 전시되는 등 스웸·지상·해상 자율체계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중국은 대형 UCAV와 군집드론의 양방향 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실전 운용 성숙도는 미국 대비 불확실성이 크지만, 양적 확장과 질적 발전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러시아는 AI 투자 규모 면에서 미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전략미사일군에 AI 기반 통합 경보 체계를 도입하고, 시리아 등지의 분쟁 현장에서 AI 기반 무인차량을 실전 배치한 사례가 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이란제 자폭 드론과 함께 일부 AI 기반 전자전 장비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AI 기반 자율무기와 억제 효과성

AI 기반 자율무기는 전장 인식을 고도화하고 보복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판, 과잉반응, 통제력 상실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억제 효과성에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상대방의 효과적 대응 무력화 가능성 측면에서 AI 기반 기술은 억제자가 적의 감시·

21) DARPA 공식 보도자료(2024.4.17.), <https://www.darpa.mil/news/2024/ace-ai-aerospace>(검색일, 2025.9.20.).

22) “China Develops Own ‘Loyal Wingman’ to Rival US,” *The Defense Post*(December 16 2024).

지휘·방어 체계를 선제적으로 교란하고 대응 시간을 압축함으로써 상대의 즉각적 반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억제자는 조기경보위성, 지상·해상 레이더, 드론 및 무인기 영상 등 다중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AI로 통합·분석하여 상대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이에 기반한 선제적 경고·대응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상대가 기습을 통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격 선택의 성공 가능성과 기대 편익을 낮추는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 동시에, AI의 초고속 정보처리와 정밀 추적 능력은 억제자의 타격 정확도와 교전 지속성을 높여 상대의 요격 및 방어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는 공격 감행 시 실패 위험과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자 간 인식·능력 격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상대의 공격 의지를 약화시키는 핵심 억제 요인으로 작동한다.

둘째, 공격의 비용-편익 구조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AI 기술은 전통적 억제의 전제를 뒤흔들 수 있다. AI 및 자율무기의 발전으로 공격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소하고 기대 편익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과거에는 고가의 미사일 1기로 큰 피해를 노렸다면, 이제는 값싼 다수의 드론과 AI 활용으로 특정 표적 기능을 마비시켜 저비용으로도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AI의 초단위 의사결정 및 자동화로 공격 성공확률이 높아져 동일한 자원으로 더 큰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격자의 비용-편익 계산을 바꾸어, 이전에는 위험 부담으로 억제되던 공격을 오히려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 수 있다. 요컨대 AI 기술은 공격을 더욱 저비용으로도 수행 가능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도발이나 전쟁 개시의 문턱을 낮추어 억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전력투사 능력 마비 가능성 측면에서 AI 기술은 억제자가 상대의 핵심 전력 전개 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간섭·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즉, 억제자는 조기경보위성·지상·해상·공중 레이더와 무인체계로부터 취득한 다중 소스 정보를 AI로 통합·분석하여 상대의 전력 이동·집결·운용 신호를 조기에 식별하고, 필요시 정밀타격이나 전자교란 등으로 해당 전력의 기능적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²³⁾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기습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상대의 전력투사 과정 자체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전력을 전개하는 순간부터 높은 노출·소모 위험을 인식하게 되어, 전력투사 자체를 기피하거나 그 규모·속도를 제한하는 등 작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넷째, AI 기술은 동맹 결속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 AI 자율체계는 전장 판단과 대응

23) 양욱, “모자이크전을 통한 결심중심전의 미래전,”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2022년 12월), p. 28.

속도를 높여 연합 작전 효율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권한 배분·자율성 수준·교전규칙(ROE) 조정 문제는 동맹 간 전략·윤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투명성·기술 성숙도 격차는 정보 공유 범위와 작전 책임 분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공동 억제 메시지 약화와 위기 대응 지연으로 귀결된다.

다. 전략적 안정성에의 영향

전략적 안정성의 요소 중 '위기 안정성'이란, 상대가 선제공격을 감행할 유인을 갖지 않도록 유지되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AI는 위기 안정성에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으로, AI는 정밀한 조기경보와 합리적 판단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신중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상대의 군사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 공격 의도가 없다'는 신뢰성 있는 평가를 제공한다면, 아측은 잘못된 선제공격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 기반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상황 판단을 빠르게 공유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위기의 시간 압박을 극단적으로 가속화함으로써 "use it or lose it"의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²⁴⁾ 초고속 무기체계와 결합된 AI 경보 시스템은 지도자들에게 수 분 내에 핵심 결정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냉철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AI 경보가 오탐일 경우, 인간이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자동화된 대응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AI가 자동반격 체계에 연결되어 있다면, 제한된 충돌이 일련의 자동화된 연쇄 반응을 거쳐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위기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한편, AI는 군비통제 영역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한다. 긍정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위성 분석이나 데이터 감시는 상대국의 미사일 시험, 전력 배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협정 이행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자율살상무기(LAWS)에 대한 국제적 규제 논의가 진전된다면, AI 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는 신규 군비통제 프레임워크 수립도 가능하다. UN 차원에서 진행 중인 LAWS 논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 AI 기술 남용에 대한 일정한 국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I 기술은 민간겸용이며 소프트웨어 기반이 강해, 수량 제한, 물리적 배치 제한 등의 기존 군비통제 방식의 적용이 어렵다. 핵탄두나 미사일과 달리, AI 알고리즘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복제와 은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검증이 극히 어렵고, 규범 제정도 난제다.²⁵⁾ 더불어

24) Acton(2020), pp. 63-70.

25) Boulanin, V. & Verbruggen, M. *Mapping the Development of Autonomy in Weapon Systems*(SIPRI, 2017), pp. 62-66, 78-81.

AI는 군사기술을 넘어 경제 및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대국 간 규제 합의 도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라. 사례 검증

억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AI는 정보처리와 표적 획득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상대의 대응 가능 시간을 축소시키고, 전력 손실 대비 타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작전환경을 조성한다. 러-우전에서 우크라이나는 위성·드론 영상 정보를 AI 기반 분석 체계에 연동하여 러시아군의 병력·장비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타격 결정을 가속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보-판단-사격 사이클을 수시간 단위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시켜, 상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러시아는 Lancet과 Orlan과 같은 저비용 자율 공격체계를 반복 운용하여 정밀타격의 비용-편익 구조를 변화시켰고,²⁶⁾ 이는 전쟁 수행비용을 낮추면서도 실질적 타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 선택의 매력도 자체를 높였다. 또한 이스라엘군(IDF)은 2021년 가자지구 작전에서 AI 기반 표적 추천·검증 체계(The Gospel, Lavender)를 운용하여 다중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분석하고, 과거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표적을 도출·확정함으로써 고밀도 도시전 환경에서도 시간 우위를 확보하였다.²⁷⁾ 이러한 체계는 지휘결심 주기를 단축하고, 표적 선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여 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억제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IDF 사례는 AI 기반 표적화 체계가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 탐지-판단-대응의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 억제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성 증대는 동시에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2023년 흑해 상공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MQ-9 리퍼 드론 격추 사례에서 보듯, 유·무인 체계가 혼재된 운용 환경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무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는 오판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²⁸⁾또한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자전(EW)과 GPS 교란으로 인해 일부 자율체계가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사례는, 데이터·통신 내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율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26) CSIS Futures Lab, "Calculating the Cost-Effectiveness of Russia's Drone Strikes," CSIS Analysis, (19 February 2025).

27) Harry Davies, Bethan McKernan & Dan Sabbagh, "The Gospel: how Israel uses AI to select bombing targets in Gaza," The Guardian (1 December 2023).

28) "US-Russia face-off as MQ-9 Reaper drone crashes in the Black Sea," Reuters(14 March 2023).

오판 또는 과잉 대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군집드론 운용, 알고리즘 기반 교전 추천, 인간 개입 수준의 축소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선제공격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 즉, AI 자율체계는 억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인간통제 및 규범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2. 극초음속기술

가. 군사적 적용 가능성 및 개발 동향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고속 비행, 종말 단계에서의 기동성과 불규칙 활강 궤도, 저고도 침투 능력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전통적 탄도미사일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포물선 궤적을 따르는 것과 달리, 극초음속체는 대기권 중·저고도를 불규칙하게 기동하며 접근하기 때문에 조기경보 레이더와 미사일방어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급격히 축소시킨다. 이러한 탐지·판단·대응 시간의 압축은 곧 전장의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전술·전략적 의사결정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고 전장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대응할 시간 자체가 수분 단위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는 평시 억제와 위기 시 대응 능력 모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주요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주요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

연도	국가	주요 체계	발사 방식	성능	배치/시험 상태
2019	러시아	Avangard (HGV)	지상발사 ICBM 탑재 활강체	최고 Mach 20-27	실전 배치
2019	러시아	Kh-47M2 Kinzhal	공중발사형	속도 약 Mach 10, 사거리 약 460-480km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2022	러시아	3M22 Zircon	해상발사형	속도 Mach ~9, 해상·지상 겸용 타격능력	해군에 실전 배치
2020	중국	DF-17 + HGV(DF-ZF)	지상발사(도로이동형)	사거리 약 1,800-2,500 km, HGV 탑재 가능성	열병식에 공개
2021	중국	궤도하강형 시험	로켓 궤도 후 활강-재진입	궤도 진입 후 활강 → 미사일 방어 회피 지향	시험단계
2024-2025	미국	LRHW	지상·해상발사형	개발 중, 2025년 말 운용배치 목표	시제품 단계
2023-2025	미국	AGM-183A ARRW	공중발사형 (B-52 등)	시험 실패 반복, 예산 삭감 → 재검토	시험개발
2025 (10월)	북한	신형 시험발사	지상 발사형	두 발 발사, 정확히 명명된 체계명 미공개	시험개발

현재 러시아, 중국, 미국이 이 분야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 세계 최초로 HGV인 Avangard를 실전 배치하였고, 공중발사형 Kinzhal, 해상발사형 Zircon까지 개발하면서 3축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DF-17 미사일에 HGV를 탑재해 2019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공개했으며, 사거리 약 2,000km, 속도 마하 10 이상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8년 싱콩-2 시험 성공, 2021년에는 궤도 하강 방식의 FOBS 유사 시험을 통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회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미국은 지상발사형 LRHW, 공중발사형 AGM-183A(ARRW), DARPA와의 공동 프로젝트인 HAWC, TBG 등을 개발 중이다.²⁹⁾ ARRW는 2023년 시험 실패로 일부 계획이 재조정되었으며, 미국은 2020년대 후반까지 육·해·공 전력 모두에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기술을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나. 극초음속기술과 억제 효과성

극초음속 무기는 경보·판단·요격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켜 공격 성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억제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반면, 속도 압박은 오판과 대응 과잉의 위험을 증대시켜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한다. 첫째, 상대방의 효과적 대응 무력화 가능성 측면에서 극초음속 무기는 현존하는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만큼의 특성을 갖는다. 마하 5를 넘는 속도와 불규칙 기동능력을 지닌 극초음속 활공체 및 미사일은 현재의 미사일 경보 및 요격망으로 탐지·방어하기가 극히 어렵다. 다시 말해 극초음속 공격에 직면한 상대는 효과적인 대응이나 방어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로써 공격자는 반드시 타격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얻는다. 실제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전력으로 미국의 대응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자국의 보복능력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공격의 비용-편익 구조 변화 가능성에서 극초음속 무기는 공격-방어 간 균형을 공격 우위로 이동시켜 억제에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기존 억제전략은 공격 시 치를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극초음속기술의 발전은 이 계산법을 변화시킨다. 방어망을 회피하는 극초음속 타격수단은 적은 수의 정밀타격으로도 상대 핵심 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어 공격자의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로 항공모함이나 지휘소 등을 타격할 경우, 전통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이 따르던 임무를 단일 공격으로 달성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속성은 상대의 방어노력 비용을 급증시켜

29) 미 국방부 보도자료(2023.3.29.), <https://www.army.mil/article/265373>(검색일, 2025.9.20.).

방어측의 부담을 높이는 반면, 공격측에는 신속한 승리 기대를 안겨준다. 이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극초음속 사용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극초음속 무기는 공격 성공가능성과 파괴효과를 높여 공격자의 비용-편익 계산을 공격에 유리하게 바꾸어 놓는다.

셋째, 상대국의 전력투사 마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극초음속 무기는 상대의 핵심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이 무기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적의 전략자산을 타격함으로써 상대의 전력투사 의지와 능력을 꺾어놓는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ICBM, 지하 지휘소부터 항모전단에 이르는 다양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지휘통제체계를 선제 타격하여 보복 명령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냉전 초기 고정 ICBM 기지가 취약해 선제공격 위협이 높았던 상황을 연상시키며, 극초음속 무기가 현대전에선 상대 전력의 활로를 봉쇄함으로써 사실상 전력투사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공격을 받는 측은 주요 전력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하고, 분쟁 개입이나 증원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즉, 극초음속 무기는 적의 핵심 전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해 상대의 전쟁수행 능력과 전력투사 기반을 마비시킬 수 있다.

넷째, 동맹국 결속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동맹 차원의 억제 신뢰성에 부정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동맹국 입장에서는 극초음속 위협하에서 그 약속의 실행을 확신하기 어려워진다³⁰⁾. 예를 들어 적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 본토나 항모를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자국 위협을 무릅쓰고 보복에 나설지 동맹국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져 동맹의 억제력 결속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극초음속 무기의 기술 유출이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동맹국 간 입장 차이도 결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동맹국은 자체 억제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 조율이 어려워지면 동맹 내부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동맹의 확장억제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전략적 의견차를 야기함으로써 동맹국 간 결속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다. 전략적 안정성에의 영향

극초음속 무기는 위기 상황에서 선제공격 유인을 증대시킴으로써 위기 안정성을 심각하게

30) Centre for Air and Space Power Studies, "Tipping the Scales? The Influence of Hypersonic Weapons on NATO's Deterrence Relationships," *ASPR* Vol. 24 Iss. 2/3 (2024), pp. 17-18.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대만해협 위기에서 중국이 DF-17 극초음속 부대를 전개할 경우, 미국은 항모 전단 등 전략자산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예방 타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능력과 대응 시간을 고려하여 조기 사용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³¹⁾. 이와 같은 불신과 오판 가능성은 위기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 또한 극초음속 무기의 고속성과 자동화된 조기경보체계와 결합될 경우, 경보 오류에 대한 검증·수습 시간이 부족해진다. 위기 시 허위 경보 → 오인 판단 → 핵 대응으로 이어지는 우발적 핵충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전략적 안정성의 근본적 위협이 된다.

더 나아가 제도적 측면에서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핵군비통제 체계의 규제 대상 밖에 놓여 있어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예를 들어 미러 간의 New START 조약은 ICBM, SLBM, 전략폭격기 및 핵탄두에만 적용되며, 극초음속 활공체가 ICBM에 탑재되는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 조약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애초에 조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³²⁾. 군비통제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무기의 위험성 완화를 위한 조치로 발사 시험 사전 통보, 비행경로 설정, 투명성 확대 등의 신뢰구축조치(CBMs)를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합의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극초음속기술을 핵전력 현대화의 핵심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며, 러시아 또한 자국이 전략적 비대칭 우위를 보유한 기술을 제한하는 데 부정적이다. 미국 역시 아직 실전 배치 이전 단계에 있어 다자적 합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군비경쟁과 선제공격 압박을 동시에 가속화시키며, 제도적 규제의 부재 속에 전략적 안정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라. 검증 사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은 극초음속무기가 억제체계 전반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전환시키는지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다. 러시아는 킨잘(Kinzhal)과 지르콘(Zircon) 등 극초음속무기를 실전에 투입하여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으로 일부 요격에 성공했음에도, '기존 방어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침투능력'을 과시하는 전략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효과를 넘어 서방의 방어 의지를 시험하고 압

31) Acton J. *Hypersonic Boost-Glide Weapon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5), pp. 8-14, 20-23.

32) 2019년 해거티(Hagerty) 미 상원의원이 러시아·중국과의 극초음속 무기 제한 협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박하는 심리적 억제수단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이 DF-17, DF-27 등 활공형 극초음속무기를 ‘항모킬러’로 활용해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력투사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투사 마비 가능성의 전형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미국 항모전단이 중국 본토 인근에 진입할 때 노출되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미군의 전력투사 의지와 동맹국의 신뢰를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미중 간 극초음속 경쟁은 동맹결속과 전략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파급을 미친다. 동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작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자율적 억제 능력 확보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극초음속무기가 조기경보체계와 자동화된 대응망과 결합될 경우, 위기 시 “선제사용(use-it-or-lose-it)”의 압박이 강화되어 오판과 불안정성이 확대된다. 결국 극초음속무기 확산은 기술적으로는 공격자의 억제 능력을 높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상호확증파괴(MAD)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양면성을 지닌다.

3. 무인기/드론 체계

가. 군사적 적용 가능성 및 개발 동향

무인기(드론) 기술은 전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핵심 전력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군사적 필요성은 정보획득·지속감시, 위협 회피, 기동·타격의 분산화, 효율적 전력 운용이라는 기능적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무인정찰기는 장시간 체공을 통해 고밀도·다중센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플랫폼이 제공하기 어려운 지속적 ISR(정보·감시·정찰)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지휘관의 상황인식과 의사결정 주기를 단축시킨다. 또한 무인체계는 ‘소모 가능’ 자산으로서 고위험 임무를 대신 수행하여 인명·고가 자산의 노출을 줄이고 전투 지속성을 제고하며, 스웩·분산형 전술과 결합된 무인 공격·교란 능력은 적의 방어망을 교란·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더불어 저렴한 비용과 빠른 생산·배치 가능성은 억제력 증강에 기여한다.

미국은 2023년부터 무인기·드론체계의 발전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공군은 유·무인 개발팀(crewed-uncrewed teaming)의 핵심 축인 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를 본궤도에 올려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차기공중우세 확보 프로그램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예산 일부를 CCA로 이동시키며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³³⁾ 미 국방부는 2023년 발표한 ‘리플리케이터(Replicator) 이니셔

3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Air Force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NGAD) and*

티브'를 통해 “수천 대 규모”의 저가 소모형 자율체계를 단기간 내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운용개념을 검토 중에 있다. 기존의 중·대형 무인기는 MQ-9 리퍼의 다영역작전(MDO) 체계화, 위성통신을 통한 원격 이·착륙 기술, 그리고 해병대·공군용 탑재체의 기능 향상으로 분쟁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ISR 연속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국은 장거리 타격·스텔스·swarm(스웬)을 축으로 하여 드론 체계를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다.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GJ-11(스텔스 UCAV), FH-97A(무인기 워맨), 워룡 계열 등 차세대형 무인기를 대거 선보이며 유·무인 복합체계와 엔진 기술력을 과시했고, 2025년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전후하여 스텔스 공격 드론과 신형 플랫폼 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군집드론 운용 실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만해협 유사시 다수의 무인기를 분산·동시 운용하는 전술이 실제 작전 개념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Orion, Forpost와 함께, 이란제 Shahed-136 자폭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전 투입함으로써 드론 운용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술적 드론전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중이다.

나. 무인기/드론 체계와 억제 효과성

무인기(드론) 체계는 저비용·대량 배치·자율운용이라는 특성과 분산·동시다발적 위협을 통해 상대의 의사결정체계를 교란함으로써 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무인기 기반의 지속감시·정찰 덕분에 상대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사전 경고 및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상시(24시간) 드론 정찰로 북한의 핵공격 준비를 추적할 수 있다면, 북한은 기습효과 상실과 아군의 즉각적인 보복 가능성 때문에 공격 의지가 크게 저하될 것이다. 또한 드론은 소음을 낮추고 레이더 반사 면적(RCS)이 작아 적 레이더망을 회피하거나 군집(swarm)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AI가 결합된 소형 자폭드론 군집은 적의 레이더 기지를 일시 마비시키고, 나아가 실시간 표적 식별부터 타격까지 자동화된 kill chain(킬체인) 완성을 통해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드론의 등장은 전투의 비용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과거 고가의 유인 무기체계 대신 다수의 저가 무인기를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값싼 드론 수십 기로 특정 표적을 무력화하면 전체 공격단가는 낮아지고 지속적인 공세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저비용의 드론 군집은 기존에 경제적·정치적으로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RS, 2025), pp. 4-6.

부담되던 공격 옵션들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격 옵션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동시에 드론은 조종사 위험을 제거하여 전투인원의 손실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킨다. 아군의 입장에서선 소규모 충돌에서 인명 피해 없이 공세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응징 문턱이 낮아지고, 이는 공격자에게는 편익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요컨대 드론 기술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군사효과를 구현함으로써 공격에 따르는 비용-편익 구조를 공격자가 유리하게 느끼도록 변화시킨다.

셋째, 드론은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국지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이다. 군집 드론과 자율공격체계는 적의 병력 이동과 물자 보급로를 교란하거나, 고가치 자산을 지속 타격함으로써 상대의 전력 전개를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고고도 장기체공 드론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지속 추적해 은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다수의 소형 드론은 적의 방공 레이더 기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실제로 AI 기반 드론이 정찰부터 타격까지 자동화된 작전을 펼칠 경우 적은 짧은 시간에 핵심 전력이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의 전반적인 전력투사 의지를 꺾어놓는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중소 규모 국가들도 드론을 통해 상대국의 군사개입을 억제하려는 비대칭 억제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드론은 적의 핵심 전력과 지원망을 국부적으로 마비시켜 전력투사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억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드론 기술의 확산은 동맹 간 전략적 판단과 대응 일치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한다.³⁴⁾ 드론은 그 사용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이중성을 지닌다. 예컨대 정찰용 드론 비행은 평시 정보 수집 활동으로 간주되어 명확한 억제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민간 드론을 개조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국가 행위인지 테러 행위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동맹 차원의 공통 대응이 복잡해진다. 이러한 회색지대 상황에서는 일부 동맹국은 강경 대응을, 다른 국가는 신중함을 견지하면서 동맹국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완전 자율 살상드론이 등장하면 오인 공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동맹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전략적 안정성에의 영향

드론은 인명 피해 우려 없이 정찰-경고-타격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유연성과 관리 능력을 높인다. 그러나 위기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 갈등을 확대하여, 상황이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인다. 이처럼 드론은 위기 안정성

34) Michael Spirtas et al., *Drone Proliferation and the Challenges for Allied Cohesion* (RAND Corporation, 2023), pp. 9-11.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특히 자율 살상드론이 실전 배치될 경우 인간 통제 없이 자동 교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른바 ‘부분적 자율전쟁(partially autonomous warfare)’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이들 자율 무인체계 간의 우발적 충돌이 핵심 자산을 손상시킬 경우, 오판이 핵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여 전략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³⁵⁾.

드론 분야의 군비통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은 사거리 300km·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무인기를 범주 I(Category I)로 분류해 수출 자체를 권고하지만, 이는 비구속적 체제로 실효성도 제한적이다. 중국, 튀르키예 등은 이를 우회해 개도국에 무인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통제 틀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NATO 등에서 AI 및 드론 활용에 대한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드론 기술이 제도적 관리 밖에서 전략적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 ‘핵무기 운용에 자율 AI의 개입 금지’ 및 ‘치명적 타격 능력을 가진 자율무기의 제한’과 같은 부분적 규범 형성이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드론의 확산은 중소 국가가 비대칭 억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 경우 지역 분쟁 억제와 위기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략적 안정성 관점에서 핵심은 인간의 통제가 드론 운용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며, 드론 운용에 대한 사전 양해와 통보 체계의 구축을 통해 명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중 간 해상·공중 우발충돌 방지협정에 드론을 포함시키거나, 12해리 영해 이내 무단 드론 비행 자제와 같은 비공식 행동규칙을 마련한다면, 위기 상황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검증 사례

최근의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전 사례는 드론 체계가 억제의 효과성과 전략적 안정성에 양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은 상대방의 효과적 대응 무력화를 입증한 대표적 수단이었다.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제 Bayraktar TB-2를 활용해 러시아 지상군과 보급차량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대규모 병력 이동을 지연시켰고, 러시아의 감시·방공망을 교란시켰다. 2023년 이후에는 자국산 장거리 자폭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 인근 정유시설과 항공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 본토의 후방지대를 무력

35) Paul Scharre, *Army of None: Autonomous Weapons and the Future of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8), pp. 199-206, 271-276.

화했다. 이러한 경험은 드론이 고속기동무기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전략적 타격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상대의 방공체계를 과부하시켜 대응시간을 빼앗는 ‘비용-편의 구조 변화’를 실증한다. 러시아 역시 Lancet·Shahed-136 군집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지속 압박함으로써, 드론 전력의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의 억제제산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중동전 사례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9년 이란의 후원 세력이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을 때, 사우디 방공망은 저공침투한 다수의 소형 드론을 탐지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저가·소형의 비대칭 무기체계가 전략적 자산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력투사 마비 가능성의 현실화를 입증했다. 또한 2023년 홍해와 이라크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기지 드론 공격은, 공격 주체의 불분명성 때문에 동맹국 간 대응수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견을 불러일으켰다.³⁶⁾ 이는 드론의 회색지대적 특성이 동맹 결속과 억제신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드론이 전장의 투명성과 비용구조를 재편하면서도, 동시에 위기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인명 손실 부담이 적은 드론은 분쟁 확대의 정치적 문턱을 낮추어, 국지적 충돌이 확산될 위험을 높인다. 특히 자율살상드론이 다수 등장한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AI가 표적을 공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부분적 자율전쟁’의 전조로 평가된다. 결국 드론은 억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도, 인간 통제 부재와 책임 불명확성으로 전략적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양날의 기술로 기능한다. 따라서 향후 억제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드론 운용에 대한 사전 통보·책임 명문화·인간통제 원칙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4. 우주기반 기술

가. 군사적 적용 가능성 및 개발 동향

우주 기술은 위성체계, 우주발사체, 우주감시망 및 반위성무기(ASAT) 등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군사작전의 정보·정밀타격 우위를 확보하고 적의 대응능력을 근본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즉, 우주기술은 전장을 연결하는 감시-통신-지휘의 기반으로, 어디서든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상대의 움직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는지,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지 등 억제 인식구조가 모두 달라지게 된다. 결국 우주기술

36) Reuters, “US-Russia Face-off as MQ-9 Reaper Drone Crashes in the Black Sea,” 2023.3.14.

은 단순한 지원 수단이 아니라, 억제 구조 전체를 작동시키는 중심 요소로 기능한다.

미국은 2020년대에 들어 저궤도(LEO) 다중위성망을 대량·분산 배치하는 '확산형 전력(PWSA)' 체계로 우주전력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우주개발국(SDA)은 2023년 Tranche-0을 배치하여 저궤도에서 미사일 경보·추적 및 신속한 데이터 전송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PWSA의 '대량·분산·탄력' 아키텍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후 추가 발사를 통해 운용 시연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4-25년 Tranche-1 단계에서는 Global Sentinel 등 연합훈련을 통해 동맹국과의 우주상황인식(SA) 공유 및 연동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대형 정지궤도 자산의 실패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층 센서·전송망을 구축하고, 지상·해양·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와의 연동을 가속화했다. 이 과정에서 우주영역 인식 레이더·망원경 업그레이드 등 위성 방호·복원력 투자도 병행되었다.

중국은 같은 기간 대규모 저궤도 통신/정찰망과 궤도상 기동·근접운영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2024년에는 '스타링크 대응'으로 알려진 저궤도 대규모 민군겸용 통신망 초기 배치를 시작했다. 아울러 '킬웹(kill-web)³⁷⁾ 개념하에 우주·해양·공중·지상 센서를 연결해 표적 탐지→타격연결 속도를 높이는 지휘결심망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궤도상에서의 근접접근·포획 기술과 비파괴적 교란 수단인 전자장·레이저·사이버 및 요격형 ASAT 능력을 병행 개발함으로써, 미국 위성을 위협할 수 있는 포괄적 역량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결합은 중국이 구상하는 '킬웹(kill-web)'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며,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및 동맹의 우주기반 작전구조에 상당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나. 우주·AI·드론기술 결합시 억제 효과성

극초음속무기와 무인기(드론) 체계는 각각 속도 우위와 분산·지속 운용 우위라는 전술적 효과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체계가 실제로 전략적 억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탐지·식별·지휘·타격으로 이어지는 작전 체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우주기술이다. 우주는 감시·정찰·항법·통신·조기경보를 제공하며, 극초음속무기의 표적 선정과 타격 방식, 무인 체계의 지속·연동 구조를 결정하는 전장 인식·지휘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극초음속 무기와 드론은 개별 전투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우주기술은 이들을 연결·조율·통제하는 억제체계 전체의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대방의 대응 무력화 측면에서 우주 기반 조기경보체계와 AI 결합은 억제의 실시간 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위성 감시 정보를 AI가 실시간 분석해 위협

37) 지상·해양·공중·우주 센서를 하나로 연결해 표적 탐지에서 사격결속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지휘결심망.

식별을 자동화하면,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미 공군의 SBIRS(조기경보)와 차세대 OPIR(적외선 탐지) 시스템은 이러한 AI 기반 우주 감시망의 전형으로, 의사결정 시간을 수초 단위로 단축시키고 있다. 여기에 무인기나 자율 드론을 연계할 경우, 위성이 포착한 표적정보가 즉시 전장으로 전송되어 탐지와 타격의 시간 갭은 극도로 축소하게 된다. 이처럼 우주-AI-무인체계의 통합은 적의 기습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역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지만, 동시에 오탐·과도한 대응을 초래할 위험을 확대하여 전략적 불안정 요인을 높인다.

둘째, 공격의 비용-편익 구조 변화는 우주 공간의 비가시성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기술 결합에서 비롯된다. 우주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소형 위성과 AI 기반 데이터 융합으로 낮은 비용으로도 전방위적 감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공격의 탐지·지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킨다. 반면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정보 열세로 인해 방어 비용이 급증하며, 역제의 균형이 공격자 우위로 재편된다. 특히 AI가 결합된 소형위성군과 자율드론이 합동으로 감시·공격을 수행할 경우, 고비용의 전통적 무기 대신 '저비용-고정밀'의 복합체제로 역제의 비용구조가 재편된다. 이로써 공격의 문턱은 낮아지고, 역제의 신뢰성은 기술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약화된다.

셋째, 상대국의 전력 투사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AI-무인 체계는 적의 작전 공간을 사실상 투명화한다. AI가 위성 데이터로 적의 기동패턴을 예측하고, 드론이 이를 실시간 추적·교란함으로써 상대의 전력 전개가 초기 단계에서 제한된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전에서 상업위성과 드론 정보의 결합은 러시아군의 후방 병참선을 노출시켜 전력투사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처럼 우주 기반 감시망은 전장의 사각(dead zone)을 제거해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지만, 상대에게는 지속적 감시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한다.

넷째, 우주, AI, 무인기술의 결합은 전장을 감시·판단·대응하는 시간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압축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전력증강이 아니라 동맹 억제체계의 작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우주는 감시·경보·지휘통제의 상위 네트워크 계층을 제공하고, AI는 방대한 정보를 즉시 분석·식별하며, 무인체계는 위협 분담과 신속한 실행력을 보완한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될 경우,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할 때는 정보 비대칭과 대응 속도 격차가 발생해 동맹 결속을 약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반대로 이 기술들이 연합 운용되는 경우, 동맹은 억제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바로 이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2023년 한미 우주동맹 선언과 공동우주정책협의체(SPDC) 운영, 합동 우주상황인식(SDA) 공유 훈련은 우주정보 접근권을 동맹 차원의 공동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전략적 안정성에의 영향

우주 군사기술과 AI·무인체계의 결합은 억제 안정성과 위기 안정성에 상반된 함의를 동시에 지닌다. AI 기반 위성감시망은 정찰·조기경보·데이터 교차분석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인다. 과거 냉전기의 경보체계가 인간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위성·AI 결합체계는 수천 개의 관측 자료를 실시간 통합·검증하여 허위 신호를 걸러내고, 잘못된 핵발사 명령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군의 SBIRS·OPIR 위성망은 AI 예측 모듈을 탑재하여 탄도 궤적과 열 신호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거짓 경보’ 확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AI 융합체계는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위기 상황에서의 합리적 판단을 보조함으로써 억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정밀성과 속도는 위기 안정성의 불안정성도 내포한다. AI가 통합된 조기경보체계는 인간의 검증 절차를 압축함으로써 단일 오류나 오탐이 연쇄 반응으로 전환될 위험을 높인다. 특히 AI 판단이 핵·재래식 공격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위성 신호 왜곡에 의해 잘못된 적성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 체계는 인간의 승인 이전에 자동 대응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연결된 무인기나 자율타격체계가 위성명령을 직접 수신하는 구조에서는, 단일 오판이 전장 전체의 보복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라. 검증 사례

우크라이나전과 미중 전략경쟁은 우주 기반 AI 및 무인체계의 결합이 억제 구조와 전략적 안정성에 어떠한 양면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우크라이나전은 우주기반 감시·통신체계와 드론 전력의 결합이 억제력의 실질적 속도와 효율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는 Maxar, Planet Labs 등의 상업위성과 Starlink 위성통신망, AI 영상분석체계를 통합하여 실시간 감시·타격 루프를 구축함으로써, 러시아군의 기동과 보급망을 차단했다. 위성정보가 AI 분석을 거쳐 드론부대에 즉시 전송됨으로써 전장의 의사결정시간이 수분 단위로 단축되었고, 이는 적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효율성은 동시에 위성 교란, 스푸핑, 전자전 등 비대칭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노출시켰는바, 실제로 러시아는 GPS 교란과 Starlink 간섭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C4ISR (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무력화하려 시도하였다. 이처럼 우주-AI-드론 복합체계는 억제의 실효성을 높였으나, 그 연결성과 속도 때문에 증대한 결합이 있을 경우 전체 억제체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미중 간 패권경쟁은 이러한 기술융합이 단순한 전술혁신을 넘어 전략적 안정성의

구조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SBIRS와 OPIR 위성망, Project Maven³⁸⁾ 및 GIDE³⁹⁾ 실험을 통해 AI 기반 조기경보체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무인기·자율 무기와 연계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베이더우 위성항법망과 정찰위성을 통해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AI 데이터 및 무인기 편대 작전을 통합한 ‘우주-지상 통합 작전’ 개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경쟁은 상호 감시능력 향상으로 억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보 투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상대의 경보체계와 위성자산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유인을 증대시켜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특히, AI가 결합된 자동화된 조기경보체계가 인간의 통제를 생략할 경우, 스푸핑이나 오탐 하나가 핵억제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자동화된 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IV. 결론: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

첨단기술은 개별적으로는 상이한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존의 억제 체계와 전략적 안정성에 구조적 변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 기술들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전력증강이 아니라, 정보 수집·분석·전달·타격에 이르는 전장의 전 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억제의 성립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첨단기술의 발전은 억제의 ‘안정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AI 기반 감시·정찰 및 우주기반 조기경보 체계의 정밀성과 속도는 기습적 대규모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어, 전략적 차원의 억제력을 강화한다. 즉 전장의 가시성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확대될수록 대규모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억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군집 드론, 자율무기 등 비교적 소형 및 저비용 수단은 제한적 무력행동의 문턱을 낮추어 국지적 충돌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들 기술은 공격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거나 회색지대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기 원인이 누적되는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전면전은 억제되지만 국지적 충돌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고강도 억제의 안정성과 저강도 충돌의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전통적 억제이론은 억제의 핵심을 신뢰할 수 있는 핵보복능력에 두어 왔다. 그러나

38) Project Maven은 미국 국방부(DoD)가 2017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정보(Imagery Intelligence, IMINT) 분석 자동화 프로젝트임.

39) AI 기반의 글로벌 ‘상황인식(awareness)’과 ‘결심 우위(decision dominance)’ 확보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최근의 첨단기술 발전은 핵무기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핵 사용 이전 단계에서 위기관리와 억제의 작동 공간을 확장하는 보완적 억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우주기반 감시망과 AI 기반 정보융합체계는 상대의 핵공격 준비를 조기에 탐지하고 의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 오판 방지와 경고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미사일방어(MD)와 정밀타격 능력의 고도화는 상대가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 그 효과를 무력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거부적 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따라서 첨단 기술이 억제 구조에 적용될 경우, 억제는 더 이상 “핵 보복 능력의 존재”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핵 사용 이전 단계에서 긴장을 조절하고 대응 선택지를 확보하는 보다 유연한 억제 방식으로 변화할 여지를 갖는다. 즉, 첨단기술은 핵억제의 대체물이 아니라 핵 억제의 작동 조건을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하는 “전(前)단계 억제의 강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핵국이 핵보유국과 직접 대치하는 경우, AI-우주-MD-자율체제로 구성된 통합 억제 체계는 핵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억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첨단기술은 개별 기술의 영향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으로 억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⁴⁰⁾ 신형파괴기술의 억제 영향은 개별 기술의 성능보다 AI-우주-극초음속-무인기 간의 상호 결합 효과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AI는 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우주기술은 감시·추적 기반을 제공하며,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는 타격과 압박을 실행하면서 감시-판단-타격의 전 과정을 하나의 연동된 체계로 만든다. 이로 인해 억제의 중심은 특정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반응하는 ‘시스템 단위 억제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억제 분석에서 개별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네트워크 구조·데이터 공유·지휘통제 체계의 통합 정도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며, 이는 억제 평가의 기준이 단일 전력이 아닌 통합 전력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첨단기술은 단순한 전력증강이나 방어 능력 향상을 넘어, 억제의 작동 원리와 구조를 재편하는 실질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극초음속 미사일·사이버·전자전 능력이 동시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비핵국으로서 핵보복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억제전략은 개별 전력의 보강이나 특정 무기체계의 획득에 머물 것이 아니라, AI-우주-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동맹 연계로 이어지는 억제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설계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억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전장 가시성의 체계적 우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0) Mazar(2022), pp. 34-38.

북한의 극초음속 및 이동식 발사체 체계는 짧은 경보시간과 탐지의 곤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우리의 위기관리 행동을 제한하고 상대의 기습 유인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능동적 억제를 위해 단일 센서 기반 감시체계를 넘어서, AI 기반 다중센서 ISR 체계와 우주기반 조기경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그 징후와 준비 행위가 사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도발의 기습 효과를 약화시키고 공격의 기대 편익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도발 자체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첨단기술은 핵사용에 앞선 단계에서 공격의 비용-편익 구조를 재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AI 기반 표적식별, 정밀타격, 지휘통제 차단 능력의 향상은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이득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공격을 감행했을 때 발생할 위험과 손실을 증가시킨다. 이는 한국이 핵능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거부적 억제를 통해 북한의 공격 시도 자체를 비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핵 위협 상황에서 이는 한국에게 핵 의존 억제에서 기술 기반 억제로의 부분적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략적 창구가 된다.

셋째, 억제의 무게 중심은 더 이상 특정 무기체계의 성능에 있지 않고, 감시-판단-타격-지속의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단위 억제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첨단기술 체계는 개별적으로 기능할 때보다 상호 연결될 때 훨씬 높은 억제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억제는 단일 기술의 투사 규모보다는 첨단기술의 연동 수준과 작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억제의 실질적 신뢰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억제전략은 개별 전력의 능력 확장과 더불어 전력 간 연동성, 지속적 작전능력 및 회복성에 무게를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기술은 한미 확장억제 구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자산 및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정치·외교적 보장 구조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더불어, 전장 환경이 초연결·고속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더 이상 전력 규모나 선언적 의지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확장억제의 신뢰는 양국이 위협 인식-정보 획득-결정 과정-교전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동일한 판단 구조와 운용 체계를 공유하는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기술은 단순한 전력증강 요소가 아니라, 동맹의 작전적·구조적 결속을 실체화하는 매개 변수로 기능한다. 특히 AI 기반 지휘통제(C2) 체계는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판단하여 대응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며, 이는 '재래식-핵 통합 억제(CNI)'의 실행 기반을 제공한다. 즉, ISR·조기경보·표적판단·타격 결심의 연동성이 강화될수록, 동맹은 전략자산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는 억

제 옵션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AI 기반 조기경보 정보 및 우주 감시 데이터 공유, 첨단기술 관련 연합 교리 및 전략체계 정립 등을 통해 CNI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로서 첨단기술 관련 군비통제 메커니즘의 모색이 요구된다. 현재 극초음속, AI, 우주무기 등의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국제 통제체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는 무제한적 기술 경쟁과 군사적 오인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의 핵무기 통제 배제 원칙, 파괴적 ASAT 시험의 금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공동규범 마련 등은 여전히 실행 가능성에서 제약이 존재하지만, 향후 군사적 긴장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향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2-’26)』. 2022.
- 양 욱. “모자이크전을 통한 결심중심전의 미래전.”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2022년 12월).
- 이재현.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산과 한미동맹의 억제 구조 변화.” 『한반도안보전략』 제11권 (2023).
- 장 용. “미래 무인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 제11권 (2022).
- 전성훈. “북핵 시대의 재래식 억제 개념 재구성.” 『안보연구』 제12권 제1호 (2023).
- 조은일. “신기술은 어떻게 국제안보를 변화시키는가: 인공지능, 드론, 극초음속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안보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3권 제3호 (2024).

2. 국외 문헌

- Acton, James M. “Escalation through Entanglement.” *International Security* 44(1). 2020.
- Boulanin, V., & Verbruggen, M. *Mapping the Development of Autonomy in Weapon Systems*.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17.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ypersonic Boost-Glide Weapons*. 2015.
- Centre for Air and Space Power Studies. “Tipping the Scales? The Influence of Hypersonic Weapons on NATO’s Deterrence Relationships.” *ASPR* Vol. 24 Iss. 2/3. 2024.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ir Force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NGAD) and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RS, 2025.
- CSIS Futures Lab. “Calculating the Cost-Effectiveness of Russia’s Drone Strikes.” CSIS Analysis, 19 February 2025.
- Davies, Harry, Bethan McKernan & Dan Sabbagh. “The Gospel: How Israel Uses AI to Select Bombing Targets in Gaza.” *The Guardian*, 1 December 2023.

- Freedman, L.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4.
- Glaser, Charles L. "The Security Dilemma and Offense-Defense Theory." *World Politics* 44(3). 1990.
- Huth, Paul & Bruce Russett. "Deterrence Failure and Crisis Esca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1). 1988.
- Mazar, Michael J. & Ashley L. Tellis. *Disrupting Deterrence: Examining the Effects of Technologies on Strategic Deterrence in the 21st Century*. RAND, April 14, 2022.
- NATO 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 (STO). *Science & Technology Trends 2020-2040*. March 2020.
- Posen, Barry R.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28(1). 2003.
- Schelling, Thomas.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 Snyder, Glenn H.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Wohlstetter, A.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Foreign Affairs* 37. 1959.
- "China Develops Own 'Loyal Wingman' to Rival US." *The Defense Post*, 16 December 2024.
- "US-Russia Face-Off as MQ-9 Reaper Drone Crashes in the Black Sea." *Reuters*, 14 March 2023.
- DARPA. "ACE-AI Aerospace Program Press Release." April 17, 2024. <https://www.darpa.mil/news/2024/ace-ai-aerospace>(검색일, 2025.9.20).
- Department of Defense (DoD).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2023*. <https://media.defense.gov/2023/May/09>(검색일, 2025.9.18.).

How Advanced Technologies Reshape Deterrence Effectiveness

Lee, Sung-hoon

Keywords

Advanced Technologies, Deterrence Effectiveness, Strategic Stability, AI, Drones, Unmanned Systems, Hypersonic Weap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dvancement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is reshaping traditional concepts of deterrence and strategic stabilit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enabled autonomous systems and other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onventional nuclear deterrence frameworks are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simultaneously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deterrence in crisis situations while potentially undermining the foundations of strategic stability.

In particular, technologies such as AI, hypersonic weapons, and unmanned systems may increase the risks of misperception and miscalculation by compressing warning and response times, thereby weakening crisis stability. They may also exacerbate imbalances in asymmetric deterrence structures by altering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lowering the thresholds for escalation. In an environment of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disparities in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crisis management capacities are likely to emerge as critical variables shaping future stabilit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ystematically assesses the impact of advanced technologies on both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deterrence and strategic stability. It seeks to identif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deterrence theory and to derive policy-relevant insights for managing technological competition while preserving stability in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논문투고일: 2025. 10. 30.]

[심사의뢰일: 2025. 11. 11.]

[게재확정일: 2025. 12. 4.]

한미안보협약의 변천과 함의

이미숙*

- I. 서론
- II. 한미안보협약의 변화 동인
- III. 안보협약의 형성기(1950~1990년대): 동맹-연합방위 중심 협약
- IV. 안보협약의 포괄·전문화기(2000~2010년대): 포괄적 전략동맹-다층 협약
- V. 안보협약의 고도화기(2020년대): 확장역제 중심 협약
- VI. 종합 분석 및 함의

요약

본 연구는 한미안보협약의 변천과정과 그 역할을 주요 변화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시기별로 주요 동인이 한미안보협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한미안보협약은 직면한 안보환경과 안보 현안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변동요인으로 '미국 군사전략', '한미관계', '북한위협'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1950~1990년대는 한미안보협약의 형성기, 2000~2010년대는 한미안보협약의 포괄·전문화기, 2020년대는 한미안보협약의 고도화기라는 특징을 보였다. 형성기의 협약은 연합방위와 동맹 유지의 역할을 하였고, 포괄·전문화기의 협약은 안보협력의 강화 역할을, 고도화기의 협약은 확장역제 실행력 강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한미안보협약의 필요성이 심화·확대되는 안보 상황에서 협약의 추진 시 현안을 해결하고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한미안보협약, 변동요인, 협약의 형성기, 협약의 포괄·전문화기, 협약의 고도화기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한미안보협의체는 한미동맹의 안보협력과 정책 조율을 위해 양국이 운영하는 다양한 공식 협의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한미안보협의체로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 Consultation Group),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등이 있다. 한미안보협의체는 SCM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위 협의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미동맹의 안보정책을 조율·발전시키고 있다.

최초의 한미안보협의체는 1968년 개최된 한미 국방각료회의였다.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 안보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미 정상은 1968년 4월 17일 호놀룰루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안보협의체가 제도화되었다. 한미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 국방각료회의는 1971년 4차 회의의 시 안미안보협의회의(SCM)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안보협회는 6·25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의 국방정책에 협력하는 형태로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한미안보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1960년대 말까지 한미관계는 지원-피지원 관계였다.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국방위를 주도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미동맹의 비대칭성¹⁾으로 한국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SCM 개최 이후 1978년 11월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따라 양국 간 군사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협의기구로 한미군사위원회(MC)를 설치하여 매년 SCM과 같은 시기에 MCM을 개최하고 있다.

한미안보협의체는 1980년대까지 SCM, MCM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협의 내용과 공동선언문을 보면, 상호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동맹의 유지를 위해 제기되는 안보 현안에 대한 지침을 통보·확약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반도 및 국제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한국의 위상 변화, 미국 군사전략 변화와 동맹 내 역할 조정, 그리고 새로운 위협의 부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협의체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1) James Morrow.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1991), pp. 904-933. 모로우는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대국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치권의 일부를 강대국에 양도해주는 동맹을 '자치-안보교환(Autonomy-Security Trade Off)적 동맹'이라 했는데, 이것이 '비대칭적(Asymmeteic) 동맹'을 의미한다.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한미안보협의체는 그 구조와 의제, 운영방식, 역할 등에 있어서 변화를 보인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한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의 특성상 SCM과 같은 한미안보협의체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양국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며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한미안보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연합군사령부인데,²⁾ 그중에 한미안보협의체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안보협의체의 변천 과정과 그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시기별로 주요 변화 동인이 무엇이고, 그 동인이 한미안보협의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안보협의체의 변천 시기는 시대별로 직면한 안보환경, 동맹의 제도적 변화, 구조적 진화, 정책적 필요성 등 동인에 근거하여 ① 안보협의체 형성기(1950~1990년대), ② 안보협의체 포괄·전문화기(1990~2010년대), ③ 안보협의체 고도화기(2020년대)로 구분하였다.

한미안보협의체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미안보협의체의 구조와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SCM³⁾과 MCM의 설립 배경, 구조, 주요 의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2000년대 이후 FOTA, SPI,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통합국방협의체(KIDD), 핵협의그룹(NCG) 등 신설된 협의체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⁴⁾

둘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미안보협의체 연구이다. 즉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역사와 변화⁵⁾, 한미동맹의 강화·지속요인 및 그 추진실태, 동맹이론⁶⁾, 미·중관계⁷⁾ 등과 연계하여 한미안보협의체의 구조와 역할, 발전 방향 등을 군사전략적·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⁸⁾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 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591.

3) 최강.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제37집(서울: 00000, 2006), pp. 1-15; 엄태암. “2013년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분석: 평가와 과제,” 『전략연구』 제60호(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p. 197-226.

4) 장삼열. “조정기의 한미동맹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연구,” 『군사발전연구』(광주: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3); 한미 국방부.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등 지속 강화 합의,” 『국방과 기술』536(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3).

5) 이경태. “한·미안보 협력 관계의 재조정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제1호(서울: 대한정치학회, 2003); 하상식. “한미안보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과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서울: 대한정치학회, 2007); 추이즈잉. “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2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6) 손경호. “한미동맹의 역사 -동맹이론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7권 제2호(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3).

7) 김재철.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중소연구』 제35권 제3호(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8) 조성렬.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재정의,”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1호(서울: 통일연구원, 2002);

셋째, 한미안보협의체에서 논의된 정책 현안 및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⁹⁾, 미군기지 이전, 한·미·일 3국 안보협력¹⁰⁾, 북핵대응, 한미연합방위체계¹¹⁾, 방위비 분담금¹²⁾ 등 구체적 정책 현안에 대한 사례 연구가 주제별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확장억제¹³⁾, 사이버 안보, 미사일 방어, 글로벌 공급망¹⁴⁾, 첨단기술¹⁵⁾ 등 새로운 안보 이슈와 이와 관련된 협의체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한미안보협의체에 관한 연구는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과 연계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는 한미안보협의체를 한미동맹 연구의 하위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미안보협의체의 변화과정과 특징,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연구는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제시했으나 한미동맹에 있어서 한미안보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미안보협의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통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소

김영준. “비대칭 동맹에서 방기 우려에 대한 대책: 한미동맹의 사례,” 『유라시아연구』11(4)(서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박휘락.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실태 비교: 동맹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국강안보와 전략』15(3)(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이주은. “한미동맹의 진화요인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장광열. “비대칭동맹 변환과 약소국요인,”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철. “한미동맹의 한국군 자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전략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송세관.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방향,” 『대한정치학회보』27(서울, 대한정치학회, 2019); 이창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 유지 요인에 관한 연구: 동맹의 결속과 해체 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홍찬희. “한미동맹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박원근. “한미동맹 미래 발전방향: 향후 30년을 위한 의견,” 『한국국가전략』제21호(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김형진. “한·미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외교 활성화,” 제21호(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성기은·신성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념 변화에 관한 연구: 구조토픽모델(STM)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3집 3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 pp. 55-93.

- 9) 윤태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위기관리체계 변화양상과 발전방안 -한·미동맹, 미·일동맹 및 NATO 위기관리체계 비교연구-,” 『국가안보와 전략』11(2)(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김지동. “한미군사동맹 변화의 추동요인과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제64권(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12), pp. 55-77.
- 10) 이만희.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안전보장법,” 『일본학보』105(서울: 한국일본학회, 2015); 이재성·이대중. “한미일 3국 협력방안 연구,” 『동서연구』36(3)(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4); 앤드류 여. “Institutionalizing ROK-U.S.-Japan Solidarit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Indo-Pacific Security,” 『한국국가전략』9(1)(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4).
- 11) 정형희·김수찬. “체제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8(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 12) 양희용. “한미 동맹정치와 방위비분담,” 『국제지역연구』제30권 2호(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pp. 33-63.
- 13) 김열수.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한국군사』13(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송민형. “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과 한미군사동맹 핵협의그룹(NCG)의 설립요인에 관한 연구: 확장억제 딜레마의 영향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4).
- 14) 강구상 외 5명.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15) 이재원.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37(3)(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홀히 다루어졌던 한미안보협약의체에 주목하여 한미안보협약의체를 변화시킨 주요 동인이 무엇이고, 그 동인이 한미안보협약의체에 통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추상적 '동맹'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보협약의체의 구조와 의제가 시간에 따라 변해 온 제도적 과정으로 파악했다. 연구결과는 향후 한미안보협약의체 추진 시 국방 현안들을 해결하고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안보협력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한미안보협약의체 변화 동인

기존연구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안보협약의체의 역할 변화는 동북아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협약의 결과물이 한미동맹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의 변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의 변화요인은 크게 국제체제(대외적 요인)와 한미 관계(대내적 요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국제체제의 변화가 미국의 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¹⁶⁾, 한국과 미국의 내부 관계¹⁷⁾에서 발생한 갈등과 협상이 각각 한미동맹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위협도 한미동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위협이 고조될 때 한미동맹은 견고한 관계를 유지했다.¹⁸⁾ 윌슨(Carter A. Wilson)은 기존 정책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변수를 '압박요인(stressor)'이라고 정의했다.¹⁹⁾ 따라서 한미안보협약의체가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연속 및 변화하는지를 세 가지 쟁점으로 검토한다. 기존연구에서 한미 안보 관계와 한미동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논의되는 미국의 군사전략, 북한위협, 한미관계, 이 세 가지 쟁점은 한미안보협약의체 변천의 주요 동인으로 시기 구분의 근거가 된다.

첫째,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이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은 냉전 종식, 9·11테러, 중국의 부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모해왔으며,²⁰⁾ 이러한 변화는 한미안보협약의체의 구

16) 나승학. "한미동맹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냉전·탈냉전 시기 비교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9권 2호(서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6), pp. 121-150; 황지환. "1990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4호(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pp. 33-58.

17) 양희용. 앞의 논문, pp. 33-63.

18) 장삼열. 앞의 논문, p. 99.

19) Carter A. Wilson. "Policy Regimes and Policy Chang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20, No.3, 2999, pp. 257-258.

20) 추이즈잉. "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2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p. 147, 156-157.

조와 의제, 운영방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48년 4월 미국은 한국의 방위나 안보에 관한 일체의 공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교전 당사국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한국 사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²¹⁾ 이는 극동의 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한 미국이 미국의 극동전략과 연계하여 전쟁 발생 시 전략적인 방어전만 전개한다는 소극적인(defensive) 대한군사정책이었다. 이 군사전략의 단적인 예가 바로 1950년 1월 12일 발표된 ‘애치슨라인’이다.²²⁾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

냉전시기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containment)전략과 주한미군 상시 주둔 중심의 방어전략이었다. 탈냉전기에는 소련과 동구권 해체로 인해 미국의 관심이 강대국 대결에서 지역분쟁 관리로 전환되며, 국방예산 및 병력의 대폭 감축이 이루어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 우선과 군축, 다자안보, 평화유지 활동 확대를 강조하고, 미국 중심의 세력균형 유지에 집중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대테러전 및 대량무기(WMD) 확산 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 및 글로벌 분쟁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임무와 배치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을 통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재조정과정에서 한미안보협의체의 역할은 강화되었고²³⁾, 한미협의체의 구성, 협의 의제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 대량살상 무기,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중시하여 군사뿐 아니라 경제, 기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협의체의 논의범위가 확대되었다.

2017년 이후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을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국 견제 및 역내 동맹·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하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위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글로벌 이슈 대응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고, 협의체도 확장된 의제를 다루었다. 정보통신기술, 정밀타격, 무인 체계 등 군사혁신(RMA)이 미국 전략의 핵심이 되면서 첨단기술 협력과 정보공유가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우주, 사이버, 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중영역작전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안보한미협의체도 새로운 작전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대규모 단독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동맹국에 안보부담을 점진적으로 전이하고, 공동대응 역

2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Department of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72), p. 50.

22) Dean G.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1969, pp. 354-358.

23) 장삼열, 앞의 논문, pp. 117-118.

량 강화를 요구하여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연합연습 확대 등 한미협의체의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2018년 이후 미 국방전략(NDS)은 대테러 중심에서 중국 억제와 강대국 경쟁 중심으로 명확히 전환했다.²⁴⁾ 미국은 중국을 '준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규정하고 군사전력과 작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합동 전 영역 작전(JADO)과 미래전력 개발을 통해 군사우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중 군사력 균형 및 미·중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므로, 한미안보협력도 이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와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북핵·미사일 위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해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 방어,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EDSCG, NCG 등 한미안보협의체를 신설·강화하였다.

이처럼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는 구성, 의제, 운영방식, 역할 등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맹의 역할과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위협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북한의 위협이다.²⁵⁾ 한미는 국제체제와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견지하였다.²⁶⁾

북한은 6·25전쟁 이후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차,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을 구축하고 한미동맹과 맞서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며 '총력전'과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하였다. 1960년대에는 특수부대, 납파 간첩, 게릴라전 등 후방 교란 및 남한 사회 혼란 유발을 위한 비대칭 전략을 전개하였다. 특히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1969년 EC-121 격추 등 국지도 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1970~1990년대에는 화학무기 등 비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보유가 점차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고, 대량살상무기의 잠재적 보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핵 개발에 몰두,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시도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잠재적 핵무기 개발 위협을 꾸준히 강조했다. 1990년대에는 노동·스커드 미사일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본격화해 남한 전역과 일본, 미군 기지까지 타격 범위를 확장했다. 2000년 이전 북한의

24)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주요국제문제분석』2020-62(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pp. 7-11.

25) 추이즈잉. "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국방정책연구』제26권 제2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 157.

26) 성기은·신성균. 앞의 논문, p. 80.

군사위협은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전격적 침공 가능성, 특수부대·비정규전, 초기 대량살상무기(핵·화학무기) 개발, 미사일 보유, 주기적인 국지도발 등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재래식 군사력과 비정규전이 남북 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북한의 위협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심화되었다. 미국은 1978년 SCM 공동성명에 최초로 '핵우산 제공'을 공약한 이후 매년 그 공약을 지속 재확인해왔다. 미국은 2010년 9월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핵위협이 대두되면서 2006년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최초로 천명하였고, 이후부터 확장억제정책을 통한 핵우산 제공을 지속 공약해 오고 있다. 한미는 2차 핵실험('09.5)과 천안함 피격사건('10.3)·연평도 포격전('10.11) 등 북한 군사도발 위협이 심화되자 2011년부터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신설 운영하였고, 2012년부터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핵·WMD는 물론 주요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억제·대응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4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북한의 5차 핵실험('16.9) 이후 한미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 추가하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나 DSC보다 한 단계 격상해 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자는 취지에서 외교부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확장억제수단을 군사(M)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정보·경제(DIE) 영역까지 확대하여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6차 핵실험('17.9) 이후 개최된 2차 회의 이후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각 협의체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부터 지침을 받아 회의를 운영하고 매년 SCM에 연간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이러한 안보협의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역할 분담과 업무협조를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의 연합방위 역량은 더욱 강화되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NCG 신설을 공식 선언했고, 같은 해 7월 18일 서울에서 1차 출범회의가 개최되었다. NCG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신설된 핵 및 전략무기 운용에 관한 양국 공동의 정책 협의체로서 제도적·운용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지속적이고 고도화된 위협은 한미안보협의체의 구조와 의제, 운용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협의체의 다층화, 정례화, 실질적 대응력 강화, 동맹 결속력 제고 등 주요 변화를 이끌어왔다.

셋째, 한미관계이다. 한미안보협의체는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한미가 안보협의체를 적극 운영하는 것은 한미관계가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관계가 안보협의체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은 한미안보협의체의 연속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한미관계는 6·25전쟁을 계기로 양국 군사동맹이 시작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주로 군사안보에 집중되었다. 한미는 1970년대 후반 양국의 연간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수원국-공여국 관계에서 '호혜적 경제 파트너'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변화 등 요인으로 전통적 동맹의 성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한국은 미국과 보다 평등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 글로벌 이슈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해왔다. 2000년대 초·중반 국내 민주화운동과 반미정서로 한미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기도²⁷⁾ 했지만 중국의 부상, 북핵 문제,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 동맹 내 역할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과거처럼 미국 우위 일변도에서 '더 이상 절대적 우위가 아닌 상호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변화는 협의체의 구성, 의제, 운영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미관계의 발전에 따라 안보협의체가 다층화·정례화되고, 협의 의제도 한미관계의 신뢰와 이해 증진을 기반으로 하여 첨단기술, 전략자산 전개, 공동연습, 정보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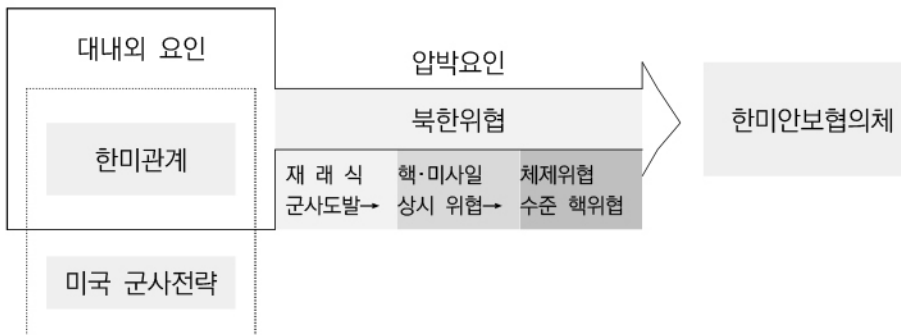
이러한 쟁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군사전략'을 대외적 요인으로, '한미관계'를 대내적 요인으로 취급한다. '북한위협'은 대내외적 요인에 작용하는 압박요인으로 취급한다. 압박요인은 시간에 따라 강도·질이 변화하는 연속변수이므로 핵실험·전술핵 위협 공언 등 중요한 변곡점을 기준으로 압박 수위의 변화를 세분화하여 안보협의체 의제의 변화를 설명한다. 압박 수위 단계는 재래식 군사도발 → 핵·미사일 상시 위협 → 체제위협 수준의 핵 위협으로 구분한다. 이 세 요인은 '동맹구조와 전략환경'을 형성하는 상위 요인으로 두고, 한미안보협의체의 변화는 이 상위구조가 '제도화된 안보협력의 형태로 어떻게 발현·조정되는

27) 장삼열, 앞의 논문, p. 100.

지'를 보여주는 매개 요인으로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안보협의체 분석을 통해 동맹연구 및 안보협력연구와 연계하여 “같은 동맹이라도 안보협력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의 국내정치가 양극화되어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국내정치 변수’는 분석틀에 포함하지 않았다.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국내정치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동맹의 정책 우선순위, 대북접근법, 방위비 분담 등에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틀에서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1차 목적은 ‘한미안보협의체라는 제도·메커니즘의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 기능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때 핵심 설명변수로 ‘미국 군사전략’, ‘한미관계’, ‘북한위협’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전략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정치는 정부 교체 주기마다 변동성이 크고, 이념·정책 선호 등 다수의 하위 변수로 분해되므로, 이를 분석틀에 포함하면 연구 범위와 설명 단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안보협의체 자체의 제도적·기능적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내정치 요인은 분석틀의 독립변수로 두지 않았지만 시기 구분이나 일부 사례 분석이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 설명변수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은 분석틀을 바탕으로 ‘변화 동인’이 한미안보협의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미안보협의체 변화 동인



III. 안보협약체 형성기(1950~1990년대): 동맹-연합방위 중심 협약체

1. 주요 안보협약체

이 시기 안보협약체는 한미안보협약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같은 단일·단순 협약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SCM이 운용되기 전 한미 간 안보협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초기 군사협약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미는 SCM과 MCM을 통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의 조기 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시행방침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첫째, 한미안보협약회의(SCM)는 한미 간 각종 안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최상위 군사정책 협의기구이다.²⁸⁾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근거하여 1968년부터 매년 국방부장관급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안보협약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초의 SCM은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1968년 2월 12일 사이러스 밴스(Cyrus R. Vance)가 존슨(Lyndon B. Johnson) 미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을 때, 양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방 각료급(閣僚級) 회의의 개최를 합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에 이어 발생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반면 한미관계는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우호적인 군사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미 양국은 1968년 5월에 제1차 '한미국방각료회담'을 가졌고, 1971년 제4차 회의 때는 미 제7사단 철수와 관련하여 외무부(차관보급)가 참석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회의로 격상하고, 그 명칭도 '한미안보협약회의(SCM)'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SCM은 본회의와 실무위원회회의로 이루어져 있다. 본회의는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등 군 주요인사와 외교관계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회의로는 정책검토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공동성명위원회 등이 있으며, 기타 실무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SCM은 분야별 실무위원회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보현안을 조율한다.

28) 최강.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제38차 한·미 안보협약회의(SCM)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제37집(서울: 국립외교원, 2006), pp. 1-15; 엄태암. "2013년도 한미 안보협약회의(SCM) 분석: 평가와 과제," 『전략연구』 제60호(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p. 197-226.

SCM은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 한반도·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협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과 운용방안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에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기간 중 총 32회의 SCM이 개최되었는데, 한미가 논의한 주요 의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⁹⁾

〈표 2〉 SCM(제1차~제32차) 주요 의제

차수(시기)	특징/주요 사건	주요 협의 의제
1~10차 (196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부터 SCM 명칭 • 1977년 한미연합군 창설 합의 • 미군 3만명 감축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위협 주목, 한국의 대간첩작전 강화 • 한미연례국방각료회의로 시작 •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 평가 •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합의 • 미군 감축 • 군비 현대화
11~20차 (1978~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1년 미개최 • 1978년 군사위원회(MCM) 체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미국 핵우산 공식 명기 • 주한미군 방위공약 재확인 • 전시작전권 • 한미정보 협력 • 연합훈련 강화
21~32차 (198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평시작전권 한국군 전환 • 북핵위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대응 • DMZ 및 접경지역 사건 •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 평시작전통제권 부분 환수 논의 • 팀스피리트훈련 • 북핵 1차 위기 공동대응

이처럼 SCM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응 및 억제, 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SCM 의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 미국·한국 국방정책 기조 변동, 미군 해외정책, 북핵 이슈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전·확장되었으나,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강화'와 '북한 및 역내 위협 공동대응'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SCM은 한미 안보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성격과 기능이 발전적으로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재천명과 군사력 증강계획에 대한 지원 약속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p. 392-394.

공포 등 선언적 역할을 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점차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의 주요 안보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³⁰⁾

둘째, 한미군사위협회의(MCM)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70.11.7.)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여 군사협의기구로 설치되었다. MCM은 본회의와 상설회의³¹⁾로 나뉜다. 통상 MCM으로 불리는 본회의(Plenary Session)는 한미 양국 합참의장, 양국 의장이 지명한 대표 각 1명(미 태평양사령관, 한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한미연합사령관 등 5명으로 구성되며, 한미 양국의 고위 군사실무자 및 업무 담당관이 배석한다. 본회의는 한반도의 군사위협 분석과 군사대비책을 협의하고 연합전투력 발전실태를 포함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연합 군사 전략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한다. 본회의는 통상 SCM 기간 중에 개최되며, 회의 결과를 SCM에 보고하고 양국 장관으로부터 추가 지침을 받는다.

MCM은 1978년부터 1999년 현재까지 총 21회 개최되었다. 본회의는 1981년 제3차 MCM까지는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전력증강 및 작전계획 발전 등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1982년 제4차 회의에서 1984년 제6차 회의까지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한 한미 공동 노력과 한미 양국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1985년 제7차 회의에서 1988년 제10차 회의까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감시자산 추가배치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협의하고 시행했다. 1989년 제11차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연합방위체제의 유지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제기된 군사소요를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MCM은 기간 중 총 21회 개최되었는데, 한미가 MCM에서 논의한 주요 의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²⁾

30) 국방부, 『국방백서 2020』(서울 : 국방부, 2020), pp. 88-89.

31) 상설회의(Permanent Session)는 한미 간 수시로 긴밀한 협의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미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양국의 대표가 된다. 상설회의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양국의 대표가 합의각서 형태로 합의하고 있다.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p. 397-398.

〈표 3〉 MCM(제1차~제21차) 주요 의제

차수(시기)	특징/주요 사건	주요 협의 의제
1~10차 (1978~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군사위원회(MCM) 체제 신설 • 연합사의 창설근거가 된 전략지시 제1호 하달 • 1986년 아시안게임 •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사 창설 및 연합작전지침 정립 • 주한미군 주둔 및 지휘체계 제도화 • 한미연합군사령부 운용방안 수립 • 북한위협 직접 대응 체계 논의
11~20차 (198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한미야전군사령부 해체 • 1994년 평시작전권 한국군 환수 • 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 북한의 핵 개발 가능성과 화학전 위협 공식 시인 • 북핵위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사·연합지휘체계 강화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 14차 회의결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미 증원전력에 대한 RSOI 지원 보장대책 협의 • 주한미군 역할과 한국군 주도성 확대 논의
21차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미사일 도발 • 제1연평해전(1999.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한 연합 군사대응 • 연합훈련 강화 • 한미동맹 내 역할 조정 • 한미연합사령부의 운용 개선 • 미래 대비 전략지침 전달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본격화

이처럼 MCM에서 논의된 핵심의제는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 및 유지,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과 연합 대비태세,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연합지휘체제 및 협조체계 발전, 한미동맹의 전략적 발전방향 등이다. MCM은 주로 연합지휘권 분담, 국가위기상황 공동대응, 지휘통제 절차의 정비 및 발전을 타협하거나 합의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군의 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확대 등 '자주국방'의 단계적 실현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MCM은 SCM과 연계해 한미 양국군·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MCM에서는 연합방위체제 및 지휘체계 정립, 북한 위협 대응, 주한미군 기능 재정립, 작전통제권 이양 등 동맹의 근간이 되는 구조 변화와 현안이 지속 논의되었다.

2. 특징: 연합방위-동맹 유지

안보협의체 형성기의 주요 협의체인 SCM과 MCM의 신설 배경과 구성 및 운영방식, 주요 협의의제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시기의 안보협의체는 미국 군사전략, 북한위협, 한미관계 등 변화 동인의 영향을 받아 '연합방위와 동맹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형성되었다.

SCM을 신설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북한의 위협이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해군 당포함 피격('67.1.19.), 경원선 철도 폭파('67.9.5.), 경의선 철도 폭파('67.9.13), 청와대 기습사

건(68.1.21),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68.1.23), 제주도 서귀포 침투(68.8.20),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68.10.30), 미 해군 정찰기(EC-121) 격추(69.4.15), 대한항공여객기 피랍사건(69.12.11) 등 북한 도발³³⁾이 빈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북한의 지상침투현황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대략 연간 20여 회 내외의 침투횟수를 보이다가 1965년과 1966년에 40~50회로 증가하였으며, 1967년 141회, 1968년 285회, 1969년 118회로 급증하였다.³⁴⁾ 북한은 대남 직접 도발에 그치지 않고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미 해군 정찰기(EC-121) 격추 등 대미 직접 도발까지 단행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단순 방위만이 아니라 상시적 위기관리를 위한 긴밀한 안보협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68년 2월 사이러스 밴스는 존슨 미 대통령 특사로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관련한 협의차 방한한 자리에서 SCM의 전신인 국방각료급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로 조성된 1960년대 후반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 간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SCM을 개최하였다.

1950~60년대 미국은 냉전구도의 심화와 소련·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방적 보호와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 중심의 군사정책을 유지하였다.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전쟁, 중국의 핵실험 등으로 미국은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을 채택하고 전쟁 억지뿐 아니라 국지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³⁵⁾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SCM이 공식적인 정책협의체로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968년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 실질적 위기를 거치며 국방장관급연례회의 틀이 마련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부담 속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와 병행하여 SCM을 통해 전쟁억지와 주한미군 태세를 조정하였다.

1970년부터 북한의 도발횟수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1960년대 후반 닉슨독트린과 미군감축 등 미국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 등으로 한미간에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면서 SCM은 단순 군사 방위에서 벗어나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례화되었다.³⁶⁾ 1970년대 미국의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으로 한미관계는 자율성·책임분담 논의 확대로 이어졌다. 닉슨과 카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을 감축시켰지만 한미는 협의를 통해 한국의 안보 및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976년부터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했고,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에는 작전계획

33)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1970년, 상)』(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2), pp. 25-26.

34)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1970년, 상)』(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2), pp. 20-26.

35) 손한별, “1960년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공격계획”, 『군사』 제108(2018.9), pp. 138-145.

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 316.

조정과 전력 증원 메커니즘 논의가 가속되며, SCM이 '위기 대응 협의체'로 기능하는 면이 강화되었다. 1978년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다. 1978년 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식화 등 핵심 공약이 공동성명에 명시되었고, 이후 핵우산이 모든 협의체의 기본 정책축으로 포함되었다. 경제성장과 군 현대화를 이룬 한국의 국방역량 및 정책참여 가치가 커지면서, 한미안보협의체 내 한국 측 발언권·협상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안보협의체가 다층화·전문화되는 토대가 되었다. SCM과 MCM의 주요 협의 의제를 보면, 핵우산을 포함한 포괄적 위기관리 및 위협대응 방식 논의도 진행되었으나 전통적 군사안보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 안보협의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형성된 안보협력체제에서 대내외 요인 중 '한미관계'보다 '미국 군사전략'의 영향을 더 받아 SCM과 MCM을 신설하고, 단일·단순구조로 운영되었다.³⁷⁾ '한미관계'가 점차 발전되면서 협의체는 상호의존도가 높은 협의를 추진하며 군사안보와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위협'은 1960년대 후반 고강도 도발로 안보협의체 신설에 있어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점차 도발 강도가 약화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 안보협의체는 SCM과 MCM을 통해 전통적인 군사위협 대응과 동맹 기초 확립에 중점을 둔 미국 주도의 비대칭적 협력 구조의 협의체였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협의체는 군사동맹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나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등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또 기간 중 한미관계가 '보호-피보호관계'에서 '안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미국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및 조정,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철수 논의, 방위비 분담 등 협의체 의제가 확대되었고 구조도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상호 협의체제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1978년)와 확장억제 정책은 한미관계의 신뢰와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고, 한국의 위상 변화와 역할 확대, 경제성장과 민주화,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에 따라 안보협의체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 안보협의체 중 SCM은 북한위협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신설되었고, MCM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치되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미국 군사전략과 부합되었기에 설치가 가능했고 미국의 군사전략 운용범위내에서 한미관계를 조정하며 북한위협에 대응하였다. 1960년대 후반 북한위협이 빈번하였지만, 미국이 북한을 실체적 위협으로 인식한 북한도발은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이 아니라 미 해군 정보함

37)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 노태우정부』(서울: 대영문화사, 2014), pp. 46-47.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었다. 이에 한국이 미국의 이러한 선별적 위협 인식에 반발하며 주일 한국군의 철수를 언급하자 미국은 1968년 2월 밴스(Cyrus Vance) 대통령 특사를 한국에 보내 국방각료급연례회의 개최를 약속하고 한미 안보현안을 상호협약하는 한미간 정상급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발전되지 않았던 것은 한미안보협의체에 근거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SCM 신설이후 북한의 도발 횟수가 감소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안보협의체는 한미동맹의 방위 분야를 다루는 핵심 협의체로서 전쟁 발발 이후 안보공조를 제도화하고, 북한위협 변화에 대응하며, 한미 연합방위력 및 전력태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외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였다.

IV. 안보협의체 포괄·전문화기(2000~2010년대): 포괄적 전략 동맹-다층 협의체

1. 주요 안보협의체

2000년 이후 한미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외에 주요 실무·차관급 안보협의체를 운용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다양한 동맹 현안이 제기되자 한미는 안보 현안과 미래발전 과제를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실무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주한미군과 국군의 임무 및 역할을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³⁸⁾ 특히 증가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의 협의체도 추가 운영하였다.

첫째, FOTA는 미국 세계전략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및 재배치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동맹 기능 유지에 대한 세심한 협의를 요구되어 미국의 제안³⁹⁾으로 신설되었다.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23, p. 158.

39) 미 국방부 정책차관(Feith)은 2002년 11월 6일 이준 국방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보다 강력해진 한국의 지위에 걸맞은 성숙한 관계에 대해 진정한 협의를 기대한다. 한국의 증대된 자원과 능력을 감안하여 3~5년 간 한미동맹에 대해 함께 검토를 희망한다.”고 제안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방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과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한강 이남 배치 등 한·미군의 임무 및 역할을 상호합의 하에 호혜적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FOTA는 정례적이고 공식적인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로 각국 외교 및 국방 당국 고위 인사가 참석한다.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는 국방부 주관으로 준비하되 외교통상부가 참여하고 NSC와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다.⁴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제 1차 회의는 2003년 4월 8~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그리고 Richard P. Lawless 미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Lafleur 미 국무부 전담대사를 위시한 양국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국무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FOTA는 정책 협상과 함께 실무 협의 및 기술 협의 등 다양한 회의를 포함하며, 회의에서는 군사동맹의 전략적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논의된다.

FOTA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한국의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의 국방부 아·태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총 12회가 개최되었다. 한미가 FOTA에서 논의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⁴¹⁾

〈표 4〉 FOTA 주요 의제

차수(시기)	주요 협의 의제
1차('03.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2개 권역 목표) • 한국군 군사능력 고려, 일부 군사임무 한국군에 전환
2차('03.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2사단 2단계 이전개념 구체화 • 한미동맹의 강화·형성·조정 관련 협의
3차('03.7.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합의서(MOA/MOU)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 군사임무 전환 구체적 협의, 주한미군의 미래 역할 조정
4차('03.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기지 잔류부지/인원 관련 협의
5차('03.10.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CFC 잔류부지 규모 논의 •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이행계획(案) 합의
6차(04.1.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CFC 한강이남으로 이전 결정(2.5만평 규모 잔류) • 새로운 합의서(UA/IA) 중점 협의
7차('04.2.1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기지 이전목표연도, LPP 협정 개정 방향 합의 • 미 GPR 개념 소개
8차('04.5.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IA 법적체계, 非SOFA 청구권, 간부주택 제공 잠정합의 • E-MOU 수정·보완 합의, 포괄적 안보환경 평가 약정(TOR) 체결

40) 이종석 NSC 차장이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정·통제(monitor and control)했다.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 400.

차수(시기)	주요 협의 의제
9차('04.6.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UA) 및 이행합의서(IA) 법적 체계 개선 • 非 SOFA 청구권 문제 합의
10차('04.7.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IA) 및 LPP 개정협정 합의 • C41제공범위 협의 • 부지 규모 합의(349만평) • 이전시기 2008년으로 합의
11차('04.8.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지역 추가 제공부지 위치 최종 합의 • 주한미군감축 협의 •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UA/IA) 및 LPP 개정협정 가서명
12차('04.9.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감축시한 연장 논의

FOTA의 주요 협의 의제는 주한미군 감축 규모 및 시기, 주한미군 재배치 및 기지 이전 계획(용산기지 이전, 평택지역 이전 등),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능력 유지 방안, 한국의 군사 주권 회복과 전작권 전환 시기 및 조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과 관련 세부사항,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및 국민 정서 반영, 환경오염 문제 및 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이다. FOTA는 한미동맹의 미래방향과 주한미군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중요한 채널로서 한반도 안보와 동맹관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FOTA는 미국의 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의체로, 고위급 정책협약과 함께 군사 및 정치적 협의를 병행하며 주한미군 감축·이전 등 주요 동맹 현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였다. 한미는 9·11테러 사건 이후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FOTA를 통해 용산기지이전과 주한미군재배치, 군사임무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 예민한 동맹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국군이 한국방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자 노력하였다.⁴²⁾

둘째,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는 양국이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도에 구성하였다. SPI는 한미 양국 정부의 군사 및 외교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과 관련된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회의는 양측이 교대로 격월단위로 개최하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부터 회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받고 필요시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표단으로 한 측은 국방부 정책실장이 수석대표 임무를 수행하고 청와대, 외교부, 합참 등에서 관련자가, 미 측에서는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부, 합참, 주한미군사령부 관련자 각각 15명 내외가 참석하였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양국은 2006년 제38차 SCM, 2007년 제39차 SCM에서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42) 장삼열, 앞의 논문, pp. 117-118.

점에 공감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SPI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9월 까지 총 29회 개최되었다. 한미가 SPI에서 논의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⁴³⁾

〈표 5〉 SPI 주요 의제

차수(시기)	주요 협의 의제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 의제 및 추진일정 설정 • 용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 후속조치 점검 • 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군사능력 발전 • 한미동맹비전 연구 • 전략적 유연성 별도 협의
2~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보협력 증진 방안 SPI 의제 채택 합의 • FOTA 관련 사안 • 군사임무전환, 전력증강계획 • JVS/CSA 이견사항 논의 • 한국의 Khaan Quest '06 참여 검토 • 기지 내 임대주택 논의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통제권 논의 가속화 합의 • 동맹조정 3단계 공동연구 진행 • 반환기지 환경문제 협상 착수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로드맵 작성 논의 • 한미 군사지휘관계 및 동맹비전 연구 • 주한미군 기지 이전 상황 점검 및 추진
6~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동 평가 등 다양한 안보 현안 협의
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 미군기지환경협상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 • 북한 위협 관련 정보 공유
1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기지 이전 원활한 이행 의지 확인 • 추진 절차 및 방법 협의
11~2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 일정 조율 • 연합방위체계 강화 • 대북정책 공조 • 우주·사이버 협력 등 안보·방위분야 심층 협의
21~2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 발전 • 북한 위협 공동 대응 • 국방현안 • 전략적 유연성 및 합동 작전능력 강화 • 6자회담 관련 정책 공조 • 대확산 협력 •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등 포괄적 안보 협의 진행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23, pp. 401-402.

SPI는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인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전작권통제권 전환, 연합군사능력 발전, 전략적 유연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 한미 동맹의 비전 연구,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 한미 안보협력 증진 및 공조 방안, 주한미군 재배치 및 훈련여건 개선, 한미지휘관계 연구 등을 중심으로 매회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우주, 사이버, 대확산,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분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 협의체로 협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SPI가 FOTA와 다른 것은 협의내용에 환경문제가 추가되었고, 북한핵문제의 해결, 아프간 전쟁 문제의 대두 등이 협의되었다는 점이다.⁴⁴⁾ SPI는 2012년 이후 신설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로 통합되었다.

셋째, KIDD는 2010년대 초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내 정책·운용 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협의를 위해 신설되었다. 2010년대 들어 북핵문제와 미사일 위협·비대칭 위협 등 복합적 안보현안이 중첩되자, 기존에 분산된 한미 간 군사·안보협의체만으로는 신속·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보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실무·정책 협의체가 요구되었다. 미국의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실질적 확장억제력 보장과 한미 양국 간 방위·군수, 전작권 전환, 전략자산 운용, 연합훈련 등 군사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화 채널'의 필요성이 공식화되었다. 2011년 10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정책당국자가 연 2회 정례적으로 주요 안보 현안을 총괄 논의하는 KIDD 신설에 합의하고, 2012년부터 SCM 후속 종합정책 채널로 정식 출범했다. KIDD는 SPI, EDPC 등 기존의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통합하여 북핵·미사일, 확장억제, 연합방위, 전작권 이양 등 동맹의 포괄적 현안과 미래 전략 논의를 일원화·효율화하는 전략실행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즉 KIDD의 신설은 북한 위협 고도화, 동맹 동반 급변, 기존 협의체 한계 보완 등으로 한미동맹 내 '전략-정책-실무' 현안을 총괄하는 상설 종합 안보 협의체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현실적 결과물이다. KIDD는 현재까지 한미군사동맹의 실질적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KIDD는 출범 당시 SPI, EDPC, 전략동맹공동실무단(SAWG)으로 구성되었다. EDPC는 북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보장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기구로는 나토(NATO) 이외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전략동맹공동실무단(SAWG)은 전작권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미 간 현안을 다룬 「전략동맹 2015」의 세부계획 작성 및 이행 점검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였다. SAWG는 「전략동맹 2015」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 핵심군사능력 및 미국 보완

44) 장광열, 앞의 논문, pp. 216-217.

및 지속능력, 한미 C4I 상호운용성 등을 논의했다.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4월 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⁴⁵⁾가 통합되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로 바뀌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는 북핵·WMD는 물론 주요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억제·대응방안과 미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 보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6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는 북핵·WMD 위협 대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로 한미는 북핵·WMD 위협 공동평가,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북핵·WMD 위협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다양한 억제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6년 5월 제9차 KIDD 회의에서 2014년 4월 한미 양국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노력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동맹공동실무단(SAWG)을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으로 대체하였다. KIDD 회의 개최 시 한미는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KIDD의 구성은 고위급 회의,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COTWG)으로 개편되었다.

2022년 11월 3일 한미는 제54차 SCM에서 DSC 예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한미 간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였다. 한미는 제1차 CMWG 회의를 2022년 11월 18일 한 측 국방부에서 개최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국방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한미는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KIDD는 2012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26회 개최되었다. KIDD의 개최현황과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⁴⁶⁾

45)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는 2012년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였는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전력 발전 소요를 도출하는 협의체이다.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p. 403-408.

〈표 6〉 KIDD 주요 의제

차수(시기)	주요 협의 의제
1~5차 (2011~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사 창설 및 연합작전지침 정립 • 주한미군 주둔 및 지휘체계 제도화 • 한미연합군사령부 운용방안 수립 • 북한위협 직접 대응 체계 논의
6~10차 (2014~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사·연합지휘체계 강화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 14차 회의결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미 증원전력에 대한 RSOI 지원 보장대책 협의 • 주한미군 역할과 한국군 주도성 확대 논의
11~16차 (2017~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한 연합 군사대응 • 연합훈련 강화 • 한미동맹 내 역할 조정 • 한미연합사령부의 운용 개선 • 미래 대비 전략지침 전달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본격화 • 「9·19 군사합의」 평가 및 이행 지속 합의

KIDD는 변화하는 정세 속에 그동안 한미협의회의에서 중점을 두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의 대화의 이슈를 확대하면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를 계승하여 출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한미안보정책구상체제 하에서는 확장억제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한미통합국방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이를 흡수하여 통합 운영되는 것에서 회의성격이 더욱 방대해지게 되었다. 한미통합국방협의회의는 2011년 10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 4월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발하였으며 2016년까지 총 10차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한미통합국방협의회의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과거 전신인 미래한미동맹구상회의와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 비하여 그 회의 참석자의 직위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열렸던 두 가지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에 그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새로이 출범하는 KIDD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토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논의 빈도와 무게감은 예전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⁴⁷⁾

넷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북

47) 장광열, 앞의 논문, pp. 228-229.

한의 5차 핵실험 이후 DSC에 추가하여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외교·국방장관 또는 차관급)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신설하였다. 그동안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나 DSC보다 한 단계 격상해 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자는 취지에서 외교부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확장억제 수단을 군사(M)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정보·경제(DIE) 영역까지 확대하여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한미는 2016년 10월 19일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장관회의와 같은 해 10월 20일 제48차 SCM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⁸⁾ 이어서 한미는 2017년 양국 외교·국방(2+2) 당국 간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⁹⁾

EDSCG 회의는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서 한미는 EDSCG를 통해 확장억제수단을 군사(M)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D)·정보(I)·경제(E) 영역까지 확대하여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⁵⁰⁾ EDSCG 회의는 2018년까지 두 차례의 고위급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2년 9월 제3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⁵¹⁾ EDSCG는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5회 개최되었다. 한미 간 EDSCG 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⁵²⁾

〈표 7〉 EDSCG 주요 의제

차수(시기)	주요 협의 의제
1차 (20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설 및 출범 •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 • 미국은 지속적인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 강조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재확인 • 북한 5차 핵실험 후 확장억제 전략협의 및 공약 강화방안 논의

48)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6.10.20.); 국방부 보도자료,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 회의 개최 결과 공동보도문”(2016.12.21.).

49) 국방부·외교부 공동보도자료,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방안 합의”(2017.9.5.).

50)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161.

51) 국방부 보도자료, “제3차 한미 고위급 EDSCG 공동성명”(2022.9.17.).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23, p. 409.

차수(시기)	주요 협의 의제
2차 (20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 구체화 •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및 실효적 운용방안 모색 • 미측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 •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합의

2016년 12월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제1차 EDSCG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회의를 통해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2017년 6월 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에서 EDSCG의 정례화에 합의함에 따라 2018년 1월 워싱턴에서 제2차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1·2차회의는 EDSCG 협의체의 출범과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초기 확장억제전략 마련에 집중하였다.

확장억제는 억제자가 동맹이나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적에 대해 억제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⁵³⁾ 한미는 1978년 SCM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⁵⁴⁾이라고 명시하였다. 이후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10.9.) 직후 개최된 제38차 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가 최초로 명시되었다.⁵⁵⁾ 이후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제41차 SCM에서는 확장억제 수단을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로 더욱 구체화하였다.⁵⁶⁾ 또한 2018년 제50차 SCM에서 확장억제 수단 중 ‘핵우산’을 ‘핵능력’으로 변경하였다.⁵⁷⁾ 그러나 그 이후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중단되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워싱턴에서 4년 8개월 만에 한국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는 2+2형태의 제3차 EDSCG회의가 열려 현재 5차까지 개최되었다.

53)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서울: 박영사, 2019), pp. 149-155.

54)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55)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6.10.20.).

56)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9.10.22.).

57)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8.10.31.).

이처럼 2000년대 들어 북핵·WMD 위협이 증대되고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미는 전담 협의체를 운용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는 물론이고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안보정책구상(SPI)',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의 정책실무협의체를 통해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확장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을 준비해 나갔다.

2. 특징 : 포괄적 안보협력 강화

협의체의 주요 관심사와 대상은 변화되었다. 기간 중 협의체는 군사동맹과 안보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및 확장억지력 제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기후 및 에너지 분야 현안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 안보협의체가 신설된 계기는 북핵·WMD 위협이었다. 기간 중 북한은 1998년 8월 장거리 미사일 시범발사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후 핵·미사일에 의한 전략도발로 위협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고도화하였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는 제1·2차 북핵 위기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압박 수위가 '핵·미사일 위협의 상시화'단계로 상승했다.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이후에는 확장억제 공약이 공동성명과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반복·상시화되며 '핵억제 관련 의제의 상시 안전화'라는 변화를 보였다.⁵⁸⁾ 또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위협으로 협의체의 결속은 더 견고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안보협의체는 KIDD, EDSCG 등 보다 세분화된 안보협의체의 도입·정례화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군사전략도 변화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군사력 현대화 노력을 본격화해 거의 매년 국방비를 10% 이상 증가시켜 왔다.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진입과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기초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⁵⁹⁾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전반적인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로 중국이 준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⁶⁰⁾ 군사적으로, 미국정책결정자들

58) Chung, "Washington Declar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KINU Online Series* co 23-16 (May 2023), pp. 8-9.

59) 최우선, 『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국립외교원, 2021).

은 현대화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은 이제 모든 전투 영역에서 미국이 누리왔던 지배적인 지위에 실질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경쟁적인 전장 환경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정밀타격 능력과 사이버·우주·전자전 공격능력의 발전은 미국의 군사작전의 전제인 공중 우위와 전장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⁶¹⁾

2001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실질적으로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대테러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미국은 2010년 경 부터 점차 중국에 대응할 미래전력 강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명확하게 군사전략을 전환하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후반부에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채택하고 중국 등의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포괄적인 전략적 전환을 실행하지 못했다.

2018년 '국가국방전략' 보고서를 통해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과 던포드(Joseph Dunford) 합참의장은 전략적 우선순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방부의 최대 과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여 군사전략의 변화를 주도했다.⁶²⁾ 미국은 2018년부터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전략에서 주로 중국을 억제하고 필요시 강대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분명하게 전환했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한미동맹을 동북아시아 안정의 초석으로 재인식시켰고,⁶³⁾ 한미는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에 이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거듭나고자 호혜 평등한 안보협의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 안보협의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체의 다층화·정례화이다. SCM, MCM과 같은 기존 고위급 협의체가 전략·정책의 최종결정기구로 자리잡았다. KIDD, EDSCG 등 실무·분야별 협의체가 신설되어 방위정책, 연합훈련, 군사기술, 확장억제, 전작권 전환 등 세부 현안별 논의 채널이 확립되었다. 협의체 간 연계·분업이 공고해지며, 전략·정책 결정-실무 실행-현장 운용의 입체적 소통 구조

60)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61) Jake Sullivan, "The World after Trump: How the System can Endure,"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8).

62)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63) Abraham M. Denmark and Zachary M. Hosford. *Securing South Korea: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2010 참조.

가 정착되었다.

둘째, 협의의제의 실질화이다. 협의체를 통해 위협을 인식하는데 그치지않고 실제적 위협에 적극 대응했다. 2006년 제1차 북핵실험 이후, 각 협의체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최우선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핵우산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 운용논의가 심화되었고, 한미 간 미사일 방어, 전략자산 전개,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위기대응 능력이 구체적·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 북핵·WMD·미사일 위협 등 구체적 위협에 맞춘 억제전략(맞춤형 억제전략, TDS) 개발 및 실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0-2010년대에 걸쳐 전시작통권(OPCON) 전환 문제가 다뤄졌고, 조건부 전환, 미래연합군사령부 준비 등 '한국군 주도성' 강화가 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다.

셋째, 협의의제의 영역 확대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 채택 이후 한국의 방위주도 의지가 강화되고 동맹의 기능이 단순 군사동맹에서 확장억제, 미사일 방어, 사이버 안보, 우주 협력 등으로 확장되면서 한미관계는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더 강화되어 다양한 협의체의 등장을 촉진했다. 기존의 방위정책·작전 중심에서 나아가 국방산업·무기체계 현대화, 사드 배치, 미사일방어 협력, 국방과학·기술동맹 등 첨단 영역 협의가 강화되었다. 2010년대 미사일지침 해제, 미래연합군 구성, 방위산업 공동개발 등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사이버, 우주, 공급망, 팬데믹(2019년 COVID-19 등)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도 각 협의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안보협의체는 이전 시기의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추가 운영하여 주한미군과 국군의 임무 및 역할을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군 구조 및 작전개념이 전면 수정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주한미군의 조정은 종전과 달리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기존의 SCM·MCM 외에 추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군 재조정 등 제반 동맹현안 의제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기간중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뚜렷한 고도화·다각화를 거듭하며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 전체 안보에 증대한 위협으로 부상하여 한미는 EDPC, CMCC, KIDD, DSC, EDSCG 등의 협의체를 운용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미관계는 국력의 신장에 따른 보다 성숙한 동맹관계를 요구하면서 동맹 재조정 협의를 통해 한국이 한국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2009년 6월 천명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한반도 방어를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고, 안보협의체를 이 버전을 구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명시

하여,⁶⁴⁾ 북한관리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인 접근과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였다. 이 문건은 이후 양국 정상·장관 공동성명에서 '동맹 발전의 청사진'으로 반복 언급되며, 사이버·우주, 인도·태평양 협력 등 안보협의체 의제 확대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2019년 11월 공개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의 틀을 계승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 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지지'와 남북·미북 대화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⁶⁵⁾ 이 문서는 동맹의 방위협력을 북핵뿐 아니라 역내 안보, 신 영역 위협 등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되, 대북 관여·외교 지원을 동맹의 중요한 기능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안보협의체는 북핵 억제뿐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 지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연계된 군사적 위협 관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역내 파트너 역량 구축 등의 역내 안보협력 의제를 병행하여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미·중경쟁 등에 의한 미국의 전략변화로 한미동맹의 구체적이고 성숙한 협력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 협의체는 실무급회담에 중점을 두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협의체는 '한미관계'보다는 '미국 군사전략'의 영향을 더 받았고, 북한위협의 강도가 고도화되면서 협의체는 정례화·다원화·전문화·포괄화를 통해 역외·신안보 분야를 포함한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FOTA를 통해서는 미2사단의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한국군으로의 군사임무 전환, 주한미군 감축, 한미방위비분담 등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는 성과를 거두었고, SPI를 통해서는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해체에 따른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모색,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과 새로운 군사적 역할 등이 협의되었으나 미시적 차원의 이행과 거시적 차원의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⁶⁶⁾

64)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 2009).

65) Clint Work·Joo Young Kim, "Shifting Vision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DIPLOMAT* (December 18, 2023).

66) 이수형,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작전통제권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3호(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p. 14.

V. 안보협약체 고도화기(2020년대): 확장억제 중심 협약체

1. 주요 안보협약체

이 시기는 기존 SCM, MCM, KIDD, EDSCG에 더해 신설된 NCG, 다양한 분야별 워킹그룹 등이 한미 안보협약체 체계를 촘촘히 구성하여, 동맹 군사·정책·기술·글로벌 역할이 모두 고도화되었다. 이런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적 범주를 넘어 미래 전략동맹, 글로벌 안보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

첫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한미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서 출발했다. 2023년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NCG가 신설됐다. 그 신설 배경 및 목적은 첫째, 확장억제 강화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억지력(확장억제)이 실제로 작동하게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한미가 공동으로 핵 및 전략기획을 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핵·전략 기획의 공동 논의이다. 기존에는 미국이 핵전략을 별도로 수립했으나 이를 통해 한국도 전략기획, 훈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이는 핵 위협 시 미국의 단독 대응이 아닌 양국의 공동대응 체계를 의미한다. 셋째, 비확산 체제 관리이다. 북핵 위협이 비확산체제(NPT)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려는 것도 NCG 설립 목적 중 하나이다. 북한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넷째, 정례화·실질화이다. NATO의 핵기획그룹(NPG)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게 더욱 실질적인 논의와 공동 기획·운용을 목표로 했다. NCG는 주로 미국이 한미협약체에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한국이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전략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협약체이다.

따라서 NCG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핵 및 전략무기 운용에 관한 양국 공동의 정책 협약체로서 제도적·운용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DSC와 EDSCG가 이를 보완한다.⁶⁷⁾ 한미는 NCG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공동 기획, 정보 공유, 위기 대응 훈련 등을 체계화해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고위급 관계자가 NCG의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한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등 차관보급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양측 국가안전보장회

67) 김열수.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한국군사』제13호(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pp. 1-2.

의(NSC), 국방·외교·정보·군사 등의 주요 실무자가 참여한다. 실무급 및 고위급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는 분기별(연 4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개최한다. NCG 내에서는 확장억제 운용과 관련된 핵심사안별 분과(Workstreams) 중심으로 논의와 실행이 병행된다.

〈표 8〉 NCG 주요 협의 메커니즘 및 분과

분과/업무영역	주요 내용
정보 및 보안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전략무기 등 민감 정보 실시간 공유 프로토콜 • 위기시 협의시스템 구축
핵·전략기획(공동기획,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재래식 통합 계획 수립 • 실행훈련 및 시뮬레이션 • 한미 공동 작전기획 및 컨틴전시 플랜(CNP) 연계
위기관리·핵운용/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별 협력적 소통체계 및 위기관리절차 표준화 • 토의식 도상연습(TTX) 등 실무훈련
전략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대외 메시지 조율 및 위험감축 정책 논의
교육 및 연습(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전략·확장억제 가상훈련 • 시뮬레이션 • 교육장치 마련

이 구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기획그룹(NPG)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핵 억제·운용 정책 협의와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관리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다만 NCG는 미국 대통령이 독점 보유하는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공유하지 않고, 정보협의와 공동기획 중심의 실행 플랫폼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국방부(정책실), 외교부, 정보·합참 등의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미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국무부, 유관 정보기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처럼 NCG는 한미 양국의 정책·군사 실무자들이 고위급·실무급으로 정기적·비상적으로 집합해, 핵·전략 억제기획, 정보공유, 위기관리, 실제 실행방안까지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연습하는 상설 공동협의체이다. 이는 기존 형식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 공동 운용·실행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다.

2020년대 한미안보협의체는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정책·운용·기술·첨단 리스크·글로벌 협력까지 모두 아우르는 첨단 입체동맹체계로 고도화되었다. NCG는 한미 핵 확장억제 협력의 내실화, 실질적 대응력 강화, 정보 및 전략자산 공유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실질 위기 대응력과 운용성·신흥위협 공동대응력, 미래지향적 협력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

이 특징이다. NCG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4회 개최되었다. 한미가 NCG에서 논의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표 9〉 NCG 주요 의제

차수(시기)	주요 협의 의제
1차 (2023.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선언의 이행 및 NCG 출범 목적 재확인 • 한미 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 상설 고위·실무 협의체 출범, 통신체계 확립 •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력 강화 • 핵우산 공약 재확인 • 핵작전 공동기획, 실무협의·시뮬레이션 방안 논의
2차 (2023.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억제 실행계획 이행 점검, 세부 실천과제 논의 • 한미 안보·정보·군사당국 간 협력 심화 • 북핵 도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 태세 점검, • '북한 핵공격 시 미측 결연한 대응' 천명 •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보안 절차 점검 • 핵전력·전략기획 및 핵·재래식 통합 등 실무 협의 개시 • 실질적 과업 진전 및 이행계획 승인
3차 (20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G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국방부 주도 역할 확대 • 실질적 대응지침 구체화, 전략적 메시지 및 연습 화가대 • 동맹의 핵억제·대응능력 실질적으로 강화 평가 •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시 공동 대응체계 점검 • 핵·재래식 통합과 실질적 연합훈련 및 시뮬레이션 확대 • 위험감소, 추가 투자 등 새로운 협력 분야 협의
4차 (2025.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지속 및 NCG의 역할·성공적 기능 강조 • 동맹의 전용 보안통신 강화, 위기 및 유사시 협력체계 구체화 •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가시성 증진 약속, 대응 능력 평가 • 정보공유 지속 강화 및 정보 보호 강화방안 논의 • 확장억제 임무계획·활동 내역 공유 • 연합훈련 확대 및 공동임무계획 승인

둘째, NCG의 신설로 확장억제와 전략 실행력이 강화되면서 2022년에 신설된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 Missile Working Group)는 미사일 분야의 보다 심층적 정책공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예하에서 운용되었다. CMWG는 북 미사일 위협 변화가 동맹의 미사일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개최되었다. CMWG는 KIDD 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설 이후 수 차례의 정기회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정책 조율,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및 관련 연합 훈련과 실무 협력, 한미연합미사일 방

어체계의 운용과 개선,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운용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PT) 이행현황 점검 및 추진방안,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등 연계협력 체계 운영 등을 논의함으로써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국방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동맹의 미사일대응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갔다.⁶⁸⁾

2. 특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안보협의체 고도화기의 주요 협의체인 NCG와 CMWG의 신설 배경과 구성 및 운영체계, 주요 협의의제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시기의 안보협의체는 실질적인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공동기획·운용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고도화된 북한위협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NCG의 직접적인 신설 배경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이었다. 2020년대 들어 북한은 핵무기 수량과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했고, 전술핵 운용 언급 등으로 압박 수위가 '체제생존 위협 수준의 핵위협'단계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안보위협 상황에는 실질적인 억제전략이 필요하였다. 기존의 '핵우산 제공' 약속만으로는 동맹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북한의 도발 억제력에도 한계가 드러나 미국과의 긴밀한 공동기획 및 운용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SCM, EDSCG 등에서의 원론적 논의를 넘어 수시 정보공유·모의훈련·위기관리계획·핵 및 전략무기 공동 운용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진행할 실무/정책 통합협의체가 필요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워싱턴 선언'과 NCG 신설이 이루어졌다.⁶⁹⁾ 특히 '워싱턴 선언'이후에는 확장억제 이행체계가 '정치적 공약'에서 '상설 양자협의체와 연동된 제도화된 운용체계'로 전환되었다.⁷⁰⁾ 즉 NCG는 북핵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동맹의 실질적 억제 실행력 강화 요구로 신설되었다.

2023년 '워싱턴 선언'과 관련된 공동비전들은 2019년의 관여·평화 프레이밍보다 더 강하게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와 '핵·전략자산 운용의 제도화'에 초점을 두었다. 한미 정상은 NCG 신설, 미국 전략핵 자산의 정례적 전개, 동맹 차원의 공동 핵·전략기획 협의 등을 약속하며, 확장억제 의제를 동맹 전반의 최상위 의제로 격상시켰다.⁷¹⁾

68) 국방부 보도자료, "제1차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개최", 2022.11.18.

69) Chung, "Washington Declar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KINU Online Series co 23-16* (May 2023), pp. 8-9.

70) W H. GOV,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NCG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간 확장억제전략은 양적·질적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보였다. 첫째, 실행 중심의 확장억제(Deterrence by Execution)로의 진화이다. 단순히 '핵우산 제공' 선언을 넘어,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및 정례화로 실질적 전략기획·운용, 실제적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확장억제는 선언적에서 '공동 기획-운용-정보공유-위기시 신속협의·결정' 등의 운용적 단계로 강화되었다. 둘째, 핵·재래식 통합 억제체계의 구체화이다. 기존 핵억제 뿐 아니라, '핵+재래식 전력 통합'이 키워드로 등장하며, 양국 합동 기획 및 도상연습(TTX), 공동·동시 작전계획 확정 등까지 포함하였다. 확장억제전략은 재래식 군사력과 사이버, 우주 등 신흥위협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셋째, 전략자산 운용·배치의 실질화이다.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수시로 이뤄지고, 위기 시 신속 배치·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NCG, EDSCG, SCM 등 주요 안보협의체에서 군사적 모의훈련, 실증적 시나리오 운영이 본격 논의·시행되었다. 넷째, 정보공유·협의체계의 고도화이다. 한미 간 민감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유사시 '핵 운용·결정' 과정의 공동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위기단계별 핵사용 정책, 경보정보, 실무자-전문가-고위급까지 수직·수평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다.

다섯째, 확장억제 적용영역의 확대이다. 사이버 공격, 첨단미사일, 우주위협 등 '비핵 신흥 위협'까지 확장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통적 군사 억제에 더해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영역과도 연계하였다. 여섯째, 확장억제전략의 다자적·동맹 네트워크화이다. 한·미·일 3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협력과도 확장억제 전략을 연계 운영하였다. 미국이 동맹·파트너국 전반에 확장억제 신뢰성 부여 및 정보·전략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20년대 확장억제 전략은 '단순 약속'에서 '실행 가능한 동맹 공동 운용체계'로 진화했다. 이는 군사·정책·기술·정보·훈련·글로벌 차원의 변화로, 핵심은 '공동기획, 실질적 억제 운용, 정보 공유, 신흥위협 대응'의 다층적 통합 협의이다.

2020년 이후 미국은 대테러중심 군사전략에서 중국·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경쟁중심 군사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타트너십 강화,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⁷²⁾ 이에 따라 안보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전략 변화에 맞춰 한미 연합방위 태세, 확장억제 능력 강화, 첨단 군사기술·무기체계 도입 등의 협력이 적극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미·중 경쟁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과 실행, 전략권 전환 추진 현황 점검, 연합연습·훈련 강화가 중점의제로 다루어졌

71)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JULY 12, 2024).

72)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October 27, 2022).

다. 또 미국의 혁신적 군사력 개발과 미래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협의에 영향을 미쳐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과 전략적 조율이 확대·심화되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한반도 방위 중심에서 북한억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현안에 대처하는 다층적 협력과 2023년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NCG를 설립하여 안보협력이 확장억제 운용·정보공유 등으로 고도화되었다. 1978년 제11차 SCM 회의의 공동성명에 '핵우산'이 포함된 이후 2005년까지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었으나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제38차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⁷³⁾

이로 인해 이 시기 안보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신흥 안보영역 확대와 첨단기술 협력 강화이다. 기존 군사 협의만이 아니라 사이버, 우주, 미사일, 공급망, AI 등 첨단·비군사 영역까지 협의체가 넓어졌다. 분야별 워킹그룹(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우주정책실무회의,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등)이 신설·정례화되어 기존 안보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시켰다.

둘째, 확장억제 전략의 구체화 및 실행력 강화이다. 전통적 핵우산 제공을 넘어 NCG 신설로 핵 작전지침, 정보 공유, 공동 기획·운용, 위기 시 대응절차 등이 구체화되었고, NCG 신설 등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공동기획·운용 구조가 구축되었다. 선언적 '핵우산'에서 벗어나, 확장억제 전략의 실제적 운용, 정보공유, 위기 시 신속협의·결정체계가 마련되었다.

셋째, 전략·정책·실무 협의체의 다층적 고도화이다. 다층적·고도화된 협의체 구조 확립이다. SCM, MCM과 같은 고위급 전략 결정기구에서부터 KIDD, EDSCG, NCG 그리고 각종 워킹그룹까지 '입체적·분업적' 네트워크가 촘촘히 구축되었다. 이는 전략, 정책, 운용, 기술까지 동맹 협력의 전 주기·전 영역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소통·행동할 수 있게 만든 변화이다. 실무 그룹과 분과들이 전문성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책 조율 및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진화했다. 그러나 한미 간 핵 협의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NCG, DSC, EDSCG의 역할 분담과 참모그룹과 기술적 조연그룹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⁴⁾

요컨대, 이 시기 한미안보협의체는 전통적 군사동맹 틀을 넘어 핵·재래식 통합 억제·첨단 기술 및 신흥 위협 대응·글로벌 협력 등 다차원의 전략동맹으로 고도화되었다. 실행력, 정보

73) 김열수. 앞의 논문, pp. 15-17.

74) 김열수. 앞의 논문, pp. 22-23.

공유, 공동기획, 다층적 거버넌스, 미래 지향적 통합이 가장 두드러진 주요 변화이다. 따라서 2020년대 안보협약체 고도화기는 전통적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핵·재래식 복합 억제와 신기술·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략·실무·정책 간 통합협약체 체계를 고도화하여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미래 전략동맹으로의 진화를 추구하는 시기였다.

VI. 종합 분석 및 함의

한미안보협약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 10>과 같이 한미안보협약체는 시기별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보였다. 연구 결과 안보협약체의 변화에는 대내외 요인과 압박요인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내외 요인 중에서는 대외요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대내요인인 한미관계보다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북한위협은 지속되었고, 그 강도는 고도화되어 협약체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미안보협약체는 대응해 나갔다. 한미안보협약체 형성기의 협약체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였다. 미국은 SCM, MCM을 통해 동맹으로서 대한방위공약을 재천명하고 군사안보 차원에서 한국 군사력 증강계획에 대한 지원 약속을 공표하였다. 한미안보협약체 포괄·전문화기의 협약체는 안보 현안과 미래발전 과제를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약체였다. FOTA, SPI, KIDD, EDSCG 등의 협약체는 주한미군과 국군의 임무 및 역할을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안보협력을 강화·발전시켜 나갔다. 한미안보협약체 고도화기의 협약체는 양국의 핵 및 전략무기 운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협약체로 N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실행을 병행하고 있다.

〈표 10〉 안보협약의 변화 동인과 역할

구분		안보협약 형성기 (1950~1990년대 말)	안보협약 포괄·전문화기 (2000~2010년대 말)	안보협약 고도화기 (2020년대)
주요 협약체		SCM, MCM	FOTA, SPI, KIDD, EDSCG	NCG, GMWG
변 화 동 인	미 군사전략 (대외요인)	미국의 냉전전략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조정	인도·태평양전략
	한미관계 (대내요인)	비대칭 동맹관계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가치·규범 동맹 담론
	북한위협 (압박요인)	재래식 군사도발 (고강도 → 저강도)	핵·미사일 상시 위협 (저강도 → 고강도)	체제위협 수준의 핵위협 (고강도 → 고도화)
안보협약체 구조		연합방위와 위기관리 중심 협약체	포괄적 전략동맹-다층 협약체	확장역제 중심 협약체
안보협약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단순구조 ◦ 비대칭적 협력 구조 ◦ 고위급 정책·전략 결정기구 ◦ 전통적 군사안보·한미 동맹 유지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층화·정례화 ◦ 실질·포괄적인 의제 ◦ 상호 호혜적 협력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영역 확대 ◦ 다층적·고도화된 협의구조 ◦ 입체적·분업적 구조
안보협약체 역할		동맹-연합방위 유지	포괄적 안보협력 강화	확장역제 실행력 강화

한미안보협약의 변화 동인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1990년대는 안보협약체 형성기, 2000~2010년대는 안보협약체 포괄·전문화기, 2020년대는 안보협약체 고도화기라는 특징을 보였다. 즉 형성기에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북·중·소 위협이 결합해 ‘방위동맹-연합방위 협약체’로, 포괄·전문화기에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한미관계의 재조정, 북핵 상시화가 결합해 ‘포괄적 전략동맹-다층 협약체’로, 고도화기에는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의 가치동맹 담론, 체제위협 수준의 핵위협이 결합해 ‘확장역제 고도화-NCG 중심 협약체’ 구조를 형성했다.

한미 양국이 7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여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안보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SCM, KIDD 등 각종 안보협약체를 통해 동맹국으로서의 관념을 공유했기 때문이다.⁷⁵⁾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서 알 수 있듯이, 태평양지역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집단방어(collective defense)를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미는 공동비전을 통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다. 2009년 공동비전이 안보협약체 의제의 ‘수평적 확장’을 촉발했다면, 2019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평화 프로세스와 연계된 ‘관연·지원’ 기능을 부각시켜 협약체가 평화체제

75) 성기운·신성균. 앞의 논문, pp. 84-85.

구축과 병행하는 억제·위기 관리 플랫폼으로 작동하였다. 이에 비해 2023년 ‘워싱턴 선언’과 관련된 공동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최우선 목표로 재정렬하고, NCG를 통해 안보협약의 핵심의제를 핵 억제 운용 협의로 설정함으로써 안보협약 전체의 의제 구조를 핵·전략억제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재편하였다. 이처럼 한미안보협약의 대내외 요인과 압박요인의 변화에 따라 의제와 기능이 단계적으로 진화해왔다. 따라서 의제별로 드러나는 양국의 입장차이를 잘 조정하여 동맹의 공동이익, 공동 목표를 보다 확고히 한다면 향후 한미관계는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안보협약의 변화동인이 시사하는 함의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북한위협 요인이다. 한미안보협약의 역할은 북한의 위협과 비례한다. 한미는 미국 군사전략과 한미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위협이 변함없이 지속되므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⁷⁶⁾ 북한의 도발 횟수와 강도가 증대하면 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남북관계가 긴장되면 한미관계는 순조로웠다.⁷⁷⁾ 북한의 도발 중에서는 대남도발보다 대미도발이 발생하면 협의체는 더 적극적으로 운용되었다. 이는 한미안보협약의 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이 다양화, 고도화되면서 협의체의 역할도 포괄적이고 전문화되었다. 북핵·미사일 문제, 미·중경쟁 등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소가 되면서 협의체의 구조와 의제가 포괄적이고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위협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위협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군사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⁷⁸⁾ 이를 감안할 때 남북 간에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북한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체는 군사문제만을 다루는 협의체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남북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 시작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 비군사협의체인 ‘접경위원회’를 통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였고, 협의가 진전되면서 군사문제도 자연스럽게 다루었다.⁷⁹⁾ 우리도 ‘접경위원회’와 유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 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면 북한

76) 성기온·신성균. 앞의 논문, pp. 79-80.

77) 장삼열. 앞의 논문, p. 99.

78) 이미숙. “북한의 남북한 군사협상 결정요인 고찰,” 『국방연구』제53권 제1호(논산: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0), pp. 72-75.

79) 이미숙·김태산.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군사연구』제152호(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21), pp. 207-208.

위협과 관련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반면 북한위협에 의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안보협의체의 의제는 '포괄성보다 핵심 기능의 고도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NCG와 기존 협의체인 SCM, KIDD, EDSCG 등 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군사전략이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체를 미국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추진 수단으로 운용한다. 한미안보협의체는 한미간의 협의체이나 미국은 북한, 중국,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지역 안보구도 속에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안보협의체를 운용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협의체를 운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미관계와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안보협의체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라는 대외적 요인에 적절하게 상호 조응해야 한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미안보협의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안보협의체의 역할을 검토함에 있어서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변동요인을 적확하게 포착하여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관계이다. 한미안보협의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한미 양국이 7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여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안보 상황 및 여건에도 불구하고 SCM, KIDD 등 각종 안보협의체를 통해 동맹국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⁸⁰⁾ 특히 한미 간 체결하는 공동비전과 같은 상위 정치적 합의가 협의체의 의제·기능 변화를 통해 동맹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역할을 하므로 공동비전이 바뀔 때마다 협의체의 의제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비전 문건이 단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협의체 의제와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안보협의체의 역할은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미간 협의의 결과이므로 한미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대에는 한미관계 외에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반영해야 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동북아 지역 구도 속에서 한미안보협의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미관계는 한미 양국만의 관계만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국과 미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협의체

80) 성기운·신성균, 앞의 논문, pp. 84-85.

의 운용과 병행하여 주변국들과 양자안보협의체는 물론이고 다자안보협의체의 운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자안보협의체의 운용은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변화동인에 대한 연구는 관련이 있는 동맹연구와 안보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동맹연구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이 '단일한 동맹'이 아니라 시기마다 다른 안보협의체 구조와 의제 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꾸어 왔음을 보여줌으로써 동맹의 지속성과 변화에 기여한다. 안보협력 측면에서는 동일한 동맹 틀 안에서도 위협·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고도화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협의체 기반 안보협력'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한미안보협의체는 동맹 관리 및 안보협력에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다층·정례 협의체 구조는 조율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지만, 대규모 회의와 사전 조정에 의존하는 만큼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대응 속도가 느릴 수 있다. 특히, NCG·SCM·KIDD·EDSCG처럼 여러 트랙이 병존하면서, 어느 협의체에서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의사결정의 관성'이나 관료적 지연을 낳을 위험이 있다. 또 안보협의체의 포괄·전문화기를 거치며 협의체가 세분화되고 의제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문성을 높이는 대신 의제 분절과 중복을 낳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이 여러 협의체에서 반복 논의되면서 정책 메시지와 우선순위가 분산되고, 실무부처 간 '칸막이'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맹 구조상 미국이 글로벌 전략과 핵·전략자산 운용을 주도하기 때문에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에서는 미국의 위협인식과 전략 우선순위가 의제 설정을 주도할 수 있다. 특히 억제 중심 프레임이 강화될수록 북한·중국 등 주변국은 한미협의체를 공격적 동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위기관리·신뢰구축 의제를 다루는 데 외교적 공간을 좁히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협의체가 고도로 제도화될수록 관료·군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로 고착될 위험이 있고, 국내정치나 여론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합의를 재확인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된 국내정치 환경에서는 협의체에서 도출된 합의가 국회·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방위비·전략자산 전개·새로운 협의체 신설 등에서 정치적 논란과 정책 실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2020』(서울 : 국방부, 2020).
-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 국방부 보도자료. “제1차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개최”, 2022.11.18.
- 국방부 보도자료.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 회의 개최 결과 공동보도문”(2016. 12.21.).
- 국방부 보도자료. “제3차 한미 고위급 EDSCG 공동성명”(2022.9.17.).
- 국방부·외교부 공동보도자료.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방안 합의”(2017.9.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 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 강구상 외 5명.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김열. “한미동맹의 한국군 자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전략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 김열수.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한국군사』13(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 김영준. “비대칭 동맹에서 방기 우려에 대한 대책: 한미동맹의 사례,” 『유라시아연구』11(4) (서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 김태산·이미숙.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군사연구』제152호(계통: 육군군사연구소, 2021).
- 김형진. “한·미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외교 활성화,” 제21호(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 김재철.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중소연구』제35권 제3호(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 김지동. “한미군사동맹 변화의 추동요인과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제64권(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12).
- 나승학. “한미동맹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냉전·탈냉전 시기 비교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제19권 2호(서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6).
- 박원근. “한미동맹 미래 발전방안: 향후 30년을 위한 의견,” 『한국국가전략』제21호(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3).

- 박휘락.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실태 비교: 동맹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15(3)(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 성기은·신성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념 변화에 관한 연구: 구조토픽모델(STM)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3집 3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
- 손경호. “한미동맹의 역사 -동맹이론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7권 제2호(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3).
- 손한별. “1960년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공격계획,” 『군사』 제108(2018.9).
- 송민형. “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와 한미군사동맹 핵협의그룹(NCG)의 설립요인에 관한 연구 : 확장억제 딜레마의 영향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4)』.
- 송세관.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7(서울, 대한정치학회, 2019).
- 양희용. “한미 동맹정치와 방위비분담,” 『국제지역연구』 제30권 2호(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 엄태암. “2013년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분석: 평가와 과제,” 『전략연구』 제60호(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 앤드류 여. “Institutionalizing ROK-U.S.-Japan Solidarit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Indo-Pacific Security,” 『한국국가전략』 9(1)(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4).
-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1970년, 상)』(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2).
- 윤태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변화양상과 발전방안 -한·미 동맹, 미·일동맹 및 NATO 위기관리체제 비교연구-,” 『국가안보와 전략』 11(2)(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 이경태. “한·미안보 협력 관계의 재조정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제1호(서울: 대한정치학회, 2003).
- 이만희.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안전보장법,” 『일본학보』 105(서울: 한국일본학회, 2015).
- 이미숙. “북한의 남북한 군사협상 결정요인 고찰,”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논산: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0).
- 이수형.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작전통제권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3호(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이재성·이대중. “한미일 3국 협력방안 연구,” 『동서연구』 36(3)(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4).

- 이재원.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37(3)(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 이주은. “한미동맹의 진화요인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 이창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 유지 요인에 관한 연구 : 동맹의 결속과 해체 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 장광열. “비대칭동맹 변환과 약소국요인,”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장삼열. “조정기의 한미동맹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연구,” 『군사발전연구』(광주: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3).
- 정형희·김수찬. “체제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 8(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 조성렬.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재정의,” 『통일정책연구』제11권 제1호(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추이즈잉. “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국방정책연구』제26권 제2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 최강.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제37집(서울: 국립외교원, 2006).
-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주요국제문제분석』2020-62(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 하상식. “한미안보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과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서울: 대한정치학회보, 2007).
-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 노태우정부』(서울: 대영문화사, 2014).
- 한미 국방부.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등 지속 강화 합의,” 『국방과 기술』536(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3).
-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서울: 박영사, 2019).
- 홍찬희. “한미동맹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 황지환. “1990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정치』제34권 4호(서울: 2018).
-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9.10.22.).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6.10.20.).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8.10.31.).

Abraham M. Denmark and Zachary M. Hosford. *Securing South Korea: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2010.

Carter A. Wilson. "Policy Regimes and Policy Chang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20, No.3, 2009.

Chung. "Washington Declar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KINU Online Series co 23-16* (May 2023).

Clint Work·Joo Young Kim. "Shifting Vision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DIPLOMAT* (December 18, 2023).

Dean G.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1969.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James Morrow.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199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72.

Jake Sullivan. "The World after Trump: How the System can Endure,"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8).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 200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The W H. GOV.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October 27, 2022).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JULY 12, 2024).

Change and Implications of the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Lee, Misook

Keywords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Variables, Formation Period of Mechanism, Comprehensive and Specialized Period of Mechanism, Advanced Period of Mechanism

This study analyzed the evolution and role of the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SCM) based on key variables. It sought to clarify how major drivers influenced the SCM during each period and how the SCM responded to the prevailing security environment and security issues. To this end, three key variables were examined: ‘U.S. military strategy’, ‘ROK-U.S. relations’, and ‘North Korean threat’.

The findings reveal distinct phases: the 1950s to 1990s marked the formation period, focused on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and alliance maintenance; the 2000s to 2010s represented the comprehensive and specialized phase, emphasizing enhanced ROK-US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2020s signify the advanced phase, prioritizing strengthening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During the formative period, the consultative mechanism served the role of maintaining military security and alliances. During the comprehensive and specialized period, it served the role of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During the advanced period, it served the role of enhancing the operational cap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es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solving current issues when advancing consultations and for the more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ROK-U.S. relations and the alliance, as the necessity for ROK-U.S. security consultations deepens and expands in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논문투고일: 2025. 10. 31.]

[심사의뢰일: 2025. 11. 13.]

[계재확정일: 2025. 12. 17.]

김정은 시대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도약이론을 중심으로*

장석준**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김정은 시대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양상
- IV. 북한 군사력 강화의 도약적 특성
- V. 결론: 북한 군사력 강화의 전략적 함의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병행하며, 전통적인 선형적 발전 경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선형적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도약이론(Leapfrogging Theory)의 후발이점 활용·단계생략·경로창출을 차용하여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는 도약이론의 핵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전략무기 분야에서는 선발국의 기술 학습을 통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핵·미사일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 단계생략이 나타났다. 재래식 전력에서도 중간 세대 무기체계를 건너뛰거나 선택적 집중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압축적 현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역공학 기반의 개량·재조합을 통해 독자적 기술경로를 창출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군사협력 확대 등 전략환경 변화가 군사기술 도약의 '기회의 창'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약이론에 기반해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발전 경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및 설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북한, 김정은 시대, 북한군, 군사력, 무기체계

*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책학 박사.

I. 서론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10여 년 동안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13년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뒤 북한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과 2021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노선의 표명은 군사력 강화를 체제 유지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기초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노선 하에서 북한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0회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 및 훈련을 감행하고, 극초음속 미사일(화성-8형), 장거리순항미사일(화살-1·2형), 신형·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불화살-3-31형 및 개량형), 수중핵어뢰(해일-5-23),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체계의 다종화와 고도화를 추구해왔다.

동시에 북한은 해군력과 육군력의 현대화에도 나섰다.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 의지 표명, 해군절·함대 현지지도 등 해군력 강화를 위한 정치·군사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한편, 신형 자주포(M-2018), 신형 전차(천마-20) 공개와 ‘제2차 장갑무력혁명’ 언급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¹⁾ 특히 신형 전차, 자주포, 초대형 방사포, 신형 구축함과 더불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까지 공개하면서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포괄하는 전방위 군사력 증강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발전의 속도와 범위는 북한이 겪는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감안할 때 전통적인 군사력 발전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이 MIRV 기술을 확보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된 것과 달리, 북한은 훨씬 짧은 기간에 단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와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체계를 연속적으로 선보였다.²⁾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고도의 기술·인프라가 요구되는 사업 역시 단기간에 추진되고 있어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형’ 군사력 강화가 실제로는 외부 기술 도입과 단계 생략을 전제한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³⁾ 더욱 주목할 점은 북한 스스로도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을 불과 1~2년 안에 이룩했다”고 자평하며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중앙TV』 (보도일자: 2023년 8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3년 9월 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땅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5년 5월 4일)

2)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33.

3) 핵잠수함 건조 경험과 원자로 제조법을 획득한 미국도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건조하는 데 약 8~9년이 소요된다. “North Korea lacks tech,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s to build nuclear submarines, say experts,” *Korea JoongAng Daily* (13th, Mar, 2025).

무기체계의 비선형적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⁴⁾ 즉, 북한이 전략노선에 따른 정책적 우선순위에 의해 군사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 발전 궤도와는 다른 특수한 경로를 따랐음을 유추할 수 있다.⁵⁾

이처럼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양적 증대나 점진적 질적 향상을 넘어 특정 분야에서 단기간에 ‘도약’이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북한 군사력의 위협 수준 평가나 군사전략·독트린 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군사기술 발전의 내재적 동학과 발전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따라서, 북한의 급격한 군사력 발전을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기술적 도입에 의한 일시적인 군사력 강화 현상요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그 발전 동학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론과 기술혁신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도약이론(Leapfrogging Theory)을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을 시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도약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북한의 군사력 강화 과정에 적용하여 북한이 어떻게 기술적·전략적 도약을 이루어냈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의 군사력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약적 특성은 무엇인지, 둘째, 이러한 도약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셋째, 도약이론적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력 강화의 전략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적·기술적 제약 하에서 후발국이 어떻게 특정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이를 통해 북한 군사력 발전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약이론을 군사 분야로 확장 적용함으로써 후발국의 군사기술 발전 경로를 설명 및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8차 군수공업대회 성대히 개막,” 『로동신문』 (보도일자: 2017년 12월 12일).

5)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비 비중을 기록했지만, 단순 수치만으로는 북한이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성과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21 Edition*, (Dec 30th, 2021), <https://www.state.gov/world-military-expenditures-and-arms-transfers-2021-edition>.

II. 이론적 논의

1. 도약이론의 발전과 개념적 확장

도약이론은 후발국의 발전 경로가 선발국의 단계적 발전 궤적을 단순 모방하지 않고, 특정 발전 단계를 생략하거나 압축함으로써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기원은 로스토우(Rostow)의 경제성장 단계론에서 제시된 ‘도약(take-off)’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 과정은 5단계의 단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발전 5단계를 전통적 사회, 도약을 위한 전제, 도약, 성숙으로의 추진, 고도로 발달된 대량 소비 사회로 구분하고, 도약단계를 ‘산업화가 시작되고 노동자와 기관이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짧은 집약적 성장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즉, 도약은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현대적 의미의 도약이론은 거셴크론(Gerschenkron)의 후진성의 이익(advantage of backwardness) 논의를 거쳐 기술혁신 연구 분야에서 체계화되었다. 초기 도약이론의 연구는 주로 후발국이 선발국의 기술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선형적 추격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경제성장에서 후발주자들의 이점을 강조한 거셴크론(Gerschenkron)은 후발국의 상대적 후진성이 오히려 제도적 혁신을 촉진하며, 후발국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 대신 자본집약적 최신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선발국과의 격차를 압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러한 관점은 후발국이 선발국의 시행착오 비용을 절약하고 검증된 기술을 직접 도입할 수 있다는 후발이점(latecomer advantage)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도약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페레즈와 소테(Perez & Soete)가 제시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개념이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경제적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s)의 등장 시기에 후발국이 기술적 도약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회가 창출된다고 분석하였다. 후발주자는 기존 기술에 대한 투자 대신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고 선발주자들은 기존 사업에 고착되어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약이론을 단순한 기술 모방론에서 벗어나 추격 과정에서 신기술이 등장하는 시기가 후발주자에게 일종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술적 도약을 구

6) Rostow, W. Whitman,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 36-59.

7)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조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⁸⁾ 또한 린(Lin)의 연구는 도약이론에 제도적 차원을 추가하였다. 그는 경제발전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구조적 전환의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부터 기존 기술과 산업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는 후발국의 우위를 강조하였다. 개발도상국은 초기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후진성의 이익(advantage of backwardness)을 활용해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여 더 빠른 기술적 혁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관점은 도약을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닌 제도적·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틀이 되었다.

최근의 도약이론 연구는 후발국의 발전 경로가 선발국의 경로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관찰에 기반하여 새로운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근과 임채성의 연구는 후발국이 일부 발전 단계를 건너뛰는 단계생략(stage-skipping) 현상과 기존 경로와는 상이한 독자적 발전 경로를 창조하는 경로창출(path-creation) 현상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후발국(주자)은 선발국(주자)이 경험한 초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뛰어넘어 선발국의 혁신적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을 통해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더 빠르게 성장하거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빠르게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¹⁰⁾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인 이근과 말레르바(Lee & Malerba)는 후발주자들의 성공적인 도약의 핵심 요소로 외생적인 새로운 기술의 '내재화'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너뛰기(stage-skipping) 전략을 통해 후발 기업이 선도 기업과 유사한 경로를 따르지만, 일부 단계를 건너뛰어 추격(forging ahead)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를 도약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다.¹¹⁾

나아가 가루드와 카르노에(Garud & Karnøe)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과 대비되는 경로창출의 개념을 통해 행위자들이 기존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적 경로를 개척하는 능동적 과정을 강조하였다. 기업가들은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사업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진 대안적 접근 방식에서의 전환을 위해 경로를 창출한

8) Perez, C., Soete, L., Catching-up in technology: entry barriers and windows of opportunity. In: Dosi, G., Freeman, C., Nelson, R., Silverberg, G., Soete, L. (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London and New York: Pinter Publishers, 1988), pp. 475-478.

9) Lin, J. Y., *New structural economics : a framework for rethinking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12), p. 6.

10) Lee, K., & Lim, C. Technological regimes, catching-up and leapfrogging: findings from the Korean industries. *Research policy*, Vol. 30, No. 3(2001), pp. 459-483.

11) Lee, K., & Franco, M., "Catch-up cycles and changes in industrial leadership: Windows of opportunity and responses of firms and countries in the evolution of sectoral systems," *Research Policy*, Vol. 46, No. 2(2017), pp. 345-346.

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즉, 경로창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로는 결국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약이론은 후발국의 발전 경로가 선발국의 경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특정 단계를 생략하거나 압축하여 ‘도약’함으로써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기술혁신, 국가 전략, 조직 발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 즉, 초기 도약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후발주자가 선진주자의 오래된 기술을 획득하고, 산업에 적용하여 두 사이의 격차를 좁히고 성공적인 추격을 달성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후 도약이론은 발전되어 후발주자 혹은 후발국가가 단순히 선진국가의 기술발전 경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단계를 건너뛰거나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여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얻음으로써 도약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약이론의 핵심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후발 이점’은 후발국이 선발국의 경험과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어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단계 생략’은 발전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최신 단계로 직접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경로 창출’은 기존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발전 경로를 창출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약을 “후발국이 선진국의 기술발전 경로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기술·정치·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서 나타나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여 기존 경로를 생략하거나 우회하면서 기술격차를 단숨에 줄이거나 추월하는 현상”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도약이론은 경제발전과 산업·기술혁신의 경로를 설명하며 후발국이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해 기술격차를 압축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이론적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민간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군사력과 무기체계 발전 등 방위 산업과 군사기술 영역에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군사적 측면에서 후발 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제한된 자원과 기술적 제약 속에서도 특정 군사 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 현상을 조명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는데, 이는 도약적 발전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12) Garud, R., & Karnøe, P. “Path dependence and creation as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to strategy.” In R. Garud & P. Karnøe (Eds.), *Path Dependence and Creatio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pp. 7-8.

후발 국가의 군사력 발전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정밀유도무기, 미사일 전력, AD/2D (Anti-Access/Area-Denial) 체계와 같은 특정 전력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해 왔다. 앤드류 크레피네비치(Andrew F. Krepinevich)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정밀유도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위성·사이버전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력투사와 정밀타격 중심의 군사적 우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한다.¹³⁾ 그는 이러한 전력 발전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이 아닌, 미군의 전통적 작전개념을 직접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중국의 전력 발전 방식은 후발 국가가 선진국의 축적된 군사기술을 학습함으로써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후발이점'의 군사적 적용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 발전을 다룬 연구들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군사력 발전을 조명하고 있다.¹⁴⁾ 캄란 타레미(Kamran Taremi)는 이란이 이라크 전쟁 이후 외부 지원에 의존해 스커드(Skud) 계열 탄도미사일과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국 내 자체설계를 비롯한 시험, 생산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했다고 분석한다.¹⁵⁾ 베남 벤 탈레블루(Behnam Ben Talebu)의 연구 역시 이란이 외부 기술을 도입한 뒤 이를 역공학하여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장거리 타격 능력, 정밀 유도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제재 환경 속에서도 미사일 전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사력을 단기간에 강화하였음을 지적한다.¹⁶⁾ 이는 자국의 산업·기술 기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군사기술 분야에서 선택적 집중을 통해 단기간에 전력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이 후발 국가의 군사기술 발전의 도약적 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조명해 온 것과는 달리, 북한 군사력 발전을 다룬 연구는 주로 핵전략 변화와 핵·미사일 발전 양상 및 전력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구체적으로 김보미(2022)는 억제력의 강화 과정에 주목하여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였고, 함형필(2021)은 전술핵 전력의 부상을 계기로 북한

13) Andrew F. Krepinevich, "Strategy in a Time of Austerity: Why the Pentagon Should Focus on Assuring Access," *Foreign Affairs*, Vol.91, No. 6(2012), pp. 58-69.

14) Andrew F. Krepinevich(2012), p. 61.; Hadi Ajili and Mahsa Rouhi, "Iran's Military Strategy," *Survival*, Vol. 61, No. 6(2019), pp. 139-152; Michael Elleman, *Iran's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 Net Assessment*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0).

15) Kamran Taremi, "Ballistic Missiles in Iran's Military Thinking," *Woodrow Wilson Center* (Oct 14, 2003), <https://www.wilsoncenter.org/event/ballistic-missiles-irans-military-thinking>.

16) Behnam Ben Talebu, "Ship Carrying Chemical for Missile Development Docks in Iran,"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Feb 25, 2025), https://www.fdd.org/analysis/policy_briefs/2025/02/25/ship-carrying-chemical-for-missile-development-docks-in-iran.

핵태세가 단순 보복억제에서 재래식 분쟁 국면에서의 제한적 핵사용을 내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논증하며 핵전략의 변화에 주목하였다.¹⁷⁾ 류인석(2025)은 북한이 핵전력의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향후 비핵 전략무기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다층적 억제 전략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¹⁸⁾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핵개발의 목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군사력 전반의 발전 과정에 대한 함의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재래식 전력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군사력 발전 양상을 주목한 연구도 존재한다. 조남훈(2019)은 북한군의 주요 전력 실태와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재래식 열세를 보완하기 육·해·공군의 핵 타격능력 완비, 신형무기 개발 등 군사력 건설방향의 변화를 보이며 비대칭전략 중심의 군사전략으로 재편해 가고 있다는 점을 핵심 주장으로 제시한다.¹⁹⁾ 김보미(2020)와 차두현(2021)은 김정은 집권 이후 재래식 무기체계, 특히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의 기술적 발전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전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⁰⁾ 황일도(2023)는 북한이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전술핵과 전략핵을 병행하는 이중 핵전력 구조를 지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²¹⁾ 특히 황일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해진 러시아의 상황을 역이용해 무기체계 안정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간접적이거나 북한의 핵전력 발전이 외부 충격과 선행 사례의 흡수를 통해 비연속적으로 가속될 수 있는 도약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 발전을 분석한 앞선 연구들은 군사기술 발전의 내재적 동학과 발전 경로를 이론적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이 어떠한 기술적 경로와 발전 메커니즘을 통해 압축적인 군사력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일반적인 군사기술 발전 궤도와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7) 김보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 억제력의 강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통권 133호(2021), pp. 7-43.

18) 류인석,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전략연구』 통권 95호(2025), pp. 65-101.

19) 조남훈, “북한군 주요 전력 실태 및 평가,” 『북한』 제575호(2019), pp. 30-37.

20) 김보미, “북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함의,” 『INSS 전략보고』 No. 87 (September 2020); 차두현, “북한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위협과 대응의 시급성,” 『Issue Brief』 No. 32 (2021).

21)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22) 황일도(2023), p. 57.

도약이론의 핵심 개념을 분석틀로 정립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단순한 위협 축적 과정이 아닌 도약적 발전 경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3. 이론적 적용

본 연구는 도약이론을 군사력 발전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도약이론은 본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군사력 발전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적용 사례가 드물다. 군사력 발전 역시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술 발전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특히 군사기술은 기술 도입과 개량, 전략적 선택, 외부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요소가 결합하는 영역으로, 도약이론의 핵심 개념인 후발이점, 단계생략, 경로창출을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약이론을 통해 기술혁신 연구의 범주 속에서 군사력 발전을 이해하려는 확장적 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후발 군사국가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는 데 도약이론이 가지는 분석적 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군사기술 발전에서도 후발 이점이 작용할 수 있다. 후발 군사국가는 선진 군사국가의 기술과 전략을 학습하고 적용함으로써 자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앞선 절에서 검토한 이란과 중국의 사례는 후발국이 기술 개발 전 과정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이미 검증된 기술을 선택적으로 흡수·개량함으로써 군사력 고도화의 속도를 단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후발 이점 활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선진 기술을 학습하고 자국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독자적 기술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군사기술 영역에서도 후발국이 선발국의 축적된 기술 성과를 기반으로 압축적 발전을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군사력 발전에서도 단계 생략이 가능하다. 특히 신흥 군사강국들은 중간 단계의 무기체계를 건너뛰고 최신 세대의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이란 같은 신흥 군사강국들은 정밀유도무기(precision-guided-munitions) 분야에서 기술적 도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투기 등에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합해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미군이 지닌 정밀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준독점적 지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중국의 정밀유도무기 개발은 전통적인 단계

23) Anderew. F. Krepinevich(2012), p. 60.

별 무기체계 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신 세대의 정밀타격 기술로 도약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미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적 우위를 중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추격하는 군사기술적(military technological) 도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군사 전략과 독트린 발전에서도 경로 창출이 나타난다. 후발 군사국가들은 기존 전략을 모방하는 대신, 자국의 고유한 상황과 제약에 맞는 독자적 전략과 독트린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과거 20세기 아랍지역에서의 분쟁은 유목민적 특성과 사막 지형의 제약 조건 속에서 기존 정규전의 직접 충돌 방식인 접촉전쟁(War of Contact) 대신 새로운 간접 작전 방식 분리전쟁(War of Detachment)으로 전환시킨 사례이다. 즉, 기존 군사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규전의 핵심 원칙인 “적군의 주력 파괴”라는 목표 자체를 아랍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열세한 군사력과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²⁴⁾

다만,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과정을 도약이론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론적 조정이 필요하다. 경로 창출의 경우, 군사 전략과 독트린 발전에서 나타나는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자적인 기술 경로의 창출로 변용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도약이론의 세 가지 핵심 요인을 ‘후발이점의 활용’, ‘기술발전 단계의 생략’, ‘독자적 기술경로의 창출’으로 재정립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핵·미사일 기술, 전자·정보 기술, 재래식 무기체계 기술 등 군사 분야에서 북한이 어떻게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 도약이론이 기술·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회의 창’에 주목해 온 점을 확장하여, 국제 정치·군사 패러다임의 변화 역시 군사기술 도약의 구조적 기회의 창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기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군사협력의 확대와 같은 국제정치 구조와 군사적 환경의 변화는 후발 군사 국가가 기존의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 외부 기술과 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재조합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패러다임 변화를 북한 군사력 도약의 구조적 조건으로 설정하고, 북한 군사력 강화가 지닌 도약적 특성과 그 전략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매체 분석, 국내·외 연구기관 자료,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국방 및 정보기관의 공개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북한의 주요 공식

24) Freedman, Lawrence, *Strategy: A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108-109.

매체와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나타난 김정은의 연설문, 당 회의 결정문, 군사 관련 보도 등을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군사력 발전 양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약적 특성을 추적한다.

III. 김정은 시대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양상

1.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핵무기체계 강화(2012-2015)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첫 국가전략노선으로 경제발전과 핵무력 강화를 병행 추진하는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핵무기의 기술적 능력 향상과 핵 투발수단 다종화의 개발에 몰두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정은 집권 초 군수공업 부문의 현지지도 횟수는 35회에 달하였다.²⁵⁾ 또한 김정은은 집권 초부터 국방부문의 인적 역량 강화와 역할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였다.²⁶⁾ 이러한 최고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은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핵능력과 투발수단의 강화 및 발전으로 연결되었다.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²⁷⁾ 지난 2009년 제2차 핵실험의 핵능력이 2~6kt인데 비해 제3차 핵실험에선 5~15kt에 도달한 것으로 당시 추정하였다. 이는 과거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HEU 핵탄두 위력(15kt 정도)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⁸⁾ 이전 제1·2차 핵실험이 플루토늄 기반이었다면, 제3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이전 보다 진일보한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능력의 질적 향상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²⁹⁾

25) 변상정·김인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No. 170(2022), p. 3.

26) “최고상임위원회 정령: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 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에게 로력영웅 칭호를 수여할 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보도일자: 2012년 12월 22일); “최고상임위원회 정령: 제3차 지하 핵시험 성공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군들에게 로력영웅 칭호와 김정일 훈장, 김정일 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보도일자: 2013년 2월 21일).

27)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라고 성공적인 ‘지하핵시험’ 사실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보도일자: 2023년 2월 12일).

28)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정세분석』 2013-02(2013), p. 4.

29)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로동신문』(보도일자: 2013년 5월 21일).

한편, 투발수단 역시 개발에 열을 올리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5건, 2014년 18건, 그리고 2015년 14건으로 총 42회를 기록하였다.³⁰⁾ 뿐만 아니라 투발수단의 다종화에도 힘쓰며 2013년까지는 지대지·함대함·지대공·지대함 등 다양한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발사를 강행해 ‘광명성 3호-2호기’의 궤도 진입을 성공시키며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핵심기술인 단분리와 핵탄두 운반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에는 주로 스킨드(SCUD)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한데 이어 2015년에는 5월 신형무기체계인 ‘북극성-1호(KN-1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초 수중 발사하는 군사적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추가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콜드런칭(cold launching)’ 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향상에 매진하였으나, 두 차례 발사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술적 과제를 남겨두었다.

이처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전략노선과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국방공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당면 과제 해결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2012-2015)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MD) 비율은 2013년 23.9%, 2014년 24.0%, 그리고 2015년 24.2%를 기록하며 국방력 발전을 위한 예산 역시 증가하였다.³¹⁾ 이는 결국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 시기로 설명할 수 있다.

2. 제7차 당대회 총결 기간과 전략무기체계 능력 향상(2016-2020)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에서 기존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하였다.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도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 과업 완수가 당면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³²⁾ 이러한 기조는 제7기 2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지속되며, 김정은은 핵무력과 자력갱생을 핵심으로하는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철저한 관철을 재확인했다.

이 시기 북한은 2016년 1월과 9월에는 제4차,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제4차 핵실험에

30)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KINU Insight』 No.1(2017), p. 5.

31)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21 Edition,” (DEC 30, 2021), <https://www.state.gov/world-military-expenditures-and-arms-transfers-2021-edition> (검색일자: 2025. 5. 6.).

32) 당면한 국방공업으로는 크게 △ 국방공업의 주체성·자립성 강화 △ 현대화·과학화 추진 △ 각종 전략무기의 현대화 달성 △ 대공방어체계의 향상 등 국방공업 발전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주장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보도일자: 2016년 5월 8일).

대해 북한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시험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언급하며 기술적 향상의 성과를 자평하였다.³³⁾ 제4차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일 경우, 일반 원자탄보다 2~5배 정도 위력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경량화 및 소형화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난 3차 핵실험에서 비해 상당한 핵능력의 진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핵분열 방식으로 추정되는 3차 핵실험(2013)보다 위력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³⁴⁾ 이후 감행된 제5차 핵실험은 기존 핵실험을 통해 입증하지 못했던 강화된 핵 폭발능력과 핵탄두 제조 공정단계의 진전을 보이며 ‘표준화된 핵폭탄’ 제조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7년 제6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고 공식 보도하였다.³⁵⁾ 제6차 핵실험의 폭발위력은 50~150kt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이 표준화된 핵탄두를 확보한 상태에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⁶⁾ 즉,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개발과 핵폭탄을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내폭 원리 및 관련 기술 자료를 확보하였음을 보여준다.

투발수단 관련 실험 역시 지속되었으며, 북한은 다수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시험 발사에 이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주장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³⁷⁾ 북한은 2016~2017년 동안 약 40회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2017년 한 해에만 18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시험발사를 통해 타격능력을 고도화하고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회피기술을 축적하면서 IRBM ‘북극성-2형’과 ICBM ‘화성-15형’의 개발을 완료하였다.³⁸⁾ 이러한 투발수단 발전 양상은 단거리에서 준중거리·중거리·중장거리 및 SLBM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신형’ 또는 ‘개량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전략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보도일자: 2016년 1월 10일).

34) 정성윤,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Online Series』 CO16-02(2016). pp. 2-3; 이상민, “6차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북핵 능력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2017), p. 8.

35) 제6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은 “우리의 핵무기는 장기간에 걸친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핵무력 강화에 대한 입장을 표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보도일자: 2017년 10월 8일).

36) 이준근,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 통권232호(2017), p. 35.

37)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이 이룩된 민족적 대경사의 날”로 그 결과를 표현하였다. “만세 만세 만만세!,” 『로동신문』, (보도일자: 2017년 11월 30일).

38) 변상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취향찬 설계'와 불균형적 발전』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p. 79.

이후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대외적 환경요인을 고려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일시적 태도 전환 속에서도 전략무기체계의 기술적 역량 향상은 지속해왔다. 일례로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2019년 한 해에만 북한은 약 25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였다.³⁹⁾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비핵화 협상 시기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해온 사례들을 공개한 바 있다.⁴⁰⁾ 즉, 이러한 정황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이 전략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북한은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MGM-140 육군 전술 미사일(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과 유사한 단거리 준탄도미사일(KN-24)을 개발하였다. 또한, 북극성-3형(SLBM) 시험발사를 통해 단일 단계 고체 추진제 운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⁴¹⁾

이후 북한은 2019년 12월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국방력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⁴²⁾ 이러한 기조 아래 북한은 2020년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SLBM)’과 다탄두(MIRV)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화성-17형(ICBM)’을 공개했다. 동시에 초대형방사포와 대구경 장사정포 등 사정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도 확대하였다.⁴³⁾ 이를 통해 2020년을 전후로 북한의 전략무기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신형 ICBM 개발 등 13종으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군사적 역량 증가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제8차 당대회와 군사력 고도화 및 현대화(2021-현재)

39) 2019년 5월~8월까지 4차례의 신형전술미사일(KN-23) 시험발사, 7월~8월까지 2차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발사, 그리고 8월에는 ‘북한식 에이테킵스’인 신형무기(KN-24)의 2차례 시험 발사 등을 감행한 바 있다.

40) 변상정·김인태(2022), p. 7.

41) Panda, Ankit, “Unpacking North Korea’s new weapon: the “Songun ATACMS”,
<https://www.nknews.org/pro/unpacking-north-koreas-new-weapon-the-songun-atacms/>, (Aug 11, 2019).

42)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0년 1월 1일).

43) 이중구, “북한의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구상과 무기체계 발전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27권 제3호(2025), p. 32; 김보미(2020), p. 3.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력 강화를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⁴⁴⁾ 이 계획에 따라 북한은 2025년까지 국방 분야의 전략적 과업으로 초대형 핵탄두 생산의 지속적 추진,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핵무기 개발, 15,000km 사거리 내 ICBM의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군사 정찰위성 등 무기체계 확보와 군의 최적예화, 무장 장비의 현대화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⁴⁵⁾

제8차 당대회에서 구체적인 군사력 증강의 중기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북한은 이를 수행하는데 주력하였다. 제6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의 능력 향상을 지속해온 북한은 2023년 3월 27일 이른바 ‘전술핵장치(탄두)’로 추정되는 ‘화산-31’ 형상을 처음 공개하였다. 동시에 화산-31형을 장착할 수 있는 투발수단 8종(KN-23·24·25, CRBM, 화살-1·2형, SLBM, 해일)과 600mm 초대형방사포 핵탄두의 위력을 5kt로 적시한 개념도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이러한 공개는 북한이 핵탄두 위력 조절 기술을 포함해,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 가능한 표준화·규격화, 소형화·경량화, 다중화 수준에 상당 부분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⁴⁶⁾

또 다른 군사 분야 과업인 투발수단 능력의 고도화를 위해 북한은 상기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2023년 4월 13일 고체연료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고각 발사하여 성공했다고 공식보도 하였다. 뒤이어 2024년 10월 31일 기존 고체연료 ICBM을 더욱 개량시킨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면서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지칭하였다.⁴⁷⁾ 이로써 북한은 액체·고체연료추진 기반 ICBM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ICBM의 기술적 능력을 가늠할 정찰위성 ‘천리마-1 로켓’ 발사는 2024년 5월 27일 실패 이후 추가적인 성능 시험이 이뤄지지 않아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및 목표 지향 비행 기술 등의 고도화 기술 확보는 한계로 남아있다.⁴⁸⁾

44)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초대형 핵탄두, 1만 5천 km 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다탄두개발유도기술(MIRV), 중형잠수함 및 핵잠수함(SSN), 수중·지상 발사 고체형 ICBM,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SLBM 또는 SLCM),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연구·개발 중에 있는 전략무기까지 이례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홍민 외, “북한 조선노동당 제 8차 대회 분석,” 『KINU Insight』 No.1(2021), p. 29.

45)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1년 1월 9일).

46) 양욱,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핵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 『Issue Brief』 2023-12(2023), pp. 2-5.

4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 발사 성공적으로 단행,”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4년 11월 1일).

48) 정찰위성 발사는 ICBM 핵탄두와 유사한 중량의 탑재물을 정상각도로 우주궤도에 진입하기에 실제 ICBM 정

나아가, 북한은 2021년 9월 ~ 2024년 12월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업과 관련해 총 6차례 시험발사를 진행하면서 액체연료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엔진과 추진체에 대한 보완 및 성능개량을 병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2021년 9월 활공체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HGV)'은 실패했으나, 2022년 1월에 두 차례 시험발사한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능력 향상의 진전을 과시하며 개발 완료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의 성능에 대해 비행거리, 고도, 속도, 선회 및 측면기동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자평하였으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⁹⁾

한편, 2017년 12월 북한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정밀공격수단을 포함한 저격 무기(소총), 전차·장갑차 등의 전력 향상을 위한 재래식 현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핵무기체계 고도화 및 여러 산적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한 이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제8기 제7차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무기생산과 군수산업에 대해 강조하며 다수의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⁵⁰⁾

북한은 2023년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 2023'에서 신형전차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신형

상각도 발사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ICBM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가능하다. 양욱,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Issue Brief』 2025-04(2025), pp. 3-10.

- 49)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속도와 고도를 강제제한하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활공도약형 비행체도 특성과 측면기동능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중략) 이로써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4년 4월 3일); 흥민, "북한의 신형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분석," 『Online Series』 CO 24-29(2024), pp. 3-5; 김보미·이성훈, "주변국 및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과 대응 방안," 『이슈브리프』 533호(2024), pp. 3-4.
- 50)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탄약 공장 4회, 전략미사일 TEL 공장 4회, 전술미사일 공장 3회, 전술미사일 TEL 공장 2회, 조선소 2회, 저격 무기 공장 2회, 약전기기(전자기기) 공장 1회, 무인기·순항미사일 엔진 공장 1회, 장갑차 공장 1회 등 다양한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하였다. 이종구, "북·러 군사협력의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26권 11호(2024), p. 45;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3년 8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3년 8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4년 1월 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10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2월 2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2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국방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13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7월 3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선박건조사업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9월 8일).

전차 ‘M-2020’은 능동방어체계(APS) 장착하고 포탑 측면에 요격탄 발사기로 보이는 원통들도 식별되면서 외형적 측면에서 기존 전차들 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¹⁾ 나아가 2025년 5월 김정은의 탱크 공장 방문을 보도하며 최신식 신형전차와 600mm 초대형방사포 ‘KN-25’, 이동식발사차량(TEL), 북한판 K9 자주포 포탑 등을 공개하였다. 특히 북한은 신형전차에 대해 “일체식동력장치, 신형 능동방호종합체, 피동방호수단, 전자전 종합체 혁신, 갱신”하였다고 언급하며 육군력에서의 기술 발전을 과시했다.⁵²⁾

해군력 강화에서는 2023년 9월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다수의 SLBM 발사관을 갖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SSB) ‘김군옥영용함’을 진수하였다. 뒤이어 북한은 해군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2025년 3월 8일 SL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동시 탑재 가능한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실을 공개하였다. 북한이 기존 디젤 잠수함을 개조한 ‘전략잠수함’, ‘핵잠수함’, ‘전술핵공격잠수함’ 등의 용어를 언급한 적은 과거 여러 차례 존재한다. 하지만, 핵추진 엔진 기반의 미사일 발사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단기간 내에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해군 함정 현대화의 일환으로 기존 운용 중인 압록급 호위함(1500t) 보다 약 3배 규모인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함(5000t급)’을 2025년 4월 25일 선보였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또 다른 신형구축함 ‘강진호’를 진수하였다.⁵³⁾

이처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력 발전은 세 단계의 명확한 궤적을 보여준다. 1단계(2012-2015년)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시기에는 핵무기체계 강화에 집중하여 제3차 핵실험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기반의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 개발과 함께 ‘은하 3호’ 발사 성공으로 장거리 투발수단의 핵심기술을 습득했다. 2단계(2016-2020년) 제7차 당대회 총결 기간에는 전략무기체계 능력의 비약적 향상과 제4-6차 핵실험을 통해 50-150kt급 수소탄 기술을 완성하고, 화성-15형 ICBM 개발로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다중화된 투발수단 체계를 구축했다. 3단계(2021년-현재) 제8차 당대회 이후에는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군사력 고도화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화산-31형 전술핵탄두 공개, 화성-18형·19형 고체연료 ICBM 완성,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동력전

51) 신인균, “우리 군이 도입 망설인 능동방어체계(APS), 北 신형 전차에 장착 시작,” 『동아일보』 (2023년 8월 13일).

52) 김정은은 탱크공장 현지지도에서 “우리 육군에 최신식 탱크와 장갑차를 지난 세기의 무기와 교체하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군의 무장 장비 현대화를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땅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5년 5월 4일).

53) “새시대 해군현대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5년 4월 2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5년 6월 13일).

락유도탄잠수함 건조, 신형 전차·자주포·구축함 등 재래식 전력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군사력 강화를 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핵·미사일 기술의 질적·양적 도약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추구라는 북한의 압축적이고 다층적인 군사력 발전 양상을 보여준다.

IV. 북한 군사력 강화의 도약적 특성

1. 전략무기체계 발전에서의 도약적 특성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단기간 내 전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는 압축적·비약적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 발전 경로에서 흔히 관찰되는 점진적·선형적 성장과 달리 특정 기술과 능력에서 급격한 질적 전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도약이론의 세 가지 요인인 후발이점, 단계생략, 경로창출을 적용할 때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전략무기체계와 지상·육·해군력 전반에 걸친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서 이러한 세 가지 경로를 상황과 목적에 따라 결합 및 활용함으로써 기존 군사력 발전의 선형적 경로를 압축·우회·변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존 핵보유국들의 기술적 경험과 시행착오를 학습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핵능력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우라늄 기반 핵분열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또 다시 3년 만인 2016년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혼합한 제4차 및 5차 핵실험을 통해 증폭핵분열에 성공한데 이어 다음 해인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에선 핵폭발 작동방식에 있어 기존 증폭핵분열 기술에서 핵융합으로 다변화하였다.⁵⁴⁾ 즉,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전략무기체계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였다. 다만, 북한이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여 핵개발에 몰두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핵능력을 북한 독자적으로 획득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핵융합기술은 핵무기 중에서도 수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핵개발의 최종적 단계이다. 여러 핵보유국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미국은 1945년 최초 핵실험 후 1946년 2차례, 1948년 3차례, 그리고 1951년 16차례의 핵실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였다.⁵⁵⁾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로 간주될만한 위력을

54) 대한민국 국방부, 『2022년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 339.

선보인 제2차 핵실험 이후 7년 만에 핵융합무기를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완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의 급속한 핵능력 발전은 외부 기술원조를 통한 후발이점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북한은 민감 핵기술(sensitive nuclear technology)을 파키스탄의 칸(A. Q. Khan)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⁶⁾ 2010년 11월 헤커(S. Hecker) 교수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할 당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2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현대적인 시설을 완비한 상태였다. 북한이 대외에 공개한 우라늄 농축 역량의 기술적 기반은 칸 네트워크로부터 P-1 및 P-2 원심분리기, 설계도, 기술적 자문 등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⁵⁷⁾ 나아가 2024년 9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기지 및 핵무기 연구소 현지지도 과정에서 공개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핵물질의 대량 생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시설이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한 형태이자 외형적 구조와 배치 면에서 기존 시설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⁵⁸⁾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 기술원조가 없었다면 기술적으로 북한의 급격한 핵능력 발전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선발 핵보유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농축 기술과 핵융합 기술 노하우를 외부로부터 단기간에 습득하여 핵프로그램을 급속도로 발전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외부 확산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민감 핵기술의 유입이라는 ‘후발이점’이 존재했기에 동일한 시간축에서 다른 핵보유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의 핵무기 고도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미사일 기술에서도 핵기술 경로와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 1990년대 러시아의 미사일 분야 전문가 그룹이 방북해 미사일 관련에 필요한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고, 1996년 시리아로부터 SS-21 미사일을 도입해 북한은 1998년 최초의 다단로켓인 사거리 2,500km급 장거리 탄도 미사일(대포동-1호)을 시험 발사하였다.⁵⁹⁾ 대포동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55) 이호찬·이상규·정관, “북한 4·5차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0권 제3호(2017), p. 458.

56) Gordon Corera,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A. Q. Khan Net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2009).

57)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 20, 2010), p. 5; Hui Zhang, “Assessing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8, 2009).

5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물질생산기지 및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보도일자: 2024년 9월 13일); 신승기,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안보전략 FOCUS』 제41호(2025), pp. 3-5.

가능했던 것은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과의 기술커넥션을 통한 결과였다.⁶⁰⁾ 이후 이러한 활동을 통해 획득된 추진제, 단분리, 재진입체 기술 등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김정은 시대에 개발하고 있는 10,000km급 ICBM과 SLBM,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반이 되었다.⁶¹⁾ 이는 선발국들의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전형적인 후발 이점 활용 사례이다.

나아가 북한은 도입된 외부 기술을 단순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역공학을 통해 분석·개량할 수 있는 체계적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후발 이점을 넘어 도약이론에서 강조하는 경로 창출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러시아의 RD-250 엔진 역설계를 통해 개발해왔던 백두산엔진(RD-250 쌍둥이 엔진 기반)에 새로운 액체 추진제와 보관 용기 기술을 결합하여 신속성 및 발사운용의 적응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적 향상을 고안해냈다.⁶²⁾ 또한, 2021년 3월 시험 발사한 신형전술탄도미사일 'KN-23 개량형'은 기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복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의 하단 추력 제어구조와 자체 개발한 고체로켓 모터를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는 북한의 독자적인 경로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후발이점이 기술의 단순 수입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 내부의 역공학·재조합 능력과 결합하며 경로 창출 변수로 전환되고, 이것이 다시 개량주기 단축과 새로운 형식의 무기체제 출현 속도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후발이점과 경로 창출이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발전의 물리적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한편,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MIRV) 기술 개발은 단계 생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7년 화성-12 발사에서 개별탄두를 실어 보내는 PBV(Post Boost Vehicle) 기술 시험이 관찰되

59) 북한은 1980년대부터 소련의 스킵드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여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분석하고 개량하는 과정을 거치며 탄도 미사일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Joseph S. Bermudez Jr., *A History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 (Monterey: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99), pp. 10-11; 김진무 외, 『북한군 현 실태 II』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 138.

60) 권용수,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국방연구』 제56권 제1호(2013), p. 21.

6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의 엔진은 1960년대 소련의 RD-250과 유사하고, 외형 역시 소련의 사거리 10,000km 이상 ICBM ‘SS-19’과 흡사하다는 분석이다. Joby Warrick, “The secret to Kim’s success? Some experts see Russian echoes in North Korea’s missile advances,” *Washington Post* (July 8, 2017).

62) 홍민 외,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4), pp. 87-88.

63) 장영근, “북한 신형전술미사일(개량형 KN-23)의 기술평가 및 함의,” 『한국군사』 제10권(2021), pp. 173-183; Kristensen, H. M., Korda, M., Johns, E., & Knight, 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2024,”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80, No. 4(2024), pp. 251-271. “총알 갈아끼우듯 ‘핵탄두’ 탑재…이런 방식, 북한이 유일” [북핵 어디까지 왔나,] 『중앙일보』, (보도일자: 2023년 4월 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287>.

었다. 이는 기존 핵보유국들이 대량의 핵탄두 확보 후 다탄두각개유도탄(MIRV) 기술을 개발한 것과 달리 북한은 제한된 핵물질로도 다목표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독창적 접근법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한 이후 단탄두에서 다탄두,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다탄두 기술 개발을 통해 1970년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미사일 '미니트맨-3'을 전력화 하였다.⁶⁴⁾ '미니트맨-3' 미사일을 전력 배치할 당시인 1970년 미국의 핵탄두 개수는 약 26,000개에 도달한 반면 북한은 대량 탄두 생산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탄두 ICBM 기술 개발을 2017년 무렵부터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11월 '국방발전-2024'에서 선보인 '화성-19형'과 단탄두와 다탄두의 그림을 공개할 당시 북한의 핵탄두 수량은 최대 50개로 추정되고 있다.⁶⁵⁾ 이러한 북한의 MIRV 개발은 핵탄두 대량 축적이라는 선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목표 타격능력을 확보하는 단계 생략형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도약이론의 세 가지 특성을 차용하여 전략무기체계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서의 도약적 특성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전형적인 단계 생략을 통한 압축적 무기체계의 발전이라는 도약적 특성을 보여준다. 과거부터 북한은 재래식 무기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대내외적인 요건을 고려해 전략무기체계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대적으로 재래식 무기체계의 전력 증강 속도는 제한적이였다. 지상군의 핵심무기인 자주포의 경우, 북한은 1970~1980년대에 구형 전차 차체를 활용해 견인포를 자주화하는 초기적 형태의 자주포를 개발하였다. 1990년대 170mm 곡산 자주포(M-1978, M-1989형)와 240mm 자행 방사포의 전력화 이후 북한은 정밀유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 2018년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현대적 자주포(M-2018)를 공개하였다.⁶⁶⁾ 이러한 북한의 자주포 현대화는 일부 중간 단계를 건너뛰며 질적 변화를 추구한 독특한 사례이다.

2018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M-2018 자주포는 외형과 구성에서 한국의 K9, 러시아

64) York, H.F., "The Origins of MIRV," In Foradori, P., Giacomello, G., Pascolini, A. (ed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50 Years of Experience in Nuclear Educ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8), pp. 51-64.

65) "Estimated share of nuclear warhead stockpiles, 1945 to 2024,"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nuclear-warhead-stockpiles>.

66) Foss, C. F., "North Korea's armoured and artillery systems," In *Jane's Armour and Artillery 2011-2012* (U.K: IHS Jane's, 2015), pp. 829-830.

의 2S19, 중국의 PLZ-05와 같은 현대식 자주포와 유사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체의 형상, 포탑의 구조, 포신의 형상 등 여러 면에서 이란의 Raad-2 자주포와 매우 유사한 형상을 보유하고 있다.⁶⁷⁾ 북한의 M-2018 자주포가 서방의 현대적 자주포 개발 단계 양상인 GPS 및 레이저 기술을 통한 정밀 유도탄 기술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개발되었다는 것은 독자적 기술 자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한 획득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경우에도, 후발이점인 외부 기술 도입과 중간 세대 자주포를 건너편 설계 선택, 즉 단계 생략이 결합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속도가 일반적 축적 경로에 비해 압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견인포 중심 + 구형 자주포에서 단번에 현대적 자주포 체계로 발전된 양상은 후발이점과 단계 생략을 결합한 재래식 전력의 발전을 보여준다.

한편, 2020년 공개된 신형전차(천마)는 3세대급 전차로 도약한 사례이다. 이전 북한군의 주력전차 선군호(선군-915)가 2017년 열병식에서 고장을 일으킨 이후 2020년 북한은 기존 선군호의 무장시스템에 이란 줄피카르-3(Zulfikar-3) 전차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결합한 'M-2020'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대규모 양산에 돌입한 사실을 존재하지 않아 실제 전력화 수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⁶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25년 5월 김정은의 탱크 공장 현지지도 시찰에서 3.5세대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차(천마-20)를 공개하였다. 북한이 5년 만에 더욱 향상된 능력의 신형 전차를 공개한 것은 후발이점의 기술적 도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공개된 신형 전차 기술에서도 역공학의 흔적이 뚜렷하다. 신형 전차는 3.5세대급 전차 외관과 능동방호체계·원격조종 무기시스템이 적용된 첨단장비를 구비하였으며,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측면·상판 폭발반응장갑 등을 탑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신형전차에 탑재된 능동방어장치(APS)는 구 소련이 개발했다가 폐기한 드로즈드(Dorzd) 시스템을 참고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군사기술과 장비를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⁶⁹⁾ 실제로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2023년 방북하여 '무장장비전시회-2023'를 관람한데 이어 북·러 양국이 "국방안전분야에

67) "사격후 포신이 춤추듯 휘청... 베일 벗은 '북한판 K9' 신형 자주포," 『조선일보』 (보도일자: 2022년 2월 7일).

68) 차두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제27권 제3호(2025), p. 12.

69)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 중 하나로 정찰위성, 핵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경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전략공간 확장을 통한 '연대'와 '우회'," 『국방연구』 제68권 제3호(2025), p. 7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러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일자: 2023년 7월 27일).

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식 보도한 바 있다.⁷⁰⁾ 이는 결국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지원 받아 신형 전차 개발을 이뤄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라는 국제 정치적·군사적 전략환경 변화가 러시아의 방산기술 접근성 제고라는 형태로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후발이점 변수가 강화되며 북한의 전차 현대화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후발이점과 단계생략이라는 도약적 특성을 강화하고, 신형 전차 개발 및 개량 주기의 단축이라는 인과 경로가 형성되는 것이다.

해군력 발전에서의 기술적 발전은 가장 극명한 도약적 특성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1,800t 로미오급 잠수함을 생산한 경험 밖에 없는 북한이 2019년 신포조선소에서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였다. 이후 2023년 9월 수직발사대와 SLBM 및 SLCM이 탑재 가능한 전술 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하고 2025년 3월에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SSBN) 건조 사실을 공개하며 급격한 해군력 강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개발 속도는 일반적인 국가의 기술 발전 경로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잠수함 건조 경험과 원자로 제조 기술을 보유한 미국도 2021년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를 시작으로 이를 완료하는데 84개월에서 9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⁷¹⁾

또한 신규 함정 건조 기술에서도 유사한 도약적 특성이 관찰된다. 북한은 2025년 4월 4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외부에 알렸다. 공개된 5,000t급 ‘최현함’은 외형상 러시아의 최신형 호위함인 어드미럴 고르쉬코프(Admiral Gorshkov)와 유사한 체계들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최현호에는 러시아 해군이 2020년 초부터 실전배치하고 있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Close-In Weapon System) 판치르-ME와 상당히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체계가 외형상 확인되었다. 또한 고르쉬코프급 호위함은 브라모스·지르콘 초음속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함정으로, 북한은 최현호가 초음속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²⁾ 이처럼 최현호는 북한의 기존 최대 함정인 나진급 호위함(1,500t

7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러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일자: 2023년 7월 27일).

7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avy Columbia (SSBN-826) Class Ballistic Missile Submarine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No. R41129(Mar 31, 2022), p. 18; F. Mortlock & Benjamin Field, “SSBN Columbia Class Submarine Case Study,” *Excerpt from the Proceedings of the Twenty-First Annual Acquisition Research Symposium*, (April 30, 2024), p. 37.

72)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에서 김정은은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능력은 물론이고 공격수단들 즉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육상타격 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가 탑재되었다고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

급)보다 3배 이상 대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현대화 능력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⁷³⁾ 따라서 북한의 신형 구축함은 기존 보유한 함정 보다 규모 및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히 확장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은 중간 규모 함정 건조 단계를 생략한 채 대형 함정 건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통상 약 8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대비할 때 이러한 해군력 향상은 기술 도약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군력에서의 압축적 기술 발전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관계에 따른 설계도 및 일부 자재 등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⁷⁴⁾ 다시 말해, 해군력 증강에서 북한의 급격한 기술적 향상이 가능한 것은 급속도로 밀착된 러시아와의 군사적 기술 협력을 통한 도약으로 해석된다.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된 새로운 국제 안보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정치·군사 패러다임 변화가 후발이점과 경로창출, 그리고 단계 생략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인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재래식 전력 현대화의 비약적 속도 역시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 아닌, 정치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라 제고된 외부 기술 및 자원 접근성, 그리고 도약적 개발 전략이라는 일련의 인과 사슬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북한 군사력 강화의 전략적 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력 도약은 체제 생존과 안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졌다. 대내외적으로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능력 향상을 이뤄내며 핵보유국의 기술적 완성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력 강화 과정을 도약이론의 틀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군사력 강화의 내재적 동학과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단순히 점진적·선형적 축적 과정이 아니라 압축적이고 불연속적인 도약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

문, (보도일자: 2025년 4월 26일).

73) 박용한, “핵 위협 고도화를 위한 북한의 해군력 강화 노력 평가와 효과적 대응 방향,” 『안보전략 FOCUS』 제37호(2025), p. 2.

74)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방러한 김정은이 9월 16일 시찰한 러시아의 전략 핵잠수함 기지(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는 각종 수상함과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잠수함, 항공대 등 최신 전략 무장장비를 갖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동지께서 9월 16일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토크(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일자: 2023년 9월 17일).

화가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 의존한 결과가 아니라, 후발이점 활용·단계 생략·경로 창출이라는 도약적 특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전략무기체계의 발전에서 도약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수소탄 실험을 단행하고 다탄두 탑재 능력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돌입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전략무기체계 발전 속도는 기존 핵보유국들의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적 경험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압축적이었다. 이는 북한이 선발국들의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흡수·개량하는 방식으로 후발 이점을 극대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최신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 생략의 양상도 뚜렷하게 확인될 뿐 아니라 기존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 발전 경로를 창출했다. 즉, 핵·미사일 기술 발전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전략무기체계의 급격한 발전과 기술 향상을 이뤄 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서도 도약적 특성을 나타냈다. 신형 자주포, 신형 전차, 전술핵잠수함, 최신 구축함 등은 단순한 기존 무기의 개량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전력 구조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현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신 개념 무기를 전력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후발 추격을 넘어, 기존 발전 경로와는 다른 대안을 창출하는 경로 창출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대화가 비대칭 전력 강화와 결합하면서 북한은 전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기체계발전과 군사력 강화에서 나타나는 도약적 특성은 기존의 경제·기술 발전 분야에서 관찰되는 도약 현상과 유사하면서도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극도로 제약적인 환경에서의 도약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도약 사례들이 비교적 개방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반면, 북한의 경우 국제적 고립과 고강도 제재라는 극도로 제약적인 환경에서 도약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이는 제약된 환경에서도 체제에 최적화된 전략과 자원 집중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도약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안보적 동인(動因)에 의한 도약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약과 달리, 북한의 군사기술적 도약은 체제 생존과 안보 확보라는 절박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부는 끊임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 한·미연합전력에 대해 군사적인 공포감과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북한의 동인은 도약의 속도와 집중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단기간 내 집중적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국방발전 5개

년 계획의 마지막해인 2025년 현재까지 북한은 과업목록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⁵⁾ 즉, 안보적 동인이 김정은 체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술적 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정권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국제 제재와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 부문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며 군사적 도약을 추구하였다. 2023년 기준 2023년 북한의 전체 예산 지출에서 국방비 비중은 15.9%으로 GDP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⁷⁶⁾ 즉, 북한은 제한된 자원을 핵심 군사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군사력 발전은 기술적·물질적 조건을 넘어 정치적 동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앞으로도 특정 국면에서 도약적 발전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우연적 진보가 아니라 후발이점·경로창출·단계 생략이라는 도약적 특성을 일관되게 적용해 온 축적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도약적 군사력 강화는 북한의 군사력 수준뿐 아니라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에도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군사기술 확산 네트워크, 북·중·러 군사협력 등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여 군사력 도약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 구조의 중·장기적 불안정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군사기술 확산 차단,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구조적 제약, 위기 시 상호 소통 채널 유지 등 북한의 군사적 도약에 내재된 비용과 위협을 증대시키는 외교적·제도적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안보·군사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도약이론을 북한 군사력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력 발전에 북한의 무기체계발전과 군사력 강화의 압축적·도약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단순한 위협 요인으로만 파악하는 것을 넘어 발전 경로와 내재적 동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 현상을 단순한 위협 인식이 아닌 발전 경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공개된 1차 자료에 의존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실제 기술 수준과 발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와 연구가

75)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경주,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위협 변화와 新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25 북한군사포럼 자료집』(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5).

76) 전선미·김현희·노화정·전정길, "북한경제동향·관련 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제26권 제1호(2024), p. 136.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나 단계 생략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권용수.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국방연구』제56권 제1호(2013).
- 김보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 억제력의 강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 _____. “북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함의.” 『INSS 전략보고』 No. 87(2020).
- 김보미·이성훈. “주변국 및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과 대응 방안.” 『이슈브리프』 533호(2024).
- 김진무 외. 『북한군 현 실태 II』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 대한민국 국방부, 『2022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 류인석.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전략연구』 통권 95호(2025).
- 박용한. “핵 위협 고도화를 위한 북한의 해군력 강화 노력 평가와 효과적 대응 방향.” 『안보전략 FOCUS』 제37호(2025).
- 변상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위황찬 설계’와 불균형적 발전』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 변상정·김인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No. 170(2022).
- 신승기.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안보전략 FOCUS』 제41호(2025).
- 양욱.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핵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 『Issue Brief』 2023-12(2023).
- 양욱.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Issue Brief』 2025-04(2025).
- 이상민. “6차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북핵 능력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 이중구. “북·러 군사협력의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26권 11호 (2024).
- _____. “북한의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구상과 무기체계 발전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27권 제3호(2025).
- 이호찬·이상규·정관. “북한 4·5차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0권 제3호(2017).

-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 _____.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 통권232호(2017).
- 장영근. “북한 신형전술미사일(개량형 KN-23)의 기술평가 및 함의.” 『한국군사』 제 10권 (2021).
- 전경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전략공간 확장을 통한 ‘연대’와 ‘우회’.” 『국방연구』제68권 제3호(2025).
- _____.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위협 변화와 新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25 북한군사포럼 자료집』(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5).
- 전선미·김현희·노화정·전정길. “북한경제동향·관련 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제26권 제1호(2024).
-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정세분석』 2013-02(2013).
- 정성윤.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Online Series』 CO16-02(2016).
-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조남훈. “북한군 주요 전력 실태 및 평가.” 『북한』 제575호(2019).
- 차두현. “북한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위협과 대응의 시급성.” 『Issue Brief』 No. 32 (2021).
- _____.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제27권 제3호(2025).
-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통권 133호(2021).
- _____.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 러·북 군사기술 협력이 미칠 영향.”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24호(2024).
- 홍 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KINU Insight』 No. 1(2017).
- _____. “북한의 신형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분석.” 『Online Series』 CO 24-29(2024).
- 홍민 외.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KINU Insight』 No. 1(2021).
- 홍민 외.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4).
-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 Behnam Ben Taleblu, “Ship Carrying Chemical for Missile Development Docks in Iran,”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Feb 25, 2025), https://www.fdd.org/analysis/policy_briefs/2025/02/25/ship-carrying-ch

emical-for-missile-development-docks-in-ir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avy Columbia (SSBN-826) Class Ballistic Missile Submarine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No. R41129(Mar 31, 2022).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21 Edition* (Dec 30th, 2021), <https://www.state.gov/world-military-expenditures-and-arms-transfers-2021-edition>.

Freedman, Lawrence. *Strategy: A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Foss, C. F. “North Korea’s armoured and artillery systems.” In *Jane’s Armour and Artillery 2011–2012* (U.K: IHS Jane’s, 2015).

F. Mortlock & Benjamin Field, “SSBN Columbia Class Submarine Case Study,” *Excerpt from the Proceedings of the Twenty-First Annual Acquisition Research Symposium* (April 30, 2024).

Garud, R., & Karnøe, P. “Path dependence and creation as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to strategy.” In R. Garud & P. Karnøe (Eds.) *Path Dependence and Creatio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Gerschenkron, Alexander.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Gordon Corera.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A. Q. Khan Net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2009).

Hadi Ajili and Mahsa Rouhi. “Iran’s Military Strategy.” *Survival* Vol. 61, No. 6(2019).

Hui, Zhang. “Assessing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8, 2009).

Joby Warrick, “The secret to Kim’s success? Some experts see Russian echoes in North Korea’s missile advances.” *Washington Post* (July 8, 2017).

Joseph S. Bermudez Jr. *A History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 (Monterey: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99).

Kamran Taremi. “Ballistic Missiles in Iran’s Military Thinking.” *Woodro Wilson Center* (Oct 14, 2003), <https://www.wilsoncenter.org/event/ballistic-missiles-irans-military-thinking>.

- Krepinevich, A. F. "Strategy in a Time of Austerity: Why the Pentagon Should Focus on Assuring Access." *Foreign Affairs* Vol. 91, No. 6(2012).
- Kristensen, H. M., Korda, M., Johns, E., & Knight, 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2024."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80, No. 4(2024).
- Lin, J. Y.. *New structural economics : a framework for rethinking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12)
- Lee, K., & Franco, M. "Catch-up cycles and changes in industrial leadership: Windows of opportunity and responses of firms and countries in the evolution of sectoral systems." *Research Policy* Vol. 46, No. 2(2017).
- Lee, K., & Lim, C. "Technological regimes, catching-up and leapfrogging: findings from the Korean industries." *Research policy* Vol. 30, No. 3(2001).
- Michael Elleman. *Iran's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 Net Assessment*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0).
- Panda, Ankit, "Unpacking North Korea's new weapon: the "Songun ATACMS"," <https://www.nknews.org/pro/unpacking-north-koreas-new-weapon-the-songun-atacms/>, (Aug 11, 2019).
- Perez, C., Soete, L. Catching-up in technology: entry barriers and windows of opportunity. In: Dosi, G., Freeman, C., Nelson, R., Silverberg, G., Soete, L. (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London and New York: Pinter Publishers, 1988)
- Rostow, W. Whitman.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 20, 2010).
-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21 Edition." (DEC 30, 2021), <https://www.state.gov/world-military-expenditures-and-arms-transfers-2021-edition> (검색일자: 2025. 5. 6.).
- York, H.F. "The Origins of MIRV," In Foradori, P., Giacomello, G., Pascolini, A. (ed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50 Years of Experience in Nuclear Educ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8).

“Estimated share of nuclear warhead stockpiles, 1945 to 2024,”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nuclear-warhead-stockpiles>.

『로동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조선중앙통신』

『Korea JoongAng Daily』

『조선중앙TV』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Military Modernization in the Kim Jong-un Era: A Perspective of Leapfrogging Theory

Chang, Sok-chun

Keywords

North Korea, Kim Jong-Un Era, Korean People's Army, Military Power, Weapon Systems

Under Kim Jong-un, North Korea has expanded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ways that depart from conventional linear development pathways, advancing nuclear-missile forces while modernizing selected conventional capabilities despite acute economic hardship and international sanctions. This article explains this non-linear trajectory by extending leapfrogging theory and applying three core mechanisms—latecomer advantage, stage skipping, and path creation—to North Korea's weapons develop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strategic-weapons domain, learning from forerunners compresses development timelines and reduces costs, with stage skipping observable in parts of the nuclear-missile development process. In conventional forces, “compressed modernization” is evident in the bypassing of intermediate generations and selective resource concentration to enhance performance. Path creation is reflected in reverse-engineering-based modification and recombination that facilitate the emergence of indigenous technological trajectories. Moreover, shift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including the expansion of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following the war in Ukraine—may broaden the opportunity structure for military-technology leapfrogging. Overall, the article offers a pathway-centered framework for systematically interpreting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y development through the lens of leapfrogging theory.

[논문투고일: 2025. 8. 29.]

[심사의뢰일: 2025. 11. 10.]

[계재확정일: 2025. 12. 17.]

중국 연합합동군사훈련의 전략적 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

전창빈*

- I. 서론
- II. 중국 연합합동군사훈련의 개념과 발전 과정
- III. 최근 중국 연합합동군사훈련의 양상 변화
- IV.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V. 결론

요약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전략적으로 진화한 양상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전력 능력을 고도화하며, 다영역작전(MDO)을 실전화하고 외교적 메시지를 강화하였다. 이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전략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헌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훈련의 유형과 군사·외교·정보적 함의를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러 협력의 공고화와 북·중·러 3각 협력의 부상이 전략 균형을 재편하는 핵심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감시·정찰 능력 강화, 다자외교 확대, 정보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는 동북아 안보 담론과 한국의 국방·외교정책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 중국 연합군사훈련, 한반도 안보환경, 한국의 대응전략

* 해군대학 주변국해양전략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와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병행하며, 연합합동군사훈련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군사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인민해방군(PLA)의 훈련 양상은 단순한 기술적 수준을 넘어 전략적 진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¹⁾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군사적 역량의 과시를 넘어, 중국의 외교적 메시지와 지역질서 재편 의도를 담고 있는 행위로 해석된다.²⁾

중국의 군사훈련은 해·공군 중심의 전력 운용에서 벗어나, 사이버·우주·전자전 등 다영역 통합훈련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에 구조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의 확대,³⁾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에서의 다영역 훈련, 그리고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의 활동 증가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구조적 긴장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군사훈련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다. 중국의 훈련 지역이 서태평양, 동중국해, 동해로 확장됨에 따라, 한국의 해상·공중 감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략적 불확실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환경은 기존의 냉전적 균형구조에서 벗어나,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위협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⁴⁾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군사훈련의 전략적 진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며,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의 군사훈련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국의 연합합동군사훈련의 전략적 진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초래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어떠한 군사·외교·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세 단계의 인과적 고리를 전제로 한다. 첫째, 중국의 군사훈련이 어떠한 원인과 배경 속에서 전략적으로 진화했는

1) 황태성·이만석,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제2호(2021), pp. 32-66.

2) 김순수,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군사외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논문, 2010, p. 17.

3) Jane Kaufmann & Chris Pagenkopf, “How to Train Your Dragon: Understanding China’s Growing Web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Modern War Institute, 2025.10. 8.)
<https://mwi.westpoint.edu/how-to-train-your-dragon-understanding-chinas-growing-web-of-combined-military-exercises-and-security-relationships/>

4) 정재홍, “미중 전략 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과 함의,” 『세종정책 브리핑』 No.2020-14, (세종연구소, 2020.10.19.), p. 1.

가(원인). 둘째, 이러한 훈련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구조적 긴장을 유발했는가(효과). 셋째, 한국은 그 결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대응). 이를 통해 연구의 초점이 '훈련의 진화 → 구조적 변화 → 정책적 대응'이라는 선명한 인과 구조로 설정된다.

개념적으로, 연합합동군사훈련은 다영역(육·해·공·우주·사이버) 전력을 통합하여 다국적 협력 속에서 수행되는 전략적 군사행위로 정의하였다. 구조적 변화는 한국 안보환경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KADIZ 진입 횟수, 합참의 경보 단계 변화, 감시·정찰 부담 증가, 외교적 선택지 축소, 정보전 위협 심화 등 구체적 지표로 조각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중국 훈련의 성격과 범위, 종속변수는 한국 안보환경의 구조적 긴장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 중국의 군사개혁 이후부터 2025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중국 군사훈련의 전략적 전환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변화를 포괄하기 위함이다. 공간적 범위는 중국의 훈련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 인접 해역과 공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군사훈련의 비공개적 성격으로 인해 일부 자료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 둘째,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정치적 민감성과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국가 자료의 교차검증과 전문가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분석과 전략 문서 분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 국방백서, 군사전략 문서, 훈련 관련 보도자료 등 공식 문헌과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훈련의 전략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둘째, 중·러 연합훈련, SCO 훈련,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 훈련 등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시계열적·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한국 국방부 및 외교부의 대응 문서, 정책 브리핑 등을 통해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자료는 영문, 중문, 일문을 포함하여 가능한 여러 국가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번역 및 원문 인용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과 깊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중국의 연합합동군사훈련 중 전략적 전환을 대표하는 10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모든 훈련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의 실증성과 분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시기적 대표성으로서 2015년 이후 각 시기별 전환점을 보여주는 훈련을 포함하였다. 둘째,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남중국해, 발틱해, 러시아 극동, SCO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된 훈련을 반영하였다. 셋째, 전략적 의미를 기준으로 단순 전술훈련이 아닌 국제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훈련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다자성을 고려하여 양자훈련뿐 아니라 다자훈련을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외교적 확장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10개 훈련은 중국 군사훈련의 전략적 진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책 제언은 군사·외교·정보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며,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정찰위성 추가 배치와 한·미·일 협력 제도화, 중기적으로는 다자외교 채널 확대와 정보전 대응 조직 신설, 장기적으로는 우주감시 체계 구축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설계는 연구 질문에 대한 체계적 답변을 가능하게 하며, 정책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중국의 군사훈련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미·중 전략 경쟁, 중·러 군사협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지형의 재편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거시적 차원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구체적 훈련 사례와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윤석준(2022)은 중국의 군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수하고 2049년까지 세계 일류급 군대로 도약할 것”이라 분석하였다.⁵⁾ 그는 특히 육전대의 상륙훈련과 중·러 합동훈련 강화를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망을 실제 훈련 사례와 연결하여, 중국의 현대화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 훈련을 통해 실증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황태성·이만석(2021)은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동아시아의 양극화 질서를 심화시키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한다고 평가하였다.⁶⁾ 이 연구는 중국이 군사훈련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훈련 사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남중국해, 발틱해, 러시아 극동 등에서 실시된 훈련을 사례로 제시하여, 이러한 압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

5) 윤석준, “중국몽(中國夢)을 이끄는 중국 특색의 군부 파워 엘리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주목하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웹진 Asia & Asias*, 2022. <https://snuacwebzine.snu.ac.kr/?p=5551>

6) 황태성·이만석, 앞의 글.

셋째, 정재홍(2020)은 중·러 연합훈련의 빈도와 범위 확대가 한국의 해상·공중 감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였다.⁷⁾ 이는 구조적 긴장의 심화를 지적한 중요한 연구이나, 한반도 맥락에서의 구체적 사례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본 논문은 정재홍의 분석을 확장하여, 중·러 훈련이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넷째, Kaufmann과 Pagenkopf(2025)는 중국의 연합훈련 참여가 지난 8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 군사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하였다.⁸⁾ 본 논문은 이들의 거시적 분석을 토대로, 훈련의 외교적 메시지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다섯째, 일본 방위연구소(연구원 飯田将史)는 중·러 공동훈련이 동아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평가하였다.⁹⁾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의 시각을 참고하면서도, 한국 안보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심화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방백서(2019)는 군사훈련을 신형 무기 검증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의 장으로 규정하였다.¹⁰⁾ 본 논문은 이를 실제 훈련 사례와 연결하여, 중국이 정보화·다영역 작전을 실전화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중국 군사훈련의 전략적 의미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반면 본 논문은 2015년 이후 대표적 훈련 사례 10건을 중심으로 미시적·구조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7) 정재홍, 앞의 글, p. 3.

8) Jane Kaufmann & Chris Pagenkopf, 앞의 글, para. 5. "Over the last eight years, Beijing has more than doubled its participation in such exercises, concentrating on partners 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nd select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tates."

9) 飯田将史, "進展する中国とロシアの軍事協力—共同軍事演習の多様化と高度化," 防衛省防衛研究所 NIDS 코멘터리 第271号, 2023년8월29일, p. 4. "中露の共同演習は地理的に東アジアで行われることが多いため、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とりわけ懸念がもたれる"

10) 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 pp. 15-18. "中国军队坚持实战化军事训练, 积极开展联合演习演练, 提升新型作战力量运用能力."

II. 중국 연합합동군사훈련의 개념과 발전 과정

1. 연합합동군사훈련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연합합동군사훈련(joint combined military exercises)은 둘 이상의 국가가 다영역(육·해·공·우주·사이버) 전력을 통합하여 공동 작전능력을 시험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군사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협력 수준을 넘어, 전략적 신뢰 구축과 군사외교의 수단으로 기능한다.¹¹⁾ 특히 현대 국제정치에서 군사훈련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현대화의 실험장,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십의 상징적 표현으로 활용된다.

중국은 이를 ‘군사외교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훈련을 통해 지역 내 전략적 지렛대를 구축하고 주변국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¹²⁾ 이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닌, 전략적 영향력 투사와 국제질서 재편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Kaufmann과 Pagenkopf는 “중국의 군사훈련은 자국 주변을 넘어선 전략적 확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훈련의 외교적 기능을 강조하였다.¹³⁾

또한, 연합훈련은 군사작전 이론의 실증적 검증이라는 기능도 수행한다. 예컨대, 중국 국방백서(2019)는 PLA가 정보화 기반의 실전화 군사훈련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군은 AI 지휘체계, 드론 전력, 전자전 장비를 실제 훈련에 통합 운용하고 있다.¹⁴⁾ 이는 연합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닌, 전력 운용의 미래 모델을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훈련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전술훈련 외에도, 전략적 시나리오 기반 훈련,

11) 渡邊裕人, “中国の軍事外交: 合同軍事演習・訓練から見る中国の戦略性,” 『コスモポリス』 第12号, (上智大学, 2018), p. 93. “合同軍事演習は戦略的信頼の構築と軍事外交の手段として機能する”

12) Shiau-Shyang Liou (劉曉祥),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China and Foreign Forces”, *INDSR Newsletter*, No.25 (July 2023), pp. 3-10.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 (Taiwan). <https://inders.org.tw/uploads/eninders/files/202307/59b0050a-d2e5-4349-9909-fdd0a267a8da.pdf>. 이 보고서에서는 2023년 2월 이후 중국이 러시아·남아공·이란·캄보디아 등과 실시한 합동 군사훈련을 분석하였다. “Mosi 2023”(중·러·남아공), “Security Bond 2023”(중·러·이란), “Golden Dragon 2023”(중·캄보디아) 등 주요 훈련을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훈련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지역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평가하고 있다.

13) Jane Kaufmann & Chris Pagenkopf, 앞의 글, para. 2. “China’s military diplomacy is no longer confined to its backyard. This was not an isolated stunt, but the product of years of steadily growing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cultivated through the execution of combined exercises with foreign forces.”

14) 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防』(2019)의 제3장「履行新时代军队使命任务」부분에, 중국군은 “坚持实战化军事训练, 积极开展联合演习演练, 提升新型作战力量运用能力”라고 명시하며, 군사훈련을 신형 장비 검증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의 장으로 규정하였다.

비전통적 위협 대응 훈련, 복합위기관리 훈련 등이 포함되며, 이는 중국이 군사훈련을 통해 국가 전략의 다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군사훈련 체계 개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5년 이후 '전구 중심의 통합작전 체계'를 도입하며, 훈련의 구조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였다.¹⁵⁾ 기존의 군구 체계는 해체되고,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전구로 재편되면서, 각 전구는 독립적 작전권한을 갖는 전략 단위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 구조는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Combatant Command)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⁶⁾

각 전구는 지리적 특성과 전략적 임무에 따라 훈련의 성격이 달라진다. 동부전구는 대만 및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남부전구는 남중국해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훈련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부전구는 한반도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담당한다. 이러한 전구별 훈련은 지역별 전력 운용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전구 간 협력훈련을 통해 통합작전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PLA는 전략지원부대(Strategic Support Force, SSF)를 통해 사이버·우주·전자전 영역을 통합 지휘하며, 훈련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왔다.¹⁷⁾ 예컨대, 2023년 실시된 '북부전구-러시아 연합훈련'에서는 전자전 장비와 위성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전장관리 시스템이 실험되었다.¹⁸⁾ 이는 중국이 다영역 통합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을 실천 수준에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훈련의 지휘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군사위원회(CMC)가 직접 지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전구가 자율적 훈련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며, 이는 기술적 유연성과 전략적 분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로 평가된다.¹⁹⁾

15) 황태성·이만석,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제2호, 2021, p. 34.

16) 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防』(2019)의 제4장「改革中的中国国防和军队」부분에, "进入新时代, 适应世界新军事革命发展趋势和国家安全需求, 中国全面推进国防和军队现代化建设, 全面深化国防和军队改革, 着力破除体制性障碍, 解决结构性矛盾和政策性问题, 健全中国特色社会主义军事制度体系, 发展中国特色现代军事力量体系, 构建中国特色现代军事政策制度体系."라고 명시하여, 합동작전 체계 강화와 군 현대화를 위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7) 중국의 전략지원부대는 2015년 12월 31일, 시진핑 주석의 군 개혁 일환으로 PLA 내에서 사이버전·우주전·전자전·심리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2024년 4월 19일 해체되어 정보지원부대(Information Support Force, ISF), 사이버공간부대(Cyberspace Force), 항공우주부대(Aerospace Force) 등으로 분산·재편되었다.

18) Jane Kaufmann & Chris Pagenkopf, 앞의 글, para. 7. "PLA's use of satellite-linked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s during joint drills with Russia signals operational maturity"

3.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연합훈련 발전사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은 2000년대 이후 뚜렷한 발전 궤적을 보이며, 전략적·외교적·기술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진화해왔다. 특히 2001년 중·러 간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이후, 중국은 연합훈련을 단순한 기술적 협력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²⁰⁾ 이 조약은 양국 간 군사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연합훈련의 빈도와 범위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2005년 ‘和平使命(Peace Mission)’ 훈련은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다자적 연합훈련을 실시한 첫 사례로, 테러 대응과 도시전, 공중강습 작전을 포함한 복합 시나리오가 적용되었다.²¹⁾ 이후 SCO 훈련은 정례화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이 주도하는 훈련 기획과 지휘체계가 강화되었다.²²⁾

2012년부터 시작된 ‘해상연합(海上聯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 간의 연합작전 능력을 시험하는 대표적 사례로, 함대기동, 대잠수함전, 해상봉쇄, 상륙작전 등 고난도 해양작전이 포함되었다.²³⁾ 특히 2016년 남중국해 광둥성 잔장(Zhanjiang)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훈련(Joint Sea 2016)은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전략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²⁴⁾

2020년 이후 중국은 훈련의 지리적 범위를 동북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며, 연합훈련을 통해 군사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2023년 8월 신장에서 실시된 UAE와의 연합훈련은 중국의 중동 진출과 에너지 안보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된다.²⁵⁾

19) 황태성·이만석, 앞의 글, p. 36.

20) 송재익, “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뉴스투데이』, (2022.11.7.)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1103500160>.

21) Roy Alliso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and Eurasian Security,”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6, No. 1 (2008), pp. 3-26. 이 논문에서는 SCO의 제도화 과정과 군사훈련의 정례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분석하고 있다.

22) Chien-peng Chung,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hina’s Chang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China Quarterly*, No. 180(2004), pp. 989-1009. 이 논문은 SCO 창설 이후 중국의 영향력 변화를 다룬 논문이다; Richard Weitz, “Parsing Chinese-Russian Military Exercises” (Academia.edu, Jamestown Foundation 보고서, 2015)에서는 중국-러시아 합동훈련의 발전 과정과 SCO 훈련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https://doi.org/10.21236/ADA616312>.

23) Kaufmann & Pagenkopf, 앞의 글, 이 글에서는 ‘해상연합(海上聯合, Joint Sea)’ 훈련을 언급하며, 중·러 해군이 2012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대표적 합동훈련임을 소개하며, 훈련 내용으로 함대 기동, 대잠수함전, 해상봉쇄, 상륙작전 등 복합적 해양작전이 포함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24) Huiyun Feng, “Power play in the South China Sea,” *East Asia Forum* (06 October 2016)
<https://eastasiaforum.org/2016/10/06/power-play-in-the-south-china-sea/>

25) Agnes Helou, “China, UAE to hold first-ever joint military drill, likely a ‘message’ to US: Analysts,” *B*

또한, 2025년 실시한 파키스탄과의 '전사연합(Warrior Alliance)' 훈련은 테러 대응과 도시 전 중심의 비전통적 위협 대응 훈련으로 구성되었다.²⁶⁾

훈련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훈련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 드론 함모(Type 076) 등이 실험적으로 투입되며, 중국은 이를 통해 전력 현대화의 실증적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²⁷⁾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전력 개발과 전략적 메시지 전달이 결합된 복합적 군사행위로 평가된다.

4. 중·러 연합훈련(SCO, 东方훈련)의 전략적 의미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의 지리적 범위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북극해, 서태평양,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중러가 공식적인 군사동맹 없이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CO 훈련은 중·러 협력의 다자적 기반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테러 대응, 국경 방어, 도시전, 사이버전 등 복합 시나리오를 통해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을 시험한다.²⁸⁾ 특히 2021년 SCO 회원국들이 2021년 9월 러시아 오렌부르크에서 실시한 합동 대테러 훈련인 'Peace Mission' 훈련에서는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과 위성통신망이 도입되어, 중러 간 지휘체계 통합 실험이 이루어졌다.²⁹⁾

东方훈련(Vostok 훈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략적 훈련으로, 중국은 2018년부터 참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东方-2022 훈련에서는 중국 육군과 공군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합

reaking Defense (August 02, 2023) <https://breakingdefense.com/2023/08/china-uae-to-hold-first-ever-joint-military-drill-likely-a-message-to-us-analysts/>.

26) "Pakistan, China launch annual counter-terrorism exercise," *The Economic Times* (Dec 02, 202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pakistan-china-launch-annual-counter-terrorism-exercise/articleshow/125721035.cms>.

27) Gabriel Honrada, "China's multi-platform hypersonic strike force takes shape," *Asia Times*, (Dec 21, 2024); IRIA Staff, "Inside China's Largest Military Parade: Hypersonic Missiles, Drones, and Advanced Defense Systems," *International Relations Insights & Analysis* (Sep 8, 2025); Yu Ting Chen, "Type 076 Warship Highlights PLA's Shift Toward Unmanned Aerial Dominance," *The Diplomat* (Nov 24, 2025).

28) Roy Allison, 앞의 글 (2008)과 Richard Weitz의 앞의 글(2015)을 참조할 것.

29) Ankit Panda, "SCO's Peace Mission 2021: China and Russia Test Joint Command Structures," *The Diplomat* (Sep 23, 2021).

동 기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동북아 군사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³⁰⁾ 일본 방위연구소는 이에 대해 “중·러 공동훈련은 동아시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³¹⁾

중러 연합훈련은 NATO의 확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하며, 2022년 공동성명에서는 “외부 간섭과 지역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전략적 안정성을 수호한다”고 명시하였다.³²⁾ 이는 훈련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국제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또한, 중러 훈련은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의 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상·공중 감시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략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³³⁾ 특히 2023년 동해에서 실시된 중러 폭격기 편대 훈련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으며, 한국에 실질적 위협 수준의 훈련으로 평가되었다.³⁴⁾

III. 최근 중국 연합합동군사훈련의 양상 변화

1. 주요 사례: 2015년 이후 전략적 훈련

중국은 2015년 이후 연합합동군사훈련을 전략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훈련의 성격은 단순한 전술적 협력을 넘어 국제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행위로 진화하고 있다. 아래는 연구자가 대표적인 훈련 사례로 판단한 10건을 고찰한 것이다.

첫째, 海上联合-2016(남중국해)이다.³⁵⁾ 2016년 9월 12일~19일, 중국과 러시아는 남중

30) Emily Ferris and Veerle Nouwens, “Russia’s Vostok 2022 Military Drills: Not Size or Tanks, but Context,”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 Commentary, September 15, 2022, <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russias-vostok-2022-military-drills-not-size-or-tanks-context..>

31) 飯田将史, 「進展する中国とロシアの軍事協力——共同軍事演習の多様化と高度化」, 防衛省防衛研究所 NIDS 코멘터리 第271号, 2023년8월29일, p. 4. “中露の共同演習は地理的に東アジアで行われることが多いため、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とりわけ懸念がもたれる”

32) 中俄联合声明, 「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新华社, 2022年2月4日), “中俄双方反对北约进一步扩张, 呼吁北约摒弃冷战思维.”(중국과 러시아는 나토의 추가 확장을 반대하며, 나토가 냉전적 사고를 버릴 것을 촉구한다. 연구자 주)와 “反对在亚太地区建立封闭性集团和阵营对抗.”(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인 집단과 진영 대립을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 연구자 주)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33) 정재홍, “미중 전략 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과 함의,” 『세종정책 브리핑』, No.2020-14 (세종연구소, 2020.10.19.)의 후반부 ‘주요 함의와 시사점’(pp. 7-8.)

34) 김호준, “중·러 폭격기, 동해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긴급 출격,” 『연합뉴스』, 2023년 6월 6일자.

국해에서 '해상연합-2016(海上联合-2016)'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해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 전력으로는 중국 해군의 상륙함, 구축함, 잠수함, 해상 헬기, 해병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의 목적은 상륙작전, 해상봉쇄, 대잠수함전 등 고강도 해양 작전 능력의 통합 운용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었다.

둘째, 东方-2018(러시아 극동)이다.³⁶⁾ 2018년 9월 11일~17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략훈련 'Vostok-2018'에 참가하였다. 훈련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중국은 육군 3,200명, 전차 900대, 항공기 30대를 파견하였다. 훈련은 대규모 기동훈련과 전구 외 작전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러 간 전략적 연대의 상징적 표현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海上联合-2019(발틱해)이다.³⁷⁾ 2019년 7월 23일~27일, 중국 해군은 사상 처음으로 유럽 해역인 러시아 발틱해 칼리닌그라드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과 '해상연합-2019' 훈련을 실시하였다. 참가 전력은 중국의 052D 구축함, 054A 호위함, 러시아의 슬라바급 순양함 등이 포함되었으며, 훈련 목적은 해상봉쇄, 대잠수함전, 함대 기동작전이였다. 이는 중국 해군의 원해작전 능력 과시와 유럽 내 전략적 존재감 확대를 위한 훈련이었다.

넷째, 和平使命-2021(SCO 다국적 훈련)이다.³⁸⁾ 2021년 9월 11일~25일,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함께 '和平使命-2021'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러시아 오렌부르크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은 당시 전략지원부대(SSF)를 통해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과 위성통신망을 실전에서 운용하였으며, 훈련 목적은 테러 대응, 도시전, 사이버 방어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다영역 통합 대응능력 시험이었다.

다섯째, 중국·이란 해상훈련(2022)이다.³⁹⁾ 중국·이란 해상훈련은 2022년 1월 20일~21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 북인도양에서 실시되었다. 참가 전력

35)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中俄海上联合-2016军事演习在湛江举行," 2016년 9월 12일자

36) 新华社, "东方-2018战略演习展开联合战役指挥演练." 新华网, 2018년 9월 12일자
https://www.xinhuanet.com/world/2018-09/12/c_129952017.htm.

37) 新华社, "中俄海军在波罗的海举行'海上联合-2019'演习." 新华网 (July 25, 2019).
https://www.xinhuanet.com/world/2019-07/25/c_1124791234.htm.

38) 梅世雄, 刘敏. "和平使命-2021: 肩负和平使命 共护友谊之舟."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Sep 26, 2021).
<http://www.mod.gov.cn/gfbw/jsxd/ly/4895561.html>. 또는 梅世雄. "和平使命-2021联合反恐军事演习闭幕."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Sep 24, 2021).
<http://www.mod.gov.cn/gfbw/qwfb/4895506.html>.
 를 참조

39) Jerusalem Post. "Iran, Russia, and China Hold Joint Naval Drill in Indian Ocean." *Jerusalem Post*, January 20, 2022. <https://www.jpost.com/middle-east/iran-news/article-694029>.

은 중국의 Type 052D 구축함,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구축함, 이란의 알반드급 호위함 등이었으며, 훈련 목적은 에너지 수송로 보호, 해상봉쇄, 해적 대응이었다. 이는 중국의 중동 진출과 에너지 안보 전략과 연계된 훈련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중러 폭격기 편대 동해 진입 훈련(2023)이다.⁴⁰⁾ 2023년 6월 6일,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상공에서 폭격기 편대 훈련을 실시하였다. 참가 전력은 H-6K(중국), Tu-95MS(러시아) 전략폭격기로 구성되었으며, 훈련 중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였다. 이는 단순한 항공훈련이 아닌, 전략적 메시지를 담은 고강도 연합훈련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감시·정찰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곱째, 중국·파키스탄 ‘전사연합’ 훈련(2023)이다.⁴¹⁾ 2023년 10월,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사연합(Warrior Alliance)’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 전력은 특수작전부대, 드론 운용부대, 사이버방어팀으로 구성되었다. 훈련 목적은 테러 대응, 인질 구조, 사이버 방어 등 복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능력 시험이었다.

여덟째, 중국·러시아간 北部·联合-2024 (Northern Joint-2024)이다.⁴²⁾ 2024년 9월 9일~27일,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 러시아 극동 해역(북극해 인접)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최소 4척의 함정과 공군기가 참가했으며, 러시아는 태평양함대 소속 대형 전투함과 항공기가 참가했다. 항공전력으로는 중국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러시아 SU-30, MiG-31 등이었다. 훈련 목적은 해상 방어 및 통신선 보호, 대공·반잠수함 훈련, 해상 호송 및 화력 타격, 양국 해군의 전략적 협력 및 다영역 작전능력 강화 등이었다.

〈표 1〉 주요 훈련 사례

구분	시기	장소	참가국	훈련 내용	전략적 목적
해상연합-2017	2016. 9	남중국해	중국, 러시아	상륙작전, 해상봉쇄, 대잠전	영유권 과시, 미국 견제
东方-2018	2018. 9	러시아 극동	중국, 러시아	대규모 기동, 전구 외 작전	중러 전략적 연대

40) USNI News. “Russian, Chinese Bombers Fly Joint Mission Near Japan, Korea as Russian Fleet Holds Major Drills in the Pacific.” *USNI News*, June 6, 2023. <https://news.usni.org/2023/06/06/russian-chinese-bombers-fly-joint-mission-near-japan-korea-as-russian-fleet-holds-major-drills-in-the-pacific>.

41) The Economic Times. “Pakistan, China Launch Annual Counter-Terrorism Exercise.” *The Economic Times*, December 2, 202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pakistan-china-launch-annual-counter-terrorism-exercise/articleshow/105721035.cms>.

42) 央视网军事频道. “圆满结束！高清图带你回顾‘北部·联合-2024’演习全程.” 央视网军事频道(Sep 28, 2024). <https://military.cctv.com/2024/09/28/ARTIU1790sIk26k0v2q7AqV240928.shtml>.

구분	시기	장소	참가국	훈련내용	전략적 목적
海上聯合-2019	2019. 7	발틱해	중국, 러시아	해상봉쇄, 함대기동	유럽 전략 영향력 확대
和平使命-2021	2021. 9	러시아 오렌부르크	SCO 회원국	테러 대응, 도시전, 사이버전	다영역 통합훈련 실험
중·이란 해상훈련	2022. 1	호르무즈 해협	중국, 이란	에너지 수송로 보호	중동 진출, 해양안보
중·러 폭격기 훈련	2023. 6	동해 상공	중국, 러시아	전략폭격기 편대 비행	KADIZ 진입, 지역 긴장 유발
전사연합 훈련	2023.10	파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특수작전, 드론, 사이버방어	비전통 위협 대응
北部·聯合-2024	2024. 9	북극해 인접	중국, 러시아	통신선보호, 대공 및 반잠수함 훈련	양국 해군간 전략적 협력 및 다영역작전 능력 강화
중·베 육군훈련	2025. 7	광시좡족 접경	중국, 베트남	산악전, 도시전	군사외교 다변화
중·벨라루스 훈련	2025. 7	벨라루스 브레스트	중국, 벨라루스	도시 테러 대응	SCO 외부 협력 심화

* 출처: 연구자가 작성

아홉째, 중국·베트남 육군 합동훈련(2025)이다.⁴³⁾ 2025년 7월 21일~30일, 중국과 베트남은 광시좡족자치구 장룽(江龍) 충저우 훈련기지에서 사상 첫 육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지역은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인접 지역으로 참가 전력은 양국 지상군 약 140명, 차량 20대, 장비 170여 점이였다. 양국간 국경 협력 강화와 산악 및 도시전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 훈련은 중국의 군사외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열째, 중국·벨라루스 합동훈련(2025)이다.⁴⁴⁾ 2024년 7월 8~19일, 중국과 벨라루스는 'Eagle Assault-2024'라는 이름의 합동 대테러 군사훈련을 벨라루스 브레스트(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실시했다. 참가 전력은 양국의 특수작전부대가 참가하였으며, 대테러 작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시전 훈련과 수상 장애물 극복 훈련을 하였다. 이 훈련은 NATO 정상회의 직전 실시되어, 서방에 대한 중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벨라루스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한 이후 중국과의 첫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평가되었다. 이 훈련

43) 차병섭, “中 베트남, 첫 육군합동훈련… 美관세압박 속 군사관계 심화,” 『연합뉴스』, 2025.7.2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1051300009>

44) Katherine Michaelson. “China Signals Defiance to NATO with Military Drills in Belarus.” *VOA News* (July 12, 2024). <https://www.voanews.com/a/china-signals-defiance-to-nato-with-military-drills-in-belarus-/7696140.html>.

은 중국의 유럽 내 군사외교 확대와 러시아-벨라루스-중국 협력 심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2. 전략적 분석: 훈련 양상의 구조적 변화

위 10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중국의 연합합동군사훈련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훈련의 지리적 확장과 전략 공간의 재편 중국은 훈련 지역을 동북아에서 남중국해, 러시아 극동,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북극해까지 확장하며, 전구 외 작전능력과 해양 전략의 공간적 확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닌 전략적 영향력 투사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북극해 훈련은 기후변화와 자원경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영역을 포착한 사례이다.

둘째, 다영역 통합훈련의 실전화와 기술적 고도화 AI 기반 지휘체계, 위성통신망, 사이버전, 우주작전 요소가 통합되며, 다영역 통합훈련(Multi-Domain Operations)이 실전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MDO 개념에 대응하는 중국식 전략모델의 실험으로 평가된다. SCO 훈련에서의 AI 지휘체계 도입은 지휘통제(C4ISR) 능력의 질적 도약을 보여준다.

셋째, 외교적 연계성과 전략적 메시지 강화 훈련은 군사외교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베트남·이란·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가와의 훈련은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에 대한 견제로 작용한다. 특히 SCO 훈련은 중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 모델을 실현하는 장이며, 중·러 훈련은 NATO 확장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넷째, 실전성 강화와 전력 현대화 검증 훈련은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항모,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 등 신형 전력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전력 개발과 전략 메시지 전달이 결합된 복합적 군사행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과 전략적 자립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상이다.

다섯째,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의 훈련 강화 중거리 폭격기 편대의 동해 진입, 대만해협을 가정한 상륙훈련 등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는 고강도 훈련으로 평가되며, 이는 지역 안보 균형을 흔드는 구조적 긴장 요인이다. 특히 KADIZ 침범은 실질적 위협 수준의 훈련으로 간주되며, 한국의 감시·정찰 및 위기관리 능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표 2〉 주요 훈련의 전략적 변화 양상

구분	내용	함의
지리적 확장	동북아→ 중동·유럽·북극까지	전략 공간 확대, 영향력 투사
기술적 고도화	AI 지휘체계, 위성통신, 사이버·우주전	MDO 대응, 전력 현대화
외교적 연계	다양한 국가와 훈련 확대	美 동맹 견제, 다자안보 모델 실험
실전성 강화	신형 전력 실험(극초음속, 드론 등)	전력 검증, 전략 메시지 전달
한반도 인접 훈련	동해·대만해협 등을 상정한 고강도 훈련	한국 안보환경 직접적 영향

* 출처: 연구자가 작성

3. 소결론: 전략적 진화의 함의

중국의 연합합동군사훈련은 2015년 이후 전략적 진화를 거듭하며, 단순한 군사력 과시를 넘어 국제정치적 행위로 기능하고 있다. 훈련은 지리적 확장, 기술적 고도화, 외교적 연계, 실전성 강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훈련의 지리적 확장은 중국의 전략적 공간 확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동북아를 넘어 중동, 유럽, 북극해까지 훈련 지역을 확대하며, 전구 외 작전능력과 해양 전략의 공간적 확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닌 전략적 영향력 투사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특히 북극해 훈련은 기후변화와 자원경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영역을 포착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공간적 확장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 대응 범위를 넓히고, 기존의 한미동맹 중심의 방어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훈련의 기술적 고도화는 중국의 군사혁신과 전략적 자립성을 반영한다. AI 기반 지휘체계, 위성통신망, 사이버전, 우주작전 요소가 통합되며, 다영역 통합훈련(Multi-Domain Operations)이 실전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MDO 개념에 대응하는 중국식 전략모델의 실험으로 평가되며, 향후 중국의 전력 운용 방식이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정보·전자전 능력 강화,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의 도입 등 기술적 대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훈련의 외교적 연계성은 중국의 군사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보여준다. 중국은 러시아 외에도 베트남,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SCO 훈련은 중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 모델을 실현하는 장이며, 중·러 훈련은 NATO 확장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훈련의 실전성 강화는 중국의 전력 현대화와 실전 적용 능력의 검증을 의미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항모,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 등 신형 전력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훈련은 단순한 시연을 넘어, 전력 개발과 전략 메시지 전달이 결합된 복합적 군사 행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대칭 전력 중심의 방어구조에서 벗어나 정규전력의 질적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훈련의 한반도 인접 해역 집중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구조적 긴장을 유발한다. 중러 폭격기 편대의 동해 진입, 대만해협 상륙훈련 등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는 고강도 훈련으로 평가되며, 이는 지역 안보 균형을 흐드는 구조적 긴장 요인이다. 특히 KADIZ 침범은 실질적 위협 수준의 훈련으로 간주되며, 한국의 감시·정찰 및 위기관리 능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위기관리 체계의 정비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연합합동군사훈련은 단순한 군사 행위가 아니라 전략적 의도와 기술적 실험, 외교적 메시지를 결합한 복합적 행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외교적·정보적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전략적 자율성과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는 향후 안보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가. 훈련의 지리적·전력적 확장과 한반도 인접 위협의 증대

중국의 연합합동군사훈련은 2015년 이후 지리적 범위와 전력 구성 면에서 급격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해 등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의 훈련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감시·정찰 부담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훈련의 성격 또한 단순한 전술적 협력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은 행위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6월 6일, 중·러 폭격기 편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한 사건이 있다.⁴⁵⁾ 이는 단순한 항공훈련이 아닌 실질적 위협

수준의 군사행위로 평가되며, 한국의 대응체계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했다. 특히 이 훈련은 한반도 북부와 동해를 동시에 포괄하는 작전범위로 구성되어, 북부전구의 전략적 임무와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북부전구는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접하는 전략단위로, 해당 전구의 훈련은 한국의 군사적 대응체계에 구조적 긴장을 유발한다. 윤석준 박사는 “육전대 2개 여단이 한반도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북부전구의 작전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⁶⁾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은 한국의 해양감시체제와 중첩되며, 전략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해군사령관이 “동경 124도는 넘지 말라”고 언급한 사례는 중국이 서해와 동중국해를 자국의 전략적 내해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한 군사적 시위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작전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

나. 중·러 협력 강화와 동북아 전략균형의 구조적 변화

중국과 러시아는 2015년 이후 연합훈련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군사균형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훈련의 성격은 단순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넘어, 전략적 연대와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2022년 중·러 공동성명은 “외부 간섭과 封闭性同盟体系(폐쇄적 동맹체계)에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지역질서 재편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⁴⁷⁾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NATO 확장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전략에도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일본 방위연구소(연구원 飯田将史)는 이에 대해 “중·러 공동훈련은 동아시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⁴⁸⁾ 특히 중·러 해상훈련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일본과 한국은 해상

45) SARAH KIM, “Fighters Scrambled after Chinese, Russian Aircraft Enter Kadiz.” *Korea JoongAng Daily* (June 6, 2023).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3/06/06/national/defense/Korea-Kadiz-China/20230606175213883.html>.

46) 윤석준, “최강 北部戰區, 北 급변사태 대비 훈련 실시,” 『월간조선』, 2022년 8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208100028>.

47) 中俄联合声明, 「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新华社, 2022年2月4日).

48) 飯田将史, 「進展する中国とロシアの軍事協力——共同軍事演習の多様化と高度化」, 防衛省防衛研究所 NIDS コメンタリー 第271号, 2023年8月29日, p. 4. “中露の共同演習は地理的に東アジアで行われることが多いため、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とりわけ懸念がもたれる”

감시 및 대응능력의 고도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북·중·러 3각 협력의 부상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신범철은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과 동맹, 주변국 협력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하며, 기존의 한미동맹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자적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⁴⁹⁾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 전달과 지역질서 재편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다. 한국의 군사·외교·정보 대응체계에 대한 구조적 압력

중국의 훈련은 한국의 군사적 대응체계에 구조적 부담을 가하고 있다. 특히 다영역 통합훈련은 기존의 해·공군 중심 대응을 넘어, 사이버·전자전·우주작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며, 정보·전자전 능력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재홍은 “중국의 군사훈련은 단순한 전술적 수준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압박을 가한다”고 평가하였다.⁵⁰⁾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체계의 정비를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훈련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한다. 정혜영과 김준형은 “중국의 국방정책은 동북아에서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제약을 가한다”고 분석하였다.⁵¹⁾ 이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와 중국 중심의 지역협력 구도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훈련을 통해 정보전과 심리전 요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내 여론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훈련 시점에 맞춰 중국 관영매체는 “한반도는 중국의 전략적 영향권에 속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국내 안보담론에 간접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전략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한국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은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외교적 메시

49) 신범철·엄구호·박병광,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NEAR Policy Brief』 Vol.14. NEAR 재단, 2024년 10월, p. 1.

50) 정재홍, 앞의 책, p. 1.

51) 정혜영, “동북아의 강대국 세력경쟁과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더리포트』, 2024년 7월 1일.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36>.

김준형,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중국과 미국의 경쟁 속에서 지역 안정 유지.” 『APLN Policy Report』, 2024년 6월.

https://cms.apln.network/wp-content/uploads/2024/05/Korean_Joon-Hyung-Kim_21June_compressed-2.pdf.

지 전달, 정보전 대응, 위기관리 체계의 정비 등 다차원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 한국의 대응 전략: 군사·외교·정보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

가. 군사적 대응: 감시·정찰 능력의 고도화와 다영역 전력 재편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동중국해, 동해, 이어도 인근 해역 등 한반도 인접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되면서, 한국의 기존 감시·정찰 체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고정형 레이더와 해상초계기 중심의 감시체계는 기동성과 다영역 대응에 취약하며, 특히 고도화된 중국의 항공·해상 전력에 대한 실시간 탐지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고도 무인기(HUAV),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해양 드론 등 융합형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입체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작전 요소를 통합한 다영역 통합훈련(Multi-Domain Operations)을 실전 수준에서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구조의 근본적 재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의 도입, 전자전 대응능력 강화, 우주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방부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⁵²⁾

더불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HGV), 드론 항모, 무인전력 실험은 한국의 기존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비대칭 전력 중심의 방어구조에서 벗어나 정규전력의 질적 강화와 실전형 합동훈련의 확대, 전구 외 작전능력 확보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나. 외교적 대응: 전략적 자율성과 균형외교의 병행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확대, 그리고 북·중·러 3각 협력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전략에 구조적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러가 공동성명을 통해 “외부 간섭과 폐쇄적 동맹체계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은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명확한 견제이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에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ASEAN, EU, 인도 등 중견국과의 안보협력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 외교부는 2025년 외교전략보고서에서 중견국 중심의 다자안보협력 채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전략

52) 국방부, 『2024~2028 국방중기계획』, (대한민국 국방부, 2023.12.12.).

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SCO, ARF, EAS 등 중국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와의 실무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 공유, 위기관리, 해양안보 협력 등 실질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황태성·이만석은 이러한 다자협력체가 중국의 지역안보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실무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⁵³⁾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구축이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외교적 메시지를 담은 행위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메시지 전달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국방·외교·정보기관 간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계하며, 국제사회 대상 설명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정보·심리전 대응: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여론관리 체계 구축

중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정보전과 심리전 요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내 여론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훈련 시점에 맞춰 중국 관영매체와 SNS 채널은 “한반도는 중국의 전략적 영향권에 속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한국 내 안보담론에 간접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전략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정보전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분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확대하여 심리전·정보전 대응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방어 인력 양성과 빅데이터 기반 위협 분석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여론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 학계,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안보이슈에 대한 공공설명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정보 대응을 넘어, 전략적 인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연결된다.

〈표 3〉 한국의 대응 전략

구분	핵심 과제	주요 대응	기대 효과
군사	감시·정찰 고도화, 다영역 전력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AV·위성·드론 활용 입체 감시망 • AI 전장관리·전자전·우주감시 강화 • 합동훈련 확대· 정규전력의 질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탐지·추적 능력 확보 • 다영역 작전 대응력 제고 • 전략적 억제력 강화

53) 황태성·이만석, 앞의 책, pp. 32-66.

구분	핵심 과제	주요 대응	기대 효과
외교	전략적 자율성 확보, 균형외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동맹 의존 완화 • ASEAN·EU·인도 등 중견국 협력 • SCO·ARF·EAS 등 다자협력 연계 • 전략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적 선택지 확대 • 위기관리·해양안보 협력 강화 • 국제사회 설명력 제고
정보·심리전	전략 커뮤니케이션·여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심리전 대응 전담 조직 • 사이버사령부 기능 확대 • 언론·학계·시민사회 협력 • 공공설명력·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심리전 대응 능력 강화 • 국내 여론 안정성 확보 • 인식 주도권 확보

* 출처: 연구자가 작성

V. 결론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중국의 연합합동군사훈련이 단순한 기술적 협력 수준을 넘어 전략적 전환기로 진입했음을 규명하였다. 중국은 훈련을 통해 지리적 범위를 동북아에서 유럽·중동까지 확장하고, 기술적으로는 극초음속 무기·AI 기반 전장관리·드론 함모 등 첨단 전력을 실험하며, 외교적으로는 러시아·SCO 회원국·중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을 겨냥한 전략적 행위로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구조적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해 KADIZ 진입, 이어도 인근 훈련, 대만해협 활동 등은 한국의 감시·정찰 부담을 높이고, 위기관리 체계에 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구체적 위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은 단편적 대응을 넘어 군사·외교·정보 차원의 통합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정찰위성 추가 배치, 고고도 무인기 운용 확대, 해양 드론 전력화 등 구체적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과 전자전 대응 장비, 우주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다영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방예산 내 우선순위 조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와 중국 중심의 지역협력 구도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틀을 제도화하면서도, ASEAN, EU, 인도 등 중견국과의 연례 안보대화를 제도화하여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SCO, ARF 등 다자안보협력체와의 실무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러 협력에 대응하는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

지 않고, 실제 협의체 참여와 공동 훈련·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전 대응 측면에서는 사이버·전자전·심리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략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여론환경 안정화를 위한 공공설명력 제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과제이다. 한국은 정보전 대응을 국방·외교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단순한 군사행위가 아닌 전략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 구조적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훈련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군사·외교·정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기존의 단편적 분석을 넘어선 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닌, 전략적 자율성과 위기관리 능력 제고라는 국가안보의 재구성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자료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훈련의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훈련의 실제 효과나 의도에 대한 분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중국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제안은 정책적 가능성과 제도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동기와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훈련의 다자적 성격을 보다 정밀하게 조망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군사·외교·정보 대응 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대응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지형의 재편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구조적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변수이며, 한국은 이를 단순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실행 가능한 군사·외교·정보 전략을 제도화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며, 한국의 국방·외교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김순수,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군사외교,”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북한대 학원, 2010.
- 황태성·이만석,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제 2호 (2021): 32-66. <https://doi.org/10.31066/kjmas.2021.77.2.002>.
- 김호준, “중·러 폭격기, 동해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긴급 출격.” 『연합뉴스』, 2023년 6월 6일.
- 송재익, “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뉴스투데이』, 2022년 11월 7일.
- 윤석준, “중국몽(中國夢)을 이끄는 중국 특색의 군부 파워 엘리트: 중국공산당 중 앙군사위원회에 주목하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웹진 Asia & Asias』, 2022.
- 윤석준, “최강 北部戰區, 北 급변사태 대비 훈련 실시,” 『월간조선』, 2022년 8월호.
- 정재홍, “미중 전략 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과 함의.” 『세종정책 브리핑』 No.2020-14. 세종연구소, 2020년 10월 19일.
- 차병섭, “中 베트남, 첫 육군합동훈련… 美관세압박 속 군사관계 심화,” 『연합 뉴스』, 2025.7.21일자.
- Allison, Roy,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and Eurasian Security.”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6, no.1 (2008): 3-26.
- Chen, Yu Ting, “Type 076 Warship Highlights PLA’s Shift Toward Unmanned Aerial Dominance.” *The Diplomat*, November 24, 2025.
- Chung, Chien-peng,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hina’s Chang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China Quarterly* no.180 (2004): 989-1009.
- Economic Times, “Pakistan, China Launch Annual Counter-Terrorism Exercise.” *The Economic Times*, December 2, 2025.
- Ferris, Emily, and Veerle Nouwens, “Russia’s Vostok 2022 Military Drills: Not Size or Tanks, but Context.”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 Commentary*, September 15, 2022.
- Feng, Huiyun, “Power Play in the South China Sea.” *East Asia Forum*, October 6, 2016.
- Helou, Agnes, “China, UAE to Hold First-Ever Joint Military Drill, Likely a ‘Message’ to US: Analysts.” *Breaking Defense*, August 2, 2023.

Honrada, Gabriel, “China’s Multi-Platform Hypersonic Strike Force Takes Shape.” *Asia Times*, December 21, 2024.

IRIA Staff, “Inside China’s Largest Military Parade: Hypersonic Missiles, Drones, and Advanced Defense Systems.” *International Relations Insights & Analysis*, September 8, 2025.

Kaufmann, Jane, and Chris Pagenkopf, “How to Train Your Dragon: Understanding China’s Growing Web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Modern War Institute*, October 8, 2025.

Liou, Shiau-Shyang(劉曉祥),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China and Foreign Forces.” *INDSR Newsletter No.25* (July 2023): 3-10.

Panda, Ankit, “SCO’s Peace Mission 2021: China and Russia Test Joint Command Structures.” *The Diplomat*, September 23, 2021.

Weitz, Richard, “Parsing Chinese-Russian Military Exercises.” *Jamestown Foundation Report*, 2015.

国务院新闻办公室.『新时代的中國國防』.北京: 国务院新闻办公室, 2019.

渡邊裕人.“中國の軍事外交:合同軍事演習・訓練から見る中國の戰略性.”『コスモポリス』 第12号. 上智大学, 2018.

飯田将史.“進展する中國とロシアの軍事協力——共同軍事演習の多様化と高度化”. NIDS コメンタリー 第271号. 防衛省防衛研究所, 2023年8月29日.

中俄聯合聲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新华社, 2022年2月4日.

The Strategic Evolution of China'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Jeon Chang-Bin

Keywords

Chinese Joint Military Exercises, Korean Peninsula Security, South Korea's Strategic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ic evolution of China's joint military exercises since 2015 and their structural implications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has expanded the geographical scope of its drills, enhanced force capabilities, operationalized multi-domain operations (MDO), and reinforced diplomatic signaling through cooperation with Russia and other partners. These developments have contributed to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and deepened strategic uncertainty in Northeast Asia.

Drawing on literature analysis and case studies, the research categorizes the patterns of China's exercises and evaluates their implications across military, diplomatic, and intelligence dimension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consolidation of Sino-Russian cooperation and the emergence of trilateral North Korea-China-Russia collaboration, both of which are identified as critical factors reshaping the regional strategic balance.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South Korea to adopt integrated countermeasures. Recommended strategies include strengthening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expanding multilateral diplomatic engagement,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information warfare response system. By situating China's evolving military posture within the broader dynamics of Northeast Asian secur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scholarly debates on regional stability and provides policy-relevant insights for South Korea's defense and foreign policy planning.

[논문투고일: 2025. 10. 29.]

[심사의뢰일: 2025. 11. 11.]

[계재확정일: 2025. 12. 1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 연구: 시기별 인지전 변화과정과 한국적 함의를 중심으로

허은재, 김태경, 강민수, 한원중*, 김인승**

- I. 서론
- II. 인지전의 개념: 러-우 전쟁에 나타난 인지전의 형태와 범주
- III. 단기속결전을 위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 IV.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 인지전 수행방식의 변화
- V. 결론 및 한국적 함의

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황 및 전쟁수행 목표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인지전 (cognitive warfare) 수행방식의 조정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의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지전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범주를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사고체계까지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비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작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러-우 전쟁 개시 이전부터 이미 러시아의 인지전적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고려, 2021년 3월부터 최근에 이르는 러시아의 활동상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푸틴 등 고위관료 발언과 공식 문헌 등을 활용하여 전황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러시아가 인지전 수행 목표 및 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2022년 3월, 단기속결전 실패에 따른 전략목표 전환 시점을 전후로 그들의 인지전 수행목표와 방식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유사상황 발생 시 국면별로 북한이 전개 가능한 인지전 양상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핵심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인지전, 내러티브, 북한

*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생도

**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1세기 전쟁의 양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정보, 심리, 여론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 영역의 확장 속에서 상대의 인지적 관념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등장하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 소개됐다. 그리고 인지전은 단순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나 심리전(psychological operations)을 넘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새롭고 위협적인 전쟁 수행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사학에서 ‘인지전’ 개념이 주목받은 것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면서였다.¹⁾ 이를 계기로 NATO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대한민국에서도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²⁾ 이렇듯 ‘인지전’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비교적 최근 들어 활발해졌지만, 그 개념에 관해서는 이미 냉전시 기 소련과 중국이 깊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소련은 1965년 르페브르(V. A. Lefebvre)의 ‘재귀통제(reflexive control)’ 이론에 기초해 인지전을 발전시켰으며, 중국은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사상과 2000년대 제시된 ‘삼전(三戰) 전략’에 기반하여 인지전을 체계화하였다.³⁾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보면, 인지전은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취약성과 여론 구조를 겨냥하여 권위주의 국가가 비물리적 또는 물리적 수단으로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발전해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정보 개방성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인지전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민주국가는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있으며, 이는 외부의 허위정보가 사회 전반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⁴⁾ 둘째, 여론의 형성과 변화는 민주국가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지전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외부 세력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셋째, 표현의 자유, 사법적 독립성, 언론 자율성 등으로 인해

1) 류동원·이국화, “새로운 전쟁터로서 마음: 인지전(Cognitive Warfare) 연구,” 『한국국가전략』, 제26호(2024년), p. 127.

2) Alonso Bernal et al,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NATO Innovation Hub, March, 2021.

3) 강신욱, “인지전 개념과 한국 국방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139호(2023년), pp. 183-184.

4) Brigid Laffan, Caitriona Heintz, Cathal Berry, Charles Flanagan, David Stanton, Eileen Culloty, James Lawless, Joe O'Reilly, and Réada Cronin, “Joint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Defence Debate,” *Oireachtas*, May 16, 2023.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법적·제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 내부의 정체성 정치와 이념적 분열 요소는 외부 세력이 손쉽게 악용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성은 대표적인 비민주적 국가 중 하나인 북한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인지전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다시금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2월 개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 그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구사한 인지전 수행방식과 이에 대한 서방 국가 및 우크라이나의 대응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⁵⁾ 그러나, 러-우 전쟁이 발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들을 조망할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분석 기간의 측면에 편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전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시기적으로 개전 직전과 초기 활동상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연구들은 개전 초기까지의 러시아 인지전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지만, 러-우 전쟁 전개 과정에서 점차 변화되었던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을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분석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이 전환 및 러시아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연동하여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한국의 안보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연구 또한 부족하다.

문제는 이러한 러-우 전쟁의 인지전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로 인해 우리가 도출 가능한 한국적 함의 역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일단 러-우 전쟁 중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 연구는 향후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발생 시 북한 등 잠재적 적국의 행동방식을 유추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 속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러-우 전쟁의 전훈을 다방면으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러시아가 개방된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행한 여론 조작과 정보 왜곡 등의 인지전은 향후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의 인지전을 수행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5) 러시아의 개전 초 인지전 수행방식을 분석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상현, "인지전의 공격 양상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32권 제4호 (2022년), pp. 21-49; 송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내러티브·플랫폼·세 모으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권 제3호 (2022년), pp. 213-255; 장찬규·김성우·최현규·유준성·모영진, 『우크라이나군의 인지전 연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연구 세미나(1차) 발표 자료, 『군사연구』 제475호 부록 (2022년), pp. 7-43; 러시아의 인지전에 대한 서방 국가 및 우크라이나의 대응 방식을 기술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상현, 2022, pp. 21-49; 윤용재, "한국군 사이버 심리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24년; 장용, "인지전(認知戰) 수행관점에서 본 한국군 정신전력 발전 방향 고찰", 『정신전력연구』, 제75호 (2023년), pp. 271-278.

다. 하지만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에 대한 부분적인 학습만 가능하다면, 전황 및 전쟁목표 조정 과정에서 수반될 북한의 잠재적 인지전 수행방식의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러-우 전쟁 전훈 분석을 위해서도 분석의 시간선을 최근까지로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4년간 전개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전황 및 전쟁수행 목표의 변화에 따라 인지전 수행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왔으며, 이를 위해 어떤 내러티브(narrative)를 구사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인지적 효과를 노렸는지에 대해 구체화할 것이다.⁶⁾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인지전을 수행할 경우 러시아의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겠다.

II. 인지전의 개념: 러-우 전쟁에 나타난 인지전의 형태와 범주

인지전 개념은 러시아의 군사사상 발전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르페브르가 고안한 재귀통제 개념을 바탕으로 인지전 수단을 개발하고 활용하였다.⁷⁾ 여기서 재귀통제란 상대방의 인지 과정을 예측·유도해 스스로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⁸⁾ 냉전기에 소련은 재귀통제를 적성국과 위성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에 활용하였으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⁹⁾

그 시작은 2008년 조지아 전쟁으로, 당시 러시아는 전쟁 준비를 훈련으로 속이는 ‘유화(Pacification)’ 기법을 활용하여 조지아군을 교란했다.¹⁰⁾ 이어 재귀통제 개념은 현대 러시아 군사교리에 핵심적 요소로 반영되었다. 일례로, 2013년 러시아군 총참모장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는 현대 전쟁 전략에 관한 교리에 대해 언급하며, 현대전에서는 전쟁과

6) ‘내러티브’는 정치적 현실에 관한 개개인의 인식과 여론을 형성하며,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7) 양욱, “결심체계를 뒤흔드는 인지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산리포트 9월호 (2025), p.25.

8) 이정하,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재귀 통제(Reflexive Control)”, 『서양사연구』, 제66호 (2022), pp. 141-170.

9) 양욱, pp. 25-26.

10) *Ibid.*

평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비물리 수단이 물리 수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보·여론·내부 정치세력의 작용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서방에서 ‘게라시모프 독트린(Gerasimov Doctrine)’이라 명명한 이 교리는 사실상 재귀통제 개념이 현대적 안보 환경에 맞춰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는데, 러시아는 신원 미상의 병력을 투입해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동시에 ‘주민 보호’와 ‘합법적 투표’라는 내러티브를 제시함으로써 무력·정보·정치적 절차를 동시에 결합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지전은 인간의 심리와 인식,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전쟁수행 개념으로 부상하며 서방 담론 속에서 전략적 위협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지전의 일반적 정의는 무엇인가. 인지전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NATO 측 입장에 따르면 이는 “상대의 추론, 결정,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복합 작전”으로 정의된다. 다양한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단순한 허위정보 유포를 넘어 선택적 진실, 경제·외교 수단, 군사행동과 통합된 전략적 틀(framework)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¹²⁾ 그리고 인지전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역시 큰 틀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인지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 인지전의 개념을 가장 먼저 소개한 육군의 2022년 연구에서도 인지전을 “정보와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능력·과정을 공격”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인식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쟁”이라 정의한다.¹³⁾ 일반적으로 인지전을 국가의 전략적 목적달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등을 포함한 비물리적 수단과 물리적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간 및 조직의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의도대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NATO 측에서 이러한 인지전 수행의 목적이 “정치·사회적 구조의 불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이러한 인식은 미국 역시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 미 육군 미래사령부(Army

11) Valery Gerasimov, “The Value of Science Is in the Foresight”, 『Military Review』, Vol. 96, No. 1(2016.2.), pp. 24-25.(Originally published as “Ценность науки в предвидени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урьер, February 27, 2013).

12) Christoph Deppe and Gary S. Schaal, 『Cognitive warfare: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NATO ACT cognitive warfare exploratory concept』 (Front. Big Data, 2024).

13) 육군 교육사령부, 『미래 작전환경분석서』, (육군 교육사령부, 2022), in 서정순, 김학민, “인지전(Cognitive Warfare) 연구”, 『전략연구』, 통권 제93호(2024. 7.), p. 348 재인용.

14) Christoph Deppe and Gary S. Schaal. *Op. cit.*

futures Command)가 2021년 발간한「미래작전환경보고서(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상에도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가 사회적 분열을 심화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등의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을 야기하여 특히 “민주주의 국가(democracies)들에 피해”가 뭉을 경고하고 있다.¹⁵⁾ 이는 인지전의 수행 주체가 사실상 비민주적 국가이며, 그 직접적인 위협 대상은 민주주의 국가들이라 상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인지전은 기존에 존재했던 심리전이나 정보작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인가. 이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전달을 통해 적군의 의사결정체계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전쟁 수행 의지의 마비 또는 약화를 유도함으로써 아측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¹⁶⁾ 그러나 계층적으로 볼 때 인지전은 정보작전의 하위 개념으로서 작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에서 다른 개념과 구분된다. 심리전이 인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 적의 전쟁 수행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지전은 인간의 인식 자체에 영향을 주는 데에 집중하여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⁷⁾ 정보작전은 이러한 심리전과 인지전을 포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우위를 획득하여 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아군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인지전 개념을 현재 러-우 전쟁 전장 상황에 여과 없이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지전의 적용대상과 그 수단 측면에서 러-우 전쟁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지전 적용대상의 확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보았듯 인지전의 경우 그 적용대상을 사실상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특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술하였듯,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외부 세계를 향한 허위 내러티브 생산과 국제여론 분열에 집중하였으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통제와 정당성 확보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러시아가 수행한 인지전의 대상이 비단 적국 및 그 지원세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국내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대상을 적국 및 그 협력세력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까지로 확대해서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인지전 수행을 위한 수단 측면에서 개념적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인지전 관련 담론은 그 수단 및 방법과 관련하여 ‘비물리적 수단과 물리적 수단’ 모두를 포괄하는

15) U.S. Army Futures Command,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FORGING THE FUTURE IN AN UNCERTAIN WORLD 2035-2050”, (U.S. Army Futures Command, 2021 Apr 21), p. 9.

16) 서정순·김학민, 2024, pp. 359-361

17) 양욱, p.16.

듯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물리적 수단의 활용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것인가’로부터 비롯된다. 물리적 수단의 활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자칫 군사력을 활용한 재래식 전쟁(conventional warfare) 수행과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전개된 러-우 전쟁에서의 인지전 수행방식의 특성을 고려, 인지전적 수단 측면에서는 허위정보 유포, 정보 조작 등의 비물리적 활동 전반을 포함하되, 물리적 수단에 대한 활용 부분은 핵무기와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체계의 활용 가능성 시사에 기반한 강압(coercion)적 행위로만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III. 단기속결전을 위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1. (1단계) 러시아의 전쟁 결심과 인지전 개시: 2021년 3월~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은 러시아가 장기간 축적해 온 지정학적 불안과 우크라이나의 서방 통합 움직임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기인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탈냉전 이후부터 지속하여 서방과의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였다. 특히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에 절감하여 NATO 가입 등 서방과의 동맹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푸틴(Vladimir Putin)은 탈냉전 이후 진행되어 온 NATO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NATO 가입 움직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푸틴은 외교적 수단만으로는 러시아의 자국의 영향권 회복과 서방의 동진 저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¹⁸⁾ 다수의 보도와 분석에 따르면 푸틴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사이에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실제 이러한 전쟁 결심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준비해나가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예비군 동원령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7만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을 집결시켰고, 이는 4월까지 유지되었다.²⁰⁾ 또한, 러시아는 당해 9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나토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방과 크림반도에서 벨라루스의 정권교체를 위해 침공하는 시나리오의

18)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국제질서 변화”, 『슬라브학보』 제38권 제4호, pp. 485-516.

19) Christoph Deppe and Gary S. Schaal, 2024: RadioFreeEurope/RadioLiberty’s Russian Service, “Investigative Report Says Putin Made Decision To Invade Ukraine In March 202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April 24, 2023.

20) 송태은, 2022, pp. 226.

‘Zapad-21’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의 병력이동을 진행했다.²¹⁾

이렇듯 러시아가 2021년 초까지 대(對)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결심함에 따라 원활한 전쟁준비를 위한 병력 재배치에 더해, 국제사회에 그들의 침공 의도를 은폐·기만하고 전쟁 발발 이전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군사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전쟁 발발 전부터 다양한 인지전을 수행하였다.

먼저, 러시아는 국제 비난 최소화 및 내부 결속 강화를 목표로 하여,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정당성 부정, 서방 및 우크라이나의 악마화 내러티브와 러시아의 피해자 내러티브 유포로 구분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주제의 내러티브를 고위급 발언, 허위정보 유포와 같은 방식을 통해 확산하였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정당성(독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며, 전쟁을 ‘러시아 문명의 복원’이라는 이상 아래 포장하였다. 2021년 7월, 푸틴은 크렘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²²⁾ 이 글에서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본래 하나의 역사적·문화적 공동체이며,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간섭에 의해 탄생한 인공적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세계(Ruskiy Mir)’라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무력 개입을 러시아 문명의 책무로 정당화하려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속국이며, 현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주요 언론에 게재하였다.²³⁾ 크렘린은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능하고 불법적인 존재로 규정하려는 국가 차원의 기초를 명확히 했다.²⁴⁾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우크라이나 정권교체의 정당성 확보를 의도한 인지전적 포석이었다.

둘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악의적 행위자로 묘사하는 선전 담론을 통해, 자국의 침공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시키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4월 3일, 러시아

21) *Ibid.*

22) Vladimir Putin,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President of Russia, July 12, 2021.

23) Dmitry Medvedev, “Почему бессмысленны контакты с нынешним украин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мерсантъ*, October 11, 2021.

24) Sergei Vedyashkin, “Russia Shouldn’t Negotiate With ‘Vassal’ Ukraine, Ex-President Medvedev Says,” *The Moscow Times*, October 11, 2021.

관영 타스(TASS) 통신이 보도한 돈바스 어린이 사망 사건이다.²⁵⁾ 보도 내용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²⁶⁾ 그럼에도 러시아 주요 인사들(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등)은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우크라이나의 비인도적 행태를 부각했다.²⁷⁾ 이는 인도주의적 감정에 호소하여 국제사회의 공감과 러시아 내부의 분노를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인지전 기법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나치에 비유하며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2021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를 나치 세력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러시아 관영 매체를 통해 반복되었으며, 젤렌스키 정권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간주되었다.²⁸⁾ 이러한 표현은 러시아 국민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침공을 도덕적인 해방 전쟁으로 재규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 러시아는 침공 이전부터 자신을 서방 및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자 위협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쟁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 러시아는 NATO가 2021년 3월 중순부터 진행한 ‘Defender-Europe 2021’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경지대에 훈련 목적으로 군사를 배치하였다.²⁹⁾ 이는 전쟁 준비를 위한 러시아의 군사배치를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 조치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어 사용자에 대한 ‘인종학살(genocide)’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루소포비아(Russophobia)를 서방의 정책적 배경으로 묘사하였다.³⁰⁾ 이는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자국의 군사행동을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하는 이중 전략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나토의 흑해 해군 훈련을 ‘크림반도 무력 탈환을 노린 도발’로 해석하며 위협을 과장하였다.³¹⁾ 러시아는 2021년 12월 미국과 나토에 ‘안보 보장 조약’ 초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초안에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불허 및 동유럽에서의 군사력 축소 등 사실상 서방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³²⁾ 러시아는 상대

25) TASS, “Five-year-old killed in DPR in Ukrainian drone strike,” *TASS*, April 3, 2025.

26) EUVsDisinfo, “DISINFO: A 4-year-old child died in Donbas after Ukrainian army drone attack,” *EUVsDisinfo*, April 6, 2021.

27) Олена Перепада, “Українська армія відкидає застосування зброї проти цивільних на Донбасі — ЗМІ,” *DW*, April 4, 2021.

28) 송태은, 2022, pp. 226.

29) Maria Zakharova, “Briefing by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Maria Zakharova, Moscow, March 26, 20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h 26, 2021.

30) ‘루소포비아’는 러시아에 대한 문화적 혐오 또는 인종차별을 나타내는 신조어를 의미한다: 송태은, 2022, pp. 226.

31) Vladimir Isachenkov, “Kremlin denies plans to invade Ukraine, alleges NATO threats,” *AP News*, April 25, 2023.

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보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방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얻고자 하였다.³³⁾ 실제로 러시아와 서방 간의 협상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러시아는 이를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처럼 러시아는 전쟁 수행 이전부터 일련의 인지전을 통해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자격 없는 국가이고, 서방은 호전적이며,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전쟁 개시 전에 국내외에 각인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핵심 목표였다. 이와 같은 정당화 방식은 군사행동에 앞선 여론을 향한 전초 전이자, 정보전의 전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고위급 발언과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그들의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2021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 인접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일관되게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침공 의도를 전면 부인하였다. 2021년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누구도 공격할 생각이 없다”며 서방 언론이 제기한 전쟁설을 강하게 부인했고,³⁴⁾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Dmitry Peskov) 또한 “서방이 러시아의 정당한 군사 활동을 침략 시나리오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⁵⁾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오히려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자신들의 병력 배치가 지역 안정을 위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하였다.³⁶⁾

이와 같은 언사는 서방 국가들의 전쟁 인식에 혼란을 주고,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이견을 유도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특히 일부 서방 국가들 내에서는 러시아의 단순 훈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침공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과 대응책 마련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례로, 독일은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³⁷⁾ 이러한 분열은 러시아가 의도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침공

32) Al Jazeera, “Russia demands Ukraine, ex-Soviet nations be barred from NATO,” *Al Jazeera*, December 17, 2021.

33) Al Jazeera, December 17, 2021.

34) Pavel Zarubin and Vladimir Putin, “Interview with Rossiya TV channel,” *President of Russia*, November 13, 2021.

35) AFP, “Kremlin Slams U.S. ‘Hysteria’ Over Ukraine Conflict,” *The Moscow Times*, November 21, 2021.

36) Maria Zakharova, “Briefing by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Maria Zakharova, Moscow, December 15, 20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ember 15, 2021.

직전까지도 러시아와의 외교 해법을 우선시한 미국과 유럽 각국의 행동이 그것을 반증한다.

이처럼 러시아는 단지 병력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배치와 더불어 침공 의도의 은폐를 위한 외교적·정보적·심리적 조치들을 병행함으로써, 전쟁 개시 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완성해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적 기만전술(Maskirovka)의 일환이었으며, 인지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2. (2단계) 전쟁 조기 종결을 위한 인지전의 수행: 2022년 2월~3월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Спеціальна військова операція)'을 공식 발표했다. 푸틴은 이 작전의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탈나치화, 그리고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고 주장했다. 이는 침공의 정당성을 외부와 내부 모두에게 동시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내러티브로 작용했다.³⁷⁾ 러시아군은 개전 직전부터 우크라이나 국경과 벨라루스 남부에 약 15~20만 명의 병력을 전개해두어, 다방향 동시침공을 가능하게 했다. 북부 전선에서는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키이우를 직접 위협하고, 동부 전선에서는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공략했으며, 남부 전선에서는 크림반도에서 헤르손과 자포리자 방면으로 진출했다. 이러한 다방향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분산시켜 수도 방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³⁹⁾

개전 초 러시아는 단기 속결전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 러시아군은 개전 첫날 공수부대를 투입해 키이우 인근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 점령을 위한 발판을 확보하려 했다. 동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과 서방의 정보 지원으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단기 속결전이라는 목표하에 육·해·공 합동작전 또한 병행되었다. 러시아 육군 기갑 및 기계화 부대는 북·동·남 전선에서 진격했고, 공군은 초기 타격과 함께 공중우세 확보를 시도했으며, 흑해함대는 해상 봉쇄와 오테사 상륙 위협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을 분산시켰다. 즉, 러시아군은 전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전쟁 개시를 통해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 점령을 꾀한 것이다.

37) Liana Fix, "On the Ukraine War, Germany Has a Leadership Problem. Here's Wh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ctober 14, 2022; Сергій Сидоренко, "Макрон з переворотом: як лідер Франції спробував сподобатися Путіну, але не зрадити Україні," *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 February 9, 2022.

38) Paul Adams, "러시아,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특별 군사 작전' 개시," *BBC News Korea*, February 24, 2022.

39) 정의길, "러시아, 미국 등 우려대로 우크라이나 '세 방향' 전면 공격 감행," *한겨레신문*, 2024년 7월 14일.

인지전 역시 최단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하려는 러시아의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개전 초기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인지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혼란 조성, 둘째는 국제사회의 개입과 군사지원 차단이 그것이다. 이는 모두 단기 속결전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작전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는 심리·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내부를 겨냥한 인지전은 국민의 저항 의지와 군의 통제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개전 직후부터 텔레그램, VK, SNS를 통해 “젤렌스키가 도주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집단 항복했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유포하였다.⁴⁰⁾ 이와 함께 젤렌스키의 사망설이나 체포설, 주요 도시 포위설 등을 집중적으로 퍼뜨렸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회에 체제 공백과 혼란을 심리적으로 조장하기 위한 기획된 프레임이었다.⁴¹⁾ 이러한 접근은 적국 내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공백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저항 의지와 판단을 조기에 차단하는 전략적 디지털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과장된 군사정보 및 심리작전 콘텐츠를 통해 정보혼란을 유도했다. 예컨대 키이우 외곽까지 진입했다는 과장된 선전 영상, 조작된 명령서와 음성 녹취, 통신교란 등은 우크라이나군 내부의 명령계통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정보환경을 불안정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인지전 수단이었다.⁴²⁾ 이는 가짜뉴스를 통해 부정적 인식을 주입하려는 정보형성(informational shaping)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에 향한 인지전의 주요 목표는 서방의 개입을 지연시키고 정치적·군사적 지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침공을 ‘전쟁(Война)’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명명하였다. 이 프레임은 자국 내 전시 통제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도덕적 개입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⁴³⁾ 작전 명분 또한 “러시아계 주민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치 척결”, “NATO 확장에 대한 방어”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메시지는 러시아 국영 매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반복 전파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서방 내부 분열 유도 및 정치적 회의론 조성도 병행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이용당하고 있다”, “서방의 확장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내러티브는 프랑

40)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DRI), “Disinformation about Ukraine in Russian and pro-Russian Telegram channels,” *DRI*, December 30, 2022.

41) ‘프레임’은 인간이 특정한 사건이나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프레이밍’이란 프레임을 조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42) Rebecca Falconer, “Russia’s key attack targets in Ukraine,” *Axios*, February 25, 2022.

43) NPR, “What Ukraine war news looks like from Russia,” *NPR*, March 15, 2022.

스, 독일, 헝가리 등에서의 초기 군사지원 소극성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⁴⁴⁾ 랜드(RAND) 연구소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는 초기 메시지에서 서방 엘리트와 대중 간 인식 격차를 노려, 대응 일체감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적 이간 책동을 전개했다”고 분석한다.⁴⁵⁾

이렇듯 러시아는 초기에 대상에 따라 다른 이중적인 내러티브를 사용했다. 국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가 붕괴는 임박했다” 등의 공포 내러티브를 통해 저항 의지를 무력화하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는 방어적·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방어적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물리적 전장과 심리적 전장을 맞물리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⁴⁶⁾

그러나 대내외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인지전은 기대했던 효과를 온전히 거두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SNS를 통해 신속히 반박했으며, 미국 등의 서방은 러시아의 허위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저해하려는 선제적 전략을 구사했다.⁴⁷⁾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단기 속결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시도된 초기 인지전은 그 군사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오히려 서방의 결속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저항 의지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3. 소결론

러시아의 인지전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전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개전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치 프레임 및 피해자 서사를 활용해 전쟁을 불가피한 자위행위로 포장하였으며, 대규모 병력 배치를 감행하면서도 침공 의도를 부인하는 기만술을 병행하였다. 개전 직후에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명 아래 젤렌스키 실각설, 조작 영상,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에는 서방 책임론과 함께 서방의 개입 회피를 유도하기 위한 내러티브를 집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인지전은 전쟁의 개시와 함께 수행되며 심리적·정보적 전장

44) Natalia Chaban and Svitlana Zhabotynska, “Narratives of Ukraine on the Information Battlefields of Global Media”, 『The War Against Ukraine and the EU (April 30, 2024)』, pp. 207-230.

45) Samuel Charap and Khrystyna Holynska, “Russia’s War Aims in Ukraine: Objective-Setting and the Kremlin’s Use of Force Abroad”, RAND Corporation, RR-A2061-6 (2024), pp. 1-24.

46) Hlib Kuzmenko, “Conceptualization of Russia’s Strategic Narratives in the Full-Scale Russo-Ukrainian War”, Scientific Notes of the Institute of Journalism, Vol. 86 (June 2025), pp. 35-47.

47) Vera Bergengruen, “How Putin Is Losing at His Own Disinformation Game in Ukraine,” *Time*, February 26, 2022.

을 선점하려는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였다.

〈표 1〉 1·2단계 내용 요약

1단계 (2021.3. ~2022.2.)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 및 병력 국경 배치(2021.3.)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점령 및 친러 정권 수립 •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인지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공 정당성 확보를 통한 국제 비난 최소화·내부 결속 강화 • 침공 의도 은폐·기만을 통한 서방 대응 지연
	인지전 수행방식	[침공 정당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푸틴 논문/ 메드베데프 기고문 • 푸틴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 학살" 주장 • 러 외무부 "우크라·NATO가 위협" 주장 • 우크라이나 및 서방 악마화를 위한 돈바스 아동 사망 보도 • 러시아 관영 매체를 통한 우크라이나 '나치' 프레임 확산 [침공의도 은폐·기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메드베데프의 러시아 침공 계획 부인 발언 • 러 외무부 "러시아의 군사배치는 자위적 조치" 주장
2단계 (2022. 2.~3.)	배경	푸틴의 '특별군사작전' 개시(2022.2.)
	전략목표	단기 속결전 달성
	인지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의지 약화 및 군 지휘·통제 붕괴 • 국제사회의 군사지원 및 개입 차단
	인지전 수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내부 혼란 유도를 위한 허위정보(젤렌스키 도주·사망설, 전쟁 종결설 등) 유포 • 국제사회 지원 차단을 위한 침공명분(탈나치화, 러시아계 보호 등) 유포 및 전쟁 희의론 조장

하지만 대내외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인지전은 기대했던 효과를 온전히 거두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SNS를 통해 신속히 반박했으며, 미국 등의 서방은 러시아의 허위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차단하는 선제적 전략을 구사했다.⁴⁸⁾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단기 속결전이라는 전략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수행된 초기 인지전은 군사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오히려 서방의 결속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저항 의지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2022년 3월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48) Vera Bergengruen, "How Putin Is Losing at His Own Disinformation Game in Ukraine," *Time*, February 26, 2022.

IV.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 인지전 수행방식의 변화

1. (3단계) 러시아군 후퇴와 인지전 수행방식 변화: 2022년 3월~12월

20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지역에서의 단기 속결전 달성에 실패하였다. 당초 러시아군은 개전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공중우세 확보에 집중했지만 우크라이나 초기 공습에서 생존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재가동되고 휴대용 방공무기 등이 보급되면서 러시아의 공군력은 점진적으로 후퇴했다. 또한, 러시아군은 단일전선에 집중하기보다 복수 전선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전선별로 병력과 물자가 분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 드러난 러시아군의 전술적, 작전적 결함을 이용하여 반격을 시도하면서, 러시아는 북부, 동부 지역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확보했던 점령지역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러 전쟁지도부는 불리한 전세를 극복할만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즉,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둔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단해야 했으며, 동시에 자국 내에 점증하는 불만을 통제하고 추가적인 병력 역시 확보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전략목표는 당초의 단기 속결전을 통한 우크라이나 점령에서 돈바스·루한스크 등의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확보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의 인지전 수행목표 역시 작금의 후퇴가 패배가 아닌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주입하고,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능력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⁴⁹⁾ 즉, 2022년 3월 말 이후부터 러시아의 인지전은 공격적 선전에서 수세적 정당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22년 3월 이후부터 동년 말까지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쟁 수행능력을 제한하는 서방의 제재를 타파하고,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행사를 억제하며, 러시아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는 인지전적 목표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끊임없이 핵 무력의 사용 가능성, 에너지 무기화, 및 식량 수출 차단 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을 강압함과 동시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애국주의적 정서를 고취하는 내러티브를 전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를 전략적

49) Mark Trevelyan and Alexander Winning, "Russia states more limited war goal to 'liberate' Donbass", *Reuters*, March 26, 2022.

위협 수단으로 삼아 공급제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함으로써 국제 제재를 타파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연시키고자 했다. 2022년 4월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경우 이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고 러시아가 적대 국가에 대한 식량 수출을 재고할 것임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서방을 위협했다.⁵⁰⁾ 또한, 서방의 제재가 글로벌 식량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며 러시아가 식량 생산분을 ‘우호국가’에만 제공하도록 수출 대상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곡물 공급을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하여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고자 한 인지전적 활동의 일환이었다.

동시에 동년 9월 2일, 미국의 주도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의 전쟁 재원 확보를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푸틴은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가스, 석유, 석탄, 연료 모두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에 모든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⁵¹⁾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경우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을 것임을 경고하며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사회적 결속력을 약화하고 대러 제재의 실질적인 효력을 제한하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핵 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 등 강경 메시지를 통해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압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서방의 참전을 막고자 했다.⁵²⁾ 2022년 9월 푸틴은 전쟁 초기 병력을 집중했던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도 후퇴가 지속되자 점령지역에서의 합병투표를 강행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핵 사용 위협을 본격화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핵 신호전달(Nuclear Signaling During the War in Ukraine)」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200번이 넘는 핵 사용 위협을 가했다.⁵³⁾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의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불리한 전장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푸틴은 2022년 9월 21일, 부분적 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영토적 통합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50) Guy Faulconbridge, “Putin says world faces food crisis due to West’s sanctions”, *Reuters*, April 5, 2021.

51) 최원진, “푸틴 “유가 상한제 부과시 가스·석유 없다”...국제유가 상승”, *뉴스핌*, 2022년 09월 07일.

52) William Schneider Jr., “How Russian Coercion Diminished Deterrence and Shifted the Nuclear Balance,” 『Hudson Institute Policy Memo』, June 2025, pp. 1-7.

53)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Nuclear Signaling During the War in Ukraine”, CSIS, (n.d.).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주에서 합병 국민투표가 발표된 직후인 22일에는 메드베데프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⁵⁴⁾

또한, 러시아는 이러한 핵 사용 위협이 단순히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발현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핵 무력 사용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공세를 방어하는 입장'이라는 내러티브를 부각하였다. 실제로 2022년 10월 23일 쇼이구(Sergei Shoigu)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은 영국, 프랑스, 터키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폭탄인 'Dirty Bomb'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악화된 전장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⁵⁾ 우크라이나의 해당 무기 사용 계획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유럽국가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인도적인 무기체제로부터의 잠재적 공격 위협하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자국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형성하고자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부분적 군 동원령을 발령함과 동시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애국주의 정서를 고취하는 등 3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인지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가병력과 물자를 내부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러시아는 내부적 혼란을 잠재우고 러-우 전쟁에 대한 국내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자 했다. 실제 푸틴은 9월 21일 텔레비전을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연방에서 부분적 동원령을 내리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직업군인만 동원했지만, 21일부터 예비역 등 국민들을 부분적으로 동원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⁵⁶⁾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이를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하며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았지만 2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군 병력을 내부적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군 동원령의 발령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

54) Merlyn Thomas, “Ukraine war: Putin orders partial mobilisation after facing setbacks”, *BBC*, September 22, 2022.

55) Carlie Porterfield, “Russian Defense Chief Claims—Without Evidence—That Ukraine Could Use ‘Dirty Bomb’”, *Forbes*, October 23, 2022.

56) 박병수, “러시아군 인명 손실 어땠길래…푸틴, 예비역 30만명 동원령”, *한겨레신문*, 2022년 09월 21일.

시키고 국내적으로 큰 반발과 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푸틴에게 있어 국내적 지지를 상실하고 전쟁 수행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시기였다. 실제로 푸틴의 연설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 전국적인 반전시위가 일어났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한 러시아 내 38개 도시에서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⁵⁷⁾

이렇듯 푸틴과 전쟁지도부는 예상되는 국내적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국민들에게 군 동원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전쟁 수행에 따른 위험성과 우려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푸틴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 즉 조국·주권·영토를 보호하고 해방된 영토에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원령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⁵⁸⁾ 이는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해방시켰다는 기존의 인식에 더해, 러시아가 지금까지 ‘특별군사작전’으로 해방된 영토의 거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명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침략 야욕에 따른 전쟁이 아닌 방어적 성격의 전쟁임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러시아인들의 애국주의 정서를 고취시킴으로써 동원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였다.

2. (4단계) 성공적인 종전을 위한 인지전 수행 : 2022년 12월~2025년 9월

2022년 말부터 러-우 전쟁은 전선의 고착화와 함께 본격적인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상 방어선 구축과 러시아의 공세 양상 조정,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조응한 결과였다. 실제 러시아 군 지휘부는 2022년 말부터 물리적 요새 건설과 첨단 전력·정보전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⁵⁹⁾ 이후 러시아는 전선의 안정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장에 투입되는 자원 소모를 감내할 수 있는 형태로 그 공세 양상을 조정했다. 아우디이우카(Avidiivka) 전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종전의 대대적이고 전격적인 공세 방식에서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전세를 가져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처럼 러-우 전쟁의 양상이 장기전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역량의 주요 기반이었던 국제적 지원 활동 또한 변화되었다. 특히 서방의 지원 피로도가 점차 뚜렷

57) Simone McCarthy, Matthew Chance, Tim Lister, Anna Chernova, and Mick Krever, “Tearful scenes and protest as mobilization gets underway in Russia”, *CNN*, September 23, 2022.

58) Simone McCarthy et al., 2022.

59) Jack Watling, Nick Reynolds, “Meatgrinder: Russian Tactics in the Second Year of Its Invasion of Ukraine”, *RUSI*, May 19, 2023.

해졌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으며,⁶⁰⁾ EU 또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국내 정치·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심화됐다.⁶¹⁾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대(對) 러시아 공세가 예봉을 잃게 되었으며, 지상의 전선이 안정화됨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의 지상전 양상이 러시아의 우세로 재차 전환되는 양상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러-우 양측 모두에게 전쟁에서의 결정적인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에 러시아 역시 전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목표의 조정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12월 푸틴은 “특수 군사작전의 오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하자면, 이 과정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최초로 러-우 전쟁의 장기화를 언급하였다.⁶²⁾ 전쟁 발발 이후 푸틴 대통령은 줄곧 ‘단기간의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메시지를 유지해왔기에, 그가 전쟁의 장기화를 직접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러시아 내부의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한 승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러-우 전쟁이 러시아의 결정적 승리로 귀결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우세한 국면 속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가 전환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실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은 전선이 교착상태로 전환된 2022년 12월 이후 그 목적 및 실행방법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났다.⁶³⁾ 개전 초기나 대반격 국면에서 나타난 단기 속결전 혹은 방어적 내러티브 구축과는 달리, 우세한 조건 속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동부 지역에 대한 안정적 점령을 완수하며, 나아가 전후 국제적 위신을 회복하고 대외 제재를 완화·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인지전 수행방침을 재편하는 형태를 보인 것이다.⁶⁴⁾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 그 노력이 집중되었다.

첫째, 러시아의 인지전은 서방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약화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우크라이나 전선의 교착이 장기화될수록 서방 사회 내부

60) 고일환, “미국방, ‘재고 충분’ 보고 무시하고 우크라 무기 지원 중단”, 연합뉴스, 2025년 7월 6일.

61) Wilmington Trust Investment Advisors, “Russia’s Pullout from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Is Likely to Increase Inflationary Pressures”, Wilmington Wire, August 1, 2023.

62) Mark Trevelyan, “Putin says Russia could be fighting in Ukraine for a long time”, Reuters, December 8, 2022.

63) Hugo Bachega, “Ukraine war: Kyiv intelligence chief says conflict has reached stalemate”, BBC News, December 29, 2022.

64) Nataliya Bugayova & Kateryna Stepanenko, “A Primer on Russian Cognitive Warfare”,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June 30, 2025; 김보경, “푸틴, 휴전 대가로 우크라 동부 지역 영토 요구”, 조선일보, 2025년 8월 10일.

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의 피로감을 적극 활용하여 “서방의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내러티브를 정보전 및 심리전의 핵심 메시지로 확산시켰다. “지원의 무의미성”, “전쟁 피로감”, “우크라이나의 부패와 비효율성” 등은 이 시기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확산시킨 핵심 내러티브로, 미국과 유럽의 선거국면과 연동되어 전파되었다.⁶⁵⁾ 특히, 미국 내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원조 반대 여론을 선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AI 기반 맞춤형 허위정보, 딥페이크 콘텐츠 등이 종전의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넘어 틱톡, 텔레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되어 집중적으로 유포되었다.⁶⁶⁾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치중되었던 기존의 대(對) 서방 인지전 수행방식을 넘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실존적인 피로감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지전 수행의 정교화된 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는 점령지에 대한 안정적 통치를 위한 인지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등 점령지역에 대한 내러티브 구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하면서 합병의 정당성과 지역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였다.⁶⁷⁾ 점령지 내 교육과 종교기관, 지방 언론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 정체성의 일체감을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주민투표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국제사회에 유포함으로써 국내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당성 프레임을 구축하였다.⁶⁸⁾ 특히 러시아 정교회를 통한 종교적 내러티브의 활용은 점령지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감을 심리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능하였다.⁶⁹⁾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Kirill)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다 전사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발언하며 전쟁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종교적으로 설파하였다.⁷⁰⁾ 또한, 점령지 내에 위치한 친 우크라이나 성향의 교회를 폐쇄하고, 친러 종교 지도자를 임명하는 등 제도적·문화적 내러티브 주입을 병행하였다.⁷¹⁾ 이는 군사적 통제의 보조수단을 넘

65) Schemes, “Leaked Records Detail Vast Russian Influence Campaign Targeting Ukraine, EU”, RFE/RL, September 17, 2024.

66) Olga Lautman, “We’re Winning, Say Russia’s Fake News Manufacturers”,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October 16, 2024.

67)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A Primer on Russian Cognitive Warfare”, Understanding War, 2023; Human Rights Watch, “Education under Occupation: Forced Russification of the School System in Occupied Ukrainian Territories”, Human Rights Watch, June 20, 2024.

68) Cristina M. Arribas et al.,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historical revisionism: Russian disinformation and foreign interference through manipulated history-based narratives”, Open Research Europe, July 27, 2023; Michael J. Kelley, “Understanding Russian Disinformation and How the Joint Force Can Address It”, US Army War College Publications, May 29, 2024.

69) Zacarias Negron, “To Whom Much is Given: The Russian Orthodox Church’s Role in the Russo-Ukrainian War”, Journal of Church and State, August 16, 2024.

70) 김나영, “우크라 가서 전사하면 모든 죄가 씻길 것”, 조선일보, 2022년 9월 29일.

어, 인지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방식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피로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방향으로도 인지전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와 군 내 분열을 집중 조명하는 허위정보를 다수 생산·유포하였으며, 특히 젤렌스키에 대한 조작된 연설 영상이나 항복을 종용하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군의 사기를 저하하려는 시도를 반복하였다.⁷²⁾ 여기에 더해, 전력망·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뒤, “정부의 무능”이나 “국가적 기능의 마비”를 강조하는 내러티브를 SNS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신속히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⁷³⁾ 러시아는 사이버전 이후 진행되는 위와 같은 인지전 전략을 통해 단순한 정보전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 혼란 조성 and 체제 신뢰 붕괴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넷째, 범세계적인 반우크라이나 정서 확산 및 지역 간의 분열 조장을 위한 인지전도 전략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2023년 7월,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데사 항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이후, 제3세계에 대해서 “글로벌 식량 위기의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확산시켰다.⁷⁴⁾ 이 메시지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식량 취약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반 우크라이나 정서를 촉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방은 세계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만을 위한다”라는 반서방적 담론과 결합하여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 회복을 꾀하고, 제3세계를 대상으로 반서방 정서를 촉발하고자 했다.

이처럼, 푸틴이 전쟁의 장기화를 시사한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인지전 수행방식은 2022년 전면 침공 직후부터 같은 해 하반기까지 전개된 기존의 인지전 단계에 비해 내러티브의 층위가 더욱 정교해졌으며, 기술적으로는 AI와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이 결합된 복합 전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국영 미디어뿐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 교육기관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동원되었고, 활용되는 플랫폼 역시 다양화되었다. 특히, 종전 이후 시점에서의 상황 관리 문제 역시 중요해짐에 따라, 접령지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전후 국제적 영향력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및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인지전적 노력 역시

71) 강혜진, “러, 우크라 점령지서 기독교 박해 심각… 소련 시절 방불”, 크리스천투데이, 2024년 8월 20일.

72) 위용성, “영부인이 파리서 슈퍼카 쇼핑?... ‘우크라 혼드는 러시아 딥페이크’”, 한국일보, 2024년 7월 3일; 김상준, “우크라군 유족, 보상 못받아... 러 ‘딥페이크’ 정보전”, 매일경제, 2024년 2월 19일.

73) 박민영, “[전문가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사이버전의 위력”, Future Korea, 2023년 3월 14일; 문용득·박동휘,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전역을 중심으로.』, 민족연구제80호, 2022년, pp. 10-34.

74) EUvsDisinfo, “Disinfo: The West destroys global food security, not Russia”, EUvsDisinfo, February 25, 2024; EUvsDisinfo, “DISINFO: Grain Deal was used to deliver weapons to Ukraine”, EUvsDisinfo, July 24, 2023.

강화되는 모습이 식별되었다.

3. 소결론

2022년 상반기 이후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와 전선 고착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인지전 수행방식을 공격적 선전에서 전략적 정당화와 러시아의 체제적 영향력 행사로 전환하였다. 우크라이나 북부지역에서의 후퇴 이후에는 패배를 전략적 재편성으로 포장하며 국내의 여론을 통제하고자 했고, 핵전력 사용 가능성 및 식량·에너지 자원의 공급 제한을 일종의 강압적 메시지로 활용하여 서방의 결속을 흔들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려 하였다. 더불어 악화된 전황으로 인해 급증한 국내적 불만을 잠재우고 러시아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내부적 정당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병행되었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4단계 국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무용론’, ‘우크라이나 부패론’ 등 전쟁 지원 관련 서방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내러티브를 집중적으로 유포하고, 점령지 내의 안정화를 위해 종교·교육 등을 활용한 장기적 정통성 구축 시도가 병행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글로벌 위기의 책임은 우크라이나’라는 프레임을 통해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 확보를 피하고, 반서방 정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정학적 영향력 확장을 노렸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3·4단계 내용 요약

3단계 (2022.3. ~12.)	배경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따른 러시아군 후퇴(단기 속결전 달성 실패)
	전략목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안정적 확보
	인지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의 대러 제재와 무기지원 제한 • 우크라이나 군사력 행사 억제 • 러시아 내부적 혼란 관리
	인지전 수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에너지 공급 차단 및 핵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 등을 통한 우크라이나 및 서방 강압 • 대국민 연설 등을 통한 애국주의 정서 고취 및 군 동원령 정당화
4단계 (2022.12. ~현재)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전선 안정화에 따른 장기전 양상 돌입 • 종전 이후 상황을 고려한 출구전략 모색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 점령지에 대한 안정적 확보 • 유리한 종전협정 체결 및 국제적 위신 회복
	인지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 국가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 • 점령지 통치 정당성 강화 및 우크라이나 내 분열 확대 • 국제사회 내 반(反) 서방, 반(反) 우크라이나 정서 유발
	인지전 수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서방 내 피로감 증폭 유도(최신 기술 활용) • 종교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점령지역 내 친러 정서 확산, • 우크라이나/서방측에 글로벌 식량위기 책임 전가(최신 기술 활용)

이처럼 러시아의 인지전은 전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기 군사목표 달성의 수단을 넘어, 전쟁 지속 자체를 정당화하고 체계적으로 국내외 목표 대상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인 전쟁에서 러시아가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지전 방식의 효과성을 명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내 반(反) 우크라이나 정서, 그리고 점증하는 전쟁 피로감의 일정 부분은 분명 러시아가 유도한 결과물일 것으로 판단된다.⁷⁵⁾

V. 결론 및 한국적 함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준비를 본격화한 2021년 초부터 인지전을 수행해왔고 이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시기별 전략 목표 및 전황 변화에 맞춰 수차례 변화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전쟁에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시기적으로 개전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전 이전부터 2025년 9월까지 진행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이 크게 4단계에 걸쳐 변화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러-우 전쟁 인지전의 첫 두 단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위한 단기 속결전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2021년 3월부터 개전 직전까지, 약 1년여간 진행된 1단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시기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공 의도를 은폐하여 서방의 대응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고위급 지도부의 발언, 허위정보 유포 등의 수단을 통해 러시아 국민의 애국주의적 전쟁의식을 고취하고, 서방 국가들의 대(對) 러시아 위협 인식 및 대응 수위에 대한 내부 혼란을 유도하였다.

개전 시점인 2022년 2월부터 동년 3월까지 진행된 2단계는 러시아가 물리적 침공을 개시하며 '전쟁의 단기 속결'이라는 전략 목표하에 인지전을 전개한 시기였다. 이 시기 러시아는 젤렌스키 도주설과 같은 허위정보 유포 및 내러티브 확산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를 약화하고, 국제사회의 군사지원을 지연시키며, 러시아의 개입 명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기 러시아의 인지전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신속

75) Ipsos, "GLOBAL ATTITUDES TO THE WAR IN UKRAINE", Ipsos, April 2025, p. 7.

한 대응과 반박으로 인해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 등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음 두 단계는 러시아의 신속한 전쟁 승리가 사실상 좌절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수행된 인지전이었다. 특히 2022년 3월 말부터 동년 12월까지 진행된 3단계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 상황에 직면하여 러시아가 당초의 전쟁수행 목표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확보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러시아는 인지전 수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타파하고,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억제하며,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군사적 반격활동을 제한하고, 러시아 내부의 잠재적 혼란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식량·에너지의 공급 차단 및 핵무력의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여 서방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압을 시도함으로써 반러진영의 연대를 막고 대러 군사행동의 실질적 효력을 약화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러시아 내부의 혼란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에서 대국민 연설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애국주의적 담론을 설파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속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으로, 지상의 전선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장기 소모전 형국으로 전환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종전상황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안정화하고, 전후 실추된 러시아와 푸틴의 국내외적 입지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차원에서 러시아는 점령지 내에서 교육·종교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점령의 정당성을 구축하고, 서방 국가와 우크라이나 내부에 전쟁 피로감을 유발하는 한편,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해 AI 기반 허위정보·딥페이크·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인지전적 수단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인지전은 전쟁의 국면 변화에 따라 그 목표와 수단을 조정하는 유연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직면한 환경 및 조건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이다. 물론 인지전의 특성상 그 효과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지만, 이는 분명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과 서방의 지원 활동,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행위에 대한 러시아 내외의 인식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적절한 대응 노력이 없었다면 그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의 변화는 북한에도 상당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유사시 전략적 목표와 직면한 상황변화에 따라 그들의 인지전 수행방식을 다변화하며 남한 사회 내에 혼란을 증폭하고 국력의 효과적인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인지전은 큰 틀에서 러-우 전쟁 당시 러시아가 수행한 방식에 기반하되, 한반도의 특수성에 맞게 변용된 형태로 공세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러-우 전쟁에 대한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할 수 있는 미래 북한의 인지전 수행 방향성은 무엇인가? 크게 단기 속결전 국면에서의 인지전 수행방식과 장기전 상황에서의 인지전 수행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북한이 단기 속결전을 목표로 남한을 침공할 경우, 자급자족 능력과 외화 조달이 제한된 북한은 러시아와 달리 장기전의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전쟁 초기의 조기 종결을 최우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⁷⁶⁾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 전체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핵심 후견국인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개전의 정당성과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선전·외교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은 방어 조치를 취했다'는 식의 내러티브를 사전에 확산시켜 후원국이 제재·군사개입을 차단하거나 묵인하도록 외교적 명분을 쌓으려 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사례처럼 외부의 위협을 조작하여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소규모 국지충돌을 선제공격으로 포장하거나 조작된 희생자·피해 이미지를 선전해 국민적 적개심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그 예다. 동시에 남한 내부의 분열 지점을 노려 이념·정치·사회경제적 불만을 자극하는 허위정보와 선동을 확산시키고, 사이버 공격·통신 교란·가짜 영상(딥페이크)·지도자 신변 이상설 등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악용해 부정적 해시태그와 감정적 단편 콘텐츠를 대량 노출시키는 방식은 빠른 시간 내에 여론을 교란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만약 단기 속결전에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러시아의 사례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결속과 인지적 기반을 흔드는 것에 더해 우리에게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식량, 핵 무력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강압하여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고자 했다. 북한 또한 한반도 전장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서방의 지원과 참전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기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방에 대한 고강도의 강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경우 식량·에너지 등을 무기화할 역량이 제한적이기에, 핵·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를 주변국으로까지 실제 투사할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한국과 그 지원세력 모두에 공포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인지전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북한은 과거 외국 전쟁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모방하며 자국의 군사전략과 전력구조를

76) 박지원, "제재 하의 러시아 경제 : 주요 성장요인의 분석과 향후 전망", KOTRA, 2024년 12월 22일; 김중호, "북한 경제 실태 평가 및 시사점",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23년 12월 13일.

신속하게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인 러-우 전쟁은 북한에 있어 그들의 전쟁수행 방식의 급격한 발전을 야기할 유용한 학습 교보재일 것이다. 동시에 중앙집권적인 북한의 권력 구조로 인해 최고지도부의 결심이 즉각적인 정책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그들이 배운 것 중 상당 부분을 체화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방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장에서 보인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방식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자, 이를 우리 군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명분인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학위논문 및 기관 보고서

- 강신욱, “인지전 개념과 한국 국방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139호 (2023년).
- 김상현, “인지전의 공격 양상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32권 제4호 (2022년).
-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국제질서 변화,” 『슬라브학보』제38권 제4호.
- 류동원·이국화, “새로운 전쟁터로서 마음: 인지전(Cognitive Warfare) 연구,” 『한국국가전략』, 제26호 (2024년).
- 김중호, “북한 경제 실태 평가 및 시사점”,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12월호, (2023년).
- 문용득·박동휘,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초기 전역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80호, (2022년).
- 박지원, “제재 하의 러시아 경제 : 주요 성장요인의 분석과 향후 전망”, KOTRA, (2024년).
- 서정순·김학민, “인지전(Cognitive Warfare) 연구,” 『전략연구』, 통권 93호 (2024년).
- 송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내러티브·플랫폼·세 모으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권 제3호 (2022년).
- 양욱, “결심체계를 뒤흔드는 인지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산리포트 9월호, (2025년).
- 윤용재, “한국군 사이버 심리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24년).
- 이정하,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재귀 통제(Reflexive Control)”, 『서양사연구』, 제66호 (2022년).
- 장용, “인지전(認知戰) 수행관점에서 본 한국군 정신전력 발전 방향 고찰”, 『정신전력연구』, 제75호 (2023년).
- 장찬규·김성우·최현규·유준성·모영진, 『우크라이나군의 인지전 연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연구 세미나(1차) 발표 자료, 『군사연구』 제475호 부록 (2022년).
- Arribas, Cristina M. et al. 2023.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historical revisionism: Russian disinformation and foreign interference through manipulated history-based narratives.” Open Research Europe, (July 27).
- Bugayova, Nataliya and Kateryna Stepanenko, “A Primer on Russian Cognitive Warfare”,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June 30, 2025.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Nuclear Signaling During the War

- in Ukraine”, CSIS, (n.d).
- Chaban, Natalia and Svitlana Zhabotynska, “Narratives of Ukraine on the Information Battlefields of Global Media”, *The War Against Ukraine and the EU*, (April 30, 2024).
- Charap, Samuel and Khrystyna Holynska, “Russia’s War Aims in Ukraine: Objective-Setting and the Kremlin’s Use of Force Abroad”, RAND Corporation, RR-A2061-6 (2024).
-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DRI), “Disinformation about Ukraine in Russian and pro-Russian Telegram channels,” DRI, December 30, 2022.
- Deppe, Christoph and Gary S. Schaal, *Cognitive warfare: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NATO ACT cognitive warfare exploratory concept* (Front. Big Data, 2024).
- EUVsDisinfo, “DISINFO: A 4-year-old child died in Donbas after Ukrainian army drone attack,” EUVsDisinfo, April 6, 2021.
- _____, “DISINFO: The West destroys global food security, not Russia”, EUVsDisinfo, February 25, 2024.
- _____, “DISINFO: Grain Deal was used to deliver weapons to Ukraine”, EUVsDisinfo, July 24, 2023.
- Fix, Liana, “On the Ukraine War, Germany Has a Leadership Problem. Here’s Wh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ctober 14, 2022.
- Gerasimov, Valery, “The Value of Science Is in the Foresight”, 『Military Review』, Vol. 96, No. 1, January-February 2016. (Originally published as “Ценность науки в предвидени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урьер, February 27, 2013).
- Human Rights Watch, “Education under Occupation: Forced Russification of the School System in Occupied Ukrainian Territories”, Human Rights Watch, June 20, 2024.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A Primer on Russian Cognitive Warfare”, ISW, 2023.
- Ipsos, “GLOBAL ATTITUDES TO THE WAR IN UKRAINE”, Ipsos, April, 2025.
- Kelley, Michael J., “Understanding Russian Disinformation and How the Joint Force Can Address It”, US Army War College Publications, May 29, 2024.

- Kuzmenko, Hlib, "Conceptualization of Russia's Strategic Narratives in the Full-Scale Russo-Ukrainian War", *Scientific Notes of the Institute of Journalism*, Vol. 86 (June 2025).
- Lautman, Olga, "We're Winning, Say Russia's Fake News Manufacturers",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October 16, 2024.
- Negron, Zacarias, "To Whom Much is Given: The Russian Orthodox Church's Role in the Russo-Ukrainian War", *Journal of Church and State*, August 16, 2024.
- Schemes, "Leaked Records Detail Vast Russian Influence Campaign Targeting Ukraine, EU", *RFE/RL*, September 17, 2024.
- Schneider Jr., William, "How Russian Coercion Diminished Deterrence and Shifted the Nuclear Balance," *Hudson Institute Policy Memo*, June 2025.
- Watling, Jack, Nick Reynolds, "Meatgrinder: Russian Tactics in the Second Year of Its Invasion of Ukraine", *RUSI*, May 19, 2023.
- Wilmington Trust Investment Advisors, "Russia's Pullout from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Is Likely to Increase Inflationary Pressures", *Wilmington Wire*, August 1, 2023.

정부 및 국제기구 문서

- 육군 교육사령부, 『미래 작전환경분석서』, 2022년.
- Bernal, Alonso et al,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NATO Innovation Hub*, March, 2021.
- Laffan, Brigid et al, "Joint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Defence Debate," *Oireachtas(Ireland)*, May 16, 2023.
- Putin, Vladimir and Pavel Zarubin, "Interview with Rossiya TV channel," *President of Russia*, November 13, 2021.
- U.S. Army Futures Command,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FORGING THE FUTURE IN AN UNCERTAIN WORLD 2035-2050", Apr 21, 2021.
- Zakharova, Maria, "Briefing by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Maria Zakharova, Moscow, March 26, 20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h 26, 2021.

_____, “Briefing by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Maria Zakharova, Moscow, December 15, 20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ember 15, 2021.

기사 및 기고문

강혜진, “러, 우크라 점령지서 기독교 박해 심각… 소련 시절 방불”, 크리스천투데이, 2024년 8월 20일.

고일환, “美국방, ‘재고 충분’ 보고 무시하고 우크라 무기 지원 중단”, 연합뉴스, 2025년 7월 6일.

김나영, “우크라 가서 전사하면 모든 죄가 씻길 것”, 조선일보, 2022년 9월 29일.

김보경, “푸틴, 휴전 대가로 우크라 동부 지역 영토 요구”, 조선일보, 2025년 8월 10일.

김상준, “우크라군 유족, 보상 못받아… 러 ‘딥페이크’ 정보전”, 매일경제, 2024년 2월 19일.

박민영, “[전문가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사이버전의 위력”, Future Korea, 2023년 3월 14일.

박병수, “러시아군 인명 손실 어땠길래…푸틴, 예비역 30만명 동원령”, 한겨레신문, 2022년 09월 21일.

위용성, “영부인이 파리서 슈퍼카 쇼핑?… ‘우크라 흔드는 러시아 딥페이크’”, 한국일보, 2024년 7월 3일.

정의길, “러시아, 미국 등 우려패로 우크라에 ‘세 방향’ 전면 공격 감행”, 한겨레신문, 2024년 7월 14일.

최원진, “푸틴 “유가 상한제 부과시 가스·석유 없다”...국제유가 상승”, 뉴스핌, 2022년 9월 7일.

Adams, Paul, “러시아, 우크라 돈바스에 ‘특별 군사 작전’ 개시”, BBC News Korea, February 24, 2022.

AFP, “Kremlin Slams U.S. ‘Hysteria’ Over Ukraine Conflict,” The Moscow Times, November 21, 2021.

Al Jazeera, “Russia demands Ukraine, ex-Soviet nations be barred from NATO,” Al Jazeera, December 17, 2021.

Bachega, Hugo, “Ukraine war: Kyiv intelligence chief says conflict has reached stalemate”, BBC News, December 29, 2022.

Bergengruen, Vera, “How Putin Is Losing at His Own Disinformation Game in Ukraine,” Time, February 26, 2022.

Falconer, Rebecca, “Russia’s key attack targets in Ukraine,” Axios, February 25,

2022.

Faulconbridge, Guy, “Putin says world faces food crisis due to West's sanctions”, Reuters, April 5, 2021.

Isachenkov, Vladimir, “Kremlin denies plans to invade Ukraine, alleges NATO threats,” AP News, April 25, 2023.

McCarthy, Simone et al, “Tearful scenes and protest as mobilization gets underway in Russia”, CNN, September 23, 2022.

Medvedev, Dmitry, “Почему бессмысленны контакты с нынешним украин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мерсантъ, October 11, 2021.

NPR, “What Ukraine war news looks like from Russia,” NPR, March 15, 2022.

Porterfield, Carlie, “Russian Defense Chief Claims—Without Evidence—That Ukraine Could Use ‘Dirty Bomb’”, Forbes, October 23, 2022.

Putin, Vladimir,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President of Russia, July 12, 2021.

RadioFreeEurope/RadioLiberty’s Russian Service, “Investigative Report Says Putin Made Decision To Invade Ukraine In March 202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April 24, 2023.

TASS, “Five-year-old killed in DPR in Ukrainian drone strike,” TASS, April 3, 2025.

Thomas, Merlyn, “Ukraine war: Putin orders partial mobilisation after facing setbacks”, BBC, September 22, 2022.

Trevelyan, Mark, “Putin says Russia could be fighting in Ukraine for a long time”, Reuters, December 8, 2022.

Trevelyan, Mark and Alexander Winning, “Russia states more limited war goal to ‘liberate’ Donbass”, Reuters, March 26, 2022.

Vedyashkin, Sergei, “Russia Shouldn’t Negotiate With ‘Vassal’ Ukraine, Ex-President Medvedev Says,” The Moscow Times, October 11, 2021.

Сидоренко, Сергій, “Макрон з переворотом: як лідер Франції спробував сподобатися Путіну, але не зрадити Україну,” 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 February 9, 2022.

Перепадя, Олена, “Українська армія відкидає застосування зброї проти цивільних на Донбасі — ЗМІ,” DW, April 4, 2021.

A Study on Russia's Conduct of Cognitive Warfare in the Russia-Ukraine War: With Emphasis on the Process of Changes in Cognitive Warfare by Perio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unjae Heo & Taekyung Kim & Minsu Kang & Wonjong Han & Inseung Kim

Keywords

Russo-Ukrainian War, Russia, Cognitive Warfare, Narrative, North Korea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hronological analysis of Russia's adjustments of its cognitive warfare tactics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war situation and objectives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Based on this analysis, it also aims to derive lessons learned for South Korean national defense. To this end, based on a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cognitive warfare, this study defines Russia's cognitive warfare operations as those mobilizing non-physical means to control not only the enemy's but also its own citizens' cognitive system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Russia's cognitive warfare efforts began even before the start of the Russia-Ukraine war, this study tracks the evolution of Russia's cognitive warfare methods across four distinct phases from March 2021 to the present. Specifically, it examines how Russia adjusted its cognitive warfare objectives and method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war situation and international supports for Ukraine, utilizing statements by high-ranking officials like Vladimir Putin and official documents.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Russia underwent significant shifts in its cognitive warfare objectives and methods around March 2022, coinciding with the transition in its strategic goals following the failure of its short-term decisive battle strategy.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briefly outlines the possible patterns of cognitive warfare that North Korea could conduct in each phase of a similar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논문투고일: 2025. 9. 28.]

[심사의뢰일: 2025. 11. 13.]

[계재확정일: 2025. 12. 17.]

이스라엘은 왜 공격적인가?

- 전략문화 관점의 분석 -

백자성*

- I. 서론
- II. 분석의 틀: 전략문화
- III. 이스라엘의 전략문화 속성
- IV. 전략문화가 공세적 전략에 미친 영향
- V. 결론

요약

기존 연구들이 주로 현실주의적 접근에 의존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전략문화 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이스라엘의 공세적 전략 행태를 검토하였다. 특히 전략문화의 내부 변수를 세분화하여 위협인식, 접근방식, 정책선호를 독립변수로, 정체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전략문화가 전략적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스라엘의 공세적 전략은 단순한 위협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기억, 사회적 규범으로 구조화된 전략문화의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됨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체성은 다른 변수들의 작동을 조건화하며 공세적 전략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문화가 단기적 사건 해석을 넘어 국가 전략의 지속적 패턴을 설명하는 유효한 분석틀임을 보여주며, 공세와 억제 경계가 전략문화적 인식 속에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략문화 접근법이 국가안보정책 분석에서 독립적이고 유효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중동지역 안보 불안정성과 갈등 지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 이스라엘, 전략문화, 공세적 전략, 정체성, 위협인식, 안보정책

* 안보경영연구원(SMI) 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겸임교수(안보학). 깊은 해안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준 익명의 세 분 심사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I. 서론

이스라엘은 2023년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내 이란 지원 세력,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 자체를 겨냥한 공세적 행보를 이어왔다. 이러한 전략적 확장은 단기적으로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국제사회의 비판을 동반한 외교적 부담 또한 증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전략적 행보를 보이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략적 행보를 설명해 온 기존 연구들은 Inbar, Ben-Eliezer, Bar-Tal과 Jacobson 등의 분석을 중심으로 현실주의적 위협 구조, 사회심리적 위협인식, 혹은 특정 시기·정권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주목해 왔다.¹⁾ 이러한 접근들은 단기적 위기 대응이나 특정 국면의 행동 패턴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10·7 이후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전장에서 매우 유사하게 반복되는(remarkably similar) 공세적 선택(선제, 응징, 확산 억제)의 결합을 반복적으로 취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 전략의 특징인 공세적 일관성(aggressive consistency)은 단일 전장이나 단기적 상황 논리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차원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명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문화 접근을 도입한다. 전략문화는 이스라엘이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전략적 방식과 정책선호를 장기간 반복해 왔는지를 구조화하는 분석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존 이론이 포착하지 못한 선택의 지속성과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전략문화라는 개념을 적용한 일부 연구가 존재하긴 한다. 예컨대 Horowitz와 Luttwak은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을 설명하면서 전략문화적 특징—즉, 외교보다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²⁾ 그러나 이 역시 문화적 속성을 단편적으로 서술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독립적 분석틀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전략문화적 접근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세적 행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1) 이러한 연구로는 Inbar, Efraim. *Israel's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since the Yom Kippur War* (London: Routledge, 2007); Ben-Eliezer, Uri. “A nation-in-arms: State, nation, and militarism in Israel's first year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37, No. 4 (1995), p. 264-285; Bar-Tal, Daniel & Jacobson, Dan. (1998).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ecurity.” *Applied Psychology* Vol. 47, No. 1 (1998), pp. 59-71 등이 있음.

2) Horowitz, Dan & Luttwak, Edward N. *The Israeli Army* (New York: Harper & Row, 1975).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전략문화라는 틀을 통해 이스라엘이 왜 공세적 전략 행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문화를 분석틀로 활용한 기존 연구들이 포괄적·서술적 차원에 머물렀던 전략문화의 논의를 넘어, 본 연구는 새로운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틀로 활용함으로써 전략문화가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스라엘의 최근 공세적 전략행보를 전략문화라는 분석틀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이다. 둘째, 추상적 개념에 머물던 전략문화를 구체적 변수로 정립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현실주의적 접근이나 국내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고, 전략문화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다. 또한 분석대상은 이스라엘이 보여준 공세적 전략 행보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쟁의 경과 중 공세적 성격이 두드러진 주요 국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전략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독립변수로 직접 설정하기보다, 그 내부 변수를 중심으로 구체적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전략문화 자체가 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위협인식·접근방식·정책선호·정체성이라는 세부 변수들이 전략적 선택과 행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선택은 전략문화의 총체성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한계가 있지만, 대신 실증적 분석의 구체성과 설명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문화 일반이 지니는 예측 가능성이나 장기적 변동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전략문화의 개념과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제3장은 이 틀을 토대로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속성을 주요 변수별로 추론한다. 제4장은 이스라엘의 공세적 전략적 행보를 전쟁의 국면별로 검토하며, 이를 전략문화와 연결지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학문적 의의와 함의를 제시한다.

II. 분석의 틀: 전략문화

1. 전략문화의 개념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는 국가가 안보와 군사전략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경험, 사회적 가치, 정치 제도, 지리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비교적 안정적인 사고·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크기나 국제체제의 압력 같은 물질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국가별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설명변수이다.

Snyder는 전략문화를 “핵전략에 대한 엘리트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규범적 가치와 인지적 패턴”으로 정의하며 이론적 출발점을 제시하였다.³⁾ Gray는 전략문화를 특정 국가의 전략이 역사적 기억, 제도적 경험, 정치적 규범에 따라 구조화된 결과로 이해하였다.⁴⁾ Johnston은 전략문화를 “인지적 필터(cognitive filter)”로 설명하면서, 동일한 구조적 조건에서도 국가마다 다른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제시하였다.⁵⁾

전략문화 접근을 채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적 선택은 단기적 군사·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역사적 경험, 정체성 서사, 사회적 규범이 축적하면서 형성된 장기적 패턴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 위협을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 방어선을 외부로 확장하는 전략적 사고, 공세적 억지와 신속한 응징을 선호하는 행위 양식 등은 반복적 경험 속에서 제도화되며 일관된 전략적 태세를 형성한다. 이러한 패턴은 개별 사건이나 특정 시기의 상황 논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전략문화라는 개념적 틀을 적용함으로써 그 지속성과 구조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문화 접근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전략적 행태를 해석하고자 한다.

2. 전략문화 이론에 관한 쟁점

전략문화가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독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학문적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현실주의는 국가 전략을 국제체제의 구조와 힘의 배분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산물로 이해하는 반면, 전략문화 접근은 동일한 구조적 환경 속에서도 국가별로 상이한 전략적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에 주목한다.⁶⁾ 이러한 관점은 전략적 선택이 단순

3) Snyder, Jack.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nuclear options* (R-2154-AF)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1997), pp. 8-9.

4) Gray, Colin S. “National styles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2 (1981), pp. 21-22.

5) Johnston, Alastair I.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 33-36.

6) Snyder(1977), pp. 8-10; Gray(1981), pp. 21-23.

한 물질적 제약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인식의 틀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략문화 연구는 종종 이미 관찰된 전략적 결과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설명에 머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⁷⁾ 이로 인해 전략문화가 독자적인 설명력을 지닌 이론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전략문화 연구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비판은 전략문화를 단일하고 포괄적인 문화 개념으로 다루는 접근의 한계와도 직결된다. 전략문화가 지나치게 총체적 개념으로 설정될 경우, 무엇이 어떻게 전략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전략문화는 설명 변수라기보다 해석적 배경으로 기능하게 되며, 전략 선택의 구체적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전략문화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 선택을 형성하는 구성요인과 그 작동 경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문화를 고정된 전통이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작동하는 분석의 틀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방법론적 논쟁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략문화 연구는 역사적 경험, 제도, 담론 분석 등 질적 접근에 주로 의존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전략적 행태가 형성되는 맥락을 조명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으나, 동시에 주관성과 검증 가능성의 한계를 노출해 왔다.⁸⁾ 이에 따라 설문조사, 정책문서 텍스트 분석, 계량적 비교 등 정량적 방법론을 도입하거나 질적·정량적 혼합 접근을 통해 설명력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어 왔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 논쟁의 핵심은 분석 기법의 선택 그 자체라기보다는, 전략문화가 실제 전략적 선택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이 지점에서 전략문화 변수 설정 문제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전략문화는 역사적 경험, 제도, 사회적 가치, 담론, 지정학적 조건 등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분석 가능한 구성요인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다.¹⁰⁾ 기존 연구들은 물리적 변수, 정치적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를 구분하거나, 위협 인식과 전략 교리, 군사조직의 역할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해 왔다.¹¹⁾ 또한 전략문화가 국가 내부의 하위 집단

7) Johnston(1995), pp. 34-38.

8) Johnston(1995), pp. 34-38.

9) Johnston(1995), pp. 38-42.

10) Johnston(1995), pp. 40-44.

11) Gray(1981), pp. 22-25; Booth(1979), pp. 15-35; Johnston(1995), 40-45.

이나 제도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¹²⁾ 그러나 변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분석의 엄밀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협소하게 설정될 경우 전략문화가 작동하는 맥락과 복합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전략문화의 변화 가능성과 분석 수준에 관한 논쟁은 이러한 변수 논의를 둘러싼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다. 초기 연구는 전략문화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으나, 이후 연구들은 제도 변화, 사회적 학습, 외부 충격에 따라 전략문화가 재구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¹³⁾ 또한 전략문화는 국가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군사조직이나 정치 엘리트, 사회 집단 등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¹⁴⁾ 이러한 논의는 전략문화가 고정된 전통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구성적인 성격을 지닌 분석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전략문화가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분석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차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략문화가 전략적 판단과 행동을 형성·제약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틀로서 전략적 선택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성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략문화의 과도한 포괄성을 줄이는 동시에 실증적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설계로 이어지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문화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틀과 구성요인은 다음 절에서 제시된다.

3. 전략문화 변수의 설정

가. 전략문화 변수 설정의 필요성

전략문화는 국가의 전략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개념이지만, 그 설명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떤 경로로 전략적 선택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전략문화가 지나치게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될 경우, 단순히 “문화적 요인이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에 머물러 구체적 분석과 실증적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 절에서 검토한 전략문화 이론의 주요 쟁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다.

12) Lantis, Jeffrey S. “Strategic Culture: From Clausewitz to Constructivism.” *Strategic Insights* Vol. 4 No. 10 (2005), pp. 4-6; Meyer(2005), pp. 530-534.

13) Booth, Ken. *Strategy and ethnocentrism* (London: Croom Helm, 1979), pp.13-30; Johnston(1995), pp. 38-41; Meyer, Christoph O. “Convergence towards a European strategic culture? A constructivist framework for explaining changing norm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1, No. 4 (2005), pp. 528-533.

14) Lantis(2005), p. 4.

따라서 전략문화 연구를 실증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상적 배경 요인으로 남겨두기보다는 분해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변수로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¹⁵⁾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전략문화 자체를 독립변수로 전제하기보다는 그 내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즉, 전략문화라는 총체적 개념이 아니라 그 세부 차원—위협인식, 접근방식, 정책선호, 정체성—을 독립적·조절적 변수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와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략적 행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략문화 변수 설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전략문화 개념이 갖는 추상성과 포괄성을 줄여 이론적·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전략적 행동을 설명하는 구체적 경로를 밝힘으로써 전략문화 연구의 설명력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¹⁶⁾ 본 연구 역시 이스라엘의 최근 전략적 행보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변수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전략문화 변수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문화와 전략적 행동을 실제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전략문화가 작동하는 경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전략문화 연구에서 정체성, 위협 인식, 접근 방식, 정책 선호는 서로 고립된 요소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 형성되는 인지적·담론적 과정의 서로 다른 층위를 설명하는 범주들이다. 이러한 구분은 전략문화의 구성 요소를 조밀하게 분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략문화가 어떻게 전략적 행동으로 수렴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상의 도구이며, 본 연구의 변수 체계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정되었다.

나. 변수 체계의 구성 원리

본 연구에서는 전략문화와 관련해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접근방식(approach),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를 독립변수로, 정체성(identity)을 조절변수로 구분한다. 독립변수는 전략문화가 전략적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조절변수는 이들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조건적 요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분은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정체성(조절) → 위협인식·접근방식·정책선호(독립) → 전략적 행보”라는 구조 속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전략문화의 상위적 토대임과 동시에 다른 변수들의 작동을 조건화하는 맥락을 제공한다.

15) Johnston(1995), pp. 40-44.

16) Johnston(1995), pp. 42-45.

다. 조절변수: 정체성

정체성은 전략문화의 형성과 작동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다. 특정 국가가 자신을 누구로 정의하고, 주변 세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지가 전략적 선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¹⁷⁾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 첫째, 역사적 경험이다. 과거 전쟁, 식민 경험, 민족적 투쟁 등은 국가의 집단 기억을 형성하고 전략적 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민족적·종교적 서사이다. 민족주의, 종교적 신념,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전략문화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강화한다. 셋째, 국가 정통성의 서사이다. 건국 과정과 체제 정당화 논리는 국가의 안보 목표와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구조화한다.

정체성은 단지 상징적·이념적 요소에 머무르지 않고, 위협을 어떻게 인식할지, 어떤 접근을 취할지, 어떠한 정책을 선호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위 변수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 민족주의와 홀로코스트 경험은 “안보의 절대성”이라는 전략문화의 핵심 요소를 규정하며, 이는 모든 전략적 선택의 근간이 된다.

라. 독립변수

(1)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위협인식은 전략문화가 전략적 행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동일한 안보 환경에서도 각 국가는 위협을 다르게 인식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상대방의 군사적 증강을 방어적 조치로 보지만, 다른 국가는 공격적 의도로 간주한다.¹⁸⁾ 위협인식은 단순한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역사적 경험, 정치적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위협인식은 전략문화가 현실을 해석하는 인지적 필터로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전략적 행보의 출발점이 된다.

(2) 접근방식(approach)

접근방식은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략문화의 구체적 표현이다. 일부 국가는 선제공격과 군사적 응전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외교적 협상, 다자주의적 틀,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을 중시한다.¹⁹⁾ 접근방식은 크게 군사 중심 접근과 비군사 중심 접근으로

17) Johnston(1995), pp. 35-40.

18) Snyder(1977), pp. 8-10.

19) Gray(1981), pp. 27-32.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억지, 선제공격, 군사력 확대 등의 형태를 띠며, 후자는 협상, 신뢰 구축, 제도화된 규범 활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당면한 상황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전략문화에 내재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학습에 의해 구조화된다.

(3)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

정책선호는 전략문화가 구체적 정책 결정으로 나타나는 최종 단계이다. 군사력 증강, 핵 억지 전략, 동맹 강화, 혹은 자주적 방위 정책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정책선호는 위협인식과 접근방식의 영향을 일부 받기도 하지만, 경로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변수로 기능한다. 또한, 정체성이 제공하는 장기적 방향성에 의해 뒷받침된다.²⁰⁾

예를 들어, 특정 국가는 “존속과 생존”을 국가정체성의 핵심으로 규정할 경우, 군사적 우위 확보와 선제공격 교리를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다자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국제협력과 규범 기반 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마. 변수 간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략문화 변수 체계는 조절변수로서 정체성, 그리고 독립변수로서 위협인식, 접근방식, 정책선호로 구성된다. 이때 정체성은 국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한다고 인식하는지를 규정하는 상위적 토대이다. 그러나 정체성은 나머지 변수들을 단선적으로 결정짓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이들이 작동하는 인지적·담론적 맥락을 형성하는 조건 변수로 이해되어야 한다.

독립변수인 위협인식·접근방식·정책선호는 각각 고유한 설명력을 지니며 전략적 행보를 분석하는 데 병렬적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위협인식은 전략문화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직접적 지표이며, 접근방식은 위협 대응의 전략적 경향을 드러낸다. 정책선호는 특정 시기와 상황에서 제도화된 전략적 선택을 나타낸다. 이 세 변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전략적 선택의 방향을 구조화한다. 위협인식은 접근방식과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복된 전략적 선택이 다시 위협을 재구성하는 순환적 관계 또한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역동성은 전략문화가 단순한 배경 요인이 아니라 전략적 행동의 형성과 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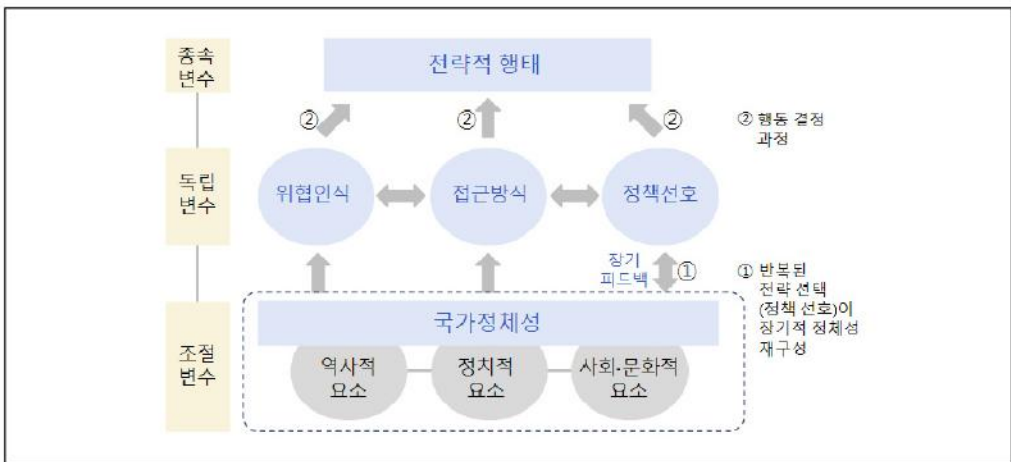
한편, 전략적 선택은 반복적 실행을 통해 경험과 규범을 축적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체성 서사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기적 피드백은 전략문화가 단기적 전략 계산만을 규

20) Lantis, Jeffrey S. "Strategic culture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 No. 3 (2002), pp. 105-107; Meyer(2005), pp. 531-534.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 전체를 재형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정체성은 세 독립변수의 작동 맥락을 제공하며, 위협인식·접근방식·정책선택은 각각 독립된 설명력을 가지면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행보는 이러한 변수들의 교차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분석틀은 전략문화가 국가전략을 형성·제약하는 구체적 경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략문화 연구가 단순한 결과론적 해석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설정한 전략문화 변수와 전략적 선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도식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략문화 변수와 작용 메커니즘



III. 이스라엘의 전략문화 속성

1. 개요

21세기 국제안보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전략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인접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공세적 군사행동,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단행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등은 단순히 외부 위협 환경이나 군사력 균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전략적 행태의 배경에는 역사적 경험과 집단기

역, 사회적 정체성, 문화적 규범이 축적되면서 형성된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¹⁾

전략문화 접근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단기적 위협이나 물질적 조건의 반응으로만 보지 않고, 역사적 서사, 정체성, 규범, 제도적 학습이 상호작용하며 구성하는 구조적 산물로 이해한다.²²⁾ 이스라엘의 경우 홀로코스트의 기억, 건국 초기의 생존 압박(survival pressure), 유대 민족주의(Zionism)와 디아스포라 경험, 예외성(exceptionalism)과 포위감(siege mentality)과 같은 정체성적 요소들이 전략적 판단과 행동 양식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다.²³⁾

본 장은 제2장에서 정립한 전략문화의 네 가지 변수—정체성(identity),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접근방식(approach),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스라엘 전략문화가 어떠한 구조적 속성을 지니며 어떻게 전략적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한다. 각 변수는 별도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구조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략적 성향이 단순한 군사·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인지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결과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전략문화는 유대 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집단기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디아스포라(diaspora)는 ‘흩어진 민족’이라는 자기인식을 형성하였고, 이는 시온주의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²⁴⁾ 특히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집단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 사건으로 자리 잡으며 “멸망의 위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도화하였다.²⁵⁾ 건국 이후의 연속된 전쟁 경험과 결합된 이러한 역사적 기억은 이

21) Siniver, Asaf. "Israeli identities and the politics of threat: A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Ethnopolitics* Vol. 11, No. 1 (2011), pp. 24-27; Kopeć, Rafał. "The determinants of the Israeli strategic culture." *Review of Nationalities* Vol. 6, No. 1 (2016), pp. 136-138; Pinfold, Rob Geist, Jones, Clive & Ehteshami, Anoushiravan. "Collision course: How Iran and Israel brought the Middle East to the brink." *Global Policy*, Vol. 16, No. 3 (2025), pp. 701-704.

22) Kopeć, Rafał. (2016), pp. 137-139; Nursin Ateşoğlu Güney Akgül. "Shadows in disguise: The evolution of Mista'arvim units in Israel's strategic culture." *Uluslararası Kriz ve Siyaset Araştırmaları Dergisi* Vol. 9, No. 1 (2025), pp. 111-113.

23) Siniver(2011), pp. 28-31.

24) Giles, Gregory F. *Continuity and Change in Israel's Strategic Culture*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Office, 2006), pp. 2-3.

25) Bar-Tal, Danie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스라엘을 '생존 국가(survival state)'로 규정하는 인식들을 강화하였고, 예방전쟁 교리와 군사력 우위 전략을 정당화하는 토대로 기능하였다.²⁶⁾

정체성 형성의 또 다른 축은 시온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체성이다. 시온주의는 민족적 귀환운동을 넘어 국가 건설의 정당성과 "약속의 땅"이라는 종교·정치적 서사를 결합하며 정치적 자기서사를 구성하였다.²⁷⁾ 동시에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제도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²⁸⁾ 그러나 지속적 위협 환경 속에서 안보 우선주의(security first)가 강화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안보적 요구가 충돌하는 이중성이 정치적 정체성에 심층적 긴장을 남겼다.²⁹⁾ 이 모순적 구조는 전략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스라엘 사회의 정체성 역시 전략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군인(citizen-soldier) 모델로 대표되는 징병제는 국가 방위를 '국민적 의무'로 각인시켰으며, 군복무 경험은 세대 간 공유되는 집단기억을 형성하였다.³⁰⁾ 한편, 유대인-아랍인 갈등, 세속주의-종교주의의 긴장, 다양한 이민 집단의 공존 등은 사회적 정체성에 균열을 낳았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전략문화에 '통합과 분열'이라는 양면적 구조를 부여하며, 안보 인식과 국가 충성심의 차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³¹⁾

문화적 정체성은 언어·전통·국가 의례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히브리어의 부흥은 단순한 언어 복원이 아니라 민족적 단일성과 자부심을 결속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였다.³²⁾ 또한, 홀로코스트 추모일(Yom HaShoah)과 독립기념일(Yom Ha'atzmaut)과 같은 국가 의례는 피해자-생존자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며 집단적 자의식을 강화하였다.³³⁾ 이러한 정체

Scientist Vol. 50, No. 11 (2007), pp. 1438-1440.

26) Kopeć(2016), pp. 139-142.

27) Smith, Charles D. *Palestine and the Arab-Israeli conflict: A history with documents* (7th ed.) (Boston: Bedford/St. Martin's, 2010), pp. 48-55.

28) Inbar(2007), pp. 10-20.

29) Peled, Yoav. "Ethnic Democracy and the Legal Construction of Citizenship: Arab Citizens of the Jewish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2 (1992), pp. 436-439.

30) Ben-Eliezer, Uri. *Militarism and Israeli Socie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pp. 40-50.

31) Rosman, Elisheva. "Can Military Service Bridge Social Schisms: The Case of Israel." *Israel Affairs* Vol. 26, No. 3 (2020), pp. 4-6: 10-12.

32) Safran, William. "Language and Nation-Building in Israel: Hebrew and its Rivals." *Nations and Nationalism* Vol. 11, No. 1 (2005), pp. 44-46: 50-52: 58-59.

33) Klar, Yechiel, Schori-Eyal, Noa & Klar, Yossi. "The 'Never Again' State of Israel: The Emergence of the Holocaust as a Core Feature of Israeli Identity and Its Four Incongruent Voic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9, No. 1 (2013), pp. 127-128; Edut, Dorit. *The Development of Yom*

성 서사는 국제사회에서도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안보우선주의를 정서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전략문화의 기반을 한층 더 심화시킨다.³⁴⁾

3. 위협인식

이스라엘의 위협인식은 외부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경험과 집단기억을 매개로 구성된다. 즉, 위협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정체성과 서사를 통해 해석되는 의미 구조이며, 이러한 해석 과정이 전략문화의 방향을 규정한다.³⁵⁾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기술·사이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위협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긴밀히 결합하여 이해되며, 이는 이 국가의 전략문화가 ‘정체성-위협의 교차구조’ 위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위협인식에서 군사·안보 영역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홀로코스트의 경험은 “다시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생존 서사를 제도화하였고,³⁶⁾ 이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합리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존속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으며,³⁷⁾ 예방전쟁과 선제공격 교리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군사력은 정체성 수호의 상징이자 존재론적 보루로 기능하며, 위협 인식의 가장 깊은 층을 형성하였다.

정치·외교적 위협 역시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유대 민족국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문제와 직결된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논의, 유엔의 비판적 결의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 등은 단순한 외교적 압력이 아니라 국가 정통성과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³⁸⁾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적 고립 가능성은 전략문화 속에서 ‘항구적 고립’이라는 담론을 강화하며,³⁹⁾ 정체성과 외교적 위협이 교차하는 대표적 사례로 작용한다.

Ha'Atzmaut As A Religious Observance in Israel and in the USA, 1948-2005 (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 2006), p. 4.

34) Bar-Tal(2007), pp. 1438-1441.

35) Kopeć(2016), pp. 137-139

36) Inbar(2007), pp. 6-10.

37) Horowitz & Luttwak(1975), pp. 10-25; 100-120.

38) Fleischman, Luis. "The Legitimacy of Israel: A Sociological Perspective." *FIU Law Review* Vol. 19, No 3 (2025), pp. 642-647; 657-659.

경제·자원 영역에서의 위협 인식 또한 생존 서사와 연결된다. 건국 초기 자급적 공동체에서 안보 중심의 군산복합체로 전환된 이스라엘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1973년 석유 급수 조치나 국제적 보이콧 등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생존 기반의 붕괴로 받아들여졌다.⁴⁰⁾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한 자본 유입은 회복력을 제공했지만, 외부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양면성을 지니며, 경제적 위협을 정치·외교적 압력과 연계된 구조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경제적 위협 인식이 안보적 의미로 재해석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사회·문화·종교적 차원에서 위협 인식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이민 집단과 종교적·정치적 분열은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며, 외부 공격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사회 내부의 균열을 촉발하는 문화적 위협으로 해석된다.⁴¹⁾ 유대교적 정체성과 세속주의적 정체성 간의 갈등, 유대인과 아랍인 간 긴장은 안보 문제와 직결되며, 민주주의 가치와 민족적 특수성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사회 내부의 분열 가능성은 전략문화 속에서 복합적 위협으로 자리 잡는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이버 위협은 21세기 전략문화에서 새로운 층위를 형성하였다. 유닛 8200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기술·사이버 역량은 국가적 자부심이자 정체성의 일부로 기능하지만,⁴²⁾ 동시에 적대 행위자들의 사이버공격, 정보전, 심리전이 확대되면서 ‘기술 우위의 상실=존재론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는 군사·정치·사회 영역의 경계를 허물며, 신안보 영역이 전략문화의 중심으로 편입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접근방식

이스라엘의 전략적 접근방식은 단순한 대응적 산물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의 틀을 통해 구성되어 왔다. 위협 인식이 전략 선택의 전제를 제공한다면, 정체성은 그 선택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는지를 규정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정체성이 전략적 방법론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이스라엘 안보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스라엘 전략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접근은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전쟁

39) Fleischman(2025), pp. 642-647; 653-659.

40) Martin, Lenore G. *Assessing the Impact of U.S.-Israeli Relations on the Arab World*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3), pp. 20-30.

41) Ben-Eliezer(2008), pp. 120-150.

42) Singer, P. W. & Friedman, Allan. *Cybersecurity and cyberwar: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75-180.

(preventive war)이다. 이는 “다시는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생존 담론에서 형성된 정체성적 기반에 의해 정당화되었으며, 1967년 6일 전쟁의 공군 선제타격과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은 이러한 정체성이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다. 이와 같은 선제적 접근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생존을 확보하려는 전략문화의 핵심적 습속으로 자리 잡았다.⁴³⁾

전쟁을 외부로 이동시키려는 경향 역시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중요한 요소다. 좁은 국토와 적대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리적·심리적 인식은 전쟁을 자국 영토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적 선호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외부화(outward projection)’ 전략은 공세적 억지와 결합하여, 가능한 한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존속을 보전하려는 접근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⁴⁴⁾

또한 이스라엘은 양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질적 군사우위(qualitative military edge, QME)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첨단 무기체계, 정밀타격 능력, 정보우위 확보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략문화적 차원의 선택이었으며, “질적 우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러한 방향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QME는 국가 정체성에 기초한 전략적 필연성으로 자리매김했다.⁴⁵⁾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동원체제는 사회·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개척자 국가(pioneering nation) 서사와 국민군(people’s army) 전통은 예비군 중심의 동원체제를 정체성적 구조로 고착시켰으며, 이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과 사회를 긴밀히 결합시키는 조직적 접근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군-사회 통합적 동원체제는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 유지되고 있다.⁴⁶⁾

5. 정책선호

이스라엘의 전략문화는 정체성과 위협인식이라는 심층적 구조 위에서 구체적인 정책 선호로 귀결된다. 앞선 절에서 살펴본 위협인식이 국가적 불안을 구조화하고, 정체성이 그러한

43) Ben-Eliezer(2008), pp. 160-180; Inbar(2007), pp. 15-25; 80-85.

44) Handel, Martin I. “The Yom Kippur War and the inevitability of surpris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1, No. 3 (1977), pp. 463-467; 480-485; Kopeć(2016), pp. 138-139.

45) Inbar(2007), pp. 60-70.

46) Bar-Tal(2007), 1438-1442; Kober, Avi. “The Israel Defense Forces in the Second Lebanon War: Why the poor performance?” *Middle East Journal*, Vol. 62, No. 3 (2008), pp. 29-30.

불안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면, 본 절은 이 두 요소가 실제 정책 영역에서 어떠한 선호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선호는 외교, 군사, 안보, 사회·경제 영역에서 드러나며, 각 영역은 생존, 도덕적 정당성, 공동체 연대라는 정체성 요소와 긴밀하게 연동된다.

외교 영역에서 이스라엘은 고립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강력한 동맹 확보를 일관되게 선호해 왔다. 홀로코스트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의 정체성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⁴⁷⁾ 민주주의와 유대적 가치에 기초한 국가정체성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외교적 노선으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문제 역시 실질적 안보를 확보하면서 국제적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균형적 접근을 통해 다루어져 왔다.⁴⁸⁾ 이처럼 외교정책 선호는 정체성적 요구와 전략적 필요가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군사정책 선호에서는 선제적·억지 중심의 군사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속적 위협 환경은 군사 대비 태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도록 만들었고, 생존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정체성은 예비군 중심의 동원체제와 첨단 기술 우위 전략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군사적 효율성만으로 설명되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존속은 군사적 대비에 달려 있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신념에서 비롯된 선호로 이해할 수 있다.⁴⁹⁾

안보정책 영역에서도 생존담론은 정책 방향을 강하게 규정한다. 반복된 전쟁과 인티파다 경험은 대테러 정책의 무관용 원칙을 강화시켰으며, 테러 위협을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은 강경한 보안조치, 표적 살해, 첨단 감시·통제체계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했다.⁵⁰⁾ 이러한 안보정책 선호는 단순한 위협 대응을 넘어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생존 프로젝트의 일부로 기능한다.⁵¹⁾

마지막으로 사회·경제 영역에서도 정체성 기반의 선호가 확인된다. 집단적 연대의 정체성은 키부츠와 모샤브와 같은 공동체 중심 정책을 형성하였고, 오늘날에는 첨단 방산산업과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⁵²⁾ 이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라, 약소국으로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

47) Inbar(2007), pp. 8-15; 95-110.

48) Horowitz & Luttwak(1975), pp. 230-250.

49) Bar-Tal, Daniel. “Societal Beliefs in Times of Intractable Conflict: The Israeli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9, No. 1 (1998), pp. 33-36; 38-42.

50) Pedahzur, Ami. *The Israeli response to Jewish extremism and violence: Defending democrac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2), pp. 75-76.

51) Gazit, Shlomo. *Trapped Fools: Thirty Years of Israeli Policy in the Territories* (London: Frank Cass, 2003), pp. 330-331.

52) Breznitz, Dan. *Innovation and the state: Political choice and strategies for growth in Israel, Taiwan, and Irelan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 49-50.

한 전략적 선호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정책 선호는 공동체적 정체성과 생존지향적 전략문화가 결합된 결과이다.

6. 소결론

본 장에서는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구조를 규정하는 네 가지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정체성과 그 영향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정체성(identity)은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심층적 기반으로, 예외성(exceptionalism), 포위 심리(siege mentality), 생존 서사와 같은 집단적 자의식을 통해 전략적 선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체성적 토대는 군사적 자조와 공세적 태도를 선호하는 전략적 기조를 형성해 왔다.⁵³⁾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은 정체성에 의해 해석되는 구조적 변수로, 실존적 위협과 지역 안보 환경을 지속적으로 의미화하며 전략적 대응의 동기를 규정한다. 군사·정치·사회·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위협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서사와 제도적 실천을 통해 재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독특한 위기 감수성이 형성된다.⁵⁴⁾

접근방식(approach)은 이러한 정체성과 위협인식이 구체적 전략 방법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제공격, 전쟁의 외부화, 질적 군사우위(QME), 군-사회 통합 동원체제와 같은 전략적 접근은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 선택해 온 구조적 습속이며, 이는 전략문화가 행동 양식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⁵⁵⁾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는 전략문화의 외연적 표현으로, 외교·군사·안보·사회경제 영역에서 일관된 선택 경향으로 나타난다. 강력한 동맹 의존, 선제적 군사 행동, 무관용 대테러정책, 경제-안보 결합 전략은 정체성과 위협 해석이 정책적 수준에서 구체화된 결과이며, 대중 담론과 제도적 환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강화된다.⁵⁶⁾

53) Siniver(2011), pp. 25-26; 31-32.

54)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해당한다: Akgül, Nursin Ateşoğlu Güney. (2025): Matan Bodas, Dror Goldblatt & Kobi Peleg. "Perception of the Threat of War in Israel-Implications for Future Resilience-Promoting Policies." *Israel Journal of Health Policy Research* Vol. 4, No. 1 (2015); Meridor, Dan & Eldadi, Ron. *Israel's national security doctrine: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ormu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doctrine (Meridor Committee), ten years later (Memorandum No. 187)* (Tel Avi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19).

55) Arad, Shimon. *Israel's National Security Concept: Functional Incoherence* (Tel Avi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24), pp. 12-13; 37-38.

56) 다음의 연구는 YouTube 댓글 25만여 개를 AI로 분류하여 친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반이스라엘·반팔레스타인 서사가 어떻게 형성·확산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López, Victor Manuel Hernández & Cuellar, Jaime

이처럼 정체성, 위협인식, 접근방식, 정책선호는 상호 연계된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전략 문화의 핵심적 장치를 이룬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실제 전략적 행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전략문화가 이스라엘의 공세적 행동을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형성·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IV. 전략문화가 공세적 전략에 미친 영향

1. 개요

본 장은 앞서 제2장에서 정립한 분석의 틀과 제3장에서 규명한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마스와 분쟁 이후 나타난 이스라엘의 일련의 공격적 행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 공세에 머무르지 않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다양한 전선을 대상으로 군사적 행동을 확장하였다. 동시에 자국 영토에 가해진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격적 행보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전쟁 수행 경과는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독특한 속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본 장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하마스 사태 이후 전개된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적 행동을 전선별로 정리한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를 둘러싼 공세적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이 단일 국면을 넘어 다층적·확장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제3절에서는 이러한 전쟁 수행 경과가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어떠한 속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체성, 위협인식, 접근방식, 정책선호라는 네 가지 변수 차원에서 공격적 전략의 근원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 소결론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적 전략 행보가 전략문화적 토대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 2023년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적 전략 행보

본 절에서는 2023년 10월 개전 이후 이스라엘이 전개한 전쟁 양상을 공세적 행동 중심으

E. "Mapping controvers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 analysis of the Hamas-Israel conflict on YouTube." *AI & Society Studies* (2024).

로 재구성한다. 초기에는 하마스의 기습에 대한 응전이 주된 양상이었으나, 2024년 이후 이스라엘은 점차 전방위적·선제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여기서는 2024년 이후 주요 전선을 중심으로 한 공세적 국면을 검토한다. 다만, 본 절은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주요 전략적 행보를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변수 간 구조적 연계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제시한다.

가. 가자지구에 대한 파멸적 공세: 2025년 여름 이후

2025년 여름, 전쟁은 다시 가자지구로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개전 초기의 ‘응전’이 아니라, 하마스 통치체제 자체를 종식시키려는 전략적 공세였다. 네탈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정치·군사적 기반을 끝장내겠다”고 선언했고,⁵⁷⁾ IDF는 “가자지구를 더 이상 테러 거점으로 두지 않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군사적으로는 가자시티 중심부에 대한 전면적 지상작전이 전개되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도시 전투가 벌어졌고, 터널망과 지휘소, 무기 공장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 공군과 포병은 이를 지원하며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이는 응전이 아니라 하마스 지배구조 해체와 가자지구의 전략적 재편을 지향한 ‘파멸적 공세’였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 악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과 NGO들은 대규모 난민 발생과 민간인 피해를 경고했으며, 미국은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인도적 통로 개방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라는 전략적 목표를 우선시하며 작전을 지속하였다. 이 국면은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공세적 성향이 최대로 표출된 장면이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은 하마스를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역사적 정체성과 ‘다시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생존 서사가 결합한 결과이며, 응징·압박 중심의 접근방식과 강경한 정책 선호가 맞물린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변수 간 작동 방식은 다음 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나. 레바논 남부에 대한 국지공세: 2024년 1월~3월

2024년 초,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은 북부 이스라엘 주민의 대피와 국경지역 마비를 초래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이란이 배후에서 주도하는 전략적 압박으로 인식하였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헤즈볼라의 공격은 이란의 지원 없이는

57) Netanyahu, B. (2025, July 10). *We will end Hamas's rule in Gaza City once and for all*. Prime Minister's Office, Jerusalem.

불가능하다”라고 발표하며⁵⁸⁾ 전선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군사적으로는 공군이 남부 레바논 산악지대와 마을에 은폐된 로켓 발사대와 무기 저장소를 집중적으로 폭격했다. 포병과 드론 감시망도 확대되어 헤즈볼라의 국경 침투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2월 중순에는 국경 인근 지역에서 제한적 지상침투가 시행되어 헤즈볼라 거점을 무력화했다. 이 과정은 방어적 성격을 넘어 적의 공격 기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공세였다.

국제사회는 긴장 고조를 우려하였다. 유엔은 즉각적인 충돌 중단을 촉구했고, 프랑스·독일은 외교적 개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면서도, 전면전 확대는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국면은 국지적 억제공세의 전형으로, 북부 전선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이란의 간접 압박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러한 대응은 헤즈볼라를 이란의 대리세력으로 인식하는 위협 구성과 국경 근접 전장에서 확전을 억제하면서도 적의 공격 기반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접근방식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레바논 전선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전략문화적 작동 양상은 다음 절에서 변수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된다.

다. 이란에 대한 은밀·간접 공세: 2024년 하반기~2025년 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전쟁의 최종적 배후세력”으로 지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불씨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 불씨를 끌 것”이라 언급했고,⁵⁹⁾ IDF는 “이스라엘은 이란이 제공하는 지원망을 끊어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⁶⁰⁾

공세는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드론 타격은 이란 내 군수공장과 혁명수비대 기지를 겨냥했고,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방공망을 교란시켰다. 동시에 이라크·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기지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이는 전면전 회피 속 점진적 압박이라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은 공개적으로 개입을 부인하면서도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략을 지지

58) Israel Defense Forces. (2024a, January 15). *Hezbollah's attacks are orchestrated by Iran. We will act to protect our northern communities.* IDF Spokesperson's briefing.

59) Netanyahu, B. (2024, December 30). *If Iran lights the flame, we will extinguish it.* Speech, Prime Minister's Office.

60) Israel Defense Forces. (2024d, December 30). *Israel will disrupt Iran's support networks to protect its security.* IDF Press Release.

했고, 유럽 주요국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 국면은 이스라엘의 공세적 전략문화가 은밀·비대칭 영역에서도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행동 방식은 이란의 역량을 실존적 위협으로 구성하는 위협인식과, 장거리 정밀 타격·사이버전 등 비대칭 수단을 선호하는 접근방식이 결합한 결과이며, 기술 우위를 통한 억제라는 정책선호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략문화적 요인의 작동은 다음 절에서 변수별로 체계적으로 해석된다.

라. 시리아 골란고원 북부에 대한 억제공세: 2024년 4월~6월

봄이 되자 이스라엘은 전선을 확장해 시리아 북부를 타격했다. 이는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시리아-이란 보급망 차단이라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시리아 영토를 거점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IDF는 “시리아 내 이란 군사화는 안보의 적색선”이라 발표하였다.⁶¹⁾

작전은 다마스쿠스 인근 혁명수비대(IRGC) 시설과 미사일 조립 공장을 겨냥한 정밀 공습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골란고원 북부에서는 친이란 민병대 거점과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연속적으로 타격했다. 정보전에 기반한 드론 작전이 병행되면서,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경로가 차단되었다. 이는 확전 방지 속 억제 공세라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렸다. 시리아 정부와 이란, 러시아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했으며, 유엔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행동을 묵인했다. 이 국면은 이란 견제와 레바논 전선 안정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시리아를 매개로 실행된 사례였다.

이러한 행동은 시리아 전선을 이란 견제 전략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위협 구성과 위협을 본토에서 멀리 밀어내려는 외부화 접근방식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전략문화 변수의 작용 강도는 가자·레바논·이란 전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그 구체적 메커니즘은 다음 절에서 변수별로 간략히 설명된다.

마.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원거리 공세: 2024년 7월~9월

여름에는 전선이 더 확장되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어졌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61) Israel Defense Forces. (2024b, April 12). *Iran's military entrenchment in Syria is a red line for Israel's security*. IDF Press Release.

받으며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및 우방국 선박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를 “국제 해상안보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규정하며⁶²⁾ 장거리 공세를 단행했다.

공격은 주로 미·영과 협력한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후티의 무인기 발사 기지, 미사일 저장고, 통신시설을 공습했으며, 전투기와 해상 발사형 미사일이 투입되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역외 위협 억제와 해상 교통로 방어라는 전략적 목적을 띠었다.

국제사회는 이 국면에 특히 민감했다. 홍해 봉쇄가 세계 물류망과 에너지 수송에 미칠 파급효과가 막대했기 때문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경고했고,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아랍국가들은 후티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이 국면은 이스라엘의 공세가 지역 방어를 넘어 국제적 안보 이슈로 확장되는 분수령이었다.

이러한 대응은 후티 세력을 이란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위협인식과, 장거리·역외 영역에서 기술 우위와 동맹 협력을 결합해 억제를 시도하는 정책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전략문화 변수의 직접적 작용 강도는 다른 전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그 분석은 다음 절에서 보조적으로 다룬다.

3. 전략문화가 미친 영향

앞 절에서 기술한 사례들은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문화 분석틀에 따라 정체성-위협인식-접근방식-정책선택의 구조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이 실제 전략적 선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스라엘의 전략문화는 군사기술적 요인을 넘어 네 변수로 구성된 심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다양한 공세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전략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네 변수는 전선의 특성과 위협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각 변수가 공세적 전략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는지를 전선별 차이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가. 정체성의 영향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국가의 건국 경험과 홀로코스트 기억,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생존을 위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

62) Israel Defense Forces. (2024c, July 23). *Israel has the capability to neutralize Houthi threats at long range*. IDF Statement.

다”는 집단적 신념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공세적 전략을 정당화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2023년 하마스의 기습 이후 이스라엘은 단순 방어를 넘어 가자지구 내 특정 지역을 선제적으로 타격하였다. 이는 생존의 위협을 정체성 차원에서 해석한 결과였으며, ‘공격을 통한 억제’라는 선택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2025년 여름 가자시트에 대한 대규모 작전에서도 이스라엘은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적은 완전히 무력화해야 한다’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전면적 군사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Bar-Tal(199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협적 환경에서 사회적 정체성은 군사적 응전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주요 토대”라는 논지를 뒷받침한다.⁶³⁾

더 나아가 정체성 변수는 독립적으로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의 영향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생존 중심의 집단적 정체성은 위협을 실제보다 확대·과장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고착화시켰고, 이는 위협인식 변수의 작동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군사적 수단을 우선시하는 정체성은 접근방식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며, 정책결정 엘리트가 공세적 정책을 선호하도록 이끄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즉, 정체성 변수는 단순히 하나의 영향요인이 아니라, 나머지 변수들이 공세적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배경으로 기능하였다. 다만 정체성이 전선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며, 가자 전선에서는 생존 서사가 직접적으로 강화된 반면, 레바논 전선에서는 ‘두 전선 전쟁 회피’라는 역사적 학습이 우세하게 작용했고, 이란 전선에서는 문명적·장기적 경쟁 구도가 정체성의 해석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나. 위협인식의 영향

이스라엘의 전략문화에서 위협인식은 현실적 군사능력의 크기보다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위태롭다”는 과장된 감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위협인식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 공세를 선택하게 했다. 헤즈볼라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은 아직 완전 가동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선제적 폭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시리아 북부의 무기 이전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상대국의 직접적 공격이 발생하기 전부터 공습했는데, 이는 ‘잠재적 위협은 곧 실존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전략적 결정을 이끈 전형적 사례였다. Inbar(2007)는 이러한 특성을 “이스라엘 안보정책의 과잉 대응 경향”으로 규정하며, 위협인식의 확대가 군사적 공세를 촉발하는 구조적 요인임을 강조한 바 있다.⁶⁴⁾

63) Bar-Tal(1998), p. 30.

다만 전선별로 위협이 구성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가자 전선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을 ‘국가 존속’ 차원의 즉각적 위협으로 의미화한 반면, 레바논 전선에서는 헤즈볼라가 이란과 연결된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란 전선에서는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장기적·문명적 위협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시리아와 후티 전선에서는 이러한 위협인식이 간접적·보조적 방식으로만 작동하였다.

다. 접근방식의 영향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군사·비군사 수단을 결합한 종합적 접근을 선호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정보전·심리전·외교적 압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려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으로 무기가 이전되는 경로에 대해, 이스라엘은 공습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과 외교적 압력을 동시에 가하였다. 또한 하마스 지휘관 암살이나 이란 핵개발 인사 제거와 같은 은밀작전은 ‘비대칭적 접근방식’의 대표적 사례로, 전통적 군사공세를 넘어선 새로운 양상의 공세 전략이 전략문화의 일부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Ben-Eliezer(1995)가 지적했듯이, “이스라엘 사회는 군사력과 기술적 수단의 결합을 통해 안보를 확보한다는 일종의 전쟁국가적 사고”를 내면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⁶⁴⁾

그러나 접근방식은 전선별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구체화되었다. 가자 전선에서는 대규모 지상·공중 결합 작전과 같은 전통적 공세 방식이 극대화된 반면, 레바논 전선에서는 확전을 회피하면서도 적의 기반을 제한적으로 압박하는 ‘절제된 공세’가 선택되었다. 이란 전선에서는 장거리 정밀타격과 사이버전이 결합된 비대칭 접근이 두드러졌고, 시리아와 후티 전선에서는 회랑 차단과 해상안보 중심의 제한적 접근이 주로 적용되었다.

라. 정책선호의 영향

정치·군사 엘리트 집단의 정책선호 역시 공세적 전략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였다. 강력한 억지와 응징을 통한 안보 확보라는 정책 기조는 단기적 방어보다는 장기적 공세를 중시하는 전략 선택을 낳았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이스라엘은 직접적 위협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원거리공세를 감행하였다. 2025년 여름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파멸적 공세 역시 국내 정치 지도층이 강조한 “완전한 응징”이라는 정책적 선호가 전략적 결정으로

64) Inbar(2007), pp. 40-60.

65) Ben-Eliezer(1995), pp. 276-280; 285-290.

구체화된 전형적 사례였다. Michael(2007)이 지적했듯이, 이스라엘의 정치·군사 엘리트는 '안보 우선(security-first)' 프레임을 유지함으로써 군사적 공세의 반복 선택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였다.⁶⁶⁾

정책선호 역시 전선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가자 전선에서는 '완전한 응징'이라는 강경 기초가 파멸적 공세로 이어졌던 반면, 레바논 전선에서는 확전을 통제하면서 역지를 유지하려는 제한적 선호가 우세했다. 이란 전선에서는 장기적 전략경쟁을 염두에 둔 점진적·은밀한 압박이, 시리아 전선에서는 회랑 차단과 확전 회피를 병행하는 관리형 선호가 나타났다. 후티 전선에서는 동맹 협력 기반의 역외 억제를 선호함으로써, 정책선호가 공간과 위협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전략적 강도로 구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4. 소결론

본 장에서는 이스라엘 전략문화가 어떻게 공세적 전략 행보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2절에서는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예멘 등 다양한 전선에서 나타난 군사작전을 분석하여, 응전에서 국지공세·억제공세·원거리공세·은밀공세·파멸적 공세로 이어지는 전략적 궤적을 확인하였다. 이어 3절에서는 정체성, 위협인식, 접근방식, 정책선호라는 네 가지 전략문화 변수가 이러한 공세적 선택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이스라엘의 공세적 전략은 단순히 특정 분쟁이나 개별 위협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내재화된 전략문화적 요인들의 지속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조화되었음이 드러났다. 정체성은 생존을 위해 공격을 정당화하는 집단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위협인식은 잠재적 위협까지 과장하여 선제적 대응을 합리화하였다. 접근방식은 군사·비군사 수단을 결합하며 공세적 행동의 수단을 다변화하였고, 정책선호는 정치·군사 엘리트의 반복적 선택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체성이 단독 변수를 넘어 다른 변수들의 작동방식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생존 중심의 정체성은 위협을 확대·고착화시키는 인식틀을 제공하고, 접근방식을 군사적 방식에 우선되도록 제한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공세적 선택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효과는 정체성이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66) Michael, Kobi. "The dilemma behind the classical dilemma of civil-military relations: The 'Wehrmacht Syndrome' in the IDF." *Armed Forces & Society* Vol. 33, No. 4 (2007), pp. 530-531; 534-535.

상위적 조절 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선별 군사작전에서도 이러한 전략문화적 구조는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가자 전선에서는 정체성과 위협인식이 결합하여 '파멸적 공세'가 선택되었고, 레바논 전선에서는 억제·확전관리라는 정책선택호가 접근방식의 강도를 조절하였다. 이란과 시리아 전선에서는 장거리·은밀 공세가 전략문화적 성향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후티 반군에 대한 원거리공세는 정책선택호와 기술·정보 중심 접근방식이 결합된 사례였다. 이는 네 변수의 상호작용이 전선의 종류와 위협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이스라엘의 공세적 전략 행보는 정체성·위협인식·접근방식·정책선택호라는 네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된 결과이며, 단일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정체성은 공세적 전략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위협인식은 그 강도를 높이며, 접근방식은 실행의 양식을 규정하고, 정책선택호는 이를 반복·심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누적적 작동은 이스라엘이 응전에서 출발해 국지·억제·원거리·은밀·파멸적 공세로 이어지는 일관된 전략적 궤적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동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은 이스라엘 전략문화가 지속적으로 공세적 성향을 보이는 구조적 이유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해석적 단서를 제공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략문화 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이스라엘이 보인 공세적 전략 행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략문화의 개념, 연구 동향,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략문화의 내부 변수를 위협인식, 접근방식, 정책선택호라는 독립변수, 정체성이라는 조절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문화가 단일한 총체적 요인이 아니라, 구체적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적인 전략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형성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어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략문화가 구체적으로 공세적 전략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전략문화가 단순한 설명적 변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략적 선택을 제약·유도하는 실질적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스라엘 사례는 전략문화가 국가의 안보정책과 군사적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는 전략문화 연구가 국제정치학과 안보학에서 단순한 보조적 설명틀을 넘어,

국가 전략을 분석하는 독립적이고 유효한 이론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략문화가 단기적 사건을 해석하는 도구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태도와 행동 양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지속성(continuity of strategic posture)'을 설명하는 유력한 분석틀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세적 패턴이 정권 변화나 상황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구조화된 전략문화의 영향 아래 장기간 반복·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공세적 성향은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과 갈등의 지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 틀을 제공하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이러한 전략문화적 특성을 간과할 경우 단기적 사건 대응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특히 이스라엘 사례는 억제(deterrence)와 공세(offense)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략문화적 인식을 속에서 재정의되며, 적극적 응징과 선제적 조치가 억제전략의 일부로 제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안보문화(security culture)가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제도화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가가 반복적 전략 선택을 통해 특정한 안보정체성을 구축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미래 전략적 향방에 대한 예측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전략문화와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본 연구가 본질적으로 분석 자체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며, 전략문화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부차적인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향후 전략문화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략문화가 현실주의적 요인이나 국내정치 요인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관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정체성·위협인식·접근방식·정책선호와 같은 변수 체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방법론적으로도 질적 사례연구를 넘어 정책문서, 여론조사, 언론 담론 등을 활용한 계량적·텍스트 분석을 병행하고, 단일 사례를 넘어 다른 국가나 시기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전략문화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내부의 사회·정치적 균열과 외부 행위자의 반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층적 분석이 강화될 때, 전략문화의 복합성과 맥락성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결국 전략문화 연구의 과제는 단순히 과거의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가 전략의 가능성과 제약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설명적·예측적 도구로 발전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 사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자 시험대가 되며, 향후 연구는 이를 토대로 전략문화 이론의 학문적 위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안보정책 분석의 실질적

합의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들은 장기적 전략패턴의 지속성과 공세·억제의 동시적 작동이라는 이스라엘 전략문화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전략문화 이론이 정책적·학문적으로 갖는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 Akgül, Nurşin Ateşoğlu Güney. "Shadows in disguise: The evolution of Mista'arvim units in Israel's strategic culture." *Uluslararası Kriz ve Siyaset Araştırmaları Dergisi* Vol. 9, No. 1 (2025).
- Arad, Shimon. *Israel's National Security Concept: Functional Incoherence*. (Tel Avi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24).
- Bar-Tal, Danie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 Bar-Tal, Daniel. "Societal Beliefs in Times of Intractable Conflict: The Israeli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9, No. 1 (1998).
- Bar-Tal, Daniel & Jacobson, Dan.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ecurity." *Applied Psychology* Vol. 47, No. 1 (1998).
- Ben-Eliezer, Uri. *Militarism and Israeli Socie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 Ben-Eliezer, Uri. "A nation-in-arms: State, nation, and militarism in Israel's first year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37, No. 4 (1995).
- Booth, Ken. *Strategy and ethnocentrism* (London: Croom Helm, 1979).
- Breznitz, Dan. *Innovation and the state: Political choice and strategies for growth in Israel, Taiwan, and Irelan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7).
- Edut, Dorit. *The Development of Yom Ha'Atzmaut As A Religious Observance in Israel and in the USA, 1948-2005* (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 2006).
- Fleischman, Luis. "The Legitimacy of Israel: A Sociological Perspective." *FIU Law Review* Vol. 19, No. 3 (2025).
- Gazit, Shlomo. *Trapped Fools: Thirty Years of Israeli Policy in the Territories* (London: Frank Cass, 2003).
- Giles, Gregory F. *Continuity and Change in Israel's Strategic Culture*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Office, 2006).
- Gray, Colin S. "National styles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 Security* Vol. 6, No. 2 (1981).
- Handel, Martin I. "The Yom Kippur War and the inevitability of surpris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1, No. 3 (1977).
- Horowitz, Dan & Luttwak, Edward N. *The Israeli Army* (New York: Harper & Row, 1975).
- Inbar, Efraim. *Israel's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since the Yom Kippur War* (London: Routledge, 2007).
- Johnston, Alastair I.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Klar, Yechiel, Schori-Eyal, Noa & Klar, Yossi. "The 'Never Again' State of Israel: The Emergence of the Holocaust as a Core Feature of Israeli Identity and Its Four Incongruent Voic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9, No. 1 (2013).
- Kober, Avi. "The Israel Defense Forces in the Second Lebanon War: Why the poor performance?" *Middle East Journal* Vol. 62, No. 3 (2008).
- Kopec, Rafał. "The determinants of the Israeli strategic culture." *Review of Nationalities* Vol. 6, No. 1 (2016).
- Lantis, Jeffrey S. "Strategic culture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 No. 3 (2002).
- Lantis, Jeffrey S. "Strategic Culture: From Clausewitz to Constructivism." *Strategic Insights* Vol. 4 No. 10 (2005).
- López, Víctor Manuel Hernández & Cuellar, Jaime E. "Mapping controvers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 analysis of the Hamas-Israel conflict on YouTube." *AI & Society Studies* (2024).
- Martin, Lenore G. *Assessing the Impact of U.S.-Israeli Relations on the Arab World*.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3).
- Meridor, Dan & Eldadi, Ron. *Israel's national security doctrine: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ormu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doctrine (Meridor Committee), ten years later (Memorandum No. 187)* (Tel Avi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19).
- Michael, Kobi. "The dilemma behind the classical dilemma of civil-military

- relations: The 'Wehrmacht Syndrome' in the IDF." *Armed Forces & Society* Vol. 33, No. 4 (2007).
- Meyer, Christoph O. "Convergence towards a European strategic culture? A constructivist framework for explaining changing norm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1, No. 4 (2005).
- Pedahzur, Ami. *The Israeli response to Jewish extremism and violence: Defending democrac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2).
- Peled, Yoav. "Ethnic Democracy and the Legal Construction of Citizenship: Arab Citizens of the Jewish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2 (1992).
- Pinfold, Rob Geist, Jones, Clive & Ehteshami, Anoushiravan. "Collision course: How Iran and Israel brought the Middle East to the brink." *Global Policy* Vol. 16, No. 3 (2025).
- Rosman, Elisheva. "Can Military Service Bridge Social Schisms: The Case of Israel." *Israel Affairs* Vol. 26, No. 3 (2020).
- Safran, William. "Language and Nation-Building in Israel: Hebrew and its Rivals." *Nations and Nationalism* Vol. 11, No. 1 (2005).
- Singer, P. W. & Friedman, Allan. *Cybersecurity and cyberwar: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Siniver, Asaf. "Israeli identities and the politics of threat: A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Ethnopolitics* Vol. 11, No. 1 (2011).
- Smith, Charles D. *Palestine and the Arab-Israeli conflict: A history with documents (7th ed)* (Boston: Bedford/St. Martin's, 2010).
- Snyder, Jack.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nuclear options (R-2154-AF)*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77).

Why Is Israel Aggressive? -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ulture -

Baek Jaseong

Keywords

Israel, Strategic Culture, Offensive Strategy, Identity, Threat Perception, Security Policy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relied primarily on realist explanations, this study employs the framework of strategic culture to analyze Israel's persistent and aggressive strategic behavior. By disaggregating the internal components of strategic culture into three independent variables - threat perception, strategic approach, and policy preference - and one moderating variable, identity, the study identifies the specific mechanisms through which strategic culture shapes strategic choices and behavior. The findings indicate that Israel's offensive posture is not simply a reaction to external threats but is construct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historically rooted experiences, collective memory, and socially embedded norms. Identity, in particular, conditions the operation of other variables and reinforces the convergence toward offensive strategie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strategic culture functions not only as a tool for interpreting short-term events but also a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continuity of a state's long-term strategic posture. The analysis further suggests that the boundary between offense and deterrence can be reframed through culturally embedded perceptions, highlighting the potential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culture in shaping strategic behavior. Overall, the study affirms the utility of strategic culture as an independent and meaningful theoretical lens in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vides important insights into the persistence of instability an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논문투고일: 2025. 10. 28.]

[심사의뢰일: 2025. 11. 10.]

[게재확정일: 2025. 12. 1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양상 분석: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 적용

류인석*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 II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분석
- IV.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의 검증과 전후
- V. 한반도에의 전략적 함의
- VI. 결론

요약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고도의 복합전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전쟁에서는 전통적 화력전과 기동전이 전개되는 동시에, 사이버전·정보전·인지전 등 비물리적 형태의 전쟁이 병행되었다. 또한,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참호·지하·시가전과 같은 아날로그적 방식과 결합함으로써, 신구의 기술·전략·전술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다중 복합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쟁양상은 하이브리드전이나 지능화전이 초점을 맞추었던 회색지대나 첨단기술 중심으로는 복합적 전면전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쟁은 디지로그적 통합, 연계, 얽힘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며 고도의 복합전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쟁의 복합적 속성을 신개념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군사이론의 발전에 기여한다. 동시에 첨단기술 의존이 심화되는 미래 전장환경에서 디지로그적 전략설계와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핵심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디지로그 복합전, 하이브리드 전쟁, 한반도 미래전쟁, 국방전략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I. 서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의 귀환과 더불어 전장의 공간과 수단이 전례 없이 융합·확장되는 '다중 복합전'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전통적 화력전과 기동전이 사이버전·정보전·인지전 등의 비물리적 방식과 복합적으로 전개되었고, AI·드론·정밀유도무기·GPS 교란 등 첨단기술은 화공작전·참호전·지하전·시가전 등 아날로그적 방식과 결합되어 고도의 복합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쟁의 국제화와 핵사용 위협이 빈번해짐에 따라 전면전의 장기화와 재래전-핵전의 복합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할 소요를 함의하고 있다.

그동안 전쟁양상에 관해서는 주로 회색지대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인지전, 지능화 전쟁 개념에 의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하이브리드전쟁 개념은 '테러와의 전쟁' 같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다양한 유형의 전쟁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¹⁾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각기 강조점의 차이로 인해 전쟁의 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주로 약자의 전략과 회색지대 충돌이나 저강도 분쟁 국면에 초점을 두어 강자의 입장이나 대등한 관계에서의 전면적 복합전 설명에는 미흡하다.²⁾ 지능화전쟁 개념은 기술 중심 접근에 치우쳐 다층적 복합성과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³⁾ 특정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새로운 유형의 교란과 마비에 취약하여, 디지털 기반 전장이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급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전개 양상을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개념의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 사례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디지로그 복

1) Mattis, James N. and Hoffman, Frank. "Future Warfare: The Rise of Hybrid Wars." *Proceedings* Vol. 132, No. 11(2005). Hoffman, Frank. "Complex Irregular Warfare: The Next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rbis* Vol. 50, No. 3(2006); McCuen, John. "Hybrid Wars." *Military Review* Vol. 88, No. 2(2008); 송승중. "하이브리드 전쟁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제59권 제4호(2016); 지효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제24권 제1호(2024).

2) 최근 중국의 초한전, 러시아의 신세대전, 미국의 모자이크 전쟁 개념 등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만, 전쟁 스펙트럼에서 회색지대 전쟁을 주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박창희.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화전쟁: 제지능권 개념과 지능우세 달성 방안." 『국방정책연구』제37권 제3호(2021); 설인효·배학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제66권 제2호(2023).

합전 개념의 차별성과 유용성을 대비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은 하이브리드 전쟁 보다 복잡도가 훨씬 크다는 점에 착목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요소와 역량의 융합이 전쟁의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이 개념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하위 개념이나, 특정 현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인간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 즉 신구(新舊)식 전략, 전술, 무기의 복합적 운용을 온전히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술우위가 전쟁의 승패에 크게 작용하지만, 동시에 약자도 기술적 강국의 우위를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로그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강군”을 지향해 왔던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난 디지로그 복합전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여, 이 개념의 설명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나아가 이를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용하여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비방향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검토

최근 전쟁 양상과 미래전쟁을 전망함에 있어, 하이브리드 전쟁과 지능화 전쟁은 전쟁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개념으로 적용되어 왔다. 두 개념은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전장에 미치는 혁신적 영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물리적·비물리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전통적 전쟁의 경계를 허무는 ‘혼종성’을 특징으로 하며, 지능화 전쟁은 인공지능(AI), 자율무기체계,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능적 전환’을 지향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현대 전쟁양상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은 2000년대 중반 호프만(Frank G. Hoffman)에 의해 본격적으로

4) 이어령 박사는 ‘디지로그(Digilog)’ 용어를 통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질서와 가치를 형성하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산업디자인, 예술,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로 확산되었다. 이어령, 『디지로그』(서울: 생각의 나무, 2008). 디지로그 복합전 관련 시론적 논의는 류인석,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과 전략적 함의: 기존 미래전 개념의 한계와 대안 탐색.” 『한국군사』 제17집(2025) 참조.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전쟁이 단일한 형태로 규정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전통적 군사력의 사용과 더불어 비정규전, 사이버전, 심리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대전의 양상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적 시도였다. 이러한 관점은 비대칭 분쟁과 회색시대 전쟁을 설명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이후 프라이어(Nathan Freier)가 미 국방부의 위협유형에 기반하여 제시한 전통적(traditional), 비정규적(irregular), 재앙적(catastrophic), 파괴적(disruptive) 위협의 구분은 하이브리드 위협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양한 위협 행태를 개념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로써 의미가 있다. 특히 재앙적 위협(테러 조직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파괴적 위협(정보전·사이버·생물학·우주무기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강자의 강점 무력화 가능성)은 ‘디지로그 복합전’이 강조하는 부분과 일부 교차한다.⁵⁾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맥큐언(John McCuen)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적 승리 요인을 물리적 목표의 점령이 아니라 ‘인간지형(human terrain)’의 관리와 통제에 둔다고 규정하였다.⁶⁾ 즉, 하이브리드 전쟁은 물리적·인지적·정보적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복합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을 확장·재구성하였다. 국내 연구자들도 하이브리드 행위자들이 ‘전쟁의 문턱’ 직전에서 행위를 조절·운영하며 인간지형 통제를 목표로 한다는 심리전·정보환경 조성·지역 거버넌스 교란 등 비군사적 수단의 전략적 중요성을 환기시킨다.⁷⁾

그러나 하이브리드전 개념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첫째, 이론적 구별력이 모호하고 경험적 측정·분석이 어렵다. 예컨대 사이버공격·경제제재·심리전·게릴라전·재래식 대규모 침공까지 모두 동일한 범주에 넣으면,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현상을 동일한 이론적 틀로 설명하려다 보니 가설 설정이나 원인·효과 규명이 불명확해진다.

둘째, 하이브리드전 옹호론자들은 회색시대·저강도 분쟁에 주로 초점을 맞추으로써 장기화된 고강도 정규전의 재현 가능성과 그에 수반되는 복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재래식 전력과 첨단기술, 정보전이 결합된 장기·복합형 전면전의 사례는 하이브리드전의 편향성을 반증한다. 하이브리드전은 통상 복합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영역을 강조하는 제한적 복합전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초기 개념 연구자들과 국내 학자들 역시 회색시대나 비물리적 수단

5) Freier, Nathan. *Strategic Competition and Resistance in the 21st Century*(Carlisle, V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6) McCuen(2008).

7) 송승중(2016); 지효근(2024).

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전이 전면전의 임계치를 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⁸⁾ 이러한 해석들은 분명 특정 전쟁양상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유용성을 지니지만, 현대 전쟁이 보여주는 전면적·동시다발적·다차원적 복합성을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인간지형 통제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경제적·제도적·기술적 수단의 독자적·계층적 영향력을 축소하여 설명의 폭을 좁힌다. 예컨대 대규모 사이버작전은 물리적 피해를 통해 정치적 결과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간지형 통제'로 환원될 수 없는 전략적 효과를 낳는다.

넷째, 프라이어의 재앙적·파괴적 위협 구분은 유의미하나, 이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구체적 논의로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상호취약성(예: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 체계를 무력화하는 역전현상)과 위협 간 상호전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2. 지능화 전쟁

지능화 전쟁은 기술 중심의 전쟁양상 변화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간-기계 의 협업이 전투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전쟁 형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2010년대 초 새롭게 제시한 전쟁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정보화 전쟁을 계승하면서도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평가된다.⁹⁾

지능화 전쟁은 육·해·공·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 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 체계에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인지능력과 기계의 연산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는 전쟁양식을 지향한다. 또한 기존 무기체계에 자율성과 학습능력을 부여하여 전투의 탐지, 판단, 대응 과정이 자동화되는 통합형 전쟁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요컨대, '정보화 전쟁'이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정보혁명기에 형성된 전쟁양식이라면, '지능화 전쟁'은 제4의 물결형 전쟁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인지전, 자율체계가 결합된 5세대 전쟁 담론과도 일정 부분 접점을 가진다.

그러나 지능화 전쟁이 미래전의 기술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중심적 접근만으로는 전쟁의 총체적 실상을 포착하기 어렵다. 기술은 전투력의 증강

8) 송승중(2016); 지효근(2024); 김은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함의." 『지중해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2025).

9) 이상국. "중국군의 '지능화전쟁' 논의와 대비 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2020), p. 83.

하이브리드 전쟁 이론이 전쟁의 수단적·행위자적 복합성을 포착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지능화 전쟁 개념은 기술적 진보가 전투의 속도와 정밀도에 미치는 변화를 설명하는 틀로 기능한다. 디지로그 복합전은 양자의 유용성을 결합하여, 구기술과 신기술, 인간요인과 사회적 환경이 시공간적으로 교차하며 형성하는 복합적 전장구조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장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개념은 기존 두 담론이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전면전의 재부상, '능력/취약성 역설(capability/ vulnerability paradox),' 복합의 작동체계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하이브리드전은 일반적으로 복합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복합전의 전면적 특성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 더구나 'compound warfare'가 국내에서 '복합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으며¹¹⁾, 북한은 복합전 개념을 '배합전'으로 지칭하고 있어, 하이브리드전이 '복합전'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과 개념적 불일치는 하이브리드전이 현대전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데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전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양한 주체, 수단, 방법이 혼재된 양상에 주목하면서도, 이들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고 연계되며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전쟁의 전반적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즉, 구성요소의 '존재'는 강조되지만, 그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통합, 연계, 얽힘의 효과와 작동 메커니즘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디지로그 복합전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수단과 아날로그 기반의 수단·방식이 융합되어 시공간적·전략적 혼합 상태로 작동하는 복합전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 미래전 개념들이 주로 기술·행위자·영역을 개별적으로 다룬 반면, 본 정의는 기술 융합, 행위자의 복합화, 다층적 수단 결합이라는 복합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들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위 분석틀의 역할을 한다.

복합전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전쟁과 대별되는 디지로그 복합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다양한 수단의 혼합'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시공간적 상호작용이 기술·전략·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이론적 핵심으로 삼는다. 전투는 더 이상 시공간적 경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 정보 공간, 인지 공간 등 비가시적 영역에서의 선제적 공격, 여론전, 심리전이 물리적 전투 이전과 이후 단계에서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전투의 개시와 종결, 주전장과 주변부라는 전통적 개념이 모호해지고, 시공간적 연속성이 흐려지면서 전략적 예측이 어려워진다.

11) Huber, Thomas M.(ed.). *Compound Warfare: That Fatal Knot* (Fort Leavenworth, KS: US CGSC Press, 2002). 'compound warfare'를 복합전으로 번역하여 설명한 내용은 송승중(2016) 참조.

둘째, 성능의 비약적 향상과 동시에 생기는 새로운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한다.¹²⁾ 디지로그 복합전은 신구의 전력 수단이 전략적 요구에 따라 보완적으로 결합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정밀유도무기, AI 기반 감시정찰, 사이버 공방 체계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이 핵심 전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재래전, 인지전, 심리전, 대중 동원과 같은 전통적·비정규 수단이 결합되어 다층적 작전 구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복합적 운용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전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작전 환경과 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융합’을 실현한다. 디지로그 복합전은 기술적 이질성을 전력체계 내에서 전략적 조화로 전환시키는 전쟁양식으로서, 첨단과 아날로그의 공진화가 이루어지는 동태적 전장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하이브리드적 위협에 대응하는 처방은 수단의 다변화에 집중하지만, 디지로그 복합전의 관점은 여기에 더하여 복원성(resilience) 과 중복성(redundancy)을 핵심으로 한다.

셋째, 디지로그 복합전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제한전과 전면전,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이 동시·복합적으로 혼용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혼용은 전쟁의 목적 설정과 수행 방식 자체가 다원적·입체적으로 설계·집행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투의 성과는 더 이상 물리적 영토의 점령이나 적군의 전력 소멸로만 환원될 수 없고, 정치적 영향력 확보, 사회적·경제적 교란 유발, 민심의 장악 등 비물리적 성과들이 주요 목표가 된다. 특히 디지로그 복합전에서는 국가·준국가 조직 뿐만아니라 민간기업, 그리고 자발적 시민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행위자들이 전투자원과 정보공간에 동원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행위자 혼합은 전투의 분산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표 1〉 하이브리드전, 디지로그 복합전 비교

구분	하이브리드 전쟁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	정규전과 비정규전, 군사/비군사 수단 혼합 전쟁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술·전략이 융합된 전차원적 복합전
특징	회색지대, 저강도 분쟁 초점 신구 전략, 무기의 혼용	전차원적 전쟁양상 적용 디지털과 아날로그 통합, 연계, 얽힘
주체	국가, 비국가행위자, 테러단체	국가, 비국가행위자, 민간, 국제조직

12) Schneider, Jacquelyn. "The capability/vulnerability paradox and military revolutions: Implications for computing, cyber, and the onset of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2, Issue 6(2019).

13) 미국은 최근까지 핵미사일 지휘통제시설에 플로피 디스켓과 같은 구식 저장매체를 운용했었다. 이는 플로피 디스켓이 1960년대 구축된 시스템에 유일하게 호환 가능했기 때문이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적은 장점도 있었다. 또한 B-52 전략폭격기는 우수한 무장 적재능력과 작전 효율성을 갖춰 일부 부품 교체를 제외하고 기계식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며 60년 이상 운용되고 있다. 이는 필자가 2019년 전략사령부(STRATCOM) 예하 마이노트(Minot) 공군기지의 미사일 사일로와 비행전대 방문시, 미측 실무자들의 설명에 기초한다.

구분	하이브리드 전쟁	디지털 복합전
전장 영역	물리/비물리 영역 혼합(회색지대)	전면전(제재전/핵전), 회색지대 전쟁, 우주, 사이버, 심리, 인지 등 전영역
기술	재래식 + 비대칭	디지털, 아날로그 복합
전략적 초점	혼란과 마비, 전면전 억제	전면적 마비, 회복 불가 상태 강요 (분산, 회복탄력성 중요)
사례	러시아의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 점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디지털 복합전은 과거 사례들에서 나타난 복합적 양상이 기술 발전과 결합해 재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쟁의 본질적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 개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역량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우위와 취약성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존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분석공간을 채워준다. 따라서 디지털 복합전은 단순한 용어상의 변주가 아니라, 현대 전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확장이자 명료화이다. '교차적 결합'에 의한 전략적 강점과 더불어 그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취약성의 문제를 핵심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림 3〉 디지털 복합전의 작동체계



디지털 복합전은 통합(integration), 연계(nexus), 얽힘(entanglement)의 세 가지 작동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 의미로 통합은 여러 이질적 요소를 하나의 목적·기능을 위해 구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을 지칭한다. 연계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망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강조한다. 얽힘은 이러한 연결이 더 깊어져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분리 불가능한 상호존 상태가 된 상황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전쟁 양상의 융합성과 복잡성이 통합-연계-얽힘의 과정을 거치며 심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의 주요 작동원리를 규정함으로써 개념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이 세 단계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국면이라기보다, 서로 중첩

되고 상호 피드백을 형성하는 동시적 작동체계로 이해된다. 즉, 통합은 연계와 얽힘을 포함하는 기초적 결합 구조이며, 연계는 통합을 동력화하면서 얽힘으로 발전하는 과정적 매개체로, 얽힘은 앞선 두 단계가 상호 침투하며 복합적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최종적 심화단계로 작동한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토대로, 본 연구는 디지로그 복합전을 분석하는 틀로서 각 작동원리가 상이한 차원에서 중심적으로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는 통합이 핵심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군사력·외교·정보·심리·경제 수단을 상호 일체화하여 전쟁 수행의 목적-수단-효과를 결속하는 대전략적 통합으로 나타난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연계가 주도적으로 작동하며, 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술, 물리적과 비물리적 영역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전장을 네트워크화하는 기술적 상호연동성으로 구현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얽힘이 중심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전쟁의 서사와 인식, 여론과 정당성, 심리와 정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정치적 환경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선 전략적 차원의 통합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행위자가 보유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심리적 수단을 하나의 전략적 틀 안에서 조정하고 결합하는 과정이다. 디지로그 복합전의 맥락에서 이는 물리적 전장과 비물리적 전장을 동시에 아우르는 구조적 설계 능력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군사작전, 국제여론 관리, 법적 정당성 확보, 동맹조율이 하나의 '전략 루프'로 통합될 때,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종합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반면 통합의 실패는 수단 간 불일치, 정책의 역효과,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으로 이어져 전체 전략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

기술적 차원의 연계는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작동 메커니즘이다. 이는 전쟁에 투입되는 각종 무기체계의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의 연계를 포함한다. 디지로그 복합전의 전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연계'에 의해 지휘되고 통제된다. 센서가 탐지한 정보가 AI 분석을 거쳐 즉각적인 타격 결심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데이터로 환류되어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가 바로 기술적 연계의 전형적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동시에 시스템 의존성을 높이고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심화시킨다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기술적 연계는 인간 판단과 자동화 그리고 아날로그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치적 차원의 얽힘은 전쟁이 단순히 군사행위의 범주를 넘어 정치·사회·경제·여론·국제관계의 모든 층위와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전쟁은 특정한 전선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의 환경과 긴밀히 얽혀 있다. 군사적 행동은 즉각적으로 국내 여론, 국제법적 판단, 외교적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전장의 전술적 선택을 제약한다. 전쟁의 승패와 정치적 결과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

II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분석

1. 초기: 하마스의 디지로그의 복합 공격

이번 전쟁에서는 하마스의 공격 방식과 수단에서 이전과 다른 디지로그적 다층·다영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획기적 변화가 관찰된다. 우선 대량 로켓 공격의 형태의 등장이다. 과거 하마스의 로켓 공세는 통상 수십에서 수백 발 단위였던 반면, 이번에는 단일 작전에서 수천 발(5,000여 발 이상)의 로켓이 단기간에 발사되어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망 아이언돔(Iron Dome)이 감당 가능한 표적 탐지·추적 한계를 초과시키며 대공 방어체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¹⁴⁾ 이러한 공격 방식은 아날로그 무기로 상대의 디지털 시스템을 공략하는 디지로그 복합전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하마스는 저비용·고효율의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상용 드론을 공격·정찰용으로 개조하여 전술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이러한 드론은 정밀 타격보다는 교란, 공포 조성, 정보 수집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우회하는 전술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기습 당일, 하마스는 드론을 활용해 국경 스마트 펜스¹⁵⁾ 감시장비를 먼저 파괴하고, 소형 공격드론을 이용해 관측카메라·원격 감시장비·자동화 포대 일부를 교란·파괴함으로써 초기 경보·추적 능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물리적 돌파 수단(폭발로 틈을 낸 뒤 불도저로 확장), 동력 패러글라이더·오토바이·고무보트 등의 다양한 수단을 병행 투입해 장벽의 취약지점을 전면적으로 공략하였다.¹⁶⁾ 디지털 의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아날로그·저기술 수단을 정교하게 결합한 점이 특징적이다.

14) Sandboxx. "Was Israel's Iron Dome overwhelmed, overhyped, or right on target?," October 12, 2023 https://www.sandboxx.us/news/was-israels-iron-dome-overwhelmed-overhyped-or-right-on-target/?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4); 이스라엘이 실전배치한 아이언 돔은 10개 포대로 일시에 요격 가능한 능력은 400개 표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국의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제13집 제3호(2024), p. 88.

15) 이스라엘이 2021년 말에 완성한 이른바 '스마트 장벽'은 길이 약 65km, 높이 6m 이상에 레이더·카메라·지하 땅굴 감지 센서 및 원격제어 무장탑 등으로 구성된 복합 방어체계였다. The Associated Press. "Israel announces completion of security barrier around Gaza." (December 8, 2021).

16) Nakhoul, Samia and Saul, Jonathan. "How Hamas duped Israel as it planned devastating attack." Reuters, October 11, 2023.

지하 터널 네트워크는 전통적 전선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 네트워크는 병력 이동과 무기 보급, 지휘통신, 인질 이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입체적 전장 구조를 형성하였다. 해당 땅굴에는 격실, 무기고, 숙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속적 교전이 가능했으며, 가자지구의 높은 인구 밀도와 복잡한 도시 구조는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과 소탕 작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⁷⁾ 이는 적의 전력 소모를 유도하고, 국제여론을 활용하여 정치적 협상을 압박하려는 전략이었다.

이와 더불어, 하마스는 정보전과 심리전을 병행하였다. SNS와 위성방송을 활용한 영상 선전물 제작, 전투 장면의 실시간 공개, 피해 영상의 과장·왜곡은 국제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심리적 피로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선전전 차원을 넘어, 전장을 정보-인지 결합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디지털적 방식이었다.

2. 전환기: 이스라엘의 디지털 응징

초기 성공적 작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1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마스의 전략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하며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전면공세를 단행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전쟁의 목표를 하마스 테러 조직의 군사 및 행정 능력 해체와 인질 구출로 명확히 천명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응징이 아닌, 하마스의 조직적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스라엘군은 지상군 투입 이전에 하마스의 지휘통제체제와 군사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하였다. 이 공습은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정립된 ‘다히야 독트린(Dahiya Doctrine)’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하마스의 행정·사회적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타격하는 응징적 성격을 지녔다.¹⁸⁾

지상군 투입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복잡하고 밀집된 도시 구조가 초래하는 작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하마스가 구축한 지하 터널망은 심각한 위협이었기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스펀지 폭탄’ 등 특수장비와 정예 공병부대 야할롬(Yahalom)이 투입되었다.¹⁹⁾ 이스라엘군은 루스터(Rooster), 비전 60(Vision 60), AI 기반

17) US Army. Center for Army Lessons Learned, "Subterranean Operations: Lessons from Gaza." No 25-1031, August 2025, https://api.army.mil/e2/c/downloads/2025/09/09/303436de/subterranean-operations-israeli-defense-force-lessons-from-gaza.pdf?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8. 5).

18) 김은비(2025).

19) US Army(2025).

스매시(SMASH) 조준기 등을 활용하여 병력 피해를 줄이고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첨단 전력의 결합은 이스라엘군이 디지털 전장환경에 적응하며 '로보틱-하이브리드전(Robotic- Hybrid Warfare)'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심각한 작전상 난관을 경험하였다. 대규모 공습으로 건물에 파괴되면서 지형이 변형되고 병력 기동과 표적 식별이 제한되었으며, 이는 '잔해지역 전투(Rubble Warfare)'라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²¹⁾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대응은 정밀 지상작전, 로봇·드론 활용, 전자기 스펙트럼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하마스의 주요 지도부가 제거되면서 조직 내 지휘체계가 붕괴하였다. 아울러 병원·학교 등 비전투시설을 군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제법 위반 논란을 초래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를 공습의 정당한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3. 종결기: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 정치적 혼돈 지속

전쟁의 종결 국면은 전통적 군사충돌의 단순한 종료로 보기 어렵다.²²⁾ 이는 물리적 전투가 일정 수준 진정되는 동시에, 정보·인지 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로그 복합전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전쟁의 '종결'은 전투의 소멸이 아니라 전쟁의 양식이 변화하는 단계적 전환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종결 시점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물리적 충돌의 강도가 완화된 반면, 정보·인지 영역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의미의 '전선'이 약화되면서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내러티브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각 진영은 자신의 정당성과 상대의 잔혹성을 강조하는 정보 콘텐츠를 확산시키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전장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 종결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전통적으로 종전은 군사적 충돌의 중단과 협정의 체결을 의미했으나, 디지로그 복합전의 시대에는 물리적 전투의 중단이 곧 전쟁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자지구에서의 공세가 완화된 이후에도 사이버공

20) Israel Defense(2024. 1. 18). "Meet the Rooster, Robotican's New Hybrid Robotic Drone Employed by the IDF in Gaza." <https://www.israeldefense.co.il/en/node/60981>

21) Watling, Jack and Reynolds, Nick, "Tactical Lessons from Israel Defense Forces Operations in Gaza, *RUSI*. July 11, 2024.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occasional-papers/tactical-lessons-israel-defense-forces-operations-gaza-2023>(검색일: 2025. 9. 1).

22) Roudani, Cherkaoui. "Regulated Disorder: Israel-Hamas and the Truce as a System of Power," October 17, 2025, https://moderndiplomacy.eu/2025/10/17/regulated-disorder-israel-hamas-and-the-truce-as-a-system-of-power/?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4).

격, 여론조작, 정보 왜곡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지속성을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복합적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물리적 전투의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상전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경지역의 소규모 충돌이나 테러, 인질 사태 등은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전선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전은 이제 전장 밖의 전략적 도구로 확립되고 있으며, 여론전과 인지전이 정치적 협상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셋째, 외교적 협상 가능성 역시 병존하지만, 정보전과 인지전이 협상 여건을 왜곡시킬 위험 또한 크다. 각 진영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상대를 비도덕적 행위자로 규정하고, 자국의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협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디지로그 복합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전쟁의 형태가 물리적 전장에서 디지털·인지 전장으로 이동한 국면에 있다. 물리적 전투는 약화되었으나, 정보전과 여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양상은 전쟁의 총체적 성격을 '지속적·다층적 갈등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면전은 종결되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쟁과 상호 비방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협상과 평화정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V.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의 검증과 전훈

본 장에서는 디지로그 복합전의 작동 원리인 통합, 연계, 얽힘을 분석틀로 하여 개념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세 가지 작동원리는 상이하게 작용하며 세력 간의 우위가 교차하였다. 초기에는 하마스가 통합적 전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기습적 우세를 확보했지만, 중반 이후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의 고도화된 통합과 연계 구조를 복원·확장함으로써 반격과 응징에 성공했다.

1. 전략적 차원의 통합

전략적 차원의 통합은 이 전쟁의 기획과 대응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마스는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심리적·기술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 이들은 로켓공격, 드론침투, 지하터널 활용, 선전영상의 배포를 하나의 통합된 작전으로 구성해 물리적 공격이 즉각적으로 심리적 충격과 국제 여론 효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군사적 타

격을 정치적 메시지로 전환하는 통합전략의 형태였다.

하마스는 군사행동을 단순한 전투목표가 아니라 정치·인지·심리전의 통합행위로 설계하였다. 즉, 물리적 피해보다 이스라엘 내부의 혼란·공포·불신 조성이라는 인지적 파급효과를 중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공격 직후 확보한 영상과 정보를 SNS를 통해 실시간 유포함으로써 전장의 사건과 국제 여론을 긴밀히 연계하였다.²³⁾ 또한 하마스는 로켓·무인기(드론), ANTI-TANK 체계, 통신망 회피전술 등 비교적 고도화된 무기·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지하터널, 시가지 등 지형적 특성과 정치적 환경에 적합한 전술을 병행했다. 이러한 결합은 이들 비국가 행위자가 단순한 테러 수법을 넘어 반(半)정규전·지역방어진 형태로 전투역량을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⁴⁾

반면, 이스라엘은 초기의 충격 이후 군사·외교·심리전의 통합을 통해 대규모 소탕작전을 시행했다. 정밀타격 작전과 정보전, 외교적 정당화 노력, 민간 대피 경보 등의 절차를 하나의 전략 루프로 묶어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완전하지 않았다. 하마스의 초기 충격은 이스라엘의 정보망과 경계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이후의 대응은 정치적 정당성과 인도주의 문제로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군사행동과 국제적 정당성 유지, 동맹조율을 하나의 복합 전략체계로 통합하였다. 군사적으로는 하마스의 지휘망과 터널 인프라를 집중 파괴하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관리하였다. 정보전·외교전이 상호 결합된 이 전략은 군사적 반격-정당성 프레이밍-정치적 회복의 연쇄효과를 의도하였다.

전쟁의 초반기에 주목되는 점은 '로우테크의 전략적 역습'과 '디지털의 증폭 효과'가 결합된 점이다. 즉, 단순·전통적 수단이 고성능 방어체계의 허점을 노리는 역량으로 작동했고,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은 사건을 증폭·정당화·국제여론전으로 전환시켰다. 초기 단계에서 하마스의 통합적 성공은 비국가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영역 전장을 일원화한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쟁 중반 이후 이스라엘의 반격 단계에서는 통합의 중심이 역전된다. 하마스의 초기 충격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반면, 이스라엘은 군사적, 외교적, 정보적, 인도주의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 단위의 통합된 대응체계를 복원했다. 국제사회와의 외교·여론전, 인질 협상, 사이버 감시망 복구 등이 동시에 가동되었다. 하마스의 분산형 통합이 단기적 '충격효과'를 냈다면, 이스라엘의 통합은 장기적 '체계효과'를 회복시킨 것이다.

23) 송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 전개양상과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24-11.

24) Byman, Daniel and McCaleb, Emma, "Published Understanding Hamas's and Hezbollah's Uses of Information Technology," *CSIS*, July 31, 2023, https://www.csis.org/analysis/understanding-hamass-and-hezbollahs-uses-information-technology?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9. 1).

2. 기술적 차원의 연계

기술적 차원의 연계는 전장 운영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하마스는 개전 초, 로켓-드론-지상침투를 시간적·기능적으로 동기화하여 기술적 연계를 통한 작전적 연계의 성과를 거두었다. 로켓의 포화공격으로 요격망을 소진시키고, 드론 정찰을 통해 실시간 취약점을 파악하였으며, 지상 침투대가 민간 지역까지 진입하는 흐름은 고도의 연계 구조를 보여주었다. 또한 상용 드론, 모바일 통신망, 소셜미디어를 결합해 전투와 선전, 여론조작이 실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기술적 수준은 낮았지만, '정보의 확산속도'라는 측면에서 연계효과를 극대화했다. 전투 영상과 선전물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물리적 공격이 곧바로 여론전과 결합되었다. 이처럼 하마스의 초기 연계는 '다영역 교차'를 통한 충격전술의 정점이었다.

특히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이번 전쟁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포함한 방공, 비행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고도의 정밀 타격 및 정보전 능력을 과시하였다.²⁵⁾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 기술의 군사적 확산이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의 경계를 약화시키며, 전장 환경의 복잡성과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곧 연계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통신·위성망 복구, 실시간 감시와 AI 기반 타격 연동, 그리고 전 세계 언론과 외교망을 통한 여론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공격-정보-심리의 결절점을 다시 장악했다. 이스라엘은 지상작전, 공중타격, 사이버감시, 심리전(경고문자·전단·심리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국가 차원의 복합전 시스템을 가동했다. 하마스가 개별 수단의 창의성으로 연계를 주도했다면, 이스라엘은 체계적 자원관리와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연계의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재설계함으로써 전황을 반전시켰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드러난 정보·경보체계의 허점을 인식한 이스라엘은 곧바로 고기술 기반의 지휘·정찰·타격 체계의 연계에 착수하였다. 이스라엘군(IDF)은 AI 기반 표적식별 시스템과 정찰위성·무인기·전자전 자산을 연동하여 센서-슈터(Sensor-Shooter)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였다. 동시에 초기 단계의 자동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Human-in-the-loop' 방식을 도입하여, AI의 탐지 결과에 대해 인간 분석관이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²⁶⁾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라벤더(Lavender)'라 불리는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최대 3만7천 명에 달하는 무장조직 관련 인물을 표적으로 분류한 데이터베

25) Reuters. "Hezbollah broadcasts drone video it says shows airbase deep in Israel." July 24, 2024.

26) Sylvia, Noah. "The Israel Defense Forces' Use of AI in Gaza: A Case of Misplaced Purpose," RUSI, July 4, 2024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israel-defense-forces-use-ai-gaza-case-misplaced-purpose>(검색일: 2025. 9. 5).

이스를 구축했으며, 실제 공격 승인 과정에서는 사실상 “인간의 판단 개입이 없었다”는 이스라엘군의 증언이 공개된 바 있다.²⁷⁾ 동시에 일부 공습에서는 유도 기능이 없는 재래식 폭탄, 이른바 ‘덤뱀(dumb bombs)’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며, 이로 인해 주거지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 파괴되고 내부 거주민이 모두 사망하는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제기되었다.²⁸⁾ 이는 AI 첨단기술과 재래식 폭탄의 디지로그식 타격의 전형을 보여준다.

식별된 표적은 ‘타겟 뱅크(target bank)’에 저장되거나, 상위 지휘부로 보고되어 공격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간다. 공격 시기와 수단은 표적의 취약성, 주변 민간인 위험도, 교전규칙(ROE)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즉각적 위협이나 기회가 포착된 표적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동적 타격(dynamic strike)’이 가능했다.²⁹⁾ IDF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전 확보된 목표물이 소진되자, 이러한 즉응형 타격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전자전에서는 디지털 센서망의 재구성과 아날로그식 예비 경보체계를 병행함으로써, 하마스의 통신 교란을 일부 상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스라엘은 고도화된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위성, 감시센서, AI 기반 분석시스템, 정밀유도무기를 통합해 ‘탐지-분석-타격-피드백’의 폐회로를 완성했다.³⁰⁾ 이러한 기술적 연계는 작전의 속도와 정확성을 비약적으로 높였지만, 동시에 데이터 의존성과 자동화 편향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노출시켰다. 즉, AI 분석의 오류나 오판이 곧 민간 피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연계는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쟁의 도덕적 부담을 증폭시키는 이중적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도 아날로그적 대비와 활용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고, 실제로 전과를 얻는 경우도 많았다. 이스라엘의 작전 양상은 전통적 군사력(공습·특수작전)과 함께 지능형 타격, 정보우위 확보를 위한 은밀한 공작, 그리고 화공·소이(소이성 무기·소이전술) 사용, 지하터널에 대한 수공작전, 스펀지 폭탄 사용 등 다양한 수단을 포괄한다. 특히 2024년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선호출기·무전기 동시폭발 사건은, 비록 고전적 통신기기라는 아날로그적 선택이었으나 그 배후에 깔린 정보작전·공작기법은 고도의 디지털·정보능

27) The Guardian, “The machine did it coldly: Israel used AI to identify 37,000 Hamas targets,” (April 3,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apr/03/israel-gaza-ai-database-hamas-airstrikes?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12. 4).

28) Business and Human Rights Centre, Report reveals Israel used AI to identify thousands of alleged Hamas targets in Gaza(April 3, 2024)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report-reveals-that-israel-used-ai-to-identify-thousands-of-targets-in-gaza/?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12. 4).

29) Sylvia(2024).

30) Israel Defense. “Meet the Rooster, Robotican’s New Hybrid Robotic Drone Employed by the IDF in Gaza.” January 18, 2024 <https://www.israeldefense.co.il/en/node/60981> (검색일 2025. 8. 30).

력과 결합된 것이었다. 이는 저기술을 활용하여 추적·탐지의 취약성을 노린 통신 전술의 재설계와 외국산 전자기기 공급망을 겨냥한 표적화된 작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³¹⁾

3. 정치적 차원의 얽힘

정치적 차원의 얽힘은 전쟁이 단순히 군사행위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정치·사회·경제·여론·국제관계의 모든 층위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러한 다층적 얽힘의 전형적 사례로, 전투가 개시되자마자 물리적 전장은 즉시 정치·외교·법적·심리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SNS를 통한 실시간 영상 확산은 전쟁의 이미지가 곧 국제정치의 담론으로 전이되는 통로가 되었고, 군사행위는 동시에 정치적·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³²⁾

하마스의 기습은 초기에 전술적 기민함을 보였으나, 민간사회와 도시구조가 전투공간과 얽히며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한 순간부터, 전장은 더 이상 국지적 군사공간이 아닌 국제적 정치무대로 변모하였다. 인질사건과 민간인 피해는 즉각적으로 국제여론의 분열을 불러왔고, 하마스의 무력행동은 전략적 부담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이스라엘의 반격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 또한 인도주의 논쟁을 확산시켜, 군사적 정당성과 정치적 지지를 동시에 약화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개입은 정치적 얽힘의 결정적 매개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무기 공급, 정보 협력, 외교적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쟁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평화협상 및 휴전 중재 노력을 병행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중적 개입은 전쟁의 외교적 균형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동 내 반미정서가 고조되었고, 이는 이란, 헤즈볼라, 예멘 후티 세력의 팔레스타인 지원으로 이어지며, 전쟁은 급속히 다국적·비대칭적 구도로 확장되었다.

이란은 하마스에 대한 정치적 연대와 군사적 후원을 통해 '반(反)이스라엘 전선'을 강화하였고 이스라엘과 최초의 미사일 교전을 수행했으며,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국경지대에서 저강도 공격을 전개하며 전선을 확장시켰다. 예멘의 후티 반군 또한 미사일·드론 공격을 통한 상

31) Trenta, Luca. "Nowhere to Hide: Israel's Pager Attacks on Hezbollah." *RUSI*, September, 18 2024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nowhere-hide-israels-pager-attacks-hezbollah?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5).

32) Pierre, Pahlavi. "Digital Hezbollah and Political Warfare in Cyberspace."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31, 2022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digital-hezbollah-and-political-warfare-cyberspace-205558> (검색일: 2025. 9. 1).

징적 연대행위를 감행하면서, 전쟁은 사실상 중동 전역의 복합적 얽힘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책임과 정당성, 대응 범위에 대한 합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미국의 개입, 이란·헤즈볼라·예멘의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법적 논쟁이 중첩된 다층적 정치적 얽힘의 전장으로 발전하였다. 이 얽힘 속에서 군사행위는 외교정책, 국제법, 여론전, 경제제재, 종교·이념적 갈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상호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군사력의 우열로만 규정되지 않고, 정치·외교·인지적 차원에서의 전쟁 수행능력이 그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로 부상했다.

디지털 복합전의 정치적 얽힘은 현대전이 특정 전선이나 군사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정보환경과 국제정치질서 전체가 전쟁의 일부로 기능하는 시대적 전환을 보여준다. 설령 전쟁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가자 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의 전후 복구·재정착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과 적대적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가자 지구의 경우, 무장 세력이 장기간 동안 교전을 중단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집단들은 동우크라이나의 반군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깊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현지 기반시설을 전쟁수행 체계에 긴밀히 통합해 왔고, 광범위한 해외 후원자와 연계망을 유지하고 있다.”³³⁾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서 승리”로 종결되지 않으며, 정보·여론·외교·법적 서사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정치전의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4. 디지털 복합전 검증과 전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디지털 복합전 개념이 기존 하이브리드 전쟁 이론을 포괄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상위 이론적 틀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나아가 본 개념은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에 두고 전쟁의 본질을 재정의함으로써, 미래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능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기존 하이브리드 전쟁 이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이 전통적·비전통적 수단의 병용을 묘사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했으나, 그 내적 작동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반면, 디지털 복합전 개념은 통합,

33)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한 5조 달러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재건에는 1,410억 달러, 이라크 재건에는 최소 2,200억 달러가 사용되었으나, 지속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향후 10년 동안 가자 지구의 재건 필요액은 약 53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5,240억 달러와 비교된다. Emma Isabella Sage. “The Reconstruction Trap: The Next Failure in Gaza and Ukraine?” *RUSI*, November 20, 2025.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reconstruction-trap-next-failure-gaza-and-ukraine> (검색일: 2025. 11. 17).

연계, 위협의 상호작용의 동태성과 증폭 메커니즘을 포착할 수 있는 상위 분석틀로 기능한다.

하마스의 초기 기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망을 자부하던 이스라엘에 치명적 충격을 주었다. 이는 기술 의존의 취약성 문제이다. AI, 고성능 센서, 원격무기체계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전력은 분명 높은 효율성과 정밀성을 제공하지만, 특정 기술요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전체 방어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적이 해당 핵심노드의 취약점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산·중첩된 센서 네트워크의 구축과 더불어, 수동식 대체 경보체계를 병행하는 이중 안전장치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국경의 ‘스마트 펜스’를 따라 설치된 센서, 카메라, 감시용 드론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서 조기 경보가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체계가 돌파당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하이테크 실패’를 겪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첨단 기술의 실패’ 혹은 ‘기술 자체의 치명적 결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하마스의 공격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실패한 원인은 인간의 전략적 판단 오류에 더 가깝다. 핵심은 이스라엘의 방위체계에 적용된 모든 기술이 본질적으로 인력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잘못된 가정과 복합적인 전략적 고려사항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사례는 이른바 ‘스마트’ 혹은 ‘AI 기반’ 방어체계가 완전무결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켰다. 기술적 우수성은 방어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아날로그 방어수단의 통합적 설계, 분산성 및 중첩성의 확보, 그리고 전술적·운영적 복원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투 운영 모델을 적용하였다. 정밀유도무기와 지능형 방공체계의 연계 운용은 드론·로켓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도시·비가시적 전장에서는 디지털 감시체계를 통해 인구 이동, 통신 패턴, 객체의 시간·공간적 분포를 추적·시각화함으로써 전투공간을 정보화·가시화했다. 또한 첨단기술의 도입과 전통적 정보·작전 기법을 병행했다. 중요 표적에 대한 제거 작전(암살) 사례와 테러집단의 통신 보안 취약성을 역이용한 전술(예: 무선호출기 관련 기법 등)은 일례이다.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는 화력·지상침투·참호전 등 아날로그적 공세·방어 방식과, GPS·통신이 차단될 때를 대비한 전통적 정찰·수색 방법이 병용되어 전장의 회복탄력성

34) Carchidi, Vincent. “The October 7 Hamas attack: An Israeli overreliance on technology?” Middle East Institute, October 23, 2023, https://mei.edu/publications/october-7-hamas-attack-israeli-overreliance-technology?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9. 1).

을 확보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응은 디지털 분석·정밀타격과 전통적 인간정보·현장 작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술적 강약자 양측 모두에 중요한 전훈을 제공한다. 강자는 AI-센서 융합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여론·서사·법적 정당성 관리 등 비군사적 요소를 통합한 전략설계를 병행해야 하며, 기술적 약자는 디지털 열세를 아날로그적 전술로 보완하거나, 디지털 우위를 교란·무력화하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탄력성, 즉 분산형 지휘체계와 은닉·기만전술, 그리고 현장 자율성의 확보가 장기전에서의 핵심적 생존 조건임이 확인된다.

V. 한반도에의 전략적 함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디지로그 복합전 양상의 측면에서 한반도에 특별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반도는 남북 간의 정치적 의지의 대결, 전략적 우위 경쟁, 비대칭적 전력 경쟁, 미중 경쟁의 최전선화, 지형과 기후의 영향 등으로 디지로그 복합전의 여건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소규모 충돌도 대규모의 전면전(핵전 포함)으로 급격히 확대될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력뿐만 아니라 AI, 드론, 사이버, 우주 등 최첨단 기술과 영역을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면서, 재래식 전력도 동시에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³⁵⁾ 이에 대해 한국은 첨단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며 디지털 강군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한국의 첨단 기술 기반 방위체계 확충,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반도 미래전이 전형적인 디지로그 복합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인다.

1.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과 양상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남북한은 모두 군사력 증강과 전면전 대비태세를 고도화함으로써 상호 역지의 균형보다는 적대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한국의 첨단과학기술군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맞물리며 우발적 충돌의 확대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은 소규모 국지적 충돌도 전면전

35) 류인석,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전략연구』 제32권 1호(2025).

으로 비화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미래전은 디지로그 복합전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지적 도발이나 제한적 무력충돌이 사이버전·전자전·심리전 등 비물리적 수단을 매개로 급속히 확산되며, 물리적 전장과 정보·인지 전장이 상호 중첩되는 다층적 충돌 스펙트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쟁양상은 전통적인 '전선' 개념을 해체시키고, 전장의 경계를 공간적으로 확장하며, 동시에 사회·정치·경제 전반을 전투공간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한반도의 지형적·기후적 조건 또한 이러한 복합전적 특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반도는 중심이 짧고 도시화와 산업밀집도가 매우 높아, 전쟁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인명 및 산업 기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쟁수행능력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한반도의 산악지형과 계절적 기후 변동은 기동전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전면전 발발 시 전선의 고착화와 진지전·화력전 중심의 장기 소모전으로 발전할 위험을 높인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급격한 확산성과 장기 소모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사이버·전자전·심리전 등 비물리적 영역의 전투가 선행되면서 전장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장시키고, 이후 핵·재래식 전력이 결합된 전면전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전략적 분석은 단순한 군사력 비교를 넘어, 확산 메커니즘, 전장 지속성, 국가적 회복탄력성, 기술적 상호의존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 접근을 요구한다.

2. 북한의 디지로그 신배합전략

북한은 21세기 들어 복합전 개념을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비대칭 전력 운용의 범위를 넘어, 핵·재래식·디지털·인지 수단을 통합적으로 결합한 전략체계로 진화한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하마스의 사례가 북한에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했다기보다, 오히려 북한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배합전 전략의 경험과 모델이 하마스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복합전 전략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학습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군사적 제약과 체제 생존 논리에 기반해 독자적으로 내재화된 전쟁 패러다임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최근 북한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병행 강화하는 '핵-재래전력 병행 강화'를 공식화하며, 군사전략의 중대 전환을 예고하였다.³⁶⁾ 핵전력의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병행하는

36) 『조선중앙통신』(2025. 9. 13).

이 전략은, 핵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전쟁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적 전력으로 재정의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동시에 북한은 AI, 드론, 전자전, 사이버, 우주 영역 등 디지털·비물리적 공격 능력을 다층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복합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차원의 확장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적 보완책으로 기능하며, 국가 기반시설 마비, 정보체계 교란, 심리적 혼란 조성을 통해 전선을 정보·인지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아날로그적 공격방식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다. 포병, 특수전 전력 등과 땅굴, 지하 지휘체계 및 핵시설, 현장 중심의 명령체계 등 아날로그적 구조는 첨단기술에 의한 감시·정찰을 회피하고, 전쟁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디지털 우위를 상쇄하거나 무력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운용은 북한의 전략체계를 '디지로그 복합전'에 최적화된 구조로 진화시키며, 상호 보완적 전력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핵·재래식·디지털·인지 수단의 유기적 결합은 북한의 '신배합전략'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전략은 핵역지의 단계를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현대전 수행 능력을 포함하는 '디지로그 복합전' 전략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지향하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서의 비대칭적 우위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이러한 전력 구조는 국지적 도발이 초기 단계부터 다영역적 복합전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며,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전쟁의 불가역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신배합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도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한국의 대응태세의 강점과 약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방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우위를 통한 비대칭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첨단 과학기술군 구축 및 디지털 강군화 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 감시정찰 체계의 통합, 정밀타격 능력의 고도화, 사이버 방위체계의 확충은 모두 한국군이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비대칭적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전장의 실시간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제한된 시간 내 전력 투사를 극대화함으로써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우위가 곧바로 전략적 우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첫째, 기술적 첨단화에 비해 전장 통합운용능력과 디지로그적 융합 대응체계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첨단 무기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전력 간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아울러 아날로그 방식의 대비가 부재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전략적 열세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우위를 확보하였으나, 핵전력의 불균형과 더불어 북한의 아날로그형 전술·산악전·계릴라전 능력에 대한 대응력은 제한적이다. 북한은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대신, 단순하고 저비용의 물리적 수단을 활용한 교란전과 분산형 전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중심의 한국군에게 ‘비대칭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장기 소모전에 대한 전쟁 지속 의지와 사회적 결속력 측면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체제결속형 전쟁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은 민주사회 특유의 정치·사회적 분열 구조와 피로 누적, 경제적 손실에 따른 내부 갈등이 전쟁 장기화 시 심리적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인지전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는 외부 정보조작, 허위정보 확산, 여론분열 유도 등에 대한 사회적 면역력이 약한 편이다. 이는 북한의 심리전 및 인지전 전략이 기술적 수단을 넘어 사회적 취약성을 직접 공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군사적 대응태세는 단기적·기술적 차원에서는 분명한 우위를 지니지만, 전면전의 장기화, 비가시적 전장 영역(사이버·인지전), 핵-재래식 복합 충돌이라는 다층적 국면에서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첨단화뿐 아니라, 사회적 회복탄력성과 정보통합능력, 국민적 전쟁 지속의지라는 비군사적 요소까지 포함한 전면적 대응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한국은 기술적 우위에 의존한 대응을 넘어, 정보·인지·심리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대비하는 총체적 억제체계 구축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복합전의 함의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한반도 전쟁의 국제전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남북 간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국제적 전쟁 양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반도가 이미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전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동맹의 의무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개입을 피할 수 없으며, 중국 또한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고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개입은 전쟁의 성격을 한반도 내부 갈등에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리전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후방에서의 군수 및 정보지원, 해상로 확보 등의 형태로 사실상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는 군사·기술적 연대와 정보공유를 통해 북한에 제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남아 및 유럽 주요국들은 미·중 간 세력 균형의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적 입장 표명을 통해 정치·외교적 차원의 다극적 얽힘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략적으로는 동북아 안보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다층적 복합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양국이 AI, 위성, 사이버, 전자전 등 첨단기술 영역의 전력을 투입할 경우, 한반도는 디지로그 복합전의 실험장이자, 미래전 양상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물리적 전면전과 비물리적 전쟁수단이 결합된 이 새로운 형태의 충돌은 전장의 시공간적 경계를 무너뜨리며, 현실과 인지, 인간과 기계, 정보와 물질이 혼합된 복합적 전쟁환경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전화의 과정은 한반도 전쟁의 목표·방식·결과 모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전쟁의 주도권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보다 미·중 간 전략적 의지와 기술적 우위의 상호 경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후 질서의 재편 또한 한반도 내부의 군사적 승패를 넘어 글로벌 패권구조의 재조정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전쟁은 21세기 미·중 전략경쟁의 귀결과 국제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맞물려 전략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디지로그적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쟁의 확대를 조기에 방지하고, 유리한 여건에서 종결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요구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이 지닌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분석 틀로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핵심 목적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전쟁 구조를 검증함으로써 미래전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과 첨단기술의 우위가 승패를 좌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밀 유도무기, 실시간 정보망,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체계 등 이스라엘의 고도화된 디지털 전력은 전쟁 후반부의 작전 효율성과 반격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전쟁은 '디지털 강군'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단선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하마스가 초기 단계에서 디지로그적

전투양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디지털 방어체계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던 점,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또한 신구의 기술적·전략적·전술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대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마스는 상업용 드론, 로켓, 지상침투대, 심리전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비정규 세력임에도 다영역 통합전의 초동 충격을 구현하였다. 반면 이스라엘은 고도화된 디지털 감시·공격체계뿐만 아니라, 아나로그적 작전, 전통적 정보활동, 외교적 설득, 사회적 동원력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전황을 재편하였다.

결국 이 전쟁은 순수한 디지털 우위의 대결이 아니라, 상이한 수준의 디지로그적 융합이 충돌한 복합전적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기술적·전략적·사회적 자원의 융합과 적응 능력이 전쟁의 양상과 결과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례는 21세기 전쟁이 '디지털 대 아날로그'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디지로그 복합체 간 경쟁과 상호진화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디지로그 복합전은 전쟁을 기술적·인간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함으로써, 전쟁이론의 인식론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둘째, 전쟁의 본질인 복합성의 강도는 더욱 증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 디지로그 복합전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그를 포괄하고 재구성하는 상위 메타패러다임으로 기능함을 입증하였다.

한반도는 전통적 군사력 대치와 첨단기술 경쟁, 정보·인지전이 중첩된 복합안보지대로서, 디지로그 복합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한국의 기술기반 방위체계 확충,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확산은 전통적 억제체계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순한 억제전략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통합 지휘통제체계, 사이버-전자-인지 융합 억제전략, 회북탄력성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디지털 강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차원의 전략적·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디지로그 강군'의 육성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영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국의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제13집 제3호(2024).
- 김은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함의.” 『지중해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2025).
- 류인석.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전략연구』 제32권 제1호(2025).
- _____. “‘디지로그 복합전’ 개념과 전략적 함의 : 기존 미래전 개념의 한계와 대안 탐색.” 『한국군사』 제17집(2025).
- 박창희.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화전쟁: 제지능권 개념과 지능우세 달성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3호(2021).
- 설인효·배학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 의.” 『국방연구』 제66권 제2호(2023).
- 송승중. “하이브리드 전쟁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국방연구』 제59권 제4호(2016).
- 송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 전개양상과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24-11.
- 이상국. “중국군의 ‘지능화전쟁’ 논의와 대비 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 (2020).
- 이어령. 『디지로그』(서울: 생각의 나무, 2008).
- 지효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 하이브 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제1호(2024).
- 하영선.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 21세기 미국군사의 역사적 전망.” 『미국 학』 제23권 (2000).
- Byman, Daniel and McCaleb, Emma. “Published Understanding Hamas’s and Hezbollah’s Uses of Information Technology.” *CSIS*, July 31, 2023, https://www.csis.org/analysis/understanding-hamass-and-hezbollahs-uses-information-technology?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1).
- Carchidi, Vincent. “The October 7 Hamas attack: An Israeli overreliance on technology?” Middle East Institute, October 23, 2023, https://mei.edu/publications/october-7-hamas-attack-israeli-overreliance-technology?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1).
- Cohen. Eliot A. “Introduction: How to Think About Modern Warfare.” *CSIS*, September 16, 2025 <https://www.csis.org/analysis/introduction-how->

- think-about-modern-warfare (검색일: 2025. 10. 15).
- Hoffman, Frank G. "Complex Irregular Warfare: The Next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rbis*, Vol. 50, No. 3(2006).
- _____. "Examining Complex Forms of Conflict: Gray Zone and Hybrid Challenges." *PRISM*, Vol. 7, No. 4(2018).
- Israel Defense. "Meet the Rooster, Robotican's New Hybrid Robotic Drone Employed by the IDF in Gaza."(January 18, 2024). <https://www.israeldefense.co.il/en/node/60981> (검색일 2025. 8. 30).
- Mattis, James N. transcript, Roll Out Speech for National Defense Strateg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Washington, DC, January 19, 2018.
- McCuen, John J. "Hybrid Wars." *Military Review*, Vol. 88, No. 2(2008).
- Nakhoul, Samia and Saul, Jonathan. "How Hamas duped Israel as it planned devastating attack." Reuters, October 11, 2023.
- Pahlavi, Pierre. "Digital Hezbollah and Political Warfare in Cyberspace."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31, 2022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digital-hezbollah-and-political-warfare-cyberspace-205558> (검색일: 2025. 4.5).
- Roudani, Cherkaoui. "Regulated Disorder: Israel-Hamas and the Truce as a System of Power." *Modern Diplomacy*, October 17, 2025, https://moderndiplomacy.eu/2025/10/17/regulated-disorder-israel-hamas-and-the-truce-as-a-system-of-power/?utm_source=chatgpt.com(검색 일: 2025. 9. 4).
- Reuters. "Hezbollah broadcasts drone video it says shows airbase deep in Israel." July 24, 2024.
- Sandboxx. "Was Israel's Iron Dome overwhelmed, overhyped, or right on target?" October 12, 2023 https://www.sandboxx.us/news/was-israel-iron-dome-overwhelmed-overhyped-or-right-on-target/?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9. 4).
- Schneider, Jacquelyn. "The capability/vulnerability paradox and military revolutions: Implications for computing, cyber, and the onset of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2, Issue 6(2019).
- Sylvia, Noah. "The Israel Defense Forces' Use of AI in Gaza: A Case of Misplaced

- Purpose.” *RUSI*, July 4, 2024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israel-defense-forces-use-ai-gaza-case-misplaced-purpose> (검색일: 2025. 9. 5).
- Trenta, Luca. “Nowhere to Hide: Israel’s Pager Attacks on Hezbollah,” *RUSI*, September 18, 2024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nowhere-hide-israelpager-attacks-hezbollah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9. 1).
- US Army. “Subterranean Operations: Lessons from Gaza,” No 25- 1031, Center for Army Lessons Learned August 2025, https://api.army.mil/e2/c/downloads/2025/09/09/303436de/subterranean-operations-israeli-defense-force-lessons-from-gaza.pdf?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8. 5).
-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Washington DC: US DoD, 2015.
- Watling, Jack and Reynolds, Nick. “Tactical Lessons from Israel Defense Forces Operations in Gaza,” *RUSI*. July 11, 2024.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tions/occasional-papers/tactical-lessons-israel-defense-forces-operations-gaza-2023> (검색일: 2025. 9. 1).
- 『조선중앙통신』(2025. 9. 13).
- The Associated Press. “Israel announces completion of security barrier around Gaza.” (December. 8, 2021).

Analysis of the Israel- Hamas War: Apply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Digilog Hybrid Warfare’

Inseok Yoo

Keywords

Israel-Hamas War, Digilog Hybrid Warfare, Hybrid Warfare, Future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Israel-Hamas War represents one of the most vivid manifestations of the hyper-complex nature of modern warfare. In this war, non-physical means such as cyber attacks, information warfar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traditional kinetic operations involving rockets and missiles. Moreover, cutting-edge technologies—AI, drones, and electronic warfare—interacted dynamically with analog methods such as incendiary warfare, tunnel operations, and urban combat, producing a highly integrated and multifaceted form of warfare. This battlefield environment exemplifies a multi-dimensional hybrid war, in which the boundaries between technology and humanity, the physical and the non-physical, and reality and cognition are blurred.

Existing concepts such as hybrid warfare and intelligitized warfare are insufficient to fully account for this level of complexity and interac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Israel-Hamas War through a new conceptual framework termed “Digilog Hybrid Warfare.” This framework posits that digital and analog capabilities are interwoven, an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dual dimensions fundamentally shapes the course and outcome of war. Through this concept, the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Israel-Hamas conflict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Korean defense strategy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military theory.

[논문투고일: 2025. 10. 31.]

[심사의뢰일: 2025. 11. 11.]

[게재확정일: 2025. 12. 17.]

지휘통제의 본질과 발전방향: 지휘의 술(Art)과 통제의 과학(Science), 두 요소의 조화를 중심으로

조태근*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사례연구: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 두 요소의 조화 여부가 승패를 가른 전쟁 사례
- IV. 지휘통제 발전방향
- V. 결론

요약

현대전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휘관의 통찰력과 정밀한 정보체계가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C4I 등 기술 중심의 정보체계에 치우쳐 지휘의 인간적·예술적 요소에 대한 고찰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천상륙작전과 걸프전쟁, 베트남전쟁과 러시아의 키이우 공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휘관의 전략적 통찰, 명확한 지휘의도, 예하부대의 자율성, 그리고 과학적 통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작전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지휘통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을 융합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의 육성, JADC2 기반 지휘통제 역량 향상, 임무지휘에 기반한 실전적 과학화전투훈련 강화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지휘통제, 지휘의 술, 통제의 과학, 조화, 지휘통제체계, 리더십

*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관, 군사학박사

I. 서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전쟁이 인류 문명의 일부분이며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저서『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의 본질을 정치적 목적, 원초적 폭력성, 불확실성, 우연과 개연성, 군 지휘관의 창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전쟁을 “폭력행위의 연속”으로 보았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잔혹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¹⁾ 이러한 본질적 속성들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전쟁 양상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대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참호전과 포병전 같은 재래식 방식부터 드론전, 사이버전, AI·로봇전 등 첨단 방식까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장 공간은 지상·해양·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되었으며, 민간 기술과 인프라까지 작전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쟁 양상이 다차원적으로 진화하면서 작전환경은 급격히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투영역과 수단을 통합·조율하는 지휘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휘통제는 단순한 명령 전달 체계가 아니라, 전장에서 인간의 의지를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지휘(Command)는 지휘관의 통찰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술(Art)’의 영역이며, 통제(Control)는 절차와 시스템 기반의 ‘과학(Science)’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 두 요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극대화된다.²⁾

특히,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지휘와 통제를 독립된 요소로 보지 않고 감지(Sense) - 의도(Make Sense) - 행동(Act) 간 연결 구조로 해석하는 관점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김중희·최영찬(2023)은 “한국군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전략” 논문에서 전 제대와 작전영역 간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지휘통제를 데이터 중심의 순환 메커니즘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지휘와 통제를 병렬적 기능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 작동 체계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점차 과학의 영역인 ‘통제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

1) Carl von Clausewitz 지음, 김만수 옮김. 『전쟁론』(서울: 갈무리, 2016), pp. 59~83.

2) US Army. ADP 6-0 *Mission Command: Commander and Control of Army Forces*(2019), pp. iii ~vii, p. 1-16.

다. 정보기술의 발전, AI 및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 개념의 부상 등은 통제의 실시간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했지만, 반대로 지휘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장 상황이 데이터화되고, 중앙집권적 결심이 가능해진 환경에서는 지휘관의 현장 판단과 의도가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황 발생 시 상급부대 보고에 매몰되어 현장 조치를 못한다”는 일선의 비판에서 드러나듯, 우리 군 지휘통제 구조의 경직성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는 C4I체계와 같은 통제 시스템의 기술적 발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지휘와 통제 간 조화 및 인간적 요소에 대한 심층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현대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지휘와 통제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현대전 사례를 통해 두 요소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전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효과적인 지휘통제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지휘통제 관련 군사 이론, 국내외 학술논문, 전쟁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휘와 통제의 작동 원리를 고찰하였다. 사례연구는 인천상륙작전과 걸프전쟁의 성공 사례, 베트남전쟁과 러시아의 키이우 공세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지휘와 통제의 조화 여부가 전쟁·작전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지휘통제를 단순한 기술적·제도적 요소로 보지 않고, 인간의 통찰력과 창의적 리더십, 기술 기반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메커니즘으로 접근하였다는 데 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확산되는 현대전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판단과 리더십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C2)의 개념

가. 지휘통제의 정의

전통적으로 지휘(Command)는 지휘관이 개인적 통찰, 경험, 결단을 바탕으로 부하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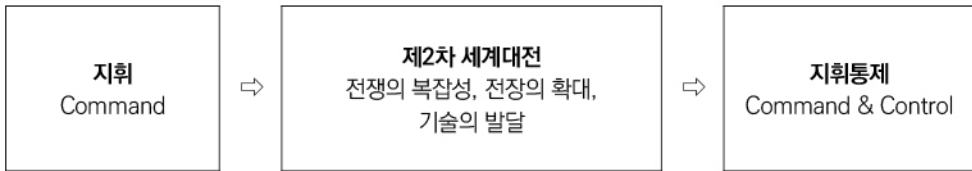
끄는 리더십 중심의 개념이었다. 이는 고대부터 나폴레옹 전쟁기까지 군 지휘의 본질로 작용했으며, 전장에서의 지휘는 지휘관이 전투 전체를 보면서 결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양상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병력과 장비, 전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통신기술, 무기체계의 자동화, 작전의 동시다발성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지휘만으로는 작전 전체를 조율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통제(Control)’ 개념이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통제를 지휘의 일부 기능으로 보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통제는 지휘와 구분되는 독립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코클리(Thomas P. Coakley)³⁾는 “통제는 지휘의 유기적 기능으로 간주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중 문헌에서 ‘통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더욱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⁴⁾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지구적이고 다차원적인 전쟁으로, 전장의 복잡성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육·해·공군·해병대의 복잡한 합동작전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명령 전달을 넘어 상황 인식과 자원의 조율, 전장과 예비부대 감독 기능까지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지휘’ 개념만으로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지휘(command)’와 ‘통제(control)’를 결합한 ‘지휘통제(C2)’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전환점이 되었다.⁵⁾

〈표 1〉 지휘통제의 형성



현대에 이르러 지휘는 ‘예술(Art)’, 통제는 ‘과학(Science)’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지휘는 지휘관의 창의성·직관·결단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통제는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⁶⁾. 이처럼 지휘와 통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대전의

3) 코클리(Thomas P. Coakley)는 미국의 군사학자이자 지휘통제(C2) 이론의 대표적 연구자이다.

4) Gregory A. Roman. *The Command or Control Dilemma: When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Orientation Collide*, Air University Press(1996), p. 4 재인용.

5) Martin Van Creveld. *Command in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 1~16,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Forces*(2003), p. 2-13, p. xii 재구성.

6) US Army. FM 6-0(2003), p. 2-13, p. 3-9.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기능으로 작동하며 함께 발전해왔다.

우리 군은 지휘통제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예하 부대 및 관련 부대에 대해 권한과 지시를 행사하는 것”⁷⁾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군 또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지명된 지휘관이 예속 및 배속부대에 대해 권한과 지시를 행사하는 것”⁸⁾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휘통제를 단순한 명령과 권한의 행사로만 국한시키는 한계가 있다.

지휘통제(C2)는 단순한 지휘와 통제의 병렬 개념이 아니라, 작전 수행의 핵심 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휘는 지휘관이 부여받은 권한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결심하고, 부대에 행동을 명령하는 결심의 술(Art)이며, 통제는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부대 활동과 전투 기능을 조정·감시·통합하는 과학(Science)이다.⁹⁾

단독적인 지휘만으로는 임무 달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효과적인 지휘는 통제의 지원없이 불가능하다¹⁰⁾. 통제가 결여된 전투력은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통제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휘와 통제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 작전환경에서는 지휘와 통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융합적 체계로 작동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휘통제란 “지휘관이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 하에,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군사작전을 계획, 준비, 실행하는 통합적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지휘통제 프레임 이해

〈그림 1〉은 지휘통제 개념을 구조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휘통제를 지휘통제체계(C2 System) 자체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휘통제체계는 C2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휘통제 그 자체는 아니다.

지휘통제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지휘관은 예술성과 과학성을 결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참모의 보좌를 받아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을 내리며, 지휘통제체계를 기반으로 일련의 작전 과정을 지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하부대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지휘함으로써 작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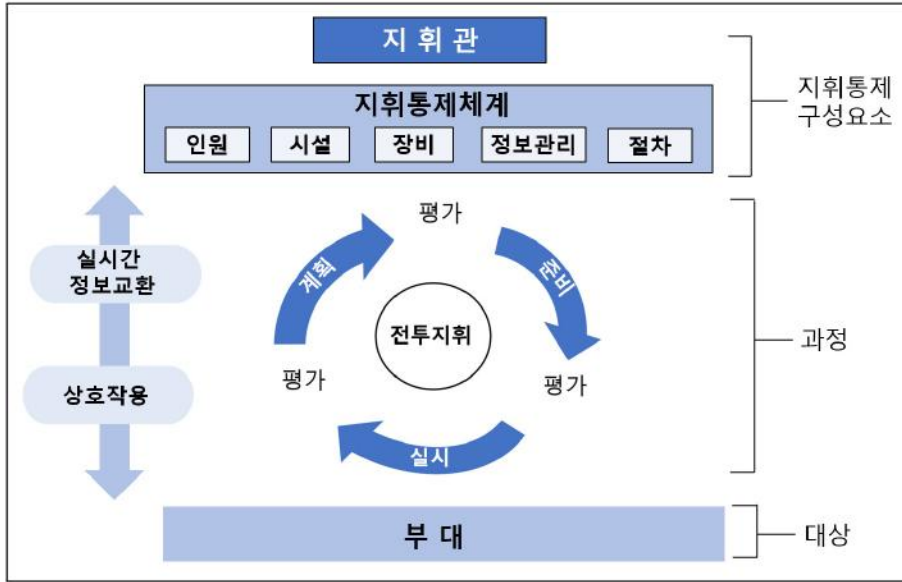
7)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2024)』p. 323.

8) US JCS.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2021), p. 40.

9) US Army. *FM 6-0 Commander and Staff Organization and Operations*(2022), p. 1-1~5 재구성.

10) 육군. 『지휘통제(2022)』p. 2-1.

〈그림 1〉 지휘통제의 프레임



출처: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2003) p. 1-2, 신동찬, 두석주 등. 『C4I체계의 이해』(대구: 황금소나무, 2012), pp. 128~129 내용 재구성.

지휘통제체계는 지휘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¹¹⁾

- 인원: 지휘관, 부지휘관 및 참모, 이들을 보좌하는 지휘통제 요원 등이 있다.
- 시설 및 장비: 지휘통제체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로, 지휘소 방호시설, 편의시설, 의료지원시설, 지휘차량, 수송 및 전력지원 장비 등이 포함된다.
- 정보관리: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적소에 제공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정보관리에는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정보체계(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체계, 운용 규정 및 절차 등)가 포함된다.
- 절차: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행방법을 표준화한 것이다. 작전 계획수립 절차 등의 교리적 절차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조치를 정의하고 표준화한 예규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체계의 발전은 지휘관과 참모에게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심의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전장의 가시화, 정보의 객관성과 적시성 증대는 통제의 과학적 측면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1) US Army. FM 6-0(2003), pp. 1-5~7, 공군. 『지휘통제(2022)』pp. 18~21 내용 재구성.

그러나 정보체계는 지휘통제체계의 일부이며, 인원, 시설, 절차 등 다른 구성요소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지휘통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아무리 첨단 정보체계를 갖추었더라도, 지휘관이 이를 작전환경에 맞게 적절히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휘통제의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지휘관의 판단력과 운용 요원들의 역량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지휘통제의 이론적 기반: OODA 루프

현대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이론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분석 틀 중 하나는 존 보이드(John R. Boyd) 대령이 제시한 OODA 루프이다. 본래 이 개념은 공중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의사결정모델이었으나, 이후 기동전, 충격과 공포 작전,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 등 현대 군사개념의 이론적 기반으로 발전하였다.¹²⁾

OODA 루프는 관찰(Observe)-판단(Orient)-결심(Decide)-행동(Act)이라는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이는 단순한 순차적 구조가 아닌 순환적이며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의사결정 주기를 보여준다. 오늘날 지휘통제의 과정(Process)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군의 교리에서도 이 OODA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¹³⁾

〈그림 2〉의 OODA 루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¹⁴⁾

관찰(Observe)은 전장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정보·감시·정찰(ISR), 예하 부대의 상황보고를 통해 적과 아군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관찰 단계는 공통작전상황도(COP)¹⁵⁾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며, 통제 기능의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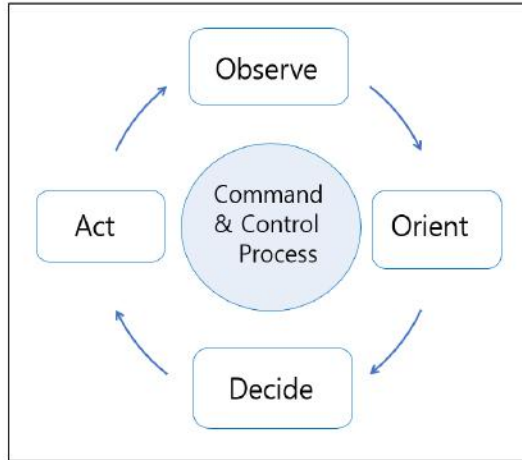
12) Martin Révay, Miroslav Liška. "OODA Loop in Command & Control Systems." *Conference Paper*, October 2017, p. 3.

13) US JCS. JP 3-13.1 *Joint Doctrine for Command and Control Warfare(C2W)*(1996), pp. A1-A2 재구성.

14) US JCS. JP 3-13.1(1996), pp. A1-A2 내용을 근거로 각 단계를 설명함.

15) COP(Common Operational Picture): 관련 정보에 대한 단일의 동일한 전시로, 모든 제대 간 상황인식이 원할히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상황도를 말함.(출처: 『연합·합동군사용어사전(2024)』).

〈그림 2〉 Simple OODA Loop for C2 process



출처: Martin Révay, Miroslav Liška. "OODA Loop in Command & Control Systems." *Conference Paper*, October 2017.

판단(Orient) 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휘관이 전장 환경을 해석하고 적의 의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때 지휘관의 경험과 직관은 불완전한 정보를 보완하며, 판단의 질을 좌우한다.

결심(Decide) 단계에서는 판단 결과에 따라 지휘관이 작전 결정을 내리고 이를 명령 형태로 하달한다. 이 과정은 지휘의 핵심이며, 빠르고 정확한 결단이 작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마지막 행동(Act) 단계는 예하 부대가 지휘관의 결정을 실질적 작전으로 전환하여 실행하는 단계로, 지휘통제체계의 작동 여부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OODA 루프는 각 단계가 고정된 절차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순환고리를 형성하며, 이 고리를 빠르게 순환시킴으로써 적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전장 상황인식의 우위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결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휘통제의 속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적은 아군에 대비할 준비 시간을 박탈당하여 혼돈과 충격에 의해 패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OODA 루프는 지휘통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경직된 명령 체계보다는 현장 상황에 유연한 지휘통제가 요구된다. 전장은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복합적 상황에서의 대응 유연성이 중요하다. 둘째, OODA 루프는 각 제대별 지휘관마다 갖게 되므로 지휘관에게 자율성과 분권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휘방식이 필수적이

16) 군사학연구회. 『군사학개론』(서울: 플래넷미디어, 2023), p. 161~162.

다. 상급부대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구조는 반응속도를 늦추며, 이는 곧 작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전장의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구조로, 지휘통제 역시 이에 발맞춘 순환성과 적응성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OODA 루프는 단순한 의사결정 도식을 넘어, 지휘통제의 신속성, 유연성, 현장 적응력을 높이며,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 교란 능력을 아우르는 지휘통제 이론의 핵심 프레임워크로 작동한다.

3. 지휘의 술(Art of Command)과 통제의 과학(Science of Control)

가. 지휘의 술(Art of Command)

지휘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하며, 기관이나 집단이 아닌 지휘관 개인에 의해 수행된다. 지휘관은 자신의 지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지휘 스타일과 방식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¹⁷⁾

이러한 지휘의 속성은 통찰력, 창의성, 리더십 등 인간 중심의 역량을 의미하는 지휘의 술(Art)로 표현된다. 지휘의 술은 단순한 절차적 지식이나 정보통신체계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지휘관 고유의 사고력과 판단력에 기반한 예술적 영역이다. 지휘의 술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체화된다.

1) 전장 통찰력

통찰력(Insight)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¹⁸⁾으로 사물이나 어떠한 상황의 맥락, 본질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휘관은 단순히 정보참모가 보고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는 적의 의도, 상황의 흐름, 작전환경 변화에 담긴 숨은 의미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편적인 데이터를 넘어 전장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전장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찰은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논리적 사고, 전장 경험의 축적, 전쟁사 연구 등에서 비롯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창의적 대응과 결심의 기초가 된다.

2) 창의적 결심과 지휘관 의도 제시

지휘의 술(Art)은 대부분 지휘관의 결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¹⁹⁾ 결심은 단순히 정

17) US Army. FM 6-0(2003), p. 2-1.

18) 표준국어대사전(검색일: 2025. 9. 11).

답을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방책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과정이다. 지휘관은 모호하고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결심을 해야 하며, 그 결정은 지휘관 의도(Commander's Intent)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지휘관 의도는 예하 지휘관에게 임무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

3) 신뢰 구축과 리더십 발휘

현대의 분산된 전장 환경에서는 모든 상황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명령 전달이 아니라 소통, 전문성, 공통된 전문관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예하 지휘관의 주도적 참여와 창의적 행동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된다.

지휘관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휘를 완성해야 한다. 리더십 발휘의 가장 큰 효과는 구성원들을 자발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²⁰⁾ 리더십은 구성원의 전투의지를 고취시키고, 조직을 단결시켜 임무완수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이다.

나. 통제의 과학(Science of Control)

지휘가 지휘관의 개인적 통찰력과 리더십에 기반한 예술적 영역이라면, 통제는 그 지휘가 작전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절차, 기술, 시스템에 기반한 과학적 활동이다. 통제는 부대가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며,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정확한 정보, 명확한 절차, 실행 가능한 체계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지휘는 제대 수준에 관계없이 비교적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통제는 제대가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통제해야 할 예하부대와 자원, 정보, 작전활동이 많아지면서 복잡성도 증가한다.²¹⁾ 이에 따라 상급 지휘관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참모조직을 운용하며, 참모가 없는 소규모 제대의 지휘관은 통제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²²⁾

통제는 대체로 참모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수집된 정보의 분석, 작전소요 산정, 전투력 할당, 성과 평가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판단과 기술적 절차가 중심이 되는 '과학의 영역'이다. 통제의 과학은 다음 세 가지 특성으로 구체화된다.

19) US Army. FM 6-0(2003), p. 2-14.

20) 육군. 『지휘통제(2022)』p. 2-15.

21) US Army. FM 6-0(2003), pp. 3-1~2.

22) US Army. FM 6-0(2003), p. 3-9.

1) 원활한 정보의 흐름과 상황 인식

통제의 가장 근간은 원활한 정보의 흐름과 전 부대의 공통의 상황 인식이다. 이를 위해 정보의 흐름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통작전상황도(COP)를 유지하여 상하 지휘관이 공통의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²³⁾ 전장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지휘결심의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고, 전장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2) 정보체계의 효과적 활용

첨단 정보통신체계의 활용은 작전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체계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복합 전장환경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휘관이 신뢰성 있는 정보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자원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통제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정보체계는 계획-준비-실시-평가의 순환적 작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휘관과 참모의 데이터 기반 판단을 통해 임무 재조정, 전투력 배분 등 주요 작전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학적 통제체계는 전투 효율성과 예하 부대의 생존성 향상에 기여한다.

과거 군인들이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전투에 임했다면, 오늘날에는 여기에 정보체계라는 강력한 화기를 추가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²⁴⁾ 개발 역시, 정보체계가 현대전에서 결정적 전투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3) 통제수단

통제수단(Control Measures)은 모든 작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통의 주요 도구로서, 부대의 활동과 전투수행기능을 제한, 허용, 조정, 협조,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²⁵⁾ 이는 지휘관의 의도를 예하부대에 명확히 전달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통제수단에는 작전계획이나 명령을 비롯해, 법령 및 규칙, 부대예규, 교리적 수단(Doctrine-

23) US Army. FM 6-0(2022), pp. 6-7~8 재구성.

24) JADC2(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등 모든 군종의 센서를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미국 국방부의 개념으로 JADC2를 통해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많은 센서를 무기시스템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출처: 美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March 18, 2021).

25) 육군, 『지휘통제』, 2022, p. 부록1-6.

based Measures)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각종 통제선, 통제구역, 작전 책임지역 등은 지리적, 기능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간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 교리적 수단이다.²⁶⁾

지휘관은 통제수단을 통해 하위 제대 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첩이나 간섭 없이 각 부대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전환경을 조성한다. ‘강한 통제’와 ‘약한 통제’의 개념 또한 이러한 통제수단의 선택과 운용 방식에서 비롯되며, 지휘관의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 작전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그 적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제의 범위와 정도를 세밀히 설정하는 방식은 전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부대의 자율성과 신속한 상황 대응력을 저해할 수 있다. 반대로, 통제를 최소화하고 예하부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우, 유연한 작전운용은 가능하나 통합성 부족으로 인한 혼선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통제수단은 작전의 성격, 환경, 그리고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강약 조절의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전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통제수단의 운용은 절차적 적용에 그치지 않고, 지휘관의 의도와 작전환경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휘와 통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적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지휘와 통제는 개별적 기능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실제 전장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라는 구분은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한 틀일 뿐,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지휘에도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통제에도 지휘관의 직관, 철학, 전술적 창의성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AI 기반 지휘결심 보조, 복합적인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통제 운용 등은 양자의 구분이 경계 없이 작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휘와 통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6) 육군(2022), pp. 2-34~36 재구성.

III. 사례연구: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 두 요소의 조화가 승패를 가른 전쟁 사례

본 장에서는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조화를 이루어 승리한 전쟁과 두 요소의 부조화로 실패한 전쟁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 두 요소의 조화로 승리한 전쟁 사례

가. 걸프전쟁(Operation Desert Storm, 1991)

걸프전쟁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 개입해 전개한 전쟁으로, 현대전의 주요 특징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대규모 우회기동을 통한 기동전의 효과, 정보우위의 결정적 역할,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무기의 압도적 위력,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의 전략적 판단이 전장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²⁷⁾

지휘의 술(Art of Command) 측면에서, 슈워츠코프(General Norman Schwarzkopf) 사령관은 작전 초기 기존의 정면공격 대신 기만작전과 측면 우회기동(Left Hook)²⁸⁾을 선택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주력부대를 포위·격멸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전통적 교리를 탈피한 전장 통찰력과 창의성의 산물로, 기동전 이론을 능동적으로 응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²⁹⁾

그는 또한 작전목표와 의도를 명확히 설정하되, 수단과 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임무지휘(Mission Command³⁰⁾)를 적용하였다. 슈워츠코프 사령관은 당시 미 7군단의 Left Hook 기동 작전에 있어, 지휘관인 프랭크스(Frederick M. Franks Jr.) 중장에게 작전 수행 방식 전반을 위임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지휘관은 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과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위임은 작전의 기동성과 민첩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상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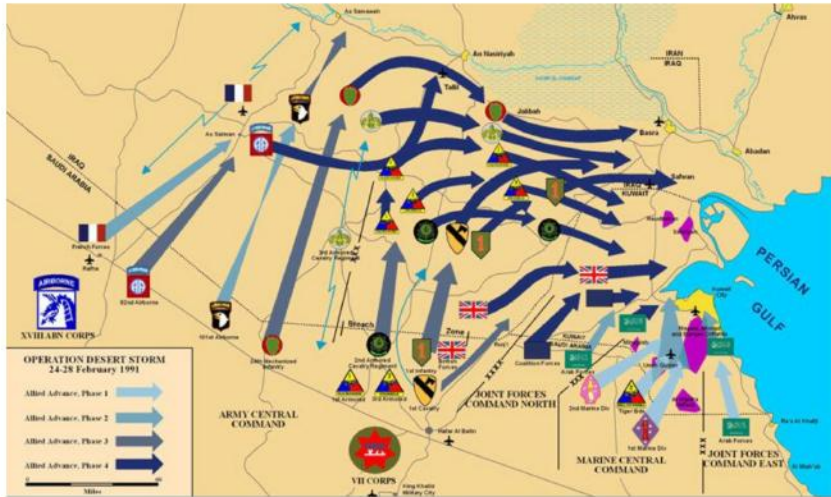
27) 합동대. 『세계전쟁사(下)』, 2012, pp. 10-303-166~170.

28) Left Hook: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 당시 다국적군 지상군의 대규모 우회 기동 작전을 일컫는 별칭으로, 기만작전, 미 제18공정군단과 제7군단의 대규모 기동, 포위 및 섬멸 작전 순으로 진행되었다.(출처: Donald P. Wright. "Deception in the Desert: Deceiving Iraq in Operation DESERT STORM", Army University Press, 2006., 합동대(2012), pp. 10-303-119~165).

29) 합동대(2012), pp. 10-303-119~165.

30) 임무지휘(Mission Command): 임무형 명령에 기초하여 분산된 실행을 통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출처: US JCS.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2021.), 지휘관 의도를 공유한 상태에서 예하 부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지휘 개념이다.

〈그림 3〉 사막의 폭풍작전시 단계별 진격도



출처: 합동대, 『세계전쟁사(下)』2012, pp. 10-303-165.

이러한 지휘는 슈워츠코프 대장 이하 야전 지휘관들이 월남전 참전에서 얻은 실전 경험, 전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현대무기에 대한 이해, 사막에 대한 적응 등의 능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³¹⁾

통제의 과학(Science of Control) 측면에서, 걸프전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지휘 통제체계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첫 전쟁으로 평가된다. 정찰위성과 고공정보기, 특수부대, 합동정보망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정확한 정보의 흐름과 실시간 상황 인식이 가능해졌다.³²⁾ 특히, 정밀유도무기(PGM), 스텔스 폭격기(F-117A), 탄도미사일 요격체계(PATRIOT), GPS 기반 항법장비 등 첨단 무기체계가 대규모로 운용되었으며, 센서-투-슈터(Sensor-to-Shooter) 체계를 통해 실시간 표적획득과 정밀 타격이 긴밀히 연계됨으로써 작전의 신속성과 타격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³³⁾ 미군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JSTARS³⁴⁾, Link-16³⁵⁾ 등으로 구성된 통합 전장 정보통신체계를 활용해 전역

31) 합동대(2012), pp. 10-303-169~170.

32) 합동대(2012), pp. 10-303-167~170 재구성.

33) US Department of Defens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 Final Report to Congress*, April 1992.

34) JSTARS(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 지상 감시 및 표적 레이더 식별용 항공 레이더 시스템으로 위성, 항공기, 기타 정찰자산과 연동됨.

35) Link-16: NATO 계열의 데이터 링크 체계로, 항공기·지상·해상 자산 간 실시간 전술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망.

수준에서 상황판단과 타격결심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였다.

이는 단순한 통제 절차의 자동화뿐 아니라, 지휘관이 신속하고 정밀한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휘의 과학적 기반 또한 강화된 사례였다. 즉, 정보기술은 지휘와 통제 양 측면 모두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 상황 인식,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 향상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걸프전은 상급 지휘관의 전략적 통찰과 창의적 결심, 예하 지휘관의 자율성과 현장 판단 존중,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정밀한 지휘통제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 전과를 달성한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 1950)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전세를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상륙작전으로,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정교하게 결합된 대표적 작전 사례이다. 이 작전은 전쟁 발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한강 전선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최초 구상되었으며, 시점은 개전 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기였다.³⁶⁾

일찍이 미 합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인천의 자연적 장애요소를 들어 상륙작전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주요 요인으로 첫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으로, 작전 가능시간이 약 3시간에 불과한 점. 둘째, 인천항으로 연결되는 수로는 단일수로로써 대형 함정의 진입이 어렵고, 북한군의 포격이나 기뢰에 의해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간조 시 6km에 달하는 갯벌과 5~6m 높이의 부두 등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³⁷⁾ 미 합참은 군산, 아산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휘의 술(Art of Command) 측면에서, 맥아더 장군은 지형적·기상적 제약이 큰 인천을 상륙지점으로 선택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접근이 아닌, 신장된 적의 병참선 차단과 서울 조기 탈환을 통해 전략적·심리적·정치적 효과까지 고려한 전장 통찰력의 산물이었다. 인천의 불리한 지형 조건이 오히려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³⁸⁾

그는 상륙작전의 목표와 의도를 분명히 하달하고, 세부 실행계획은 예하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위임하였다. 상륙작전계획의 작성과 집행의 책임은 제7합동기동부대사령관 스트러블

36) 해병대사령부. 『상륙전사』2008, pp. 4-14~15 재구성.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2016, pp. 134~135.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6), p. 13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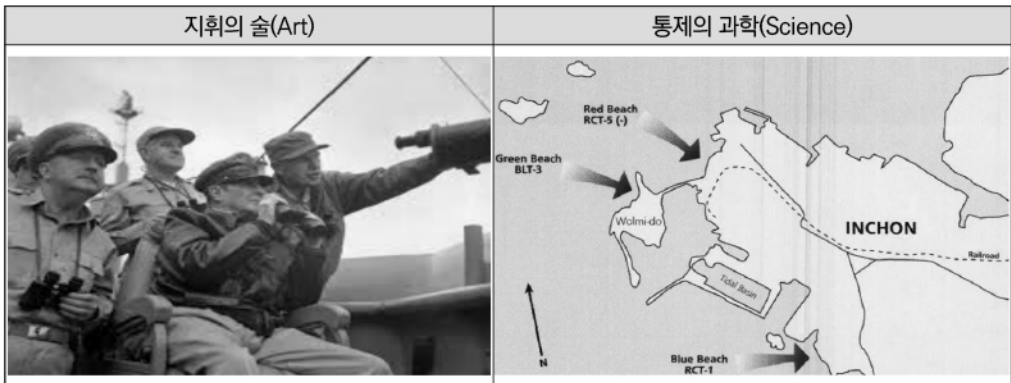
제독과 제1상륙전대 사령관 도일 제독, 그리고 제1해병사단장인 스미스 소장이었다. 이 3명의 장성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많은 상륙작전의 경험을 지닌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스트러블 제독이 상륙작전의 전반적 계획을 결정하고, 도일 제독이 상륙기동부대의 작전계획을 담당했으며, 스미스 장군은 상륙군의 작전계획을 맡았다.³⁹⁾

이러한 접근은 현대적으로 보면 임무지휘의 요소를 포함하며, 현장 지휘관의 창의성과 판단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상륙시간 조정, 기만작전 등 전술적 세부 요소는 예하 전술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하였다.

통제의 과학(Science of Control) 측면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은 당시 기술 수준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물이었다. 조수 간만 시간표, 수로 정찰, 상륙해안 선정(레드·블루·그린 비치), 병력 배치, 함포 사격, 항공지원, 그리고 실시간 통신체계 구축까지 수십 개의 요소가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중심의 통제가 아닌, 시간 기반 중심의 통제체계였으며, 정보수집-판단-실행 측면에서 원활한 정보의 흐름과 전 부대의 공통의 상황 인식을 달성하였다.

특히,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육군과 공군에서 전문가가 파견되어 인천의 상륙 예정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미 해군 클라크 대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 후방 지역에 잠입하여 직접 정찰과 정보 수집을 수행하였으며, 그의 세밀한 정보 보고는 인천 상륙 지점의 선정과 상륙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사전조사 차원을 넘어, 상륙작전의 전반적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 요인이 되었다.⁴⁰⁾

〈그림 4〉 인천상륙작전의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의 조화



39) 해병대사령부, 『상륙전사』2008, pp. 4-22~23 재구성.

40) 해병대사령부(2008), p. 4-24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더의 전략적 통찰력과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기습 효과 - 적의 신장된 병참선 차단 - 서울 조기 수복을 통한 정통성 회복 • 맥아더의 상륙작전 경험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해군·해병대의 상륙 능력 신뢰 - 맥아더의 다수의 상륙작전 지휘 경험 • 양동 및 기만작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상륙작전(9.14) - 군산·포항·목포 등 공습을 통하여 상륙 예상지역 기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밀한 계획 및 시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보조상륙(월미도 탈취) - 2단계: 함안이동 및 육상작전, 해안교두보 확보 - 3단계: 해안교두보 확보 이후 차후작전 • 인천 앞바다의 만조를 고려 상륙일 선정(9. 15), 사전 수로 정밀정찰 • 상륙지점 선정: 레드·블루·그린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에 대한 지형, 조수, 적 방어시설, 아군 투입병력 등을 고려 선정 • 지상·해상·공중 간 실시간 통신체계 운용
---	--

출처: 해병대사령부. 『상륙전사』2008,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4권)』1992.

결론적으로, 걸프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은 공통적으로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복잡하고 불확실한 전장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2.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 두 요소의 부조화로 실패한 전쟁 사례

가. 베트남전쟁(1965~1975)

베트남 전쟁은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개입한 전쟁으로, 미군의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정치·전략적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부조화된 대표적 사례였다.

‘지휘의 술’ 측면에서 미국의 주요 정치가들은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개입하였지만, 명확한 전쟁의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⁴¹⁾ 베트남 전쟁의 목표를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모호한 수준에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작전의 방향성과 성공기준이 불분명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국방부 등 정치지도자들은 작전 수행의 세부 전술 수준에까지 개입함으로써, 현장 지휘관의 창의적 판단과 자율적 결정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정치-군 관계의 불균형은 일관된 작전 실행을 저해하고, 지휘체계 전반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특히 베트남 전투현장에서는 헬리콥터의 기동성과 신속한 공중지휘소 설치가 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상급 지휘관들이 전장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는 하급

41) 김정배. “베트남 전쟁과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2011), pp. 255~267.

지휘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지휘권 분산과 임무지휘의 구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중대장의 작전 현장 위로 대대장, 여단장, 부사단장, 사단장, 심지어 야전군사령관까지도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작전지역을 감시하는 모습은 일상적이었다.⁴²⁾ 이러한 다층적 개입은 지휘체통의 일관성과 현장 판단의 민첩성을 현저히 저해하였다.

한편, 통제의 과학(Science of Control) 측면에서 미군은 '적 사망자 수(Body Count)' 중심의 전과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였다. 이 같은 수치 중심 방식은 전략적 효과와 괴리되었고, 현장 보고 왜곡과 부풀리기를 초래해 지휘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한 미군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하지 못해 정보 과잉과 분석 실패라는 한계를 드러냈다.⁴³⁾

나아가, 미군은 헬리콥터, 정찰기, 항공사진, 무선감청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감시체계를 보유했지만, 비정규전(게릴라전) 환경에 맞게 통합·운용하지 못했다. '호치민 루트' 정보는 확보했으나, 적의 위장·야간이동 같은 기만전술에 대응하지 못했고, 민중의 의지·지도부의도 등 질적 정보 요소를 경시했다.⁴⁴⁾

이러한 사례는 통제의 과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량지표나 기술적 수단이 전략적 맥락과 현장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그 한계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과학기술 기반 통제는 지휘관의 전략적 통찰과 결합될 때 효과성을 발휘하며, 이를 분리하거나 정량화만 강조하면 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전에서는 지휘관이 결심 주체가 아닌 단순한 전달자에 머물렀고, 통제 시스템은 전장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례는 지휘와 통제는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시스템 중심의 통제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휘관의 통찰과 결심이 수반되는 예술성(Art)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적 통제는 지휘의 술과 긴밀히 연계될 때에만 작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경우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키이우 공세 실패(2022년 초)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수도 키이우(Kyiv)의 신속한 점령과 정권

42) 육군, 『임무형지휘』2019, pp. 부 5-1~2 재구성.

43) Gregory A. Daddis. *No Sure Victory: Measuring U.S. Army Effectiveness and Progress in the Vietnam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11), pp. 164~165, pp. 196~198.

44) B.J.L. Irvine. *"Intelligence Failures of the Vietnam War: Lessons for the Contemporary Operating Environment"*, Canadian Forces College(2015), pp. 10~11.

교체 유도를 목표로 전격적인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러시아군은 키이우 북부에서 철수했고, 이것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실패로 평가되었다. 실패의 원인은 단순한 전술적 오류를 넘어, '지휘의 술(Art of Command)'과 '통제의 과학(Science of Control)' 간의 부조화에 있었다.

먼저, 지휘의 술(Art of Command) 측면에서 러시아군은 작전 초기 명확한 지휘계통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작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각 군관구가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이 부족했다. 러시아는 구 소련의 지휘 구조를 유지했으며 예하부대가 상급부대의 지시없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예하 전술부대의 행동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하급 지휘관의 리더십 부족, 수직관리 시스템, 상부지향적인 의사결정, 서로 다른 부대간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 등을 초래하여 지휘의 효율성을 감소시켰다.⁴⁵⁾

〈그림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공격 축선과 전차 손실



출처: 『Times of India』, "In 10 charts: How Russia-Ukraine conflict has unfolded in one month of war", 2022.3.,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에 탄 시신과 탱크로 뒤덮인 부차의 거리", 2022.4 (검색일: 2025.9.10).

또한, 러시아 특유의 전략문화와 구조적 관료주의는 특별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적시적 결심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군 공격부대의 기본 제대인 대대전술단(BTG: Battalion Tactical Group)은 임무지휘를 기반으로 기동성을 추구하였으나, 관료주의에 깊이 뿌리내린 경직된 지휘체계는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대한 적

45) Yurii Poita. "Some Lessons From Command and Control (C2) in the Russian-Ukrainian War", *Center for Army, Conversion and Disarmament Studies*(2023), pp. 27~28.

시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⁴⁶⁾ 중앙집권적 지휘는 하위 전술제대의 판단력을 억제하고, 이는 전술적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강한 통제와 자율성 결핍은 작전 실행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⁴⁷⁾

통제의 과학(Science of Control) 측면에서도 러시아군은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작전을 지휘하였으며, 이는 전장 상황과의 괴리를 심화시켰다. 전투현장을 가시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군사정찰 위성 및 첩보기관의 정보수집 역량도 제한적이었다. 전투현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전달과 활용이 미흡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도로 표지판을 제거하자 러시아군은 경로를 이탈하여 매복 공격에 취약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⁴⁸⁾

또한, 러시아군은 지리적 요인과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 작전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 보급선이 과도하게 신장되면서 대대전술단의 작전 지속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개전 초기에 수 개의 작전선에서 동시다발적 공격을 감행했지만, 군수지원의 제한으로 작전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⁴⁹⁾

이러한 사례는 전장 환경에서 지휘와 통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서는 효과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휘의 예술성, 즉 지휘관의 전략적 통찰과 유연한 리더십 없이 과학적 통제만을 강화할 경우, 조직은 경직되어 실패로 이어진다. 반대로 통제의 과학이 부실하거나 기술적 기반 없이 수행되면 지휘관의 의도는 실행되지 못한다. 키이우 공세 실패는 전장에서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3. 소결론

현대전은 더 이상 단일 전장의 전투가 아니라, 다영역(Multi-Domain), 고속, 복합 양상의 전장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전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병력의 우세나 기술의 발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지휘관은

46) 두진호. "우크라이나 사태 전훈 분석: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적 담론", 국방정책연구 제138호 (2022), p. 51 재구성.

47) Hackett, M. T., & Nagl, J. A. "A long, hard year: Russia-Ukraine war lessons learned 2023". *Parameters* 54, No. 3(2024), pp. 42~51.

48) 합동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분석: 군사적 관점에서의 전훈 분석 및 함의』2022, p. 190 재구성.

49) 합동대(2022), pp. 193~194 재구성.

복잡하고 불확실한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걸프전쟁(1991)과 인천상륙작전은 지휘관의 전략적 통찰력과 리더십, 분권화된 작전, 하급 지휘관의 임무지휘 등 '지휘의 술(Art)'이 발휘되었고, 동시에 정밀한 C2 체계, 실시간 정보 공유, 다국적군 전력의 통제 조율 등 '통제의 과학(Science)'이 구조적으로 뒷받침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반면, 베트남전과 러시아의 키이우 공세 실패는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따로 놀거나, 한 쪽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균형이 무너진 전형적인 실패 사례였다. 상부의 과도한 통제와 현장 판단 억제, 경직된 수직적 지휘구조, 전략 목표와 전장 현실 간 괴리는 전장을 관료화하고 창의성을 억압하며 작전 주도권 상실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전차, 항공기 등의 무기와 발전된 지휘정보체계가 있다 해도, 지휘관의 통찰과 리더십이 결여되면 작전은 방향성을 잃는다는 교훈을 남긴다.

따라서 현대 지휘통제체계의 설계에서 핵심은 '통합'이다. 지휘의 술은 전장 통찰, 결심, 리더십의 예술이며, 통제의 과학은 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실행의 기술이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하나의 부재 또는 과잉은 전장의 복잡성과 속도, 비선형성을 감당할 수 없다.

즉, 지휘관의 인간적 통찰과 유연한 판단력이 정보기반 통제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작전은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전에서 지휘통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미래 전장의 핵심 교훈이다.

IV. 지휘통제 발전방향

21세기 전장은 전통적 재래식 전투를 넘어, 사이버·전자기·우주·정보전 등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휘통제의 본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명령-보고 체계가 아니라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융합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전쟁 사례에서 확인하였듯, 양자의 조화가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그림 1> 지휘통제 프레임과 사례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근거로, 지휘통제 발전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장에서의 지휘관: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을 융합하는 전략적 리더

현대전은 복합·다차원적 전장(Multi-Domain Battlefield)에서 시간, 공간, 정보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휘관은 단순한 명령 지시 및 수행자가 아니라, 지휘의 예술성과 통제의 과학성을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로서의 역량을 요구받는다.

이와 같은 지휘관상(像)의 중요성은 미군의 교리에서도 제시된다.

“지휘관은 참모의 지원을 받아 지휘의 예술과 통제의 과학을 결합하여 부대를 임무달성으로 이끌어야 한다.”

- US Army, ADP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Forces*, 2019. -

이러한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통찰력: 정책·전략·작전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군사적 결심을 국가목표에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기존 교리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안을 창출하는 능력.
- 협업 및 융합적 사고: 다국적·합동·민관 협조 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
- AI 기반 기술적 소양: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결심지원체계, 네트워크 기반 통제체계 등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전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MDO)과 같은 작전환경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진다. 전통적인 군사작전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전자기, 인지영역 등 비물리적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다차원적 통합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적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군사지식과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 발전이 필요하다:

- 국방정책-군사전략-군사작전 연계형 교육: 정책과 전략적 사고, 작전을 연계하는 사례 기반 토론 중심 교육.
- 다영역 통합작전 지휘훈련: 다영역작전을 모의한 실시간 시나리오 기반 위게임 운영.
- AI 기반 결심지원체계 실습훈련: 디지털 전장 시뮬레이션과 AI 기반 분석 툴을 활용한 의사결정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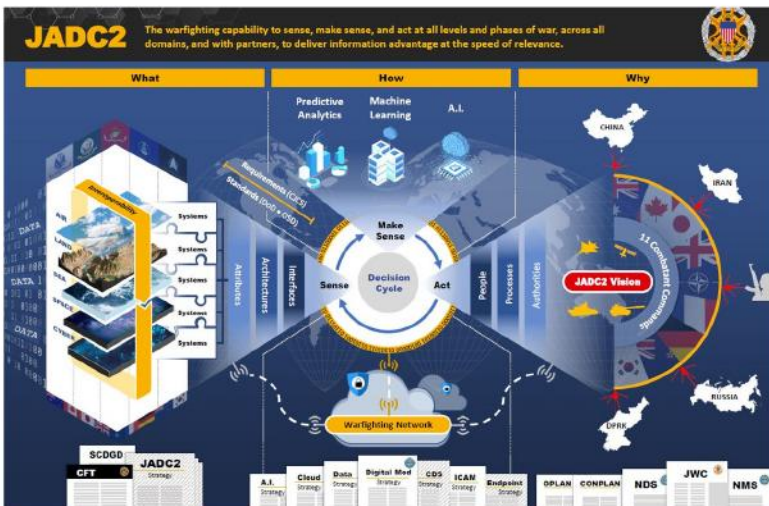
결국,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을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지휘관은 미래 전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며, 군의 교육훈련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2. 미래전을 대비한 JADC2 기반 지휘통제 역량 강화

현대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우주·사이버 등 모든 전장 영역을 통합한 다영역 작전(MDO)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JADC2(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센서-결집자-슈터 간 연결을 기반으로 한 AI 기반 지휘통제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⁵⁰⁾ 이것은 전통적인 C2 체계를 기술적으로 혁신하고, 전장의 복잡성과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림 6〉 JADC2 개념도



출처: US DoD. *Summary of the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Strategy*, (March 2022).

우리 군 역시 한국형 JADC2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구 중이며, 이에 따라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지휘통제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JADC2 체계의 기술적 기반과 운용요소의 개선이다. 한반도 작전환경은 고지대, 산악지형, 도시 밀집지역, 북한의 GPS 교란 및 통신 차단 위협, 단거리 미사일의 고속 전개와

50) US DoD. *Summary of the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Strategy*, (March 2022).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JADC2 구성요소는 이러한 환경에 맞추어 고속·지능형 데이터 링크, 생존성이 높은 분산형 통신망, AI 기반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체계 등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위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V, 드론, 이동형 센서(Mobile Sensor) 등을 활용하는 저고도 기반의 감시정찰망 발전도 필요하다.⁵¹⁾

둘째, 지휘관 및 작전요원의 JADC2 활용역량 강화이다. 단순한 시스템 사용 교육을 넘어, AI 기반 분석 결과를 전략적 통찰과 결합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협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연합지휘 능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JADC2 기반 지휘통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며, 기술체계 개선과 지휘인력의 활용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운용체계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미래전의 주력 계층인 영관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JADC2 교육 및 위계임 강화, AI 기반 전장정보처리 시뮬레이션 훈련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임무지휘 기반 실전적 과학화전투훈련 강화

현대전은 비선형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전장 환경에서 작전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자율성과 판단력에 기반한 '임무지휘(Mission Command)' 구현이 필수적이다. 상급 지휘관은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What, Why)'에 집중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How)'는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장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일부 과학화전투훈련(KCTC) 사례에서는, 지휘관이 정보 수집과 분석 없이 직관에만 의존한 결심을 내린 결과, 과도한 피해와 전투 지속 실패가 발생하였다.⁵²⁾ 필자 역시 과거 대대장 시절 과학화전투훈련에서, 극한의 기후와 열악한 지형으로 정보·통신체계가 무력화 되었음에도, 평소 훈련을 통해 형성된 공통 전술관에 기반해 예하 지휘관들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작전 성공을 이끈 경험이 있다. 이는 지휘통제가 단순한 명령 전달이 아니라,

51) 박홍순, "국방 인공지능·유무인복합체계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24권 제3호(2025), pp. 55~68., 이영욱, "4차 산업시대 드론의 군사 분야 적용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22권 제4호(2022), pp. 80~81.

52) 과학화전투훈련단, 『19년 과학화전투훈련(KCTC) 교훈』 2020, pp. 3-13~14.

정보의 수집·선별·가시화, 결심 시점 판단을 포함한 복합적 체계임을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복합적 지휘 역량은 단순 반복 훈련만으로는 함양되기 어렵고, 전사(戰史) 연구 및 전장 리더십 교육, AI 기반 워게임, OODA 루프 중심 결심 시뮬레이션, AI 기반 분석도구 활용 등 다양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과학화전투훈련은 지휘관의 리더십, 정보체계 활용, 상호 신뢰를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는 지휘관이 방대한 전장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상황별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결심의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참모적 역할을 수행한다.⁵³⁾

특히, 이 체계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 과거 유사 사례, 작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합 분석하여, 지휘관의 통찰과 전략적 판단을 보완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의사결정 보좌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AI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며, 지휘관은 AI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전략적 맥락과 현장 감각을 결합하여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과학화전투훈련에서도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를 훈련 요소에 통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의 AI-인간 협업형 지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V. 결론

21세기 현대전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영역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의 개념 역시 단순한 명령-보고 체계를 넘어서는 고차원적 융합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전장의 불확실성과 비선형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휘통제는 단순 지시의 전달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결단력과 유기적인 실행력을 요구한다.

지휘통제는 OODA 루프(Observe-Orient-Decide-Act)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지휘관은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한 뒤 지휘관 의도를 설정하고 결심을 하달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지휘의 예술성과 통제의 과학성이 긴밀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발휘한다.

53) 이준혁. “지휘통제부터 무인체계까지…방산 부문에 AI 도입해 새로운 가치 창출”, 『중앙일보』, 2025.5.29., 이창은, 손진희 등. “지휘관들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AI 군참모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6권 제1호, 2021.2.

본 논문은 지휘통제의 작동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성공 사례(걸프전쟁, 인천상륙작전)와 실패 사례(베트남전쟁, 러시아 키이우 공세)를 고찰하였다. 성공 사례에서는 상급 지휘관의 명확한 지휘의도 하에, 예하 부대 지휘관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작전을 실행하였으며, 정밀한 통제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반면, 실패 사례에서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비효율적 정보체계, 자율성의 역제가 중첩되면서 작전 기동성과 적응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지휘통제의 본질은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데 있으며, 이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만 강조되거나 분리될 경우, 전쟁과 작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지휘통제는 정보의 흐름을 매개로 예술성과 과학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며, 상급 지휘관은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예하 지휘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지휘통제 발전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을 융합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 육성. 둘째, JADC2 기반 지휘통제 역량 강화. 셋째, 임무지휘에 기반한 실전적 과학화전투훈련 확대이다. 이러한 발전방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곧 미래 전장에서 지휘통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 지휘통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AI 기반 지휘통제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 지휘권 위임의 적정 범위, 그리고 AI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 문제 등 보다 정교한 제도적·기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4.
- 육군. 『지휘통제』, 2022.
- 육군. 『임무형지휘』, 2019.
- 공군. 『지휘통제』, 2022.
- 해병대사령부. 『상륙전사』, 2008.
- 과학화전투훈련단. 『19년 과학화전투훈련(KCTC) 교훈』, 202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 2016.
- 군사학연구회. 『군사학개론』, 플래닛미디어, 2023.
- 김수림, 나승학 등.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안보군사 학연구』 통권 제18권 2호,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 김정배, “베트남 전쟁과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2011.
- 김중희, 최영찬. “한국군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전략: 미 JADC2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제79호 3권, 2023.
- 두진호, “우크라이나 사태 전훈 분석: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적 담론”. 『국방정책연구』 제 138호, 2022.
- 박상준, 강정호 등. “미래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전장가시화를 위한 기능영역별 첨단 기술 적용방안.” 『융합보안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2023.
- 박홍순, “국방 인공지능·유무인복합체계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 IT서비스 학회지』제24권 제3호, 2025.
- 신동찬, 두석주 등. 『C4I체계의 이해』, 황금소나무, 2012.
- 신희현. “임무형지휘에 기초한 우크라이나군의 분권화 전투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권 4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 안병호, 홍정희 등. 『전영역통합작전 구현을 위한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발전방향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23.
-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황금알, 2024.
- 이영욱, “4차 산업시대 드론의 군사 분야 적용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제22권 제4호, 2022.
- 이 훈, “육군 임무형지휘 원칙 적용성 탐색 고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군사논문』제122호, 한국군사학회, 2025.

- 이창은, 손진희 등. “지휘관들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AI 군참모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 분석』제36권 제1호, 2021.
- 조규필. 『임무형지휘의 역사적 고찰』, 육군교육사, 1999.
- 조동연, “미국 국방부의 디지털 현대화 전략과 한국형 JADC2 발전방향.” 『군사논단』 제94호, 한국국방연구원, 2022.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4권: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1992.
- 조너선 닐 지음, 정병선 옮김. 『미국의 베트남 전쟁: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책갈피, 2019.
- 합동대. 『세계전쟁사』, 2012.
- 합동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군사적 관점에서의 전훈 분석 및 함의』, 2022.
- Martin Van Creveld 지음, 이동욱 옮김. 『과학기술과 전쟁』, 황금알, 2006.
- B. J. L. Irvine. “Intelligence Failures of the Vietnam War: Lessons for the Contemporary Operating Environment”, Canadian Forces College, 2015.
- Carl von Clausewitz 지음, 김만수 옮김. 『전쟁론』, 갈무리, 2016.
- Gregory A. Roman. *The Command or Control Dilemma: When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Orientation Collide*, Air University Press, 1996.
- Gregory A. Daddis. *No Sure Victory: Measuring U.S. Army Effectiveness and Progress in the Vietnam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Strategy*, March 2022.
- Martin Van Creveld. *Command in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Martin Révay, Miroslav Liška. “OODA Loop in Command & Control Systems.” *Conference Paper*, October 2017.
- Lingel, S. & Hagen, J., etc.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for Modern Warfare”, RAND Corporation, 2020.
- Thomas P. Coakley, *Command and Control for War and Peac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2
- Yurii Poita. “Some Lessons From Command and Control (C2) in the Russian-Ukrainian War”, *Center for Army, Conversion and Disarmament Studies*, 2023.
- US Air Force. AFDP 3-0.1, *Command and Control*, 2025.
-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Forces*,

2003.

US Army. FM 6-0, *Commander and Staff Organization and Operations*, 2022.

US Department of Defens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 Final Report to Congress*, April 1992.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Strategy*, 2022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March 18, 2021.

US JCS. JP 1: *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2017.

US JCS.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2021.

US JCS. JP 3-13.1: *Joint Doctrine for Command and Control Warfare(C2W)*, 1996.

Essence and Future Development of Command and Control: Achieving Harmony Between the Art of Command and the Science of Control

Jo, Tae-gun

Keywords

Command and Control(C2), Art of Command, Science of Control, Harmony Command and Control System, Leadership

Modern warfare's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require both the commander's strategic judgment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Yet prior research has focused largely on technology-driven C4I systems, overlooking the human and artistic dimensions of command. This study argues that effective command and control emerge from the complementary integration of the Art of Command and the Science of Control.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cheon Landing, the Gulf War, the Vietnam War, and Russia's Kyiv offensive demonstrates that operational success depends on the interplay of strategic insight, a clear commander's intent, subordinate initiative, and scientifically grounded control.

The study proposes thre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ROK military's command and control: developing strategic leaders who can balance art and science in command; strengthening JADC2-based C2 capabilities; and expanding mission command-oriented, scientifically grounded combat training.

[논문투고일: 2025. 10. 10.]

[심사의뢰일: 2025. 11. 13.]

[게재확정일: 2025. 12. 4.]

모병제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 연구: Hood의 정책 도구론을 적용한 전문가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김석훈*, 고영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설계 및 방법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V. 결론

요약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고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지속에 따라 전통적 징병제 중심의 병력 운영 체계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병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 전환을 위한 구체적 선결조건과 정책 도구의 전략적 운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Hood(1986)의 정책도구론(NATO 모델)을 이론적 틀로 20년 이상의 군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6인의 심층면담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모병제 전환의 핵심 선결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은 Hood의 네 가지 정책도구 범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직도구(Organization) 차원에서는 병력 구조 슬림화, 자율적 병영문화 구축이 필수적이며, 재정도구(Treasure) 차원에서는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와 주거·교육·진로 지원 등 복합 복지 패키지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도구(Nodality) 및 권위도구(Authority) 차원에서는 사회적 명예 회복, 대국민 홍보 강화, 그리고 정책 추진 의지의 명확한 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도구론을 실제 국방 정책에 적용하여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모병제 전환 정책의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모병제, 병역제도, Hood 정책도구론, 질적연구, 전문가 인터뷰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육군 중령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조교수

I. 서론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대국 간 힘의 경쟁으로 국제 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습침공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식량수급 및 에너지 공급에 위기를 창발하는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는 전통적 안보 뿐 아니라 창발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군비를 증강하고,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훈을 분석하며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갈수록 복잡하고 심화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요인 등 갈등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영토 및 종교 등 전통적인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과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되었고 2020년 들어 대북 제재 및 COVID-19 바이러스의 창궐 및 확산으로 경제난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및 선별적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한 작전 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4년 러시아에 북한군 15,000 여명을 파병하는¹⁾ 등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동맹국과의 결속과 다자안보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굳건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 육군은 국방 정책 6대 기조에 의거 전방위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AI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개혁을 추진하며 '진정한 국방' 구현을 통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국익 중심 국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산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주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하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 정착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6.25전쟁 이후 약 70여 년간 징병제(conscription)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징병제는 단기간에 대규모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병역자원의 감소,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징병제 유지의 현실적 타당성에

1) NBC news, <https://www.nbcnews.com/world/asia/north-korea-confirms-sent-troops-russia-calling-heroes-rcna203245>(검색일: 2025.10.2.).

의문을 제기한다.

병무청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2016년 45만 5,551명에서 2024년 32만 8,508명으로 8년간 약 28% 감소 하였다²⁾. 같은 기간 병역 총자원 규모는 142만 7천여 명에서 92만여 명으로 줄어, 약 35%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연간 약 1만 6천 명이 줄어드는 추세로, 실제로 사단 단위 병력이 매년 소멸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대 중반에는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가 2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방 혁신 4.0에서 국방부는 제2창군 수준의 개혁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 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 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의 추진 중점을 밝힌 바 있다.³⁾ 이에 따라 상비병력은 2017년 61.8만 명에서 2025년 4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 복무기간은 2021년 1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병 봉급은 2025년 병장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의 정당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첫째, 병역 기피 및 대체복무 운영의 불공정성은 제도 신뢰를 저하 시킨다. 둘째, 성별에 따른 복무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사회 전반적인 인력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군복무로 발생하는 공백 기간 군복무장병들이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을 손실 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징병제의 사회적 수용성을 저하 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모병제 전환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경제적 비용분석이나 법적·제도적 쟁점 등 비교적 자료 획득이 용이한 거시적 논의에 편중되어 왔다. 유병덕·전기석⁴⁾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지에서 발표된 모병제 관련 연구 23건 중 문헌연구 11건(47%), 사례연구 4건(17%), 설문조사 3건(13%), 경제모델분석 3건(1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 혹은 강점과 약점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적으로 군에서 수십년 이상 복

2) 서울경제 "현역입영 대상자 9년새 12만명 감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XTJ097>(검색일: 2025.10.2.)

3) 국방부,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302010000(검색일: 2025.10.2.)

4) 유병덕·전기석. "한국 병역제도 연구 변화 분석" 『문화와 융합』제45집 제3호(2023), pp. 679-692.

무한 전문가 집단의 통찰이나 의견을 반영한 연구들은 없었다. 따라서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로 재직하면서 지휘관, 관리자, 교육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령급 이상 장교들이 20년 이상 군에 몸담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잘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Hood의 정책 도구론에 기반하여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요인을 군 복무 20년 이상 경력의 중령~장군급 고위 군 간부 6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명(究明) 하고자 한다. 군 조직에서 최고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떤 정책도구들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여 전투력 약화 없는 모병제 전환의 실질적인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병역제도

병역제도는 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조성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느냐에 관한 국가의 제도이다.⁵⁾ 병역제도의 목표는 군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병력을 적시에 충원하여 전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공급 측면의 병역자원과 수요 측면의 병역규모를 연결하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병역자원이 출산율에 의해 결정 되지만 군 병력은 국가의 안보 환경과 군사전략, 과학기술 수준, 재정 여건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병역제도를 군 인력 증 병사들을 충원하고 운용하는 매커니즘이라고 할 때 직업군인으로서 장기간 복무하고자 하는 간부들과는 달리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단기간 복무하는 병 복무는 잉여 병역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각 국가는 다양한 병역 정책을 시행해 왔다⁶⁾

병역 유형의 구분은 통상 인적자원의 충원 방법을 기준으로 법적 강제가 수반되는 정도에 따라 의무병과 지원병제도로 구분한다.⁷⁾

의무병 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국민 모두가 국가를 방위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징병제와 동원제로 구분된다.

5) 나태중, 『군제 기본원리와 한국의 병역제도』(충남: 충남대학교 문화출판원, 2012) pp169-170.

6) 김신숙(2020), pp85-88, 나태중(2012), pp169-176.

7)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4), pp13-18; 김신숙(2020), pp89-99.

징병제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자원을 징집하여 교육훈련 및 전투기술을 습득시켜 일정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고 이후 예비역으로 전환하여 국가 비상 사태, 전쟁 등 유사시 소집하여 총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 등이 채택하는 병역 유형으로 분쟁 위협이 상존하는 국가,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국가, 주변국과의 관계로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이 주로 채택한다.

동원제는 모든 국민이 일정 연령이 되면 단기간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기본적인 전투기술을 체득한 후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해진 일정 기간의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전투기술을 유지하고 유사시 동원 소집되어 전시 체제로 편성되는 민병제가 대표적인 제도이다.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인구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면적 징병을 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작아 상비군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큰 국가들이 채택한다.

지원병제 혹은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계약 관계에 의해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비교적 없는 나라에서 채택이 되고 역사적으로는 의무병 제도가 병행되거나 징병제도가 해이해졌을 때 모병제를 실시하였다. 징병제 국가에서도 간부나 획득이 제한되는 분야의 병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개인의 희망에 기초하기 때문에 군, 신분, 병과 별로 군에 지원하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게 복무하게 된다.

용병제는 계약관계에 의해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모병제와 같으나 목적 면에서 모병제는 국민의 애국심을 동기로 하지만 용병제는 금전적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용병제는 자국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용병도 고용하는데 중동 일부 국가에서 외국 용병을 고용하여 왕실 경호나 특수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병역제도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환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한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소명 의식과 정신적 가치를 반영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징병제에 비해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병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징병제와 모병제 비교

구분	징병제	모병제	
군사	위협대비	·많은 상비군+예비전력	·상비군 및 예비전력 확보 미흡
	군사력 질	·핵심 요원에 대한 대체 요원 충분 ·대규모 우수자원 확보 가능	·핵심 요원에 대한 대체 요원 부족 ·대규모 우수자원 확보 곤란
	군사력 규모	·적은 임금지급으로 인원 및 무기체계 증강 용이	·고임금으로 인원 및 무기체계증강 곤란
	복무개월	·단기간 복무시 전투기량 숙달 한계	·복무 개월 영향 미미
경제	손실	·젊은 노동인력 기회비용	·인력 활용 효율성 증대
	비용	·방위비 부담 경감	·방위비 부담 과중
정치	국내	·국민여론-국가안보 사이 갈등	·특별한 사항 없음
	국제	·동맹국과의 일체감 형성	·국제적으로 평화 이미지 고양
사회	형평성	·모든 사회계층에 공정한 국방임무 부과	·국민을 골고루 대표하지 못함
	애국심	·안보의식 형성으로 국민계도 ·국가총력전 개념 부합	·국가안보에 대한 무관심 초래 ·군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
	기타	·여성에 대한 차별화 ·군의 사회교육적 효과	·여성 군 지원으로 준비태세 영향 ·전투부대 배치인원에 대한 공정성

※ 출처: 이태우⁸⁾, 김신숙⁹⁾ 참고 저자 종합

2. Hood의 정책도구론

정부가 존재하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구도 존재한다. 전영한은 정책도구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¹⁰⁾ 정책도구 유형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도구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망라성, 상호 배제성, 단순성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Hood의 이론은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정부가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가 지향하는 선결 조건들을 실질적 정책 수단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¹¹⁾ 정책도구의 유형분류는 〈표 2〉와 같다.

8) 이태우·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4).

9) 김신숙. (2020). 『한국 병역제도의 이해와 발전 방향』. 서울: 박영사.

10)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제13권 제4호(2007), pp. 259-295.

11) 전영한·이경희. “정책수단연구: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제48권 제2호(2010), pp. 91-118.

〈표 2〉 정책도구의 유형분류

구분	분류
Hood(1986)	정보제공(nodality), 재정(treasure), 권위(authority), 조직(organization)
Bardach(1980)	강제집행(enforcement), 유도(inducement), 혜택제공(benefaction)
Mcdonnel and Elmore(1987)	명령(mandate), 유도(inducements), 역량형성(capacity-building), 체제변화(system-changing)
Linder and Peters(1989)	운영복잡성, 공적 가시성, 사용자 적응성, 개입성, 상대적 비용, 실패가능성, 대상정밀성, 시장의존성 등 8개 연속적 기준에 의한 분류
Doern and Phidd(1983)	강제성 정도에 따른 설득(exhortation), 지출(expenditure), 규제(regulation),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 등 4개 유형
vedung(1988)	강제성 정도에 따른 몽둥이(sticks), 당근(carrots), 설교(sermons) 등 3개 유형
전영한(2007b)	강제성과 직접성 정도에 따른 직접규제, 간접규제, 직접유인, 간접유인 등 4개 유형 혹은 직접규제, 준직접규제, 간접규제, 직접유인, 준직접유인, 간접유인, 직접정보, 준직접정보, 간접정보 등 9개 유형

※출처: 전영한·이경희¹²⁾

Hood는 정부의 자원 기반을 네 가지 핵심도구, NATO(Nodality, Authority, Treasure, Organization)으로 분류했다. 정보제공(Nodality)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사용하는 정책도구 유형의 하나이다. 정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한다.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연을 유도하거나 주기적인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권위(Authority)는 법과 규제를 통해서 국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가진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린벨트 등을 법으로 설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다든지, 학교 근처 일정 거리에 유해한 사업장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만든다든지 등 많은 부분을 권위라는 정책도구로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재정(Treasure)은 보조금, 세금, 벌금 등의 수단으로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서 국민의 행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한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어 특정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정책 집행간 벌금을 부과하여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조직(Organization)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국가가 직접 군대, 경찰, 병원, 학교 등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 군인 등 정부 지휘

12) 전영한·이경희.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제48권 제2호(2010), pp. 91-118.

체계 내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인적자원과 부대시설, 무기체계, 관공서, 국유지등의 물적자원으로 구성된다.

3. 선행연구 검토

모병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쟁점별로 재정 및 비용분석, 모집 및 인력유지, 여론 및 사회 수용성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보고자 하는 Hood의 정책도구론의 네 가지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 및 비용 분석분야 즉 경제적 효율성(treasure)에 대해서 김현호·강원석¹³⁾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운영유지비 비교 분석을 통해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모병제 시행시 예상되는 인건비 증가 부담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이동환·강원석¹⁴⁾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검토했다. 현 징병제 유지비용과 모병제 전환 비용을 비교하여 점진적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국방 예산의 배분 문제에만 집중하여 경제적 논리를 확보한 반면 제한된 예산에서 어떤 분야들을 우선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병역제도의 전환은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닌 군 조직 문화 변화, 정치적 합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모집 및 인력 유지 분야 즉 조직(organization) 효율성 및 전문화에 대해서 병역제도 유형이 병력자원의 질적 측면과 조직 전문화, 조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박종탁¹⁵⁾은 병력의 역량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병역제도 유형에 대입하여 소수 정예 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탁¹⁶⁾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모병제 전환이 조직적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웅¹⁷⁾은 한국군 병력 충원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시나리오별로 단계별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병역제도 전환 필요성은 입증했으나

13) 김현호·강원석.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 연구: 징병제와 모병제의 운영유지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연구』제41권 제3호(2023), pp. 145-163.

14) 이동환·강원석.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비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제12권 제1호(2017), pp75-102.

15) 박종탁.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 결정요인 분석: 병력의 역량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4호(2022), pp239-264.

16) 박종탁. "병역제도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차이 분석", 『인문사회21』제13권 4호, pp 3083-3094.

17) 이웅.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충원정책 연구", 『정책개발연구』제20권 제1호(2020), pp27-52.

실질적 제도 전환 방법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우선순위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여론 및 사회 수용성 분야 즉 사회적 합의(authority)에 대해서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여론의 수용성, 제도적 조건 등에 대한 연구로 박진수¹⁸⁾는 인구 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로써 모병제와 함께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며 모병제 전환이 사회적 형평성과 성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석했고, 심성은¹⁹⁾은 유럽의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안보상황의 변화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병역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제도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남궁곤·김근혜는 미국의 모병제 도입 과정에서 닉슨 행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석하며 모병제 도입은 단순한 국방정책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요소가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들은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나 한국의 안보환경과 군 문화를 반영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병제 전환 가능성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 위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로드맵(roadmap)을 제시하려고 한 연구들인데 김민호²⁰⁾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보, 사회구조, 전투관리를 모병제 핵심요구사항으로 선정하며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고 선승배·박상혁²¹⁾은 모병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며 필요성과 방안을 포괄적으로 주장하였다. 임민혁·강원석²²⁾은 해외 병역제도 전환 사례에 대한 동태적 SWOT²³⁾ 분석을 통해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모병제 전환 논의의 방향을 통합적으로 접근했다. 이 연구들은 거시적, 이론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해외사례 중심의 연구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해외사례는 병역제도의 변화가 단순한 병력 충원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장기화 속에서 징병제 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지자, 1970년 게이츠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전면 모병제 전환을 권고하였고, 닉슨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독일은 2010년 바이제 위원회 권고와 의회의 논의를 거쳐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두 나라는 모두 특정 시점에서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적 흐름이 수렴하면서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8) 박진수.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2022)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 심성은. "유럽 국가의 징병제 폐지 및 재도입 사례 연구". 『유럽연구』, 40(2)(2022), 123-145.

20) 김민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 연구". 『안보연구』, 28(3)(2021), 95-128.

21) 선승배·박상혁. "한국군 모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연구". 『국방정책연구』, 40(1)(2024), 45-68.

22) 임민혁·강원석.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가능성 모색: 동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74(3)(2018), 35-65.

23) Strengths(강점), Weaknesse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병제 논의가 주로 “시기상조론”과 “필연론”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비용분석이나 여론조사에 치중되어, 실제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사례는 부족하다. 특히 정책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인식을 통해 구체적 선결 조건을 도출하고, 조건 간 우선순위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 모병제 전환에 필요한 선결 조건을 구명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모병제 전환의 선결 조건을 탐색하고 도출된 조건을 범주화하여 구조적 틀을 제시하며 조건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군 모병제 전환 논의를 단순 찬반 구도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통해 선정하였다. 모병제 전환의 현장 실효성과 정책적 전략을 규명하기 위해 풍부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가진 전문가 집단을 선별해야 하므로 군에 20년 이상 경력의 중령~장군급 장교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관과 동시에 소대라는 가장 군 하위조직에서부터 중대, 대대, 연대 및 사/여단 그리고 사령부 및 육군본부,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대에서 복무하면서 지휘관 및 참모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쌓인 지식과 경험은 군에 대한 전문가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모병제 전환의 시대적 배경과 징병제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한 깊은 현장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사, 정책, 작전 등 군 조직 운영을 경험을 정책적/전략적 측면으로 통일시켜 데이터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질적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 수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stic sampling)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기준으로 표본 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 연구설계 단계에서 참여자 수를 명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론적 포화에 도

달할 시점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Guest, Bunce, and Johnson²⁴⁾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서아프리카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포화의 실증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6개씩 10회에 걸쳐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며 범주 목록 생성 및 수정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의미 단위의 73%가 첫 6개의 인터뷰에서 도출되었고, 92%는 12개의 인터뷰에서 이미 확인되었다.²⁵⁾ 또한 코드 정의의 대부분이 12개 인터뷰 분석 이후 안정화되었으며²⁶⁾, 이후 추가된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명확한 연구 질문을 설정한 경우, 6명 수준의 인터뷰만으로도 충분한 주제 포화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uest, Bunce, and Johnson의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터뷰 참여자 수를 6명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군 복무 20년 이상 장교들 6명에 대해 각각 심층 인터뷰 진행하였다. 자료는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평균 20~40분 동안 이루어졌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구분	소속	경력	주요 경력
장군A	육군본부	31년	여단장, 정책부서 과장 및 부서장
장군B	육군본부	35년	여단장, 정책부서 과장 및 부서장
대령A	육군본부	27년	여단장, 정책부서 과장
대령B	육군본부	30년	여단장, 정책부서 과장
중령A	야전부대	20년	야전부대 대대장, 정책부서 실무자
중령B	야전부대	20년	야전부대 대대장, 정책부서 실무자

24) Guest, G., Bunce, A., & Johnson, L. (2006).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An experiment with data saturation and variability. *Field methods*, 18(1), 59-82. 이론적 포화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범주나 속성이 발견되지 않을 때 연구자는 해당 범주가 포화되었다고 판단한다.

25) 앞의 글, p. 66.

26) 앞의 글, p. 68.

이들 집단은 실제 병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대장으로부터 육군본부 정책 부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육군 정책에 참여했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장교들을 인터뷰하여 현장의 딜레마와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최소 20년 이상 복무하여 병역제도의 장단점과 병역제도 전환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현 병역제도의 장단점과 병역제도 전환의 필요성, 병역제도 전환의 성공 조건, 병역제도 전환 시 국방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병역제도 전환 시 예상되는 조직,문화, 리더십의 변화, 병역제도 전환의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인터뷰)은 바로 병역제도에 대해 질문하기보다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먼저 상기시킨 후 병역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고, 이어서 병역제도 변화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반구조화된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하되 인터뷰 과정에서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거나 심층적인 탐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전환에 대한 그동안의 군 생활간 본인이 가진 생각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인터뷰에서는 사전 설정된 질문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유연함을 가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표4>와 같다

<표 4> 심층 인터뷰 질문지

구분	내용
응답자 배경	군 경력에 대한 소개(복무연수, 주요직책 등)
	최근 10년내 인사분야(모집, 선발, 유지등) 관련 업무에 관여한 수준
현 제도	징병제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병역제도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병제 전환조건	모병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국방예산 투입순위	충분한 국방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 병역제도 전환을 위해 예산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모병제 전환시 변화	모병제 전환시 변화될 병영문화는 어떤 방향일지?
	모병제 전환시 지휘관과 중간간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지?
	모병제 전환에서 예상되는 조직내 갈등은?
위험요인	모병제 전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은?

인터뷰 결과 분석은 질적연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Maxqda(2024)를 사용하여 심층인
 터뷰 결과를 전사하고 코딩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Miles & Huberman는 질적연구
 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경우 ① 자료 농축(data condensation), ② 자료 전시(data
 display), ③ 결론 도출 및 검증(conclusion drawing and verification)의 3단계로 분석
 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이에 따라 Maxqda 코딩은 3단계를 걸쳐 진행되었는데 초기코딩
 (open coding)은 인터뷰 구절마다 코드를 부여하고, 축 코딩(Axial Coding)은 초기 코드
 들을 유사성 및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통합하여 하위주제를 형성하였고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으로 하위주제들을 통합하여 핵심 선결 조건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인터뷰 전사 후 답변 중 중요한 구절마다 하나 이상의 코드로 코딩하였고 이에 따른 초기
 코드는 총 122개였다. 원자료에 기반한 모든 잠재적 개념을 추출한 것이다. 이어서 논리적
 유사성과 정책적 연관성에 따라 통합한 축 코딩을 통해 9개 하위 주제를 형성했다. 하위주제
 는 <표5>와 같다. 마지막으로 이를 모병제 전환의 선결 요건이라는 중심 현상 아래 Hood의
 정책 도구론을 적용하여 3대 핵심 선결 조건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표 5> 축 코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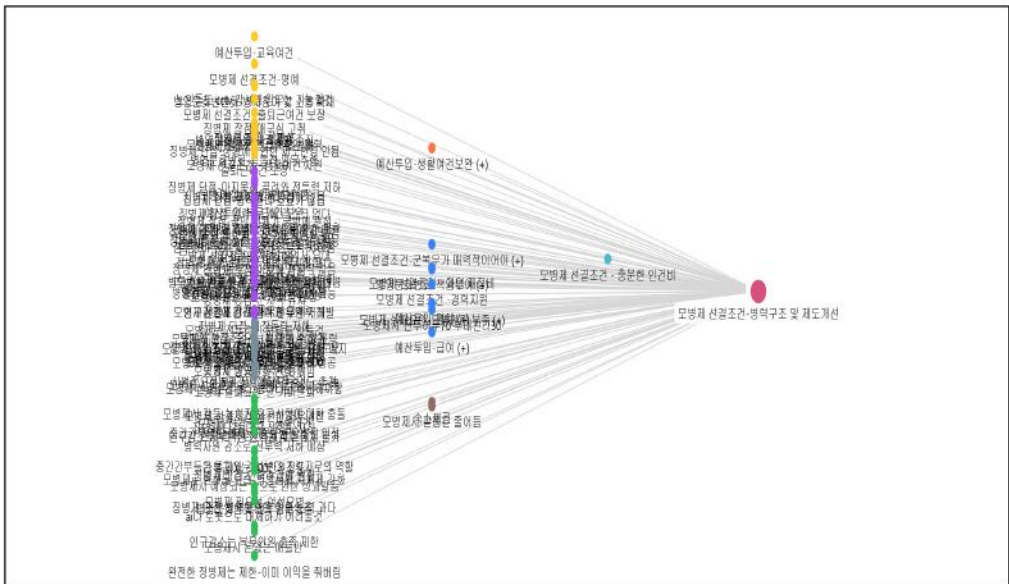
하위 주제	주요 통합 코드 목록
모병제 실패 요인	안보위협, 모병인원 부족
모병제 선결 조건	보상체계 경쟁력 확보, 병력구조개선, 과업재정비, 본질임무집중, 외국인양성 및 군부대 창설, 명예존중
모병제 전환시 간부 역할	조력자 역할, 자유와 책임
모병제 전환시 갈등요소	성과경쟁, 높아진 요구사항 이행 충돌, 노조 가능
모병제 전환시 병영문화 변화	전투임무위주, 책임 강화, 자발적 참여 및 소통 확대
모병제 전환시 예산투입요소	급여, 가족지원, 경력지원, 교육지원, 명예, 생활여건
인구감소로 발생할 문제	양적 전투력 저하, 작전계획 변경, AI / 로봇 대체불가
징병제 장점	충원용이, 예산절감, 형평성, 국민전체의 관심사항
징병제 단점	복무의지 없음, 전투력 발전 제한, 병력관리소요 다수

27) Miles, M. B. & Huberman, A. M.,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Sage Publications, 1994, pp. 10-15.

하위 주제에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은 인터뷰를 하면서 병역제도의 전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질문한 내용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현 병역제도인 징병제의 장, 단점을 논의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코드맵은 코드의 유사성에 따른 위치를 보여주며 두 개의 코드가 많이 겹칠수록 즉 데이터 사용 측면에서 유사할수록 가깝게 배치된다. 코드맵의 각 원은 코드를 나타내며 두 코드 사이의 거리는 코드가 데이터에 얼마나 유사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원이 클수록 해당 코드로 더 많이 코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코드간 연결성은 어떤 코드가 겹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²⁸⁾

(그림1) 인터뷰 결과 코딩 결과를 도시 - 코드맵



1. 3대 핵심 범주별 정책적 우선순위

인터뷰의 코드 빈도분석 결과 군 전문가들이 모병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정책적 선결 조건 순위를 Hood의 정책 도구론에 따라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Hood의 정책 도구론을 적용했을 때 조직(organization)이 재정(treasure)이나 규제(authority)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28) 서형준, 『MAXQDA로 질적연구 쉽게하기』(서울:박영스토리, 2021), p. 257.

〈표 6〉 모병제 선결조건 범주

순위	범주	Hood 정책도구	통합 빈도수	시사점
1위	병력구조 및 병영문화혁신	조직 (organization)	31회	조직의 근본적 비효율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2위	보상체계의 시장경쟁력 확보	재정/유인 (treasure)	28회	병력구조 혁신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모병 동력
3위	사회적 합의 마련, 제도적 유연성 확보	정보/권위 (nodality/ authority)	17회	안보리스크에 따른 제도변경 가능성, 사회적 인식변화

모병제 선결 조건 1순위는 병력 구조 및 병영 문화 혁신으로 이는 Hood의 정책도구에서 조직에 해당한다. 빈도수는 징병제의 단점, 병영 문화 변화 등 4개 하위 주제와 의미단위 (coding segment)를 합산한 결과로 31회였다. 군 전문가들은 모병제로 전환되기 전 군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모병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징병제의 단점과 간부의 행정 과부하 등의 문화가 군 조직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이며 모병제 전환 이전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자발적인 복무로 인해 파생되는 병력 관리 소요가 간부의 역량을 소모시켜 전투 임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Hood의 정책도구론 관점에서 재정 투입이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통찰을 제시한다. 모병을 위해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조직을 우선 구축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들에 대해 인력을 모집해야 국방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모병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 군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군 규모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업무과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령B)

전투임무 외 불필요한 노력이 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병력 관리 소요를 사전에 줄여주지 않으면 모병제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령A)

현 징병제는 병력 관리소요들이 굉장히 과하다는 측면에 있어 이는 불필요한 노력이 라고 생각합니다(중령A)

병영문화는 더 이상 통제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병제 병사들은 '선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명령보다 설득, 통제보다 자기 동기가 필요합니다(장군A)

2순위는 보상 체계의 시장 경쟁력 확보로 Hood의 정책도구 중 재정(treasure)에 해당하는

다. 28회의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결국 조직혁신과 병행해서 시장 경쟁력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모병제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인건비에 달려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생활 임금을 넘어 직업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 경쟁력을 가지는 임금수준이 아니면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처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급여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군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수한 가운데 일부 수당들에 대해서만 특수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급여를 많이 향상시킬 수 없는 제약사항이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급여체계를 구상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군인에 대한 완전히 차별된 처우를 해줘야 모병제는 성공합니다. 경쟁력 있는 급여수준이 보장되어야 지원하게 될 겁니다(장군B)

현재 급여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 과연 얼마나 더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급여체제와 연동되어 있고, 병사들 급여를 더 주면 초급 간부도 그 이상을 줘야 하며 중견간부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 고유의 특수 급여체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군A)

급여가 높아야지만 지원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예산 투입이 가장 현실적인 유인책입니다 (대령A)

보상 체계 중 급여 외에 주거, 교육지원, 군 복무 후 취업지원 등의 여건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도심지가 아닌 격오지에서의 근무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거시설만으로는 모병에 어려움이 있으며 군에 입대하는 연령을 고려시 계속 복무간 혹은 전역 후에라도 대학 및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이후 취업과의 연계성이 모병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신자와 기혼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대령B)

군 복무 후 취업 지원과 경력 인정 시스템을 구축해 직업군인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장군A)

보상 체계의 시장 경쟁력 확보는 병력 구조 개편 이후 정예화된 소수 병력에게 집중투자 될 때 각 정책도구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시사점을 가진다.

3순위를 차지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은 정보 / 권위도구(nodality / authority)를 의미한다.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를 통한 모병제 수용성 확보로 전문가들은 금전적 보상 외에 군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제도적 틀을 통해 군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자부심도 더 느낄 수 있고 지원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령A)

군이 '가난한 자의 군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모병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장군B)

모병제는 직업적 매력에 있어야 하는데 돈 외에 우리 사회가 군인을 어떻게 대우해주느냐가 결국 성공의 열쇠입니다(장군A)

2. 모병제 실패요인

인터뷰 참여한 군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의 주요 실패 요인을 3가지 정도로 제시한다.

우선 모병제 전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인적 자원 확보의 실패에서 찾았으며, 이는 단순히 급여 문제가 아니라 군 복무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급여를 더 주더라도 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면 지원할 이유가 줄어들며 군인의 본질적 임무 즉 작전 준비와 교육훈련 위주의 업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군이라는 직업의 차별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병력 관리 위주 그리고 부대 관리 위주의 부대 운영은 군의 본질적 임무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조직의 비효율성이다. 모병제 전환 이전에 군 조직 내부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인력 충원에도 불구하고 조직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는 군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그 사이즈를 만약에 못 줄이고 모병제를 하면 인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나 임무가 너무 많아 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업무 과부하가 걸려 전역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에 전달되어 모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병제가 특정 계층에게만 강요되는 '경제적 징병제'로 변질되거나, 조직 내 다양한 인력 유입으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실패의 주요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군에 지원하는 자원들이 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계층에서 지원하거나 학력적인 부분에서도 우수자원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인員들이 지원하면 전투력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모병시 여성과 노인, 외국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충분히 있으며 이는 모병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Hood의 정책 도구론을 기반으로, 군 정책 전문가 6인의 심층 인터뷰와 MAXQDA 질적 코딩 분석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선결 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 도구(병력구조 및 병영문화 혁신), 재정 도구(보상체계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정보·권위 도구(사회적 명예와 인식 개선)의 복합적 정책 집행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첫째, 병력 구조 및 병영 문화 혁신은 모병제 성공의 최우선 선결 조건이다. 현재 약 36만 여명의 육군은 군 구조의 축소를 통해 불필요한 병력 구조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병의 규모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군은 통제 중심의 기존 조직문화를 전환하여, 병사의 자발적 동기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체계와 리더십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징병제의 낮은 전투 효율성은 간부의 행정 과부하와 병력 관리소요 때문이며 이를 위해 정책 실행자는 조직 도구를 통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혁신적 인사제도, 전투 전문직 확대, 민간 연계 인력 활용 등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보상 체계라는 재정 도구의 강화는 모병제 유인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정책적으로 병력 보상 수준을 민간 부문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거 지원과 복지 서비스 등의 다면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 복무 유도과 복무 후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병제 참여율과 병력 유지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셋째, 규제/권위 도구는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명예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금전적 보상 외에 군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하며 이는 군 조직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긍정적 이미지 구축 활동을 강화하고, 병역과 군 복무를 국가 공익의 상징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법률·제도적 권위 확립과 더불어, 정치·사회 엘리트의 상징적 참여 및 지지 확보를 통해 모병제 정책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모병제 전환은 단일 정책도구가 아닌 정책도구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조직 도구를 통한 내부 혁신과 재정 도구의 충분한 지원, 그리고 규제 및 권위 도구를 통한 사회 풍토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때 실질적 변화를 획득할 수 있다.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단계적 조직 개혁과 전문 병력 전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경제적 보상과 복지 제도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복무 후 직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국민 소통과 사회문화 캠페인을 통해 군 복무 명예화 및 신뢰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표 7〉 모병제 전환 단계별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정책도구
1단계	D-7년 전 ~ D-5년 전	병력 구조 개편, 전투 위주 문화 구축	조직(Organization)
2단계	D-5년 전 ~ D-3년 전	급여·복지 패키지 설계, 시범 모병제	재정(Treasure)
3단계	D-3년 전 ~ D년	사회홍보, 법률 정비, 전면 모병제 시행	권위·정보 (Authority, Nodality)

본 연구의 한계로 군 내부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확증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본으로 추출한 6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군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향후 양적 연구와의 병행 및 정책 실행 현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고,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혁신적 병력 관리 방안 탐색도 미래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모병제 전환 정책의 복합성을 정책 도구론의 체계적 분석 틀로 조명하였으며, 군 인력 정책의 실천적 설계와 집행에 실제적 방향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2』. 서울: 국방부.
- 김민호. (2021).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 연구. 『안보연구』, 28(3), 95-128.
- 김신숙. (2020). 『한국 병역제도의 이해와 발전 방향』. 서울: 박영사.
- 김현호·강원석. (2023).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 연구: 징병제와 모병제의 운영유지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41(3), 145-163.
- 나태중. (2012). 『군제 기본원리와 한국의 병역제도』. 충남: 충남대학교 문화출판원.
- 남궁곤·김근혜. (2012).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국방연구』, 35(2), 121-145.
- 박진수. (2022).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종탁. (2020). 병역제도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차이 분석. 『인문사회21』, 13(4), 3083-3094.
- 박종탁. (2022).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 결정요인 분석: 병력의 역량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4), 239-264.
- 서형준. (2021). 『MAXQDA로 질적연구 쉽게하기』. 서울: 박영스토리.
- 선승배·박상혁. (2024). 한국군 모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연구. 『국방정책연구』, 40(1), 45-68.
- 심성운. (2022). 유럽 국가의 징병제 폐지 및 재도입 사례 연구. 『유럽연구』, 40(2), 123-145.
- 유병덕·전기석. (2023). 한국 병역제도 연구 변화 분석. 『문화와 융합』, 45(3), 679-692.
- 이동환·강원석. (2017).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비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2(1), 75-102.
- 이용. (2020).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충원정책 연구. 『정책개발연구』, 20(1), 27-52.
- 이태우. (2014).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민혁·강원석. (2018).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가능성 모색: 동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74(3), 35-65.
- 전영한. (2007).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 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4), 259-295.
- 전영한·이경희. (2010). 정책수단 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48(2), 91-118.

2. 국외 문헌

Guest, G., Bunce, A., & Johnson, L. (2006).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An experiment with data saturation and variability. *Field Methods*, 18(1), 59-82.

Hood, C. C. (1986). *The Tools of Government*. London: Macmillan.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3. 기타 자료

국방부. (2025).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302010000.

데일리안. (2024). Z세대 남 62.3%, 여 50.1% “여성 징병제 공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45913>.

서울경제. (2024). 현역입영 대상자 9년새 12만명 감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XTJ097>.

NBC News. (2024). North Korea confirms sent troops to Russia, calling heroes. <https://www.nbcnews.com/world/asia/north-korea-confirms-sent-troops-russia-calling-heroes-rcna203245>.

A Study on Key Prerequisites for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Focusing on Expert Interview Analysis Applying Hood's Policy Tools Theory

Seok-Hoon Kim, Yeongjun Ko

Keywords

All-Volunteer Force, Military Service System, Hood's Policy Tools Theory, Expert Interview

A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and the population decline accelerates, the traditional conscription-based military manpower system is facing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discussions on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AVF) system have intensified, systematic research on the specific preconditions for policy transition and the strategic deployment of policy tools remains insufficient.

This study employed Hood's (1986) policy tools framework (the NATO model) as a theoretical lens, and empirically identified the core preconditions for the AVF transi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experts who possess over 20 years of military experience and subsequent qualitative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preconditions for transitioning to an AVF system align with Hood's four policy tool categories. Specifically, in terms of Organization tools, streamlining force structures and establishing an autonomous military culture are essential. Regarding Treasure tools, competitive compensation packages and comprehensive welfare packages, including support for housing, education, and career development, are required. Furthermore, concerning Nodality (Information) and Authority tools, restoring social honor, strengthening public communication, and clearly demonstrating the will to implement the policy are necessary. This research attempts a theoretical expansion by applying the policy tools theory to actual national defense policy and is expected to offer practical contributions to policy practitioners by proposing a phased roadmap for the AVF transition policy.

[논문투고일: 2025. 10. 29.]

[심사의뢰일: 2025. 11. 11.]

[계재확정일: 2025. 12. 17.]

[서평]

경제의 무기화(The Economic Weapon) - 전간기 유럽의 경험과 현대적 경제제재의 탄생*

이준배**

I. 서론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은 경제적 번영과 과학기술의 발전, 예술과 문화가 크게 꽃핀 '아름다운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전기·철도·자동차 등 근대 기술이 확산되고, 금융과 통신, 운송 다양한 측면에서 유럽 각국들이 밀접하게 통합되었다. 프랑스 퇴직자들의 연금자금이 독일의 철강산업에 투자되었고, 독일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채굴되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거쳐 독일의 내륙 수로를 통해 운송되었으며, 구매대금은 런던의 금융가에서 발행한 신용으로 보증되었고, 마찬가지로 대양에서의 해운은 영국의 상선회사들이, 선적에 대한 보험 또한 영국의 회사들이 맡았다.

세계 경제와의 통합은 고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로부터 인위적으로 단절된다는 것은 세계 각국과 분담하던 다양한 기능들을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종종 매우 불편하고 불완전한 대안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뜻한다. 20세기 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요약한 것과 같이 단절은 "물질적 어려움, 원자재를 구할 수 없어 공장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 신용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자산이 쓸모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제재가 어떤 대안보다도 국제정치에서 위협적인 무기

* 원전: Nicholas Mulder, *The Economic Weapon: The Rise of Sanctions as a Tool of Modern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2)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연합국은 적국인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경제 단절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확인된 경제제재의 위력은 전간기와 2차 세계대전에도 유효하게 활용되었으며,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UN 결의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코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멀더(Nicholas Mulder)의 2022년 저서이자 올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번역 출간하는 “경제의 무기화: 현대전의 도구로서 경제 제재의 부상(원제: The Economic Weapon: The Rise of Sanctions as a Tool of Modern War)”은 제국주의 열강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통합되던 전간기(20세기 초중반)를 거치며 국제정치 무대에 정립된 ‘특정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기원과 역사를 다룬다. 특히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미국 및 서방 국가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금융봉쇄(SWIFT 결제망 퇴출, 해외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와 무역봉쇄(러시아 제품의 수입 금지와 가격 상한제, 전략 물자의 러시아 수출 금지)의 형태로 현실화되던 때와 겹친다. 우리에게도 경제제재는 핵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적용되는 처벌로서 익숙한 내용이었으나, 이 책은 출간 직후 그 역사적 관련성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일본과 대만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멀더 교수는 20세기 초중반 국제기구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제재의 관련자들-관료, 군인, 정책 결정자, 그리고 시민사회 일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세심히 검토하며, 현대의 경제제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역사적 교훈과 시간을 초월한 질문을 던진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경제제재는 제재 당하는 국가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게끔 압박하는 장치로서 유효한가? 연관된 질문은, 지금의 국제질서와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 안에서 경제제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조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이 책은 논문이 아니므로 위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 복합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주지시키며, 명확하고 세부적인 답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자유무역, 국제주의와 경제제재의 등장

이 책은 총3부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부분인 ‘경제 무기의 기원’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 기간에 걸쳐 벌어진 연합국의 동맹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그 직후 공산화된 소련에

대해 적용되었던 서방권의 제재를 다룬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를 보편적인 권리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이미 근세-근대에 이르면 유럽에서는 전쟁 중에도 상인들은 적국과 무역을 계속했으며 이는 오히려 외화와 상대국의 물자를 획득해오는 애국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전쟁 중인 적국에 대해 물자 운송을 봉쇄하는 형태의 공격이 치명적일 수 있음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 항행을 봉쇄하였던 교훈에서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었고, 자본주의와 국제무역으로 통합된 세계에서 이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영국 관료들에 의해 고안된다.

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원자재와 해운, 금융에서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독일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군에서 처음 제안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방식처럼 직접적으로 무력(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 항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경제관료들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첫 번째 수단은 '금융봉쇄'로, 자국 내 독일 기업과 정부가 보유한 자산과 채권을 파악하여 동결하고, 영국을 통한 독일의 금융거래, 특히 수출입을 위한 신용보증과 대금 지불을 하기 위한 능력을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무역봉쇄'는 독일 제품의 국내 수입과 수입제품에 대한 대금 지불은 물론 국내 기업들이 독일에 수출하는 전략물자의 흐름을 끊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영국은 봉쇄부를 설립하고 자국 기업들과 독일의 거래 내역과 통계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으며, 어떤 품목을 제재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하였다. 이 방식은 물리적인 통제보다도 적은 노력, 관료들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방식이었으며,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이었다. 자국 기업들과 독일 기업의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강제력과 실효성은 이들 기업들이 정부의 지침을 어겼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 집행된 이와 같은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지금도 경제제재를 집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과 서방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한 경제제재는 러시아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망(SWIFT)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러시아 금융기관, 기업, 개인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들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제재 대상국의 대외 무역 능력을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 대상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원자재와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에 시한부적인 제약을 받게 되고, 몇 년 안에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외환과 더 나아가 외환 획득을 위한 생산 능력이 고갈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두기까지 두 가지 큰 고려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제재 대상국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무역 거래를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2025년 현재 러시아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SWIFT망 퇴출은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업무에 큰 차질을 주고 있으리라 짐작되지만, 국내 거래, 특히 SWIFT가 아닌 대안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예를 들어 중국과의 거래)는 이 방식으로 제재할 수 없다. 즉, 이 방식은 제재 대상국을 처벌하자는 공감대에서 모든 나라가 같이 제재에 참여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세계에서 유의미한 경제권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미국, 영국, 프랑스와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들 정도) 연합국의 공조만으로도 경제제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반면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이탈리아에 대한 국제연맹의 경제제재는 당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이 동참하지 않았으며, 미국 기업들의 이탈리아에 대한 석유 수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자국 기업과 시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이다. 이는 특히 1918년과 1920년 사이, 영국·프랑스·미국 등 연합국이 갖 공산화된 소련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경제제재의 집행 과정에서 두드러졌는데, 전후 경기 불황이 닥치자 국내 생산업자들은 러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소련에 대한 경제봉쇄는 1921년에 이르러 종료되고 만다. 책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큰 경제권이었던 영국과 독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도 영국 기업과 시민들이 입은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막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의 경제봉쇄는 효과적이었고, 내륙국가인 독일은 이 봉쇄로 인해 전쟁 지속 능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독일과 동맹국인 동유럽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투르크도 경제적 봉쇄의 희생양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에 의해 중부유럽에 가해진 식량, 연료 등 생활필수품 수입 금지 조치로 대략 40-50만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동 오스만 지방에 비슷한 조치가 미친 직접적인 효과는 약 50만명의 민간인 사망으로 추정된다.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강력한 위력과 더불어 낙진 및 방사성 물질 노출로 이어지는 세대에 걸친 영향임을 기억할 때, 마찬가지로 경제 봉쇄는 사회적 붕괴와 건강악화, 기아와 영양실조의 공포를 주었으며 수십년 후에도 발달 미숙하고 발육이 저하된 아이들이 출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III. 전간기 경제제재의 실사례와 유효성에 관한 논쟁

경제제재는 매우 효율적인 장치였고, 전간기 국제연맹은 이를 전쟁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제수단으로 주목한다. 책의 제2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경제봉쇄를 계획하고 주도했

던 인원들이 국제연맹 체제 하의 경제제재 장치를 설계하는데 관여했던 과정을 서술한다. 이들의 노력과 타협의 산물로 국제연맹 결의에 의해 경제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과 구성요소, 그리고 절차적 과정이 확립된다. 한편 케인즈가 옹호했던 바와 같이 경제적 '박탈'을 무기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의 당사국을 지원하는 '원조' 성격의 경제무기도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 케인즈는 후자에 전쟁억지력에 대한 희망을 걸었으나 국제연맹에서는 실현되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야 미국의 무기대여법, 렌드리스(Lend-lease) 프로그램으로 현실화된다.

경제제재는 물질문명에 익숙한 국민과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나 자산동결, 신용제공 중지 조치의 직접적인 부과 대상은 그 나라의 기업들이며, 이는 전쟁 중이라고 해도 전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과 시민들, 특히 자국의 산업과 기업들도 경제적 무기의 주요 목표가 됨을 뜻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적 봉쇄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판하고, 특히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집권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을 민간에 지우는 시도로 이해하여 반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예는 볼셰비키 정부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된 1918-1920년의 소련에 대한 경제제재였다. 차르 시절 러시아가 빌린 대외 부채(특히 프랑스·영국 채권자들)를 소비에트 정부가 지불 거부하자, 서방은 보복으로 소련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식량과 자본재의 소련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경제제재의 입안자들은 소련 인민들에게 궁핍을 강요함으로써 새로 탄생한 공산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반면 서방의 많은 정책가들은 이와 같은 논리에 회의적이었다. 국민들을 굶고 죽게 만들어 볼셰비즘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소련 인민들의 분노가 소련 정부가 아닌 제재하는 서방으로 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방 국가들의 경기침체와도 겹친 탓에, 소련에 대한 경제제재는 1921년 영국과 소련이 관계를 복원하며 막을 내린다.

이와 같이 전간기 경제제재는 제한된 성과만을 달성하는데 그친다. 자갈한 사례로 국제연맹의 결의에 의해 유고슬라비아는 1921년 알바니아 침공을 중단했고, 그리스 독재자 테오도로스 팡갈로스(Theodoros Pangalos)는 1925년 불가리아와의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단념했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전쟁을 막는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제연맹 체제하 경제무기의 유효성은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함으로써 시험대에 오른다. 세계사 연구자들은 미국이 고립주의적 원칙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평화유지군과 같은 무력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제어하지 못한

국제연맹을 실효성이 없었던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한다. 경제제재는 국제연맹이 활용할 수 있었던 강력한 수단이었지만, 정작 그 일원이 아프리카의 자주국을 침범하고 점령하기까지 매우 무력한 대응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제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제재의 목적이라면, 이미 발발한 전쟁에 대해서 제재는 유의미한가? 또한 당시 세계 질서의 제약, 서구 열강들과 비유럽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지 못한 인식 하에서는, 연맹의 중요 참여자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1935년 10월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하고, 국제연맹은 11월에 들어 신속하게 금융차단, 무기 및 전략물자 금수, 이탈리아 상품의 수입 중단으로 구성된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음 해 5월 에티오피아 병합이 완료되자 제재 조치는 철회되고 만다. 에티오피아의 비극적인 역사는 국제연맹의 한계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이면은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단면이며, 지금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V. 경제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촉발한 제2차 세계대전

멀더 교수는 이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제3부 '전간기 위기'에서 정리하며, 경제제재가 유효한 전쟁 억지 수단이 되지 못하여 전쟁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무기를 집행할 국가들의 의지와 환경이 더 중요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무력했던 국제연맹과 그에 비해 진보된 국제연합(UN) 질서라는 통념은 표면적인 것이며, 제국주의 열강 중심의 국제질서와 식민지 해방 이후 미국-소련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표출된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관점이다. 오히려 경제제재에 대한 두려움은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자립적인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광적으로 매달리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으로의 도정이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집권 이래 군국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의 핵심에는 이탈리아를 전쟁 지속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는 군대를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으로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석탄에서 뽑아내는 액화석유와 인공 고무와 같은 몇 가지 기술적 혁신이 이를 뒷받침했으며 석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939년 알바니아의 원전 지대를 합병한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무역 대금 납부에 사용되는 경화(hard currency)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입 억제와 자본 통제를 시행하였으며

군수 분야에 한정하여 수입 할당과 외환 배분을 집중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생산을 장려하여 자급자족 경제(autarky)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오랫동안 인정받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으로 이어지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어느 한 편에 서기를 주저했다. 특히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고립주의적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었고, 그 본보기로써 1935년에 통과된 중립법은 교전 당사자인 양국 중 어느 쪽에도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국을 동정하고 중립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비군사적인 지원을 했으나, 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경향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는 없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은 자립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제연맹과 미국은 오랜 기간 관망적인 자세를 취한다. 일본에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침략 야욕을 약화시킬 것인가?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정부가 경제제재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외교적 노선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 관망세는 1938년 이후로 미국의 대일 무기 금수, 항공유 수출 제한, 1941년의 대일본 석유 금수조치로 점진적으로 이어지며,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기 전까지도 미국과 서구 열강들은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오는데 희망을 걸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경제무기는 '제재' 뿐만 아니라 '원조'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형태로 확대된다. 1941년 통과된 미국의 무기대여법(렌드리스(Lend-lease))은 미국이 공식 참전 없이도 연합국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긍정적 경제무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이후 미국의 국제 분쟁 개입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한다.

특히 책의 이 부분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일본과 독일 모두 '민족의 공영권'을 확대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전쟁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두 나라들이 점령지에서 행했던 잔혹 행위를 설명해준다는 점이다. 독일이 추구했던 '봉쇄 회복력'이나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에 내포된 경제적 자립은 토지와 석유, 고무와 같은 생산자원의 자립이었지 열등한 이민족의 존재는 방해요인일 뿐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소련 점령지에서,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민간인 학살에 진력한다.

V. 교훈과 결언

이 책은 무력한 국제연맹과 자체적인 군사력을 갖춘 유엔을 비교하며, 후자가 전자보다 우월한 발전된 체제라고 보는 역사발전론적 시각을 지양한다. 저자는 이를 '교훈이 있는 성장소설적'인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국제연맹과 유엔의 경제제재와 경제제재 기구의 논의 과정은 매우 연속적이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군사적 강제력을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재가 동원되었느냐는 점, 그리고 그 제재를 결정하는 주체들이 누구였는지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부재했던 국제연맹에서 이 역할은 서구 열강들이 담당했다. 국제연맹은 서구열강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요 구성원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지금에 와서도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도 높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제재는 유엔 체제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제수단이다. 그러나 지금도 반복되는 질문은 경제무기가 그것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형태이든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효과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 세계 평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로 수십년째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안보리 또는 미국 중심의 경제제재 모두 이들 정권의 붕괴나 교체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반감이나 분노는 정권 존속을 위한 프로파간다에 활용되고 있다. 렌드리스로 대표되는 긍정적 경제무기의 한계도 명확하다. 마셜플랜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원조와 같은 성공사례도 있는 반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권을 물질적 원조만으로 지탱할 수 없음을 확인한 남베트남의 사례도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국제정치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경제제재와 원조는 유효한 면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통합된 세계와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던 1996년, 토머스 프리드먼은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유명한 '맥도날드 가설'을 제시한다. 이는 맥도날드가 진출해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명제로, 맥도날드가 존재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되어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그 상호의존성이 거꾸로 무기로 활용될 수도 있는 무력충돌 국면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분명 세상은 정치인들이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을 벌여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아진 곳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나라에서 나라 안의 문제를 외국과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립성이라는 명목하에 외국 제품, 특히 중간재 수입을 비애국적이고 위협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서로 이득이 되는 경제적 거래에 대한 이해와 별개로, 자립 가

능한 경제공동체라는 개념 또한 인류 역사에서 유구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감을 얻었던 내용이다. 백 년 전 역사의 흐름이 되풀이될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방향을 지향할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저자약력(게재순)

이수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신흥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이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분야는 국방전략, 해양안보, 국방혁신 국제협력, 아세안이다. 현재 해군본부 미래해양전연구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팀장, 국방혁신위원회 실무진,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MDA)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베트남의 해징 전략” 『아시아 리뷰』(2025), “트럼프 2기 정부의 해양력 혁신정책과 한국해군에의 함의” 『해양안보융합연구』(2025), “격자형 안보 아키텍처’에서 미일호 국방협력의 동향과 시사점”(JPI PeaceNet, 2024) 등이 있다.

E-mail : virtufortuna286@gmail.com

양정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기관학과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인하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영국 런던대학교 잠수함 개념설계 위탁교육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Project Management 과정 이수를 통해 함정 무기체계 설계·사업관리 능력을 확장하였다. 획득전문인력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등 사업관리, 함정사업부 총괄업무 등 획득 실무를 수행하였고, 미 해군에서는 FMS 연락장교로서 무기체계 가동률·수명주기·지속지원 분야 한·미 해군 국제협력을 담당하였다.

해군 중령으로, 해군대학 획득관리교관으로 재직(2025년 1월~12월)하였고, 현재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잠수함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함정 연구개발-건설-운용 단계간 “진화적 개발과 능동적 성능개량 통합(IUPM)”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E-mail : yangboss11@gmail.com

김진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경기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에서 기술연구기획과장과 신기술 정책과장을 역임하며, 국방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MUM-T)의 운용개념 정립과 핵심 기술 연계 등 국방 기술기획 업무를 주도하였다. 특히 기술 전문성과 전략 운용 간의 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전군 최초의 해군 기술기획서를 작성하고, 해군 인공지능 기반 전장기능 지능화 방향 정립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하였다. 현재는 해군대학 해양전략전력학 처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방혁신 생태계, AI 기반 전략환경 변화, 기술기획 및 전력소요 구조 개선 등이며, 저서로는 역서 『전쟁의 게임체인저, AI』 (2025)와 『전투체계의 원리와 이해 (Combat System A to Z』 (2016) 등이 있다.

E-mail : pkm311@gmail.com

이성훈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서 안보전략연구실장 겸 방위전략 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2007)를 취득하였으며, 美랜드연구소에서 아태평양센터 연구원(2010-2011)으로 활동하였다. 연구원에 부임하기 전에는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전임교수, 국가안보실 안보정책 담당관, 합동참모대학장을 거쳐,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한미동맹, 우주전략, 핵억제전략 등이다. 저서로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안보 신기술 경쟁(2023)」, 「뉴스페이스 시대 한국의 우주력 건설방향: 주체, 영역, 규범을 중심으로(2022)」등이 있으며 현재는 핵억제전략의 변화 요인 및 동맹현대화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 abcd0159@naver.com

이미숙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남북한 군사협상의제 연구”라는 논제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통일부 군사회담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1년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Security Study Program에서 연

구하였다.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한 군사협상, 군비통제, 북한의 군사정책, 한국의 국방정책, 국방역사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한국 국방개혁과 「8·18계획」의 교훈” 등의 논문과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공저), 『한미동맹 70년사』(공저) 등이 있다.

E-mail : mslee0602@gmail.com

장석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16년 명지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2018년과 2024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정책학(북한학 전공) 석사, 박사를 수여받았다. 이후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연구분과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평화연구학회 총무이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정치 및 군사, 북핵 문제이며, 최근 연구 업적은 “김정은 시대 심야 열병식에서 나타난 북한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연출과 전략적 모호성, 『국가안보와 전략』 제25권 3호(2025),” “When Disasters Strike, Do missilies Fly? Rethink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Timing, and the Limits of Diversionary Theory,” Korea Observer (Forthcoming)의 논문과 『북한 학개론 : 분야별로 들여다 본 한반도 반쪽』(도서출판 매봉, 2025) 공저서 등이 있다.

E-mail : nujkus@korea.ac.kr

전창빈

1993년 해군사관학교(47기)를 졸업하였고, 1998~1999년간 국방대학교(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벤처정보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국방정책 전공)를 수여받았다. 해군대학 정보참모교관, 해군전쟁종합실습통제교관, 북한해군전략교관을 거쳐 2022년 중령으로 전역 후 해군대학 주변국해양전략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대한민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박사학위 논문, 2013), 『동중국해 안보위협 부상과 한국군의 전략적 접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3년 학술연구 용역과제), “중국의 대만통일 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일국양제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한국해양안보논총, 2023. Vol.6 No.2), “중국 해양전략의 초한전적 접근과

한국의 대응 전략”(한국해양안보논총, 2025. Vol.8 No.2), “초한전과 다영역작전의 전략적 상호작용”(해양안보융합연구, 2025. 제208호) 등의 논문과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번역),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번역), 『중국 국방대학 전략학』(공동번역), 『중국 국방대학 손자병법 주석』(공동번역) 등의 번역서가 있다.

E-mail : freeman1004da@gmail.com

김인승

2005년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였고 2014-2018년간 영국 버밍엄대학교(the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전쟁연구(War Studies) 과정을 수학하며 역사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항공전 연구”, 『軍史研究』, Vol.158, (육군군사연구소, 2024), “임무분석을 통한 한국 공군의 무인전투기(UCAVs) 작전운용개념 연구”, 『국방연구』, 64권 4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21)등이 있으며, 저서로 『하늘에서 본 6·25』, (2022년)이 있다.

E-mail : inseung3141@gmail.com

허은재, 김태경, 강민수, 한원종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4학년 생도이다.

E-mail : rokafamach@gmail.com(허은재)

kimtkloverok@gmail.com(김태경)

kangbnoble@gmail.com(강민수)

wonjong02@gmail.com(한원종)

백자성

1989년 육군사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2020~2023년간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국가안보학과에서 국가안보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홍익대학교에서 안보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군의 군사혁신에 관한 고찰.” 『전략연구』 통권 제87호(2022), “예비전력 논의를 위한 아키텍처 구축.” 『국방연구』 제67권 제1호(2024) 등 다수 논문과 『한국 통일의 미래(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E-mail : js25172@naver.com

류인석

1991년 육군사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였으며, 2002~2006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군복무 기간 동안 국방부·합참·육군본부의 정책 및 전략 부서에서 국방정책, 군사전략, 핵전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미 합참(J7)에서의 교환 근무와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방문학자로 전략/전력 분야 실무와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Stabiliz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 and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7, no. 2(2025) 등의 논문과 『북한학』, 『국가안보론』 등의 저서(공저)가 있다.

E-mail : kmaisyo@gmail.com

조태근

1991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문학사)하였고, 1998년 국방대학교에서 국가안전보장학 석사학위를, 2025년 대전대학교에서 국방정책/전략 전공으로 군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에는 합동군사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군사논단』 통권 제115호, 2023), “합동군의 핵심가치 제정을 통한 합동성 강화방안” (『국방연구』 67권 3호, 2024) 등의 논문과 『합동성, 전쟁을 바꾸는 힘』 저서가 있다.

E-mail : jotaegun@naver.com

김석훈

200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2016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서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후 2025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육군 중령으로 육군 인사사령부에 재직중이다.

E-mail : oramedic@hanmail.net

고영준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조직·인사정책), 정책수단, 성과관리이다. 주요 연구로는 “Does only performance feedback matter in public organizations? (PMR, 2025)”, “Does she belong here?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gendered institutions” (PAR, 2025), “Top executives’ discre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RAS, 2024) 등이 있다.

E-mail : yeongjiko@gmail.com

연구소 소식

◆ IISS 연례학술교류 및 국제공동프로젝트연구 회의 참석

- ▷ 기간/출장지 : 2025.10.27.(월)~31.(금)/미국 워싱턴
- ▷ 방문 기관 : GWIK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한국학연구소), KEI, CSIS, NDU GTI (Global Taiwan Institution), GMF (German Marshall Fund)
- ▷ 주요 활동 : RINSA·GWIKS 포럼, RINSA·공주대·KEI 신진학자 세미나, CSIS 전략대화, GTI 전략대화, GMF 전략대화
- ▷ 출장 인원 : 박영준 교수(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손한별 교수(핵/WMD대응연구센터장), 설인효 교수(신안보연구센터장), 박국흠 전문연구원(안보정책연구센터)

◆ 물자동원 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10.30.(목)
- ▷ 장소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남정세미나실
- ▷ 주제 : 미래전을 대비한 물자동원 혁신 방향
- ▷ 주요 발표자 : 반정민 연구원(국방대), 류태웅 중령(육.동원참모부)

◆ 제16차 RINSA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11.4.(화)
- ▷ 주제 : RINSA-RAND 학술 교류
Sovereign AI of Middle Power and Defense Revolution in Korea
(한국의 중견국 전략과 국방혁신을 위한 주권형 AI)
- ▷ 주요 발표자 : Dr. Austin Wyatt(Researcher / RAND at Canberra Australia)

◆ 제17차 RINSA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11.7.(금)
- ▷ 주제 : 국방대 및 서울대 주관 2025 범국민 안보의식 및 통일평화인식 조사결과 평가

- ▶ 주요 발표자 : 김범수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김택빈 교수(국방대 안보정책학부)

◆ 2025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주최)

- ▶ 일자 : 2025.11.12.(수)
- ▶ 장소 : 로카우스 호텔
- ▶ 주제 : 미래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방향
- ▶ 주요 발표자 : Adam Farrar(CSIS/화상), 나루시게 미지시타(GRIPS),
Chang Jun Yan(Nanyang Univ.) Lami Kim(APCSS/화상) 등
국내외 전문가

◆ 제18차 RINSA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11.20.(목)
- ▶ 주제 : 한국 국방의 3축체계 발전 방안
- ▶ 주요 발표자 :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前 공군대학 총장)

◆ 「독일안보정책회의」 국외 출장

- ▶ 기간/출장지 : 2025.11.23.(일)~29.(토)/독일(뮌헨), 오스트리아(비엔나)
- ▶ 출장 인원 : 손한별교수(핵/WMD대응연구센터장), 김태현교수(전략학부)
※ 안보문제연구소 - 뮌헨 연방군대학교 Metis연구소 MOU체결 (11.26.)

◆ 제19차 RINSA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11.25.(화)
- ▶ 주제 : 북한과 정세와 중국 패권전략 분석
- ▶ 주요 발표자 : 홍민 선임연구원(통일연구원),
김흥규 교수(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국방연구』 편집 요강

■ 공모 논문의 심사

가. 공모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 논문 접수(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접수)
 - ※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
- (2) 편집위원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회부 결정
 - ※ 제목 및 내용이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함.
- (3) 논문심사 의뢰(심사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인이 선정한 심사자 3인)
- (4)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심사 판정
- (5) 최종 판정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
- (6) 논문게재 시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각 논문 후미에 게재

나. 공모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자 수, 심사방법, 심시기한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교내외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추천하되, 가능한 교외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히,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교내의 저자일 경우에는 교외 심사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자문위원회 회의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한 후 시행하며, 심사과정 혹은 회의과정에서 편집간사는 필요한 경우 논문상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 (4) 논문의 심사는 각 호별 최종마감일 이후 시행하며,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 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 안내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순수 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4. 기고논문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요약(400자 내외) 및 핵심어(5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는 저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8. 논문제출 시 논문유사도 검사후, 검사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이메일 rinsakj@kndu.ac.kr 로 제출해야 한다.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용지 17~18매)로 한다. 분량 계산은 <흔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다.
-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引用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引用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

가)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 (서울: 오름, 2001). p. 302.

나) Bose, Partha.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 : Gotham Books, 2003), p. 98.

2) 논문

가)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2003), pp. 7-30.

나) Nye, Joseph 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 21.

3) 편저서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편). 『마르크시즘 100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 120.

나) Strange, Susan.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4) 번역서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 300.

나) Bose(2003), p. 90.

다) 남궁곤(2003), pp. 25-28.

라) Nye(1999), p. 27.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일보』 (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한다.

III. 기타 참고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서 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3.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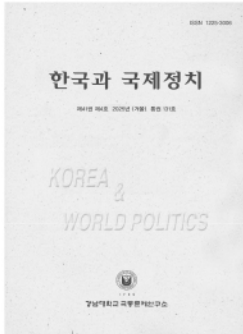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1-2.

4.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 제목 우측 상단에 별도의 각주표시로 기재할 수 있다.
6.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2) 저자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3)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4) 2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5)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4호, 2025년(겨울) 통권 131호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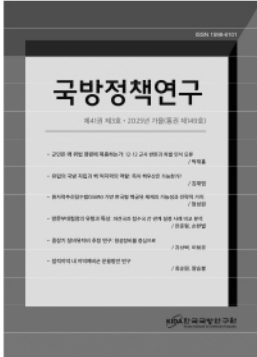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변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 부시 2기 대북 정책 전환의 이유: 미국 국내 정치적 설명 하태원(연세대학교)
-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 게임 모델을 통한 접근 정재욱(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공격적 현실주의의 확장과 북한의 하이퍼전략: 비강대국의 공세정책 동인 추적 반길주(국립외교원)
- 조선인민군 군관이하 군사칭호 도입에 관한 연구: 1948년 창설부터 한국전쟁 및 1955년까지 이성춘(동국대학교)
- 새로운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적 소고: 천주교회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황소희(연세대학교)
-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정상순(건양대학교) · 시효근(건양대학교)
- 한국전쟁이 출범 초기 NATO의 군사체제 확립에 미친 영향 임해용(성신여자대학교)
- 수평적 문책성과 민주주의 진동: 한국 사례의 비교 연구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8
온라인투고: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 군인은 왜 위법 명령에 복종하는가: 12·12 군사 반란과 처벌 인식 오류 / 박재홍
- 유럽의 국방 자립과 핵 억지력의 역할: 독자 핵우산은 가능한가? / 김재엽
- 원자력추진잠수함(SSBN) 기반 한국형 핵공유 체계의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 / 정성원
- 방문부대협정의 유형과 특성: 파견국과 접수국 간 관계 설정 사례 비교 분석 / 안준형, 손한별
- 중장기 장비유지비 추정 연구: 항공장비를 중심으로 / 김상백, 이형로
- 접적지역 내 지역예비군 운용방안 연구 / 최순원, 양승봉

■ 『국방정책연구』 원고모집 안내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로서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인 글은 기고할 수 없으며, 순수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 기고된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투고방법: 『국방정책연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jdpskida.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심사용 파일 올리기
- 원고접수 마감: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 전화: (02) 961-1291 / e-mail: jdps@kida.re.kr



통일연구원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기획논문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 고유환
- 미션 임파서블: 북핵 협상의 쟁점과 과제 / 최용환
- 중국의 새로운 국제질서 담론 제시와 대외전략 변화: 북중러 3국 협력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 정재홍

■ 일반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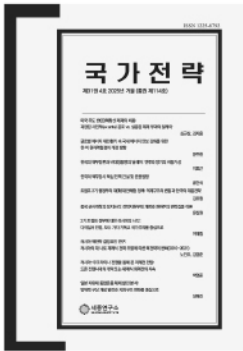
- 북한 엘리트의 차등적 '현지료해': 지역 단위 통계자료와 분석(2011~2024) / 이강민
- 위성영상을 통해 본 북한의 간척 동향과 실태 / 김혁
- 김정은 시대 선전 매체의 위기 대응 프로파간다 변화 -평양 무인기 침투 보도를 중심으로- / 이용철
- 한반도형 REDD+ 협력 체계 디자인: 중재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최효정·박소영
- 남북한 해사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및 통일해사법제 수립 방안 연구 / 이영주
- 암호화 네트워크와 북한의 비대칭 전략 분석: 사이버 테러리즘과의 결합 가능성 / 김영훈·송기복
- 재일조선인 소재 북한소설의 시론적 연구 - 리호인 「열차칸에서」의 '죄책감'을 중심으로 / 최강미

『통일정책연구』 원고 모집 안내

- ▶ 기고할 논문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원고매수는 국문 원고지 120매 내외입니다.
- ▶ 문의 및 제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nu.or.kr>) 및 <http://kinu.jams.or.kr> 공지사항 내 제출양식 및 기획주제 등 공지
 - 논문원고는 <http://kinu.jams.or.kr> 회원가입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kinups@kinu.or.kr, 전화 02)2023-8072, 팩스 02)2023-8298로 연락바랍니다.
- ▶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 가 전 략

제31권 4호, 2025년 겨울호 [통권 제114호]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신장 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창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정세 분석과 주요 국가 연구 등의 주제를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미국 주도 반(反)핵확산 제재의 비용: 과장된 사전적(ex ante) 공포 vs. 실증된 제재 부과의 딜레마 / 심규상·김지용
-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기 속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방향 / 문주현
- 한국의 핵무장론과 비대칭동맹의 딜레마: 연루와 방기의 비등가성 / 지효근
- 한국의 핵무장시 핵심 전력 건설 및 운용방향 / 류인석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대만해협 정책: 억제구조의 변동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유철
- 중국 군사개혁의 정치논리: 전략지원부대 개편과 권위주의 권력집중 이론 / 문장권
- 2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다극질서 인정, 보수 가치·기독교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 이태림
- 러시아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러시아의 대 나토 재래식 전력 우열에 따른 핵전략의 변화(2010-2021) / 노진우·김영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미래전 전망: 드론 전쟁시대의 개막 또는 재래식 화력전의 지속 / 박영준
- 일본 자위대 통합운용 체제 발전 분석: 방위력 구상 개념 발전과 지휘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장혜진

『국가전략』 원고모집

-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구소의 편집방향과 편집기준에 따라서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 상황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보내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분량으로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원고와 더불어 '400자 내외' 한글 요약문, '200 단어'의 영문 요약문과 국·영문 핵심어 3~5개를 작성하여 투고자의 연락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원고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dbpiaone.com/sjr/index.do>)에 회원가입 후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E-mail: nationalstrategy@sejong.org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8, Number 4, December 2025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